

한국의 인구주택 -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보고서

제1장 서론

이재형 (통계개발원장)

“다윗 왕은 장군 요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령하였다. 요압은 이 명령이 옳지 못하다고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휘하 장수들을 인구조사관으로 동원하여 9개월 20일 만에 백성 수를 모두 헤아려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 결과 무장가능한 장정의 수가 이스라엘에는 80만명, 유다에는 5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곧 다윗은 그의 인구조사가 너무나 사악한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신에게 용서를 빌었다. 신은 다윗에게 속죄를 위한 벌로 3년간의 기아, 3개월간의 패전과 학살, 3일간의 역병(疫病)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고, 다윗은 세 번째 벌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7만명의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었다.¹⁾”

그렇다면 인구를 헤아린 행위가 어떻게 7만명의 죄 없는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만큼 큰 죄가 되는가? 그것은 인구를 헤아린 행위 그 자체가 통치행위의 시작이며, 이는 신이 가진 이스라엘에 대한 배타적 통치권을 침해함으로써 신의 권능에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²⁾ 성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인구조사 그 자체가 중요한 국가통치행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국가운영에 있어서 인구통계가 갖는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 이 내용은 Bernard Cohen, *The Triumph of Numbers : How Counting Shaped Modern Life*, W. W. Norton&Company, 2005에 수록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2) 이를 명확히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나, 상계책에서는 『新옥스포드 성서』를 집필한 학자들의 견해를 빌어 이 설이 유력하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의 궁극적 책무는 전체 국민들을 보호하고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은 국가의 힘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 나라의 인구와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운영을 위한 기초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인구센서스의 실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주별 하원의원 수나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구센서스는 국가권력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밑그림이 되고 있다. 일본은 인구센서스를 국세조사(國勢調査), 즉 “나라의 힘”을 조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인구통계는 한 국가의 힘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또 한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정보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서구 선진국들은 18세기 말-19세기 초에 걸쳐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게 되었다.³⁾ 기독교 국가인 서구에서 인구통계는 앞서 언급한 다윗 왕의 일화로 인하여 거의 이천 년 동안 배척되어 왔으나, 미국이 최초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이후 나라가 한층 더 번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각국이 신벌(神罰)의 두려움을 떨치고 국가발전을 위해 앞 다투어 센서스를 실시하였다.⁴⁾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이미 역사적으로 오랜 인구조사의 전통을 갖고 있다. 고조선부터 이미 인구조사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며, 신라시대이후 일종의 인구조사인 호구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⁵⁾ 현대적 의미의 인구센서스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의 인구센서스는

3) 1790년에 미국이 최초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이후, 스웨덴이 1792년, 네덜란드가 1795년,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1797년, 잉글랜드가 1801년에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4) 이는 미국의 통계사학자인 Helen Worker의 추측이다. Cohen의 前掲書(2005)에서 인용.

5) 이에 대해서는 김민경, 『인구센서스의 이해』, 도서출판 글로벌, 2000을 참고하기 바란다.

2005년에 이루어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약 1,460억원의 예산과 11만명의 조사인력을 동원하여 실시한 대규모 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은 2005년 조사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주택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항목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체 조사대상의 10%에 해당하는 표본인구에 대해서는 인구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한층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기본 통계로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첫째, 이 통계는 국민을 포함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구적·사회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국가운영에 핵심적인 기본 정보로서 활용된다. 예를 들면 고령화, 성비, 지역발전, 인구이동 등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많은 과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포착해 줌으로서 효과적인 대응책의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이 통계는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모집단 자료적 성격을 갖는다.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통계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집단을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가 이에 해당된다. 즉, 「인구주택총조사」는 다른 다양한 수많은 통계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통계보고서로 작성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공표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순한 통계숫자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인구적·경제적·사회적 의미를 정책당국자나 학자, 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사회적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 보급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각계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인구주택총조사」가 담고 있는 바다와 같은 정보를 부분적으로 해석·소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는 「인구주택총조사」 통계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통합된 의미 있는 정보로서 보다 많은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된 우리나라 인구 및 주택의 현황과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인구 및 주택의 현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사회적 실상과 특징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인구주택총조사」 분석보고서라는 특징을 갖는데, 통계의 분석은 사실의 확인(fact finding)에서 출발하지만, 그 해석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연구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는 모두 17인의 집필자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사회문제에 대한 집필자들의 인식은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이 주도하여 작성하였지만, 통계개발원은 집필자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그 내용에 대해 어떠한 수정이나 조정도 행하지 않았다. “사고(思考)의 다양성” 그 자체가 연구에 있어서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집필자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통계청이나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집필팀과 은기수 교수(서울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모두 3편 1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이 보고서의 소개와 센서스의 이해에 해당하는 도입부분으로서 통계청 집필팀과 김민경 교수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제2편은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통계청 집필팀이 집필하였다. 여기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된 우리나라 인구, 가구, 주택부문의 전반적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제3편은 은기수 교수 연구팀이 집필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와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주제별로 심층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하와 같다.

먼저, 제1편에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이해에 대해 다루었다. 여기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계학적·인구학적·사회학적 의의, 인구센서스의 방법론,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의 역사와 현황,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다. 집필은 김민경 교수(고려대, 통계청 전 차장)가 담당하였는데, 김 교수는 오랜 기간 통계청에서 근무하면서 인구센서스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통계이론 및 현실 통계 행정의 양 측면에서 인구센서스 통계의 다양한 특징과 속성을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제2편은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인구·주택의 현황과 특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집필은 통계청 인구조사과 직원들이 담당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 및 구조, 그리고 지역적 분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전반적 특징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그 특징을 유형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재원 사무관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제4장은 가구 및 주택부분에 대한 전반적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가구수, 가구주 특성별 분석, 주거형태, 주택현황 등을 다루었는데, 하봉채 사무관이 집필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우리나라 인구주택 부문의 개괄적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인구이동에 대해 다루었다. 인구이동에는 주거지 이동과 통근·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인구이동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였다. 집필은 하봉채 사무관이 담당하였다. 제6장에서는 가구의 주거실태와 경제활동에 대해 다루었는데, 주거시설, 주거형태, 자동차 보유현황, 성·연령·산업별 취업현황 및 특징 등을 분석하였는데, 유상종 사무관이 집필하였다. 제5장과 제6장은 국민들의 이동, 경제활동, 주거생활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7장에서는 소외 내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구·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성과 출산, 아동 보육실태, 고령자 인구의 특성과 경제활동, 활동제약자들의 삶, 혼인 현황, 1인 가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대응이 한층 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결과는 앞으로의 인구 및 사회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류성옥 사무관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제3편은 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와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주제별로 우리나라 인구의 실태 및 국민생활 현황을 분석하였다. 집필은 은기수 교수 연구팀이 담당하였다.

제8장에서는 출산의 현황과 전망을 다루고 있는데, 권태환 교수가 연구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장차 “인구대재앙”의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의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고 있다. 인구문제는 경제성장, 국민들의 삶의 수준, 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이 연구결과는 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제9장에서는 인구이동을 다루고 있는데, 최진호 교수가 연구를 담당하였다. 인구이동이란 시·군·구 경계를 넘어 주거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지역적 인구분포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인구의 도시집중이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큰 특징이었으나,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도시화의 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우리나라 인구이동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분석결과는 주택정책, 국토개발,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0장에서는 통근·통학과 주간 인구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데, 은기수 교수가 연구를 담당하였다. 도시화가 성숙됨에 따라 도시는 지역별로 뚜렷한 기능 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직업 및 학업을 위한 통근·통학의 확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의 현격한 괴리, 도시공동화 등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도시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를 어떤 식으로 기능화하여 개발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경험한 공통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비단 도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사회 생활,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장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통근·통학 실태 및 주간인구 이동의 특징은 앞으로 도시교통문제, 도심개발,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능 재편 등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제11장에서는 고령자의 생활비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박수미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고령화의 진전과 전통적인 가족제의 붕괴로 특히 고령자 층의 생활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어, 고령자는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가족제도, 친지간의 유대 등에 의해 고령자의 경제문제가 사적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으나,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보장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어 고령자 층의 경제적 안정은 앞으로 중요한 국가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고령자의 생활비 실태분석은 이러한 점에서 향후의 고령자 대책 수립에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2장에서는 산업 및 직업별 근로 실태와 근로 장소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성용 교수가 연구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종사산업이나 직장 내에서의 종사상 지위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인구의 직업구조, 종사산업, 지위 분포를 연령별, 성별 등 인구특징별로 심층적

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13장에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활동장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조영태 교수가 연구를 담당하였다. 최근에는 오래 사는 것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건강수명의 증가속도가 평균수명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인생에서 활동제약을 갖고 살아가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활동장애는 특히 고령층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활동제약의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보고, 인구집단에 이 활동제약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제1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구구성의 특징과 주거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장세훈 교수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주택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안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도시문제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주택공급의 확대로 2005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05.9%에 이르게 되어 이제 절대적인 주택부족의 문제는 해소되었다. 또 그 동안 전반적인 주거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변화와 가족제도, 생활양태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가구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수요도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구성의 특징과 주택수요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주택공급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15장에서는 주택유형과 자가 소유를 중심으로 주거생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데, 윤일성 교수가 연구를 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주거수준은 그 가구의 계급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여기서는 주택수요의 다양한 측면을 계급, 계층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대상은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가구의 사회계급적 지위에 따른 주택자가소유율의 변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계층적 특성이다.

제16장에서는 한국의 종교인구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통계개발원의 조순기·박영실·최은영 3인이 연구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총인구의 약 54%가 종교를 갖고 있으며, 또 세계적으로 종교의 다양성이 높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종교는 우리나라 국민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종교 생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연구를 위한 절대적인 자료의 부족과 함께 종교라는 특수한 주제가 갖는 접근상의 조심스러움에서 기인된 결과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특징을 성·연령 별, 지역별, 그리고 교육수준 및 직업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 2장 인구주택총조사의 발전과 향후과제

I. 머리말

인구조사의 역사는 고대국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통계작성을 위해 독립된 국민국가가 국가 전역에 걸쳐 통일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최초의 근대적 인구센서스는 1790년의 미국 인구센서스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이후 10년 주기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1940년 센서스부터는 인구센서스와 주택센서스를 결합하여 인구주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1798년), 영국·프랑스(1801년), 노르웨이(1815년) 등 주요 국가도 19세기 초반에 근대적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1855~64년 10년간 24개 국가가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2000년 라운드 센서스에는 200개가 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지역에서 인구주택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인구센서스를 일제하인 1925년에 「간이 국세조사」의 명칭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5년마다 실시하여 왔다. 처음에는 인구센서스만 실시하였으나 1960년 조사부터 주택부문을 포함하였다. 조사명칭은 일제시대에는 「국세조사」로,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총인구조사」, 그리고 주택부문을 포함한 이후에는 「인구주택국세조사」, 「총인구 및 주택조사」, 「인구 및 주택센서스」 등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90년 조사부터 '센서스'의 우리말을 '총조사'로 함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라는 명칭으로 고정하였다.

유엔은 센서스자료의 국가 간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 1958년에 「1960년 인구주택센서스 실시에 관한 원칙과 권고」를 작성·배포한 이래 10년마다 각종 용어의 개념과 정의, 조사방법, 조사항목 등에 대한 원칙·기준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각 국가에서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유엔이 제시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원칙과 역할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의 발전내용을 방법론적인 측면과 인구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내용 측면을 살펴본 후 현재 연구 중인 향후 총조사의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원칙과 역할

인구주택총조사는 개별성 보편성, 동시성, 주기성의 기본원칙 하에서 실시된다(UN, 2007). 개별성(individual enumeration)이란 센서스에서 각 개인

및 각 거처는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각 개인 및 거처의 속성도 각각 개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조사되어 여러 속성에 관한 자료가 수집될 때 각 자료를 다른 속성과 연관하여 분류 집계함으로써 다양한 속성별 연관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편성(universality within a defined territory, 또는 통일성)이란 한 국가 전체이든 일부 한정된 지역이든 조사하기로 계획된 영역내의 모든 사람과 거처를 누락과 중복 없이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 중인 사람, 병원에 입원환자 등 집을 잠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조사하느냐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조사하는 상주인구(de jure population)의 개념과 조사당시 발견된 장소에서 조사하는 현주인구(de factor population)의 개념이 있다. 동시성(simultaneity)은 조사기준시점을 정하여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동시에 모든 인구와 거처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기성(defined periodicity)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래야만 수집되는 정보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이 네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다. 즉, 각 가구를 조사단위로 하여 가구원(개인) 및 거처별로 조사표를 작성하며,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5년 주기로 조사연도의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통계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분야 통계의 기준자료(benchmark)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통계조사이다. 총조사 결과 그 자체는 실시연도 기준시점의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의 상황을 나타내며, 이후 시점의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통계작성에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장래인구추계에서 총조사인구(누락·중복오류 조정 후)는 기준인구(base population)로서의 역할을 하며, 두 시점 총조사인구의 차이는 인구동태통계와 인구이동통계를 사용하는 인구분석 또는 인구방정식에 의하여 설명된다. 총조사의 특성별 가구집계 결과와 추계인구 결과는 장래가구추계의 기준이 된다 또한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통계조사로 인식된다. 총조사의 본질적인 역할 중의 하나는 소지역, 소그룹, 임의의 지역구분에 대한 오차가 없거나(또는 최소한의 오차) 인구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라는 것이다. 이외 정부와 민간의 각종 계획수립,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서도 이용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예산의 배분, 선거, 교육, 병무, 행정조직 등을

위한 법정인구에는 또 하나의 인구정태통계인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주기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반해,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의 최하급단위인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인구주택총조사의 발전

1. 개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인구총조사는 일제하인 1925년에 「간이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일본은 1920년 제1회 국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도 실시하기 위해 1918년에 「국세조사평의회 규정」을 제정하는 등 준비를 하였으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활발해지자 한반도 내에서의 1920년 국세조사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은 1922년에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1902년 제정)을 개정하여 5년 간격으로 대규모조사와 간이조사를 교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1925년에 「간이국세조사」의 명칭으로 제2회 국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한반도에 대한 제1회 인구총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총조사는 「1925년 간이국세조사에 관한 건」(1925년 5월 제정, 총독부령 제66호)에 의거하여 동년 10월 1일 오전 0시 현재로 조선 내에 현주(現住)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제하에는 전시동원을 위한 인적자원 파악을 위해 「자원조사법」에 의거하여 정례 국세조사 1년 전인 1944년 5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한 1944년 인구조사를 마지막으로, 1925년부터 1944년까지 5년마다 국세조사 또는 간이국세조사(단, 1944년은 인구조사)의 명칭으로 5차례에 걸쳐 인구총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들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식민지인 조선에서 노동력 착취, 경제수탈을 위한 것으로 특히 1940년과 1944년 조사결과는 엄격히 비밀로 처리되어 일반 국민은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정부수립 직후 각종 정책수립을 위해 그 기본이 되는 인구통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1950년 실시예정인 인구총조사를 1년 앞당겨 1949년 5월 1일을 기하여 정부 수립 후의 첫 번째 인구총조사인 「제1회 총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공보처 통계국에 국세조사과를 설치하고 법률적 기반으로 「인구조사법」(1949. 1. 27. 공포, 법률 제18호)과 「제1회 총인구조

사 지방사무처리규칙」(1949. 2. 15.공포, 총리령 제6호)을 제정하였다. 조사결과
과는 이듬해 6·25동란으로 각 특성별로 집계되지 못하고 단지 총인구의 파악
에 그쳤으며 속보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조사자료가 소실 또는 분실되었다 정
부수립 후의 두 번째 인구총조사는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경제의 부흥을 위한
국가부흥건설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파악을 위해 1955년 9월1
일을 기하여 「간이총인구조사」의 명칭으로, 내무부¹⁾산하 지방행정기관을 동
원하여 실시되었다. 당시 6·25사변직후의 사회적 혼란과 극심한 인구 유동으
로 인하여 조사의 실시계획 및 운영관리 면에서 결함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조사를 통하여 전국인구를 처음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었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장래인구를 추계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면모를 갖추어 실시된 1960년 총조사는 유엔의 '세계센서스계획'에
따라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센서스와 '농업센서스'의 일환으로 실시
하였다. 동 조사를 위해 유엔통계고문단이 내한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하였으
며, 「국세조사위원회」(1959. 2. 10. 규정 공포, 대통령령 제1449호)를 설치하
고 「국세조사령」(1960. 11. 3. 공포, 국무령 제19호)을 제정하여 1960년 12
월1일에 「인구주택국세조사」를, 1961년 2월1일에 「농업국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러한 1960년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근대적인 인구센서스
를 시작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종전 총조사에서 현주(現住)인구를 조사하였던
것과 달리 당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하던 상주(常住)인구를 조사하였고, 처
음으로 주택부문을 추가하였으며, 총조사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사후조사(post
enumeration survey, PES)를 실시하였으며, 집계단계에 20% 표본집계방법을
도입하는 등 조사기획에서 자료처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센서스의
면모를 갖추 오늘날 총조사의 발전을 가져오는 밑바탕이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투자재원확보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당초1965
년에 실시하려던 계획을 1년 연기하여 1966년 10월1일 기준으로 실시한 1966
년 총조사는 인구부문만을 조사하면서 자료수집에 확률표본기법을 도입하였
다. 또한 총조사 자료처리를 위해 컴퓨터(IBM 1401)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조사
결과를 집계함으로써 우리나라 컴퓨터 발전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계기가 되
었다.

1) 정부 수립 시 공보처소속이던 통계국은 1955년 2월17일자로 내무부로 이관되었으며, 내무부통계국에는
기획과, 국세조사과, 인구조사과가 설치되었다.

주택부문이 1970년 총조사에서 다시 포함되었으며, 총조사 기준일자가 1980년 총조사에서 종전의 10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되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처음으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1985년 총조사는 모든 항목을 전수조사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는 다시 자료수집에 표본기법(10% 조사구)을 도입하여 이후 총조사에 계속되고 있다.

한편 주택부문은 거주자가 있는 거처에 대해서만 그 특성을 조사하였으나 증가하는 빈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95년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빈집조사표를 사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조사구 설정을 위해서는 전국의 상세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 1990년 조사까지는 청사진지도(종이지도를 청사진 복사)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총조사에서 전국의 지도(1/5,000 축척)를 통계청이 직접 스캔한 래스터지도(raster map)를 사용함으로써 전산지도 사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0년 이후는 국립지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치지도(digital map)를 사용함으로써 조사결과 이용에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방법론적 변천

(1) 조사단위개념

■ 인구

일반적으로 인구총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인구를 정하는 방법은 현주(現住)개념(de facto)과 상주(常住)개념(de jure)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25년부터 1955년 총조사까지는 현주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55년 총조사에서 현역군인들을 그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에 포함시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별 인구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종 정책 및 행정에 이용되는데 한계가 있

2) 조사구(enumeration district)는 조사원의 담당 조사구역을 명백히 하고 조사대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을 일정한 구역으로 분할한 소지역이다. 조사구는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구분하는데 일반조사구는 조사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에 설정한 조사구로 읍면동별로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여 일정가구수가 포함되도록 구획한 조사구이다.

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여 인구의 이동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 등 조사결과의 유용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그리고 유엔의 권고에 따라 1960년 총조사부터는 상주개념을 채택하였다.

■ 가구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대상은 인구·가구·거처이나 조사단위는 가구(household)이다. 가구는 가사단위개념(housekeeping unit concept) 또는 주거단위 개념(household-dwelling concept)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데(UN, 2007), 우리나라는 가사단위개념을 채택하여 가구를 '한사람 또는 두 사람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의 분류와 명칭은 총조사마다 다르다. 초기 총조사인 1925~1955년 총조사에서는 가구를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분류하고 준가구에 군부대 형무소·유치장·학교 또는 공장기숙사·합숙소·여관·하숙집·병원·양로원·감화원·선박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1960년 총조사에서는 가구를 개인가구와 집단가구로 분류하였다. 개인가구는 혈연가구(4인 이하 비혈연 동거인가구 포함)와 1인 가구로 다시 구분하였으며 집단가구는 집단시설가구와 5인 이상의 비혈연자가구(집단생활공동체)로 구분하였다. 인구만을 조사한 1966년 총조사에서는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하였으며 보통가구는 혈연가구와 취사를 별도로 하는 1인가구(독립된 부엌시설이 있음)로, 준가구는 취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1인가구(독립된 부엌시설이 없음)와 기타준가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970년과 1975년 총조사에서는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하여 보통가구에는 혈연가구와 1인 가구를, 준가구에는 집단시설가구와 비혈연가구를 포함하였다. 가구분류가 고정된 1980년 총조사부터는 가구를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분류하고, 일반가구에는 혈연가구, 5인 이하 비혈연자가구, 1인가구를, 그리고 집단가구에는 집단시설가구와 6인 이상의 비혈연자가구를 포함시켰다. 2005년 총조사에서는 혈연가구는 친족가구로, 비혈연가구는 비친족가구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1975년 총조사까지는 매 총조사에서 가구에 대해 서로 다른 분류(용어와 개념)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당시 사회현상으로서 가구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구 분화 등 가구형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 1980년 총조사부터는 조사단위로서 가구의 분류도 고정되었다. 향후에도 가구 내지 가족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시대적 요청에 따른 적절한 가구의 개념과 분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열 분석을 위해 과거 총조사 자료와의 비교가 가능

하도록 가구를 정의 및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총조사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구 정의 및 분류의 차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구관련 통계는 1960년 총조사 결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표 2-1>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구분(1960~2005)

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2000	2005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가구 · 혈연가구¹⁾ ·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가구 · 혈연가구 · 1인가구 (독립된 부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가구 · 혈연가구 ·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 · 혈연가구 · 비혈연 5인이하 ·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 · 친족가구 · 비친족5인이하 ·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가구 · 집단시설 · 비혈연 5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가구 · 1인가구 (독립된 부엌시설 없음) · 기타 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가구 · 집단시설가구 · 비혈연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가구 · 집단시설가구 · 비혈연 6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가구 · 집단시설가구 · 비친족 6인이상

주: 1) 비혈연 동거인은 4인까지는 주인집의 동거가구원으로 조사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2) 자료수집방법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통계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은 조사원면접방법과 자기기입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들 방법은 조사수단에 따라 방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원면접 조사방법과 자기기입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일제시대에 실시된 총조사에서는 가구주 또는 조사원이 지정한 가구원이 소속 가구원에 관한 사항을 배부된 신고서(조사표)에 기재하는 일종의 자기기입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원은 신고서(조사표)의 배부·수집·검사·정리·제출을 담당하였으며 공무원, 공공단체직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직으로 따라서 조사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수립직후에 실시된 1949년과 1955년 총조사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자기기입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조사원(주로 지방 일선행정기관 공무원이 신고서(조사표)를 대신 작성할 때에는 신고의무자성명아래 대서(代書)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기입방법을 채택한 주요 이유는 조사표를 신고서라고 한데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총조사(센서스)를 국민의 신고의무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의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960년 총조사부터는 원칙적으로 조

사원면접조사방법을 채택하고, 경우에 따라 가구기입방법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등에 따라 주간 부재가구가 증가하고, 사생활 보호의식 확산에 따른 면접조사 기피 등으로 인해 가구기입방법을 점차 확대하였으며, 이 때 조사원은 조사표 배부와 수집 및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최근에 들어 맞벌이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간 부재가구의 증가, 사생활보호의식의 확산, 외부인 출입통제 주택의 증가 등은 조사의 완전도와 정확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사회환경 변화에 적합한 조사방법의 개발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총조사에서는 인터넷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인터넷조사 참여가구수는 전체가구의 0.9%로 당초목표(2%)보다 저조하였으나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의 다양한 조사방법도입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3) 표본조사기법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많은 항목을 조사하게 되나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응답자와 조사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시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 항목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항목은 일부 가구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이러한 표본기법의 적용은 조사시간과 비용의 절감, 응답자와 조사원 부담의 경감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소지역 또는 세부계층별로 통계 작성이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표본기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6년 인구총조사이다. 1965년 총조사를 1년 연기하여 더구나 인구만을 조사하면서 표본기법을 도입한 것은 정부예산 부족이 주요 이유였다. 이후 2005년 총조사까지 표본기법을 도입하였는데, 표본규모는 1975년(5%)과 1980년(15%)을 제외하고 전체 조사구의 10% 지역이었다(예외적으로 1985년 총조사에서는 전 항목을 전수조사). 한편, 1960년 총조사에서도 전 항목을 전수조사 하였으나 자료집계과정에 표본기법을 도입하여 경제활동과 출산력 항목에 대해 20%의 인구를 추출하여 집계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현장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다른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로 회수되어 결과집계를 위한 자료처리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료 처리 과정은 조사표의 사전 내검(manual editing), 조사표 내용의 부호화(coding), 컴퓨터입력(data capture), 기계내검(machine editing), 제표(tabulation)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들 자료처리과정을 중앙에서 집중 실시하느냐, 지방에서 분산 실시하느냐 또는 이들의 기능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수행하느냐 등에 따라 집중형 또는 분산형 자료처리방법 그리고 절충형 자료처리방법으로 구분한다 특히 이는 자료입력방법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총조사에서 1995년 총조사까지는 컴퓨터입력 및 내용 검사 등 자료처리업무를 중앙에 집중하여 일괄처리시스템(batch processing system)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사표입력방법은 달라 1985년까지는 주로 키엔트리(key-entry)방법에 의했으나 1990년과 1995년은 OMR (optical mark recognition, 광학기호판독장치)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표를 중앙에 집중하여 입력하였기 때문에 입력에만 7~8개월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입력 후 오류조사표의 현지확인이 본조사실시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신속한 자료이용에 제약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총조사는 전국 20개 장소에서 PC 입력방법을 도입하여 입력기간 및 조사 오류의 현지확인 기간을 종전에 비해 크게 단축하였다 통신 및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2005년 총조사에서는 구·시·군에서 웹(Web)기반입력을 하였다. 많은 장소에서 입력함에 따라 입력기간이 짧고 입력 후 즉시 오류내용의 현지확인이 가능하여 보다 더 신속한 결과집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별조사구의 조사표는 ICR(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 필기문자인식장치) 방법으로 입력을 하였다. 이와 아울러 행정구역·산업·직업분류부호부여에 자동코딩시스템을 개발하여 2000년 총조사부터 적용하였다.

(5) 결과공표와 자료제공

인구주택총조사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사내용을 완전하게 집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통상 잠정집계, 속보집계, 최종전수집계, 최종표본집계 등 자료처리 단계별로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조사실시 후 가장 빨리 공표하는 잠정집계결과는 본조사 완료직후에 작성된 조사구별 집계표(요계표)를 집계한 것으로 작성내용은 행정구역별 인구규모 가구수, 주택수이다. 속보집계결과는 2%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표내용을 집계한 결과

로 시의성 있는 인구특성분석을 위해 전수집계 전에 발표해왔으나 2000년과 2005년 총조사에서는 전체 자료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전수집계결과가 빨리 공표됨에 따라 속보집계를 하지 않았다.

총조사결과는 전수조사항목과 표본조사항목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조사결과를 수록한 보고서(CD 포함)를 발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2005년 총조사에서는 전수조사결과보고서는 전국총괄·인구·가구·주택 편을 각각 발간)과 16개 시·도별로, 표본조사결과보고서는 주제통근통학·인구이동·주거실태·경제활동·여성·아동·고령자·활동제약자·혼인연령·1인가구 별로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통계 DB(KOSIS)에도 수록하여 인터넷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kosis.nso.go.kr>). 또한 보다 심층분석을 위해 조사의 원자료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개인 식별이 되지 않도록 비밀보호화한 마이크로자료(micro data)도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자료는 1990년 총조사결과부터 2%의 표본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총조사에서는 1%와 5%의 자료도 추가로 제공하였다(<http://mdss.nso.go.kr>).

(6) 조사결과의 평가(사후조사)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오차는 자료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되는데 수정되지 않은 오차(범주오차와 내용오차)는 총조사 결과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조사 결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사후조사 실시, 일치성검사, 인구학적 분석, 행정자료와의 비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사후조사(post enumeration survey)는 총조사 실시 후에 직접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본조사이다. 사후조사방법으로는 종속조사방법, 독립조사방법이 있다. 종속조사방법은 총조사 조사표에서 조사된 내용 중 일부를 사후조사 조사원에게 확인하게 하는 한편 총조사 평가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독립조사방법은 표본으로 추출된 지역 또는 가구에 대해 조사된 조사표의 내용을 조사원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별개의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종속조사방법은 본조사 조사표와 사후조사 조사표와의 대조작업이 보다 수월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후조사 조사원의 조사태도에 의해 사후조사의 질이 좌우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한 후 매 총조사에서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방법은 1970년과 1975년은 독립조사방법을,

그 외의 총조사에서는 종속조사방법을 택하였다. 사후조사규모는 1960년은 전체조사구의 0.6%를 조사하였으나 1975년 이후는 약 0.3%의 조사구를 추출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후조사결과와 인구학적 분석결과와 차이가 커 사후조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향후 One Number Census를 지향한다면 사후조사규모, 사후조사방법에 대한 깊은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2-2>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 순누락율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사후조사	3.72	1.77	0.82	-0.04	1.25	1.25	0.90
인구학적분석	2.02	1.96	1.40	-1.22	1.43	2.11	1.91

IV. 조사항목의 변천(인구항목 중심)

1. 개관

유엔(2007)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선정할 때에 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필요성, ii) 국제 비교의 중요성, iii) 응답 가능성 및 적절성, iv) 실지조사 및 자료처리과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에 필요한 국가 재원의 가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총조사 항목은 조사가가능성, 조사결과 유용성, 국민의 응답부담, 결과 이용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항목을 적절한 범위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과거 총조사의 조사항목과 가급적 일치시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5년 5개에 불과했던 조사항목수가 꾸준히 늘어왔는데 이는 조사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총조사항목수는 '0'자 연도가 '5'자 연도에 비해 더 많은 특징을 보여준다.

일제하에 실시된 5차례의 조사에서는 인구의 기본항목성명, 성별, 생년월(1930년 센서스 이후에는 생년월일 조사), 배우관계, 민적 또는 국적)위주로 조사하면서 총조사에 따라 출생지, 상주지, 직업, 문맹, 병역관계, 지정기능 등의 항목에서 몇 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일제하의 마지막 센서스인 1944년 센서스는 일제가 전시 인력동원을 위한 자료수집이 주목적이었던 관계로 직업항목에 특수기능을 추가하고 1940년에 조사하였던 지정기능

대신 학력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다.

정부수립 직후에 실시된 1949년 총조사에서는 출생연월일, 성별, 배우관계, 학력, 본적지 등 기본적 항목에 직업 및 특수기능 해방당시(1945년 8월 15일 현재)의 거주지, 군사경험(군의 국가 명, 최고계급, 병과), 징용경험(징용 개월 수) 등 11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해방당시의 거주지는 최초의 인구이동에 관한 항목으로서 일제시대 해외이주자의 8·15해방 이후 국내귀환 실태와 국내에서의 인구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사경험과 징용경험은 일제의 강압으로 학병 또는 징병으로 끌려간 청·장년 중 살아서 귀국한 숫자를 파악하여 후에 이를 토대로 대일 배상 계획을 수립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정부수립 후 제2회 총조사인 1955년 총조사에서는 인구의 기본적인 항목이외에 인구항목으로 장애상태와 전입시기 및 전 거주지를 가구항목으로 주거점유형태, 농가·비농가 구분을 처음으로 포함하여 12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주택부문을 처음으로 조사함에 따라 조사항목이 크게 늘어난 1960년 총조사는 35개 항목(인구 17, 가구·주택 18)을 조사하였다. 인구부문만을 보면 처음으로 출산력에 관한 항목인 총출생아수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를 노동력 접근법을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인구부문만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표본기법을 도입한 1966년 총조사는 인구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7개 항목은 전수조사하고 출산력과 경제활동 항목 7개 항목은 전체 조사구의 10%에 대해서 표본 조사하였다.

다시 주택부문을 포함한 1970년 총조사에서는 조사항목이 크게 늘어 총 31개 항목(인구 17, 가구·주택 14)을 조사하였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구이동 항목으로 5년 전 거주지를 처음으로 조사하였다. 불완전 취업자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1975년 총조사에서는 경제활동상태,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산업·직업 항목 이외에 취업사업장형태, 취업시간, 추가취업희망여부, 개인소득을 추가하고 또한 초혼연령을 처음으로 포함하여 31개 항목(인구 22, 가구·주택 9)을 조사하였다.

교통난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1980년 총조사에서는 교통실태파악을 위해 통근·통학에 관한 조사항목을 처음으로 표본항목에 포함하여 40개 항목(인구 25, 가구·주택 15)을 조사하였다. 처음으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항목에 포함한 1985년 센서스는 28개 전 항목(인구 16, 가구·주택 12)을 전수조사하였다.

광역 교통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소지역별 자료작성 요청으로 1990년 총조사에서는 통근·통학에 관한 항목을 전수로 조사하였으며 가구소득을 처음

으로 조사하였으나 조사부실로 결과를 집계할 수는 없었다 2000년 총조사는 노령인구 및 정보화에 관한 항목 성씨·본관을 포함하여 역대 총조사에서 가장 많은 50개 항목(인구 29, 가구·주택 21)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 표형태도 종전과 달리 책자 형태의 조사표를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최근 총조사인 2005년 총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별로 3개 항목을 표본항목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 2-3>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 수

연도	계			진수			표본		
	계	인구	가구, 주택	계	인구	가구, 주택	계	인구	가구, 주택
1925	5	5	-	5	5	-	-	-	-
1930	9	9	-	9	9	-	-	-	-
1935	6	6	-	6	6	-	-	-	-
1940	11	11	-	11	11	-	-	-	-
1944	10	10	-	10	10	-	-	-	-
1949	11	11	-	11	11	-	-	-	-
1955	12	10	2	12	10	2	-	-	-
1960	35	17	18	35	17	18	-	-	-
1966	14	14	-	7	7	-	7	7	-
1970	31	17	14	14	7	7	17	10	7
1975	28	19	9	11	6	5	17	13	4
1980	40	25	15	22	7	15	18	18	-
1985	28	16	12	28	16	12	-	-	-
1990	45	21	24	33	11	22	12	10	2
1995	28	16	12	17	7	10	11	9	2
2000	50	29	21	20	8	12	30	21	9
2005	44(3)	24	17	21	8	13	23(3)	16	4

주 1) 교육정도가 1960~1980년은 2개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1개 항목으로 간주

2) 출생아수 항목이 1966년과 1970년은 생존아수와 총출생아수가 1개 항목으로 되어있으나,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2개 항목으로 간주

3) 2005년은 시도별로 3개 항목을 추가로 표본조사 실시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연도

2. 2005년 총조사 조사항목의 특징

최근 조사인 2005년 총조사는 종전의 조사사항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주거의 질 및 복지 관련 항목을 종전보다 강화하여 아동보육, 활동제약, 근로 장소, 혼인연월, 추가계획자녀수를 처음으로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각 시·도가 선정한 3개의 특성항목을 표본항목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전국 항목은 41개 항목(인구 24개, 가구·주택 17개)이며, 인구항목 중 8개 항목은 전수로, 16개 항목은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전수조사 항목은 성명, 연령,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 인구의 기본항목 및 종교와 남북이산가족관련 항목이다. 남북이산가족은 처음으로 총조사에 포함한 항목으로 북한에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누구인지(없음,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친인척)와 남북이산가족이 있는 가구는 태어난 곳(남한, 북한, 해외)을 조사하였다. 표본조사항목은 통상 표본 조사항목인 인구이동(5년전 거주지), 경제활동관련항목(경제활동상태, 직업, 산업, 종사상지위, 근로장소), 통근·통학관련항목(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교통수단, 소요시간)과 함께 저출산과 관련하여 아동보육실태, 혼인연월,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와 고령화 항목으로 고령자생활비원천 활동제약상태를 조사하였다. 시·도별 특성항목으로 많은 시·도에서 선정하여 조사한 항목을 보면, 다른 시·도 이동사유, 자원봉사활동, 자녀출산시기, 노후준비방법 등의 인구관련 항목과 지역사회여건 만족도, 식수사용형태 등 주거에 관한 항목이다.

3. 주요 인구관련 항목의 변천

(1) 인구의 기본항목

인구의 기본항목 중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는 제1회 총조사 이래 매 총조사에서 전수조사하였다. 아울러 성명과 함께 성씨·본관을 1985년과 2000년 총조사에서 조사하였다. 연령 파악을 위한 생년월일은 1955년 총조사까지는 출생년월일(1925년 총조사는 출생년월)을 조사하였으나 1960년 총조사에서 세는 나이만 조사함에 따라 0세 인구가 파악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1966년 총조사이후는 정확한 만연령 파악을 위해 세는나이, 출생년월일, 양·음력, 띠를 모두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조사의 연령

자료는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가구통계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구주와의 관계는 1930년에 처음 조사된 후 1940년, 그리고 1949년 총조사이후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1990년 총조사까지는 개방식(자유기입형)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자료처리과정에서 분류·부호화하였다. 이는 과거 인구동태통계의 미비로 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적생아법에 의한 출산력 추정을 위한 것으로 1990년 총조사의 경우 39개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인구동태통계 질의 향상으로 조사응답부담, 자료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비해 조사결과의 활용도가 줄어들어 1995년 총조사에서는 폐쇄식(선택형)으로 변경하였다. 교육정도는 1940년 이후 계속조사하고 있으며 문맹여부는 1930년과 1960년, 1966년, 1970년, 1985년에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공은 1966년, 1980년 2000년에 조사하였다. 한편 종교는 1985년 이후 10년마다 '5'자연도에 조사하였다.

(2) 인구이동에 관한 항목

인구이동에 관한 조사항목은 출생지 직전거주지,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특정연도이전의 거주지 등이 있다. 초기 총조사인 1930년과 1940년 총조사에서는 출생지, 1949년 총조사에서는 해방당시 거주지, 그리고 1955년 총조사에서는 전입시기 및 전거주지를 각각 조사하였다. 그러나 1960년 총조사부터는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 및 1년 전 거주지를 주로 조사하였다.

출생지의 경우 1966년, 1975년, 2005년을 제외한 매 총조사에서 조사하였으며, 1960년, 1985년, 1990년, 2000년 총조사에서는 전수조사, 1970년, 1980년, 1995년 총조사에서는 표본조사하였다. 출생지의 행정단위는 1960년 총조사에서 시·도 단위, 그리고 1970년 총조사부터는 시·군·구 단위까지 조사하였다. 한편, 1년 전 거주지는 1980년, 1990년, 2000년 총조사에서 표본조사하였으며(단, 1985년 총조사에서는 전수조사), 5년 전 거주지는 1970년 총조사부터 매 총조사에서 표본조사(단 1985년은 전수조사) 하였다. 이들 항목의 이동단위로는 시·군·구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이동에 관한 조사는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통합시, 광역시 등 대규모 행정구역 변경은 도시·농촌간 인구이동분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편, 교통량의 증가가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통근·통학항목을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총조사부터 만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통근·통학 항목을 조사하였다(단, 1985년 총조사는 제외). 조사 항목은 통근·학 여부, 통근·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학 소요시간 등 4개 항목이다. 통근·학여부는 집 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기적으로 직장 또는 학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에 통근·학으로 보았고, 통근·학장소는 읍·면·동까지 조사하였다. 이용교통수단은 제시된 교통수단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1980년은 주된 교통수단 1개, 1990년은 이용교통수단 모두, 1995년, 2000년, 2005년은 주된 교통수단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통근·학 소요시간도 총조사마다 다소 달리 조사하였는데 1980년 총조사에서는 이 항목을 조사하지 않았고, 1990년은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을 조사하였으나, 1995년은 소요시간대를 제시된 유형에서 선택하도록 하였고, 2000년은 출발시각과 소요시간을, 2005년은 소요시간만을 조사하였다. 이들 항목은 1990년 총조사에서 전수조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본조사 하였다

(3) 출산력에 관한 항목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인구의 출산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총출생아수 지난 1년간 출생아수 등 출산력에 관한 항목을 표본조사하고 있다 인구총조사에서 출산력 조사결과는 특히 인구동태통계가 부실한 경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지난 1년간 출생아수를 조사한 총조사로는 1966년이 유일하다. 이는 당시 인구동태통계의 부실로 인해 우리나라 출산력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총출생아수는 1960년 총조사부터 표본조사(단, 1960년과 1985년은 전수조사)하였으며 특히, 영유아사망률의 간접추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66년부터 1990년 총조사까지는 생존자녀수와 사망자녀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1975년 총조사이후에는 출생아수를 남·여별로 조사하였다. 예외적으로 1995년 총조사에서는 출산력 항목을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로는 인구동태통계의 질 수준이 아주 높아진데다가 저출산 지속으로 인해 총조사에서의 조사 필요성이 적어진 한편, 항목수의 축소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역별·연령별 평균출산아수 등 총조사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출산지표의 작성 필요성, 저출산 경향과 다른 사회경제적 항목과의 연관분석 그리고 보육 등 다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2000년 총조사에서 다시 총출생아수를 포함하였다(김태현, 1997).

(4) 경제활동에 관한 항목

경제활동항목은 인구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며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다른 인구 속성과 연관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현재상태접근법(current status approach)은 1주일 또는 1일과 같이 짧은 기간동안 경제활동상태를 질문하여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노동력접근법(labour force approach)이라고도 한다.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은 1년과 같이 긴 기간동안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외 조사기준 기간이 없이 직업 사업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업자접근법(gainful worker approach)이 있으며, 이는 노동력접근법이 등장하기 전에 사용했던 개념이다³⁾

초기센서스 즉, 1955년까지의 총조사에서는 주로 유업자접근법을 채택하여 경제활동상태를 묻는 질문이 없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 산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총조사에서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여 조사기준 기간(총조사 기준일자 직전의 1 주간)의 주된 활동상태를 파악하였다. 이는 활동상태에 따라 조사대상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자로 파악된 사람에 대해 직업 산업, 종사상의 지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1985년, 1990년, 그리고 1995년 총조사에서는 조사기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평상시 또는 1개월 등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였다⁴⁾ 이는 1983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 고용구조통계조사가 대규모표본으로 지역별로 고용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자⁵⁾ 주로 직업과 산업만을 파악하여 다른 인구 속성과 연관하여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거 총조사의 결과와 시계열 분석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는 월별표본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노동력접근법을 채택)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김민경,1996). 따라서, 2000년 총조사에서는 일정한 기간(1

3) 미국 등에서 1930년대까지는 유업자접근법을 사용하였으나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를 측정할 수 없는 이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실업자를 파악할 수 있는 노동력접근법이 고안되었다. 노동력접근법은 미국의 1940년 인구센서스와 경상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4) 1985년 총조사에서는 조사기준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로 무엇을 하고 있나?', 1990년 총조사에서는 '평소에 수입 있는 일(1년 중 30일 이상)을 하나?', 1995년 총조사에서는 '지난 1개월 (10.1.~10.31.)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나?'라고 각각 조사하였다.

5) 고용구조통계조사는 지역, 산업, 직종간의 노동력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표본가구에 대해 1983년부터 3년 또는 5년 주기로 1997년까지 5회 실시되었으나, 월별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 수 확대 및 표본확대로 다양한 고용자료와 지역별 자료작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2001년에 조사가 중단되었다.

주간)의 경제활동상태와 구직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는가(currently available for work)를 조사하는 등 완전한 노동력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취업자에 대해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모두를 조사한 것은 1960년 총조사 이후(단, 1985년은 산업과 직업만 조사)이다. 산업과 직업은 취업자가 종사한 사업장과 종사한 일의 종류를 개방식 질문형태로 조사한 후 자료처리과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단, 1960년은 국세조사용 산업분류와 직업분류)에 의거하여 산업과 직업을 분류하고 부호를 기입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직업분류는 각각 1964년과 1963년에 제정된 후 2005년 총조사까지 산업분류는 8회, 직업분류는 5회 개정되어 산업과 직업자료의 시계열분석 시에는 관련 분류 내용의 변경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2005년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근로장소를 조사하였다

한편, 종사상지위는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임금·봉급근로자(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의 4개 유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1980년 총조사 이후(단, 1985년은 제외)에는 일관(배열순서는 총조사마다 약간 다름)되게 적용하였으나, 1975년 이전에는 다소 달리하였다. 즉, 1975년과 1970년은 임금·봉급근로자에 대해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상용고(1년 이상), 임시고(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고(1개월 미만)로 세분하여 6개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966년은 고용원을 둔 사업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합한 자영업주 가사협조(무급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일고의 5개 유형, 1960년은 자영업자, 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의 3개 유형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를 크게 자영업자 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면 각 유형의 명칭과 배열순서는 총조사마다 다소 다르긴 하나, 분석을 위한 분류상으로는 시계열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료 이용 시에는 적용된 경제활동인구 접근방법과 조사기준기간 취업자의 산업별비중변화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농업취업자의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 농번기에 따라 농업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에 변동폭이 컸으며 더구나 농업은 상대적으로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은데 전술한 바와 같이 총조사마다 접근방법 외에도 조사기준기간(reference period)이 다르기 때문이다.

6) 노동력 접근법에서 취업자는 조사기준기간(reference period) 중에 조금이라도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한 사람이며, 실업자(당시 1주 구직 실업자)는 조사기준기간 중 i)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ii) 구직 활동을 하였고, iii)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V. 센서스의 새로운 조류

1. 순환 센서스와 등록 센서스

고대 시대부터 과세 징병, 토지분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인류의 발달과 그 역사를 함께 하여 온 인구조사에 20세기 후반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개인 사생활 보호의식 증가로 인구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거부감이 증가하고, 방대한 조사인력 소요 및 실시 예산 증가로 공통처럼 거대해진 인구주택센서스에 대한 비판 의견이 증대하여 전통적인 인구주택총조사 방법을 탈피하여 인구센서스의 대안을 찾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먼저 전통적 방식의 센서스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70년대부터 행정등록 자료를 활용한 센서스 준비에 착수하여 현장조사 대신 행정등록 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행정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현장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조사비용을 절감하고 사생활 침해에 따른 응답자 반발을 피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센서스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순환센서스(rolling census)이다. 순환센서스는 미국 통계학자 Leslie Kish의 Rolling Sample에 관한 일련의 논문으로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프랑스와 미국에서 Rolling Sample 이론을 센서스에 접목시켜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주기 센서스 자료의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이 종전의 방법외에 새로운 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유엔이 2010년 라운드센서스를 위해 작성한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원칙과 권고」에서는 종래의 방법을 「전통적인 방법(traditional approach)」으로, 새로운 방법을 「대체적 방법(alternative approaches)」으로 정의하여, 각 방법의 장·단점, 적용 시의 조건 등을 기술하고 있다.

전통적인 센서스에서는 조사대상을 전수조사 함에 따라 현장조사에서 일부 조사대상자의 누락 문제가 상존하여 왔다 더구나 이러한 조사누락의 정도가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센서스 후에 수행되는 인구추계에서는 센서스의 누락·중복을 보정한 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센서스인구와 추계인구 간에는 차이나 동일한 시점에서 두 개의 인구수치가 작성되기도 한다 센서스의 조사누락과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과 영국에서는 2000년 라운드 센서스에서 조사누락 결과를 보정하여 센서스 결과를 추계인구와 일치시키는 One

Number Census 실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One Number Census 도입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영국은 2001년 센서스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One Number Census를 적용하였다.

2000년 라운드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국가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가가 전통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각국의 센서스 조사방법은 <표 2-4> 에 나탄 것처럼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 국가통계생산 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표 2-4> OECD 국가의 인구주택센서스 실시현황

센서스 실시방법		조사주기 및 국가 명
전통적인 조사방법 (현장조사)	전수 조사	· 5년주기 : 호주, 뉴질랜드, 일본 · 10년주기 :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아일랜드, 체코, 그리스, 헝가리, 스페인
	전수 + 표본	· 5년주기 : 캐나다, 한국 · 10년주기 : 멕시코
새로운 조사방법		
① 등록센서스 (행정자료 활용)		· 10년주기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② 등록센서스 + 표본조사(보완)		· 10년주기 :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③ 순환센서스		· 5년주기 : 프랑스
④ 현장조사 + 순환센서스(표본항목)		· 10년주기 : 미국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2007)

2. 등록센서스와 순환센서스의 선진국 사례

■ 등록센서스

등록센서스의 기본적인 취지는 응답자 부담 경감과 조사비용 절감을 위하여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존의 등록자료를 결합하여 보다 빈번하게 센서스 형태의 자료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들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본 정보는 조세,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정보와 추가로 결합될 수 있다. 등록센서스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등록센서스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전국을 커버하며 수시로 갱신한 양질의 인구 등록시스템의 구축 개인별 자료의 결합을 위한 개인의 고유 식별코드의 도입 등의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등록센서스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덴마크는 1960년대에, 나머지 3개 국가는 1970년대에 등록센서스로의 전환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완전한 형태의 등록센서스 실시에는 핀란드의 경우에는 20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노르웨이, 스웨덴은 3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가장 먼저 등록센서스를 실시한 덴마크는 이미 1920년대에 지역인구등록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1968년에 중앙인구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78년에 건물·거처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1981년 등록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1966년 덴마크통계청의 개편시 행정자료의 통계목적활용, 등록시스템구축에 참여권한을 부여받았다. 핀란드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등록센서스를 1990년에 실시한 이래 매년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현장방문 조사시보다 통계생산량은 10배가 증가하였으나 조사비용은 1/4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건 외, 2007). 스웨덴은 2000년 등록센서스 실시를 목표로 준비를 하였으나 행정자료간의 연계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가구·주택 등록자료의 미비로 실시 목표가 2011년으로 조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북유럽국가들의 등록센서스 결과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는 오래전부터 양질의 다양한 등록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센서스도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등록센서스 집계결과가 활용가능한 등록자료에만 한정되어 다양한 조사결과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등록자료가 등록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통계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등록센서스 실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셋째, 추가 항목이 필요하여 등록항목을 변경할 경우 전국적으로 완전한 등록 및 보완작업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마다 이용 가능한 속성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자료 기준의 국제적인 통일이나 자료의 질을 확보하는 것도 등록센서스 실시를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 순환센서스

전통적인 인구센서스의 실시방법은 특정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짧은 조사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비용이나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10년 또는 5년 주기로 실시하여 왔

다. 이러한 전통적인 센서스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중간년도의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센서스의 단점을 보완한 시의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자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매년 일부 지역 또는 표본 가구를 조사하여 매년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순환센서스(rolling census) 방법을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다.

순환센서스의 이론적 기반은 미국 통계학자인 Kish의 일련의 논문에서 확립되었다. 1990년에 발표된 그의 논문 "Rolling Samples and Censuses"에서 전통적인 센서스는 자료의 시의성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등록센서스는 제공 가능한 변수가 일부 인구관련 데이터에 불과하고 등록자료의 질이 확보되기가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첩되지 않고 누적되는 주기적인 표본조사를 통한 센서스 자료 생산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rolling sample과 패널표본을 결합하여 특정 조사시점에서의 추정자료와 전 주기 조사시점에서의 순(純) 변화량(net change)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표본설계방법(multipurpose split panel design)도 제시하였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센서스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거부 현상이 심해지고 센서스 실시를 위한 정부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1997년 예정된 센서스가 1999년에 연기되어 실시된 상황에서 소지역단위의 최신통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전통적인 센서스의 대안방법을 연구하였다. 프랑스는 인구등록시스템의 미비로 등록센서스 실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센서스의 조사비용 및 자료처리 비용을 장기간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인구 1만명 미만 지역은 1/5개 지역씩 돌아가면서 매년 전수조사하고 인구 1만명 이상 지역은 매년 8%의 표본을 추출하여 5년간 전국의 70% 인구를 조사하는 순환센서스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5개년 센서스 실시가 완료되는 2008년 말에 완결된 전국적인 센서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미국 센서스국(U.S. Bureau of Census)은 10년 주기 센서스 중간년도의 자료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1790년 첫 센서스 실시 이래 2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전통적인 조사방법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전수조사 항목과 표본조사 항목을 분리하여, 10년 주기 현장조사에서는 전수항목만을 조사하고 표본항목에 대해서는 약 3백만 가구(전국의 약 2.5% 표본)를 매년 조사하는 미국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를 새로이 개발하여 2005년부터 조사(자료의 누적)하고 있다. 비교적 응답부담이 적은 전수항목에 대해서만 전수조사함으로써 응답률 제고를 통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표본항목

에 대해서는 매년 통계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센서스국은 2006년부터 인구 6만5천명 이상 지역에 대해서 매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구 2만명 이상~6만5천명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3년간 자료를 누적하여 2008년부터, 그리고 인구 2만명 미만 지역은 5개년자료를 누적하여 2010년부터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환센서스는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매년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자료의 시의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함에 따라 표본 기법과 조사기법의 개선에도 기여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센서스와 달리 전국을 특정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횡단면(snapshot)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우며, 지역별로 조사시점이 달라 지역 간 비교작업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인구이동이 1주기 사이에 여러번 조사되거나 한번도 조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 결과 면밀한 조정을 하지 않으면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환센서스는 고도의 복잡한 표본추출 및 모델링의 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소지역통계를 위한 표본설계는 매년 갱신된 프레임이 필수적인데 이의 확보도 과제이다.

VI. 우리나라 총조사 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1. 총조사 환경의 변화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이른바 ‘현지실사’라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를 만나는 것이 조사의 성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맞벌이 부부와 혼자 사는 1인가구의 증가로 주간에는 응답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주택구조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와 고급 주택단지의 증가로 현장 조사원의 가구 접근이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다. 조사대상 가구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것과 동시에 개인들 사생활 보호의식의 증가로 인한 응답거부 현상도 증가하고 있어 현장조사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환경 악화와 더불어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의 걸림돌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데에 소요되는 방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총조사 실시 예산을 보면, 2005년에 1,290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2000년 총조사 비용 대비 약 55% 증가한 금액이다. 이러한 증가율을 감안할 때 통

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비용이 약 2,0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비용의 증가로 통계청 내부 및 외부(국회, 예산당국)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통계청, 2007).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조사비용 중 약 70%를 차지하는 조사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조사방법의 도입이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2005년 총조사에서 인터넷조사방법을 도입한 것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이었다

<표 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년도별 당해연도 예산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예산(억원) :	82	216	542	834	1,290
•증가율(%) :	-	163.4	150.9	53.9	54.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주택총조사 사업평가(2006)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2007년에 저비용·고효율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통계청, 2007). 개선방안은 현재의 조사체계를 유지하되 가구방문위주의 현장조사방법을 개선하는 단기개선방안과 현장 조사체계 자체를 변경하는 장기개선방안으로 되어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적용될 단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가구방문조사를 줄여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터넷 조사확대 우편조사 및 전화조사방법의 도입이다. 그리고 일부 행정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총조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총조사 누락인구를 보정하여 발표하는 One-number census 도입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 적용될 장기개선방안으로는 센서스 기본항목에 대해서는 행정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다양한 표본항목에 대해서는 순환센서스(Rolling Census)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1년부터 순환센서스를, 2015년에 등록센서스 실시를 목표로 연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행정 및 연구 환경을 토대로 총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검토과제

■ One-number census

총조사인구의 오차를 보정하여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용자에게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One-number census를 도입할 경우 신뢰성 있는 기법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겠지만 그에 앞서 우선 총조사결과 의 활용측면에서 그동안 one-number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며, 2010년 총조사에 대해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coverage survey, evaluation survey, post enumeration survey 등 명칭이 무엇이든지 이들은 모두 센서스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사후조사로서, 문제는 어떻게 정교한 사후조사를 실시하느냐가 중요한데 사후 조사 실시방법이나 관심은 낙후된 수준으로 그동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One-number 센서스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가 중요하다 하겠다

총조사 실시후에 어떠한 사후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One-number census 숫자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 수치가 통계로서의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더구나 지역별로 세분된 모든 표까지 하나의 수치로 작성코자 한다면 사후조사의 표본규모 사후조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인구와는 개념이 달라 상호간에 차이가 불가피한데, 시·도별로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와 일치시켜도 주민등록인구와는 여전히 차이가 발생하고 더구나 인구센서스 실시 목적이 소지역 자료를 작성하는 것인데 소지역으로 갈수록 차이는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인구자료 외에 가구와 주택자료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순환센서스

순환센서스에서 기본적인 2개의 파라미터는 조사기간과 표본추출률이다 (UN, 2007). 조사기간은 자료갱신의 주기와 관련이 있으며 표본추출률은 이용 가능한 예산액과 통계로서 필요한 지역구분의 상세함에 의존한다. 순환센서스의 총예산이 전통적인 센서스보다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건 외, 2007), 순환센서스의 도입 필요성은 갱신빈도가 높은 자료 제공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총조사의 어떠한 항목을 어느 정도의 지역단위까지 어떠한 주기로 필요한가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적인 요구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통계청은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매년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시·도단위까지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들 조사는 다양한 인구속

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 항목에 대한 심층분석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순환센서스의 도입결정에 앞서 이들 조사의 인구속성결과를 분석하고 필요 시 조사항목이나 조사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 연동표본(rotation sampling)을 적용하고 있고 소지역추정(small area estimation)에 대한 연구도 수년 째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청이나 학계의 연구진전이나 관심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순환센서스에 필요한 정교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추정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구가동율이 높는데 순환센서스 표본선정을 위한 프레임이 어떻게 보완해나가는지 하는 문제 지방정기관을 이용하여 조사할 경우에 지자체에 인력 조직 등의 확보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 등록센서스

등록센서스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인구규모가 적은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 인구등록제도가 잘 발달해 있었으며 인구등록 외에도 질 좋은 행정등록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데는 10~30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려면 인구자료는 주민등록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현재 완전 대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어 여기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김민경, 2002). 다만 등록센서스와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인구총조사에서 측정하는 상주인구와 다른 개념의 주민등록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상주인구를 작성할 것인지 전국인구만 보아도 주민등록인구가 상주인구보다 과다한데 차이가 더 심한 지역별인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연령별 인구 외에 인구의 다른 속성은 어떤 시스템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그 시스템은 전 국민을 포함하며 갱신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통계 외에 가구 및 주거실태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수 없이 많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보면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는 전국 및 지역별 인구규모의 차이에 일관성이 전혀 없을 뿐더러 주민등록부 내용의 빈약, 연령자료의 부정확 등 주민등록 자료가 센서스를 대체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연구내용은 등록센서스 실시방법의 모색보다는 주민등록

인구와 상주인구를 비교집계치 또는 일부 지역의 개인별 매치)하여 차이과
악만 반복하여 지적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 대표성 있는 표
본으로 주민등록인구·세대자료와 상주인구·가구를 개인별 및 가구별 매치
를 통한 비교연구는 오래 전인 1993년에 처음으로 이루어 졌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통계청, 1994). 주민등록인구·세대와 상주인
구·가구와는 시점, 지역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를 뿐 항상 상존하는 문제이
다.

통계조사 환경, 국가예산의 확보, 행정업무 전산화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
한다면 앞으로 국가통계에서 행정자료의 활용은 불가피하고 등록센서스는
앞으로 나갈 방향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개념의 불일치 외에도 주소체계 개
인·거처 식별코드가 완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
며, 많은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동일 명칭의 항목이 있다고
등록 센서스실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자료에 어떠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는 것도 인구센서스의 기본원칙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매년 구할
수도 없다.

등록센서스 전환 결정에 앞서 통계작성내용과 지역범위 주소체계정비, 그
리고 이용 가능한 행정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통계작성을 위한 DB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자료의 비밀보호장치, 국민의 컨센서스 확보, 주민등록자료의 정비
방안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통계청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되 통계청이 통계작성의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전통적인 센서스는 실시되어
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총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통계청이 직접 주택DB를
만들어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2005년 총조사결과 주택의
72%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인 점을 감안한다면 2010년
총조사결과를 기초로 주택 DB를 만들고 행정자료에 의해 갱신한다면 향후
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상당히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3. 추진방안

각종 센서스 대안적인 방법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효과와 필요성만을 강
조하기에 앞서 대안적인 방법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대안적인 방법이 정착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비용, 작성통계의 내용
및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등록센서스나 순환센

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통계환경, 정부나 사회적인 요구, 변화과정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안적 방법을 검토하는 이유가 가장 최근 조사인 2005년 총조사 결과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지 매년 총조사 수준의 통계를 작성하라는 요구때문인지, 또는 2015년에 예산확보가 우려되기 때문인지 등 분명히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센서스의 어떤 항목을 어떠한 주기로 어떠한 지역단위까지 작성되어야 하느냐에 대해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검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예산의 확보가 당면과제라면 조사방법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가구단위 총조사들의 조사시기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와 동시에 실시한다면 상당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조사원 업무량 배분문제 자료처리의 문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조사가 될 것이며 양 총조사의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부서들의 마찰이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정부의 다른 사업 예산이나 외국의 센서스비용과 비교하여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총조사 예산은 많은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총조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조사결과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총조사자료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소지역 통계작성 학술 연구에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행정구역변경, 조사 항목이나 각종 분류 코드의 시계열연결이 불편하고 제공하는 메타데이터의 부족은 이용자들로부터 항상 지적받는 문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센서스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센서스전문가를 키워야한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인사시스템으로는 정부내부에 센서스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정부 내에 어렵다면 외부에라도 센서스전문가를 배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자 및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합의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식적인 절차는 물론 다양한 단계와 방법을 통한 공식·비공식적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방법의 변경은 국가통계작성체계의 개편 등 국가통계체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문성이나 통계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통계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국회예산정책처. 2006. 『인구주택총조사사업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 김민경. 1996. “인구의 경제활동상태조사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
19(1): 73-92. 한국인구학회
- _____. 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 도서출판 글로벌
- _____. 2002. “제1장 인구센서스의 발전과 특징. 『한국의 인구 1』 :21-48. 김두
섭·박상태·은기수 편. 통계청
- 김태현. 1997. “인구총조사의 방법과 평가”. 『한국인구학』 20(1): 27-46.
한국인구학회
- 이건 외. 2007.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방법론 연구』 . 통계청
-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 통계청
- _____.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 .통계청
- _____. 1992. 『한국통계발전사 I, II』 . 통계청
- _____. 1994. 『1993년 주민등록평가조사 집계결과 보고서』 . 내부자료. 통계청
- _____. 2007.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 . 통계청
- Census Bureau, U.S. “American Community Survey”.
<http://www.census.gov/acs/www/index.html>
- Jean-Michel Durr.2004. "The New French Rolling Census". UNECE Seminar
on New Methods for Population Census의 INSEE의 국가보고서
- United Nations.1998.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 1*.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67/Rev.1
- United Nations.2007.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 2*.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67/Rev.2
- Waite, Preston J.2003. "The Reengineered 2010 Census".pp2-10. Statistics Canada
International Symposium Series. Statistics Canada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 구조 및 지역분포

이재원 (인구조사과)

제 1 장 머리말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의 개별 조사를 통하여 조사시점의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의 규모, 구조 및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Snapshot)을 조망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에 처음 조사되어 이후 매 5년마다 실시되어 왔으며 200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는 제17차 조사에 해당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경제개발 계획이나 가족계획 사업 등 국가 주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으며, 민간부분의 사업계획 수립, 학술연구, 가구부문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 자료 제공 등에서도 활용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인구·가구·주택의 기본항목과 함께 혼인연월, 추가계획자녀수 등 저출산·고령화 관련 항목과 거주층 등 주거의 질 관련 항목이 조사항목에 추가되었다. 또한 지역통계 생산 강화를 위하여 시도별로 3개 항목씩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자료는 2005년에 조사된 44개 항목 중 인구의 기본특성인 인구의 규모, 구조 및 지역적인 분포에 관한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제 2 장 인구규모

인구(국민)가 국토, 주권과 함께 국가의 한 구성요소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의 기본 구성요소로서 사회경제 각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양적인 면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 국가 및 지역별 인구의 규모이다.

2005년 11월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728만명으로 조사되었다. 50년 전인 1955년에 조사된 2,153만명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50년 동안 약 2.2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

년 이후 1% 이하로 떨어져 0.5%내외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2005년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0.5%로 나타났다

표1.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연도별 총조사 인구 (단위 : 천명, %)

총조사년도	인 구	연평균증가율	총조사년도	인 구	연평균증가율
2005	47,279	0.5	1970	31,466	1.4
2000	46,136	0.7	1966	29,193	2.6
1995	44,609	0.5	1960	24,989	3.0
1990	43,411	1.4	1955	21,526	1.1
1985	40,448	1.6	1949	20,189	4.0
1980	37,436	1.5	1944	16,565	-
1975	34,707	2.4			

2005년 기준 세계인구는 64억 6천 5백만명으로 이 중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0년 0.76% 보다 조금 감소한 0.73%이다. 세계인구 증가율 1.2% 보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0.5%)이 낮아 세계인구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별 인구순위는 2000년에 이어 26위이다.

표2. 우리나라 인구와 세계인구 현황 (단위 : 백만명, %)

	2000년		2005년		증감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구	연평균증감률
세계인구	6,086	100.0	6,465	100.0	379	1.2
선진국	1,193	19.6	1,211	18.7	18	0.3
개도국	4,892	80.4	5,253	81.3	361	1.4
아시아	3,676	60.4	3,905	60.4	230	1.2
대한민국	46	0.76	47	0.73	1	0.5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2005

2005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474명(km²당)으로 2000년의 464명(km²당)보다 10명(km²당) 높아졌다. 다른 나라의 인구 밀도와 비교해 보면 방글라데시 985 명/km², 대만 632 명/km²에 이어 474 명/km²으로 세계 3위로 조밀하게 살고 있는 국가로 조사되었다.

표3. 주요국가의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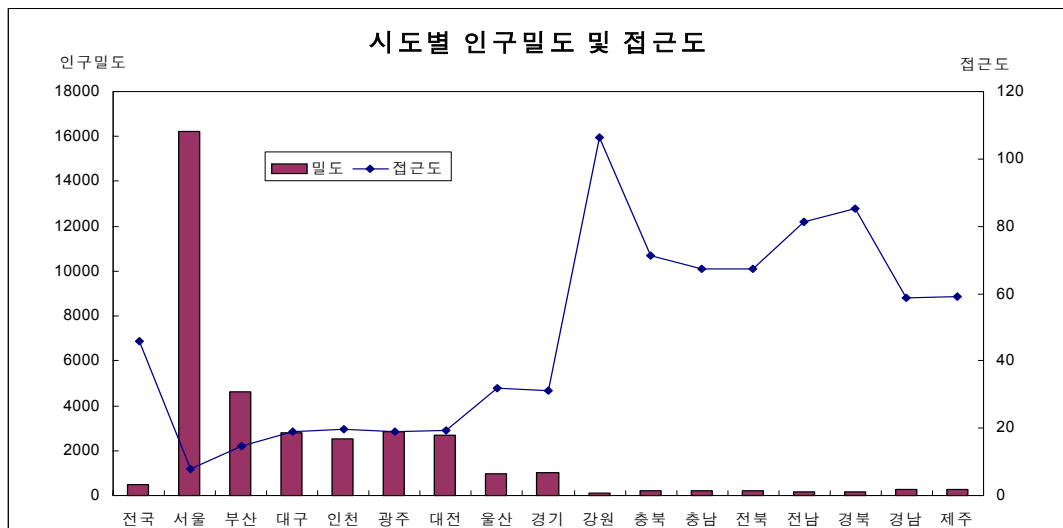
(단위 : 명/km², 천명)

▷ 국가별 인구밀도 순위 ◁			▷ 주요국가의 인구 밀도 ◁		
국가명	인구밀도	인구	국가명	인구밀도	인구
방글라데시	985	141,822	중 국	137	1,315,844
대 만	632	22,277	인 도	336	1,103,371
한 국	474	47,279	미 국	31	298,213
네덜란드	392	16,299	인도네시아	117	222,781
일 본	339	128,085	브라질	22	186,405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2005

인구밀도와 함께 인구 밀집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지표는 인구접근도이다. 인구접근도는 사람들이 지역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 했을 때 인접사람과의 평균거리를 말하며, 인접하고 있는 사람과의 평균거리가 짧을수록 조밀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구접근도 계산공식은 $\text{인구접근도} = \sqrt{\text{국토면적 (km}^2\text{)} / \text{인구 (명)}}$ 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인구접근도는 45.9m로 우리나라 인구를 전국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개인간 평균거리는 45.9m임을 말해주고 있다. 2000년 인구접근도 46.4m보다는 0.5m 가까워져 인구증가로 인하여 거주환경이 조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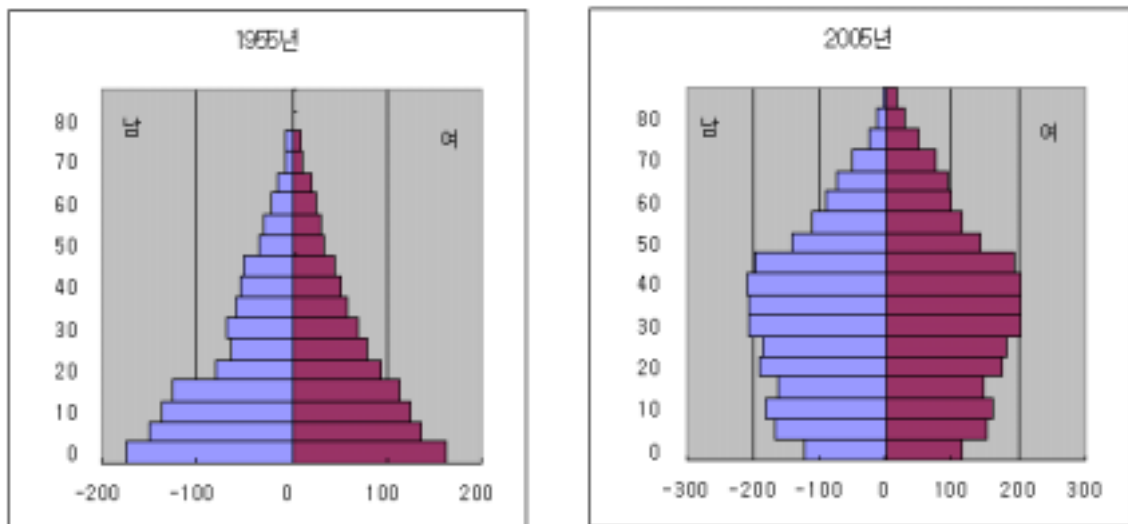
제 3 장 인구구조

1절 연령구조

인구구조는 전체 인구를 인구의 개별 속성에 따라 분류하여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연령별 인구는 인구구조 분석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 노동력 공급, 고령화 사회대책 마련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인구피라미드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여 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피라미드는 30~40대의 인구가 16,233천명(34.5%)으로 연령별 인구의 중심을 이루면서 30대 미만과 50대 이상이 적은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0년전인 1955년의 연령별 구조는 후진국형인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였으나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의 영향으로 피라미드 아래쪽이 줄어들어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 선진국의 인구 피라미드 형태는 30, 40대와 저연령층의 구조가 비슷한 『중형』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일정한 출산률이 유지되면 중형의 인구피라미드로 변경될 것이다.

< 1955년 및 2005년 인구피라미드 >



5세 계급별 인구는 40~44세 인구가 412만명(8.8%)으로 가장 많으며, 30~40대 인구가 1,62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생산활동의 중심이 되는 30~40대가 우리나라 인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경제활동에 매우 유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향후 15년 이후에는 인구의 중심이 되는 30~40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되어 노년부양비 등 고령화 사회 관련 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령구조를 간편하게 하나의 지표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중위연령이 있다. 중위연령은 전 국민을 나이를 기준으로 배열하였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연령을 말한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35.0세로 10년 전인 1995년 29.7세에 비해 5.3세가 증가하였고, 2000년 32.0세에 비해 3세가 높아져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4. 주요 국가의 중위연령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	미국	방글라데시
42.9	39.3	32.6	24.3	36.1	22.1

지역별로는 동지역의 중위연령이 34.0세, 읍지역이 35.8세, 면지역이 46.5세로 농촌인구로 볼 수 있는 읍면지역의 중위연령이 동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인데 특히, 면지역 여자의 중위연령이 50.3세로 고령화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유소년인구(0~14세)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인 고령화지수로도 측정할 수 있다. 2005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지수는 48.6로 2000년 35.0보다 13.6 증가하였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의료비 등 노인부양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국가생산력이 감소하며 저축 및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표5. 1985년 이후 고령화지수 변화

(단위 : %)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65세이상 (%)	4.3	5.0	5.9	7.3	9.3
고령화지수	14.5	19.4	25.8	35.0	48.6

※ 고령화 지수 = {노년인구/유소년인구}×100

2절 학력별 인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는 11.01년으로 2000년 평균 교육년수 10.24년보다 0.77년 증가하였다. 평균 교육년수 11년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30세이상 인구의 평균 학력수준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 이상 인구 중 여성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1.1%에서 2005년 43.6%로 2.5%p 증가하여 성별에 따른 교육격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국민 평균 교육년수 (30세이상 인구의 교육년수)

(1995) 9.7년 → (2000) 10.2년 → (2005) 11.0년

6세 이상 총조사 인구(44,042천명)의 교육상태별 구성비를 보면 초·중·고, 대학 등 정규학교 재학자가 10,888천명(24.7%), 졸업자는 29,866천명(67.8%), 중퇴자는 962천명(2.2%) 등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는 조기교육에 대한 희망 등으로 6세인구의 취학률이 39%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5년의 경우 25.8%로 하락하였다. 부모들이 동급생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것을 우려하여 조기입학을 꺼리는 것이 반영된 듯하다.

※ 6세인구의 재학율

(1990) 39.0% → (1995) 36.2% → (2000) 31.3% → (2005) 25.8%

불취학자는 2,325천명이며 불취학률은 2000년 불취학률 6.3% 보다 1.0%p 감소한 5.3%이다. 불취학자 중 9세 이상의 무학자는 1,871천명이며 이들의 78.1%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문맹여부가 1970년까지 조사되었으나 문맹률이 떨어지고 현장조사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이후에는 조사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문맹률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인구주택총조사 불취학자를 대상으로 문맹률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문맹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인구의 학력별 인구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학력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의 고학력화 현상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고학력 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른다. 우리사회의 고학력화 현상은 높은 청년실업율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3절 혼인상태별 인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인구 중 유배우자가 59.3%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혼자 30.2%, 사별자 7.6%, 이혼자 3.0%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총조사와 비교하면, 유배우 인구의 비중은 1.3%p 감소하고 이혼자의 비중이 1.1%p 증가하였다.

연령별 혼인상태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미혼자 비중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10%p이상 증가하여 만혼화 또는 독신주의 경향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자 비중은 45~4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0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0~60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6. 연령계급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단위 : %, %p)

연령	2005				2000년 대비 증감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30.2	59.3	7.6	3.0	0.1	-1.3	0.2	1.1
15~19	99.7	0.3	0.0	0.0	0.2	-0.2	0.0	0.0
20~24	96.0	3.9	0.0	0.1	2.5	-2.5	0.0	0.0
25~30	70.6	28.9	0.1	0.5	14.9	-14.9	0.0	0.0
31~34	30.2	67.7	0.2	1.9	10.7	-11.0	-0.1	0.4
35~39	13.0	82.4	0.6	3.9	5.5	-6.1	-0.3	1.0
40~44	6.1	86.5	1.6	5.8	2.3	-3.2	-0.6	1.5
45~49	3.4	86.5	3.4	6.7	1.4	-2.5	-1.0	2.3
50~54	2.0	85.7	6.3	6.0	0.8	-1.4	-1.6	2.2
55~59	1.2	83.3	11.0	4.5	0.5	0.0	-2.3	1.9
60~64	0.8	78.3	18.0	2.8	0.3	0.8	-2.4	1.3
65+	0.5	55.4	42.9	1.1	0.2	3.5	-4.0	0.4

4절 종교 인구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종교인구는 24,97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를 차지하여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항목은 10년주기로 조사되고 있는데 10년전인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종교인구는 10년동안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연령별 종교 인구를 보면, 남자인구 중 종교인구 비율은 49.7%, 여자인구중 종교인구 비율은 56.4%로 여자가 6.7%p 높으며 연령별 종교인구의 비율은 남자는 50대~60대, 여자는 60~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유형별 분포를 보면 총인구 중 불교인구가 2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신교가 18.3%, 천주교가 10.9% 순으로 조사되었다. 10년전과 비교해 보면 3대 종교 중 불교와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천주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개신교에서 신도 수 감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신도 감소 이유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표7. 종교유형별 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1995		2005		증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율
총 인 구	44,554	100.0	47,041	100.0	2,488	5.6
종교 있음	22,598	50.7	24,971	53.1	2,373	10.5
· 불 교	10,321	23.2	10,726	22.8	405	3.9
· 기독교(개신교)	8,760	19.7	8,616	18.3	-144	-1.6
· 기독교(천주교)	2,951	6.6	5,146	10.9	2,195	74.4
· 유 교	211	0.5	105	0.2	-106	-50.4
· 원불교	87	0.2	130	0.3	43	49.6
· 기 타	268	0.6	247	0.5	-21	-7.7
종교 없음	21,953	49.3	22,070	46.9	117	0.5

※ 종교없음에는 종교미상 포함, 총인구에는 외국인 제외

5절 남북이산 가족

남북이산가족 항목은 2005년 총조사에서 남북통일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처음 조사한 항목이다. 남북이산가족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전수조사가 아니면 전체적인 규모나 분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남북이산가족은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는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인구는 716천명으로 이는 전 국민의 1.5%에 해당된다.

남북이산 가족 인구 중에서는 기타 친인척을 북한에 둔 인구가 580천명으로 가장 많고, 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을 북한에 둔 인구는 136천명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을 북한에 둔 이산가족 136천명 중에는 형제자매를 북한에 둔 인구가 76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북한에 부모를 둔 인구 48천명, 자녀 7천명, 배우자 4천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8. 이산가족 인구규모 및 가족관계

(단위 : 천명, %)

	총인구	있음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계	47,041	716	48	7	4	76	580
(구성비)	(100.0)	(1.5)	(0.1)	(0.0)	(0.0)	(0.2)	(1.2)
남	23,466	349	31	3	1	47	266
여	23,576	367	17	4	3	29	314

제 4 장 인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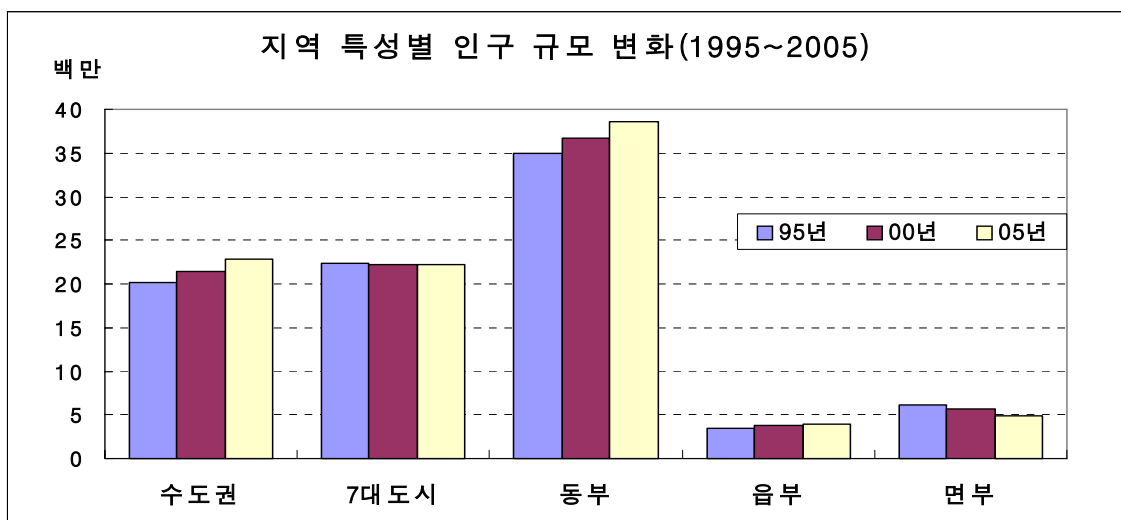
1절 시도별 인구분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우리나라 인구 47,279천명의 시도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인구가 10,415천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시도로 조사되었다. 경기도는 서울 등 다른 시도의 유출인구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증가 등으로 인하여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시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권의 광역화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도시성장이론에 따르면 처음에는 도시가 인근지역의 인구를 흡입하여 도시규모가 커지나 도시규모가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도심이 혼잡해지고 생활이 불편해지면 도심인구의 교외로의 탈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심지역과 교외지역이 연결되는 대도시권이 형성된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인구의 경기도 이주현상도 수도권 광역화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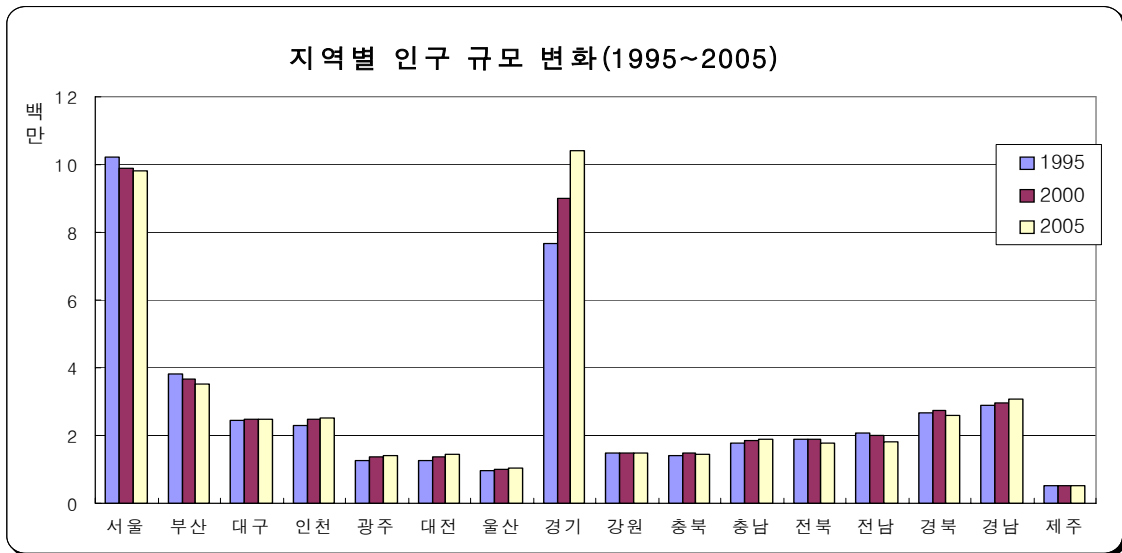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인구는 1990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05년에는 9,820천명으로 경기도의 인구보다 적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인구를 말하는 수도권 인구는 22,767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8.2%를 차지하며, 5년 전인 2000년보다 1,412천명(6.6%) 증가하였다.

※ 수도권 인구 : ('95) 20,189천명 → ('00) 21,354천명 → ('05) 22,767천명
 <45.3%> <46.3%> <48.2%>



시도별로 지난 5년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1,431천명), 대전(75천명), 광주(65천명) 등 8개 지역이며, 전남(-177천명), 서울(-75천명), 부산(-139천명) 등 8개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인구증가율은 경기도 인구 증가율이 15.9%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고 전남이 8.8% 감소하여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증가	인구 감소
경기(15.9%), 대전(5.5%), 광주(4.8%), 제주(3.6%), 울산(3.4%), 경남(2.6%), 충남(2.4%), 인천(2.3%)	전남(-8.8%), 전북(-5.6%), 경북(-4.3%), 부산(-3.8%), 강원(-1.5%), 서울(-0.8%), 대구(-0.6%), 충북(-0.4%)



2절 시군구별 인구분포

시·군·구별 인구를 살펴보면 전체 시군구(234개)의 56.8%인 133개 시군구의 인구규모가 10만명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시 77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시는 경기도 수원시로 인구가 1,044천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남 계룡시로 32천명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88개의 군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군은 울산 울주군으로 인구가 165천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군은 경북 울릉군으로 8천명으로 조사되었다. 특·광역시 의 69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서울시 노원구(604천명)이며, 부산시 강서구(47천명)가 가장 인구가 적은 구로 나타났다.

표9. 2005년 인구규모 상위 및 하위 시군구 현황

(단위 : 천명)

	시		군		구	
상위	경기 수원시	1,044	울산 울주군	165	서울 노원구	604
	경기 성남시	935	대구 달성군	151	대구 달서구	594
	경기 고양시	867	충남 당진군	113	서울 송파구	579
하위	충남 계룡시	32	경북 울릉군	8	부산 강서구	47
	강원 태백시	55	인천 용진군	12	부산 중 구	52
	경기 과천시	57	경북 영양군	18	인천 동 구	75

표10. 인구규모별 시군구 수

(단위 : 개)

	2000년				2005년			
	계	시	군	구	계	시	군	구
계	234	72	93	69	234	77	88	69
5만 미만	43		43		53	1	51	1
5~10만	56	10	41	5	48	12	32	4
10~20만	48	28	9	11	40	25	5	10
20~30만	28	11		17	31	16		15
30~40만	28	11		17	28	8		20
40~50만	14	2		12	15	4		11
50만 이상	17	10		7	19	11		8

시·군·구의 인구변동 현황을 보면 234개 시군구 중 82개 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152개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도 용인시로 지난 5년간 304천명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 안산시로 119천명이 증가하였고 충남 천안시가 104천명 증가하였다. 인구증가율 기준으로는 용인시 증가율(78.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 광주시가 63.8%, 화성시가 52.4% 증가하였다.

인구증가 상위 15개 시군구에는 경기도의 10개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수도권 광역화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시 송파구로 55천명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대구 서구가 39천명, 서울 강동구가 29천명이 각각 감소하였다.

표11. 인구변동 상위 시군구 현황

(단위 : 천명)

순위	시군구	2000년	2005년	증감	
				인구	증감률(%)
1	경기 용인시	386	690	304	78.6
2	경기 안산시	563	682	119	21.1
3	충남 천안시	418	522	104	24.9
4	경기 고양시	764	867	103	13.5
5	경남 김해시	332	432	100	30.1
6	경기 화성시	189	289	99	52.4
7	경기 수원시	947	1044	97	10.3
8	경기 남양주시	341	426	85	25.0
9	경기 시흥시	305	390	84	27.6
10	경기 광주시	126	206	80	63.8
11	경기 부천시	761	839	77	10.2
12	경기 파주시	178	242	64	35.8
13	대전 유성구	162	223	60	37.2
14	광주 광산구	248	308	60	24.2
15	대구 북구	401	460	60	14.9

3절 동읍면별 인구분포

동·읍·면별 인구를 보면 동지역 인구는 38,515천명(81.5%), 읍지역 인구는 3,944천명(8.3%), 면지역인구는 4,820천명(10.2%)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 등으로 동지역 인구는 증가한 반면, 면지역 인구는 감소하여 농촌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우리나라의 도시화율(동지역 인구비중)은 81.5%로 2000년의 79.7%보다 1.8%p 증가 하였다.

지역별 평균인구를 보면 동지역은 17,806명, 읍지역은 18,781명, 면지역은 4,017명이며 전국 3,573개 읍면동 중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화성시 태안읍으로 124천명이며 다음이 김해시 내외동 90천명, 거제시 신현읍이 84천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12. 동·읍·면지역 인구

(단위 : 천명,%)

구분	2000년			2005년			증감	
	개수	인구	구성비	개수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가율
전국	3,504	46,136	100.0	3,573	47,279	100.0	1,143	2.5
동지역	2,085	36,755	79.7	2,163	38,515	81.5	1,760	4.8
읍지역	197	3,756	8.1	210	3,944	8.3	188	5.0
면지역	1,222	5,625	12.2	1,200	4,820	10.2	-805	-14.3

가구 · 주택 부문

제 1 장 가구부문

1 절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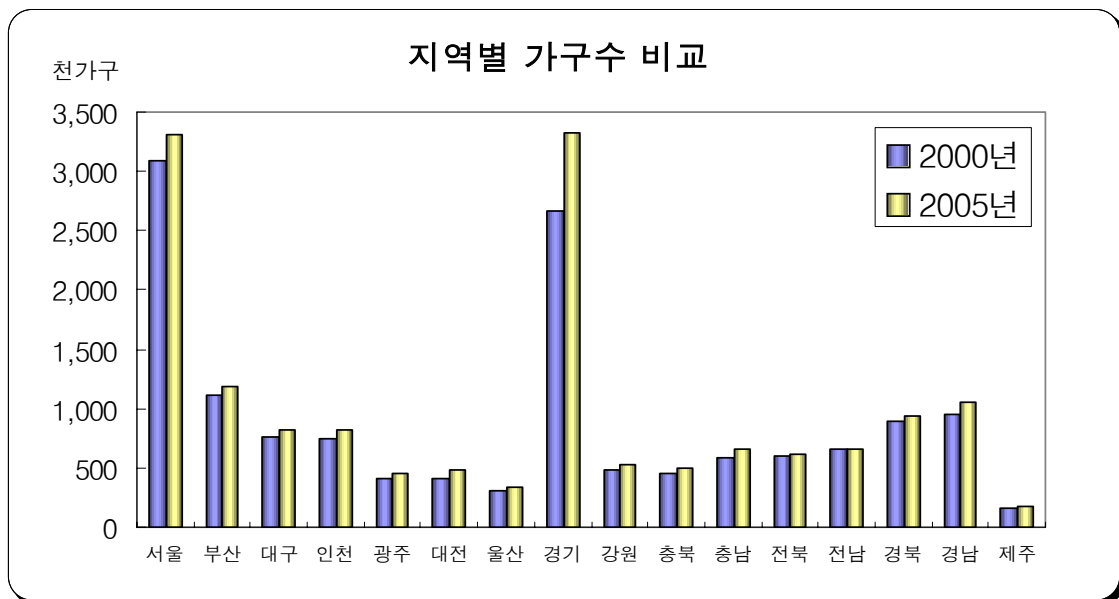
2005. 11. 1일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는 15,988천 가구로 2000년에 비해 1,597천가구(11.1%) 증가하여 같은 기간의 인구 증가율 2.5%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1> 연도별 총가구 증가율

	1995	2000	2005
총가구수(천가구)	12,991	14,391	15,988
증가율(%)	14.2	10.8	11.1

이 중 일반가구는 15,887천 가구로 2000년보다 1,575천 가구(11.0%)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에서 많이 늘어났고 증가율로는 경기, 대전, 제주가 높게 나타났다.

※ 이하 가구에 관한 특성 분석은 전체 15,988천 가구 중 기숙사, 사회시설 등 집단가구 17천 가구(0.1%)와 외국인가구 85천 가구(0.5%)를 제외한 일반가구 15,887천 가구를 중심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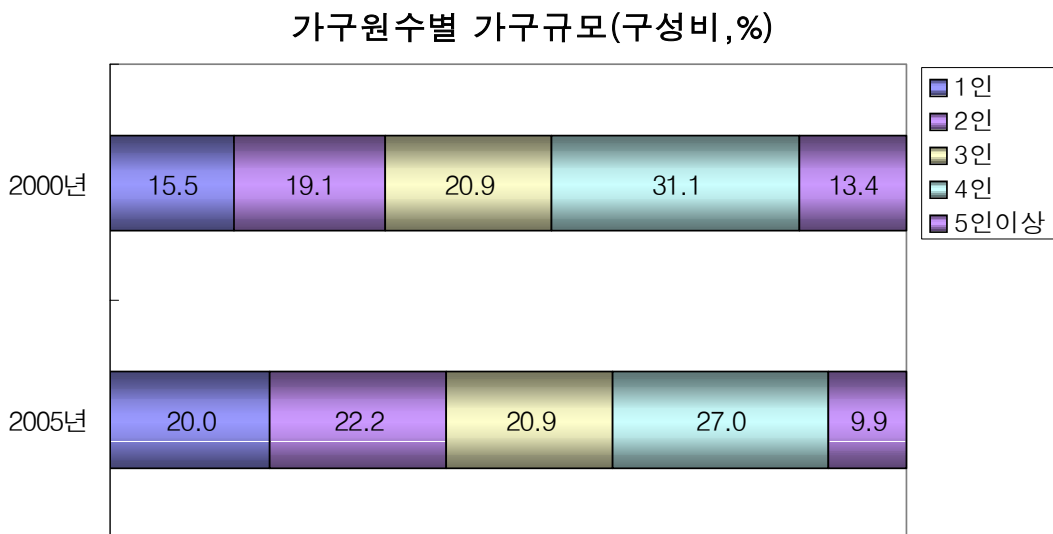
<표 2> 가구수

(단위 : 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	증감률
총 가구	14,391,374	15,988,274	1,596,900	11.1
일반가구	14,311,807	15,887,128	1,575,321	11.0
집단가구	14,417	16,551	2,134	14.8
외국인가구	65,150	84,595	19,445	29.8
일반가구	14,311,807	15,887,128	1,575,321	11.0
서울	3,085,936	3,309,890	223,954	7.3
부산	1,120,186	1,186,378	66,192	5.9
대구	759,351	814,585	55,234	7.3
인천	747,297	823,023	75,726	10.1
광주	408,527	460,090	51,563	12.6
대전	413,758	478,865	65,107	15.7
울산	306,714	339,095	32,381	10.6
경기	2,668,886	3,329,177	660,291	24.7
강원	487,420	520,628	33,208	6.8
충북	461,463	505,203	43,740	9.5
충남	589,144	659,871	70,727	12.0
전북	601,965	619,958	17,993	3.0
전남	664,287	666,319	2,032	0.3
경북	887,917	938,840	50,923	5.7
경남	951,393	1,056,007	104,614	11.0
제주	157,563	179,199	21,636	13.7

2절 가구원수별 가구규모

가구원수별 가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4인가구가 전체의 27.0%로 가장 많으며, 2인가구, 3인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 비해 4인이상 가구의 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1인가구는 42.5%, 2인가구는 28.9%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구원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여 2000년(3.12명)에 비해 0.24명이 줄어든 2.88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2.93명, 읍면지역 2.65명으로 읍면지역이 동지역 보다 0.28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읍면지역에서는 교육, 취업 등으로 인해 젊은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3인이상 가구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3> 가구원수별 가구규모 및 평균가구원수

(단위 : 천가구, %, 명)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평균 가구 원수
전 국	2000년	14,312 (100.0)	2,224 (15.5)	2,731 (19.1)	2,987 (20.9)	4,447 (31.1)	1,443 (10.1)	345 (2.4)	134 (0.9)	3.12
	2005년	15,887 (100.0)	3,171 (20.0)	3,521 (22.2)	3,325 (20.9)	4,289 (27.0)	1,222 (7.7)	267 (1.7)	93 (0.6)	2.88
	증 감 (증감률)	1,575 11.0	946 42.5	790 28.9	338 11.3	-158 -3.6	-221 -15.3	-78 -22.6	-42 -31.0	-0.24
동 지 역	2000년	11,229 (100.0)	1,643 (14.6)	1,890 (16.8)	2,420 (21.5)	3,778 (33.7)	1,159 (10.3)	252 (2.2)	89 (0.8)	3.18
	2005년	12,745 (100.0)	2,440 (19.1)	2,558 (20.1)	2,771 (21.7)	3,703 (29.1)	1,006 (7.9)	203 (1.6)	65 (0.5)	2.93
	증 감 (증감률)	1,515 13.5	797 48.5	668 35.4	351 14.5	-75 -2.0	-153 -13.2	-49 -19.3	-24 -27.0	-0.25
읍 면 지 역	2000년	3,082 (100.0)	582 (18.9)	841 (27.3)	568 (18.4)	669 (21.7)	284 (9.2)	93 (3.0)	46 (1.5)	2.90
	2005년	3,142 (100.0)	731 (23.3)	962 (30.6)	554 (17.6)	586 (18.7)	217 (6.9)	64 (2.0)	28 (0.9)	2.65
	증 감 (증감률)	60 1.9	149 25.6	122 14.5	-13 -2.3	-83 -12.4	-68 -23.8	-29 -31.6	-18 -38.8	-0.25

3절 가구의 세대구성 및 가족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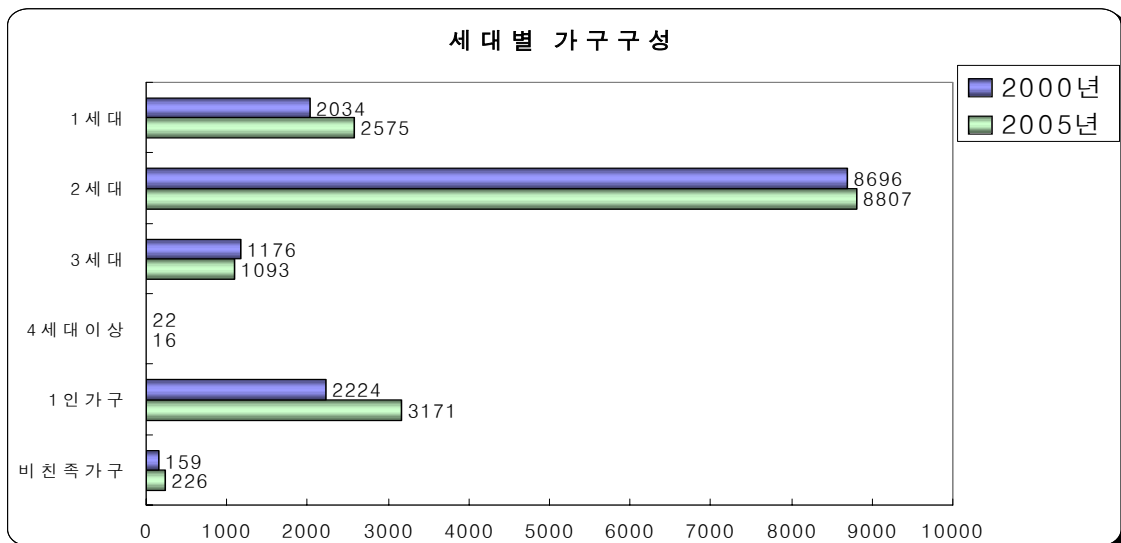
일반가구 중에는 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2세대 가구의 비중이 55.4%로 가장 많고 1세대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에 비해 1세대 가구(26.6%증가)와 2세대 가구(1.3%증가)는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7.1%감소)와 4세대 이상 가구(27.6%감소)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2세대 가구 중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 가구가 6,702천 가구로 2000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한부모+자녀’ 가구는 21.9% (246천가구) 증가하였다.

<표 4> 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단위 : 천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계		14,312	(100.0)	15,887	(100.0)	1,575	11.0
천 족 가 구	· 1세대가구	2,034	(14.2)	2,575	(16.2)	541	26.6
	· 2세대가구	8,696	(60.8)	8,807	(55.4)	111	1.3
	부부+자녀	6,892	(48.2)	6,702	(42.2)	-190	-2.8
	한부모+자녀	1,124	(7.9)	1,370	(8.6)	246	21.9
	조부모+손자녀	45	(0.3)	58	(0.4)	13	28.5
	· 3세대가구	1,176	(8.2)	1,093	(6.9)	-84	-7.1
	· 4세대이상가구	22	(0.2)	16	(0.1)	-6	-27.6
1인 가구		2,224	(15.5)	3,171	(20.0)	946	42.5
비천족 가구		159	(1.1)	226	(1.4)	67	41.9



4절 가구주의 특성별 가구구성

가구주를 성별로 보면 남자 가구주가 12,402천명(78.1%), 여자가구주 3,485천명(21.9%)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6배 정도 많지만 2000년에 비해 여자 가구주 증가율(31.4%)이 남자(6.4%)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은 40~49세가 27.5%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도 22.4%로 나타났으며, 여자 가구주 가구는 3,485천 가구로 2000년에 비하여 31.4%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4.4%로 가장 많았다.

<표 5> 가구주의 성·연령별 가구구성

(단위 : 천명,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계	14,312	100.0	15,887	100.0	1,575	11.0
30세 미만	1,436	10.0	1,388	8.7	-48	-3.3
30~39세	3,788	26.5	3,586	22.6	-202	-5.3
40~49세	3,807	26.6	4,369	27.5	562	14.8
50~59세	2,511	17.5	2,979	18.7	468	18.6
60세 이상	2,770	19.4	3,565	22.4	795	28.7
남 자	11,659	100.0	12,402	100.0	743	6.4
30세 미만	1,012	8.7	845	6.8	-167	-16.5
30~39세	3,422	29.4	3,085	24.9	-337	-9.8
40~49세	3,294	28.3	3,687	29.7	393	11.9
50~59세	2,057	17.6	2,417	19.5	360	17.5
60세 이상	1,873	16.1	2,367	19.1	494	26.4
여 자	2,653	100.0	3,485	100.0	832	31.4
30세 미만	423	15.9	544	15.6	121	28.5
30~39세	366	13.8	501	14.4	135	36.8
40~49세	512	19.3	682	19.6	170	33.2
50~59세	455	17.2	561	16.1	106	23.4
60세 이상	896	33.8	1,197	34.4	301	33.6

가구주의 교육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 보유자가 35.4%(5,629천명)로 가장 많고, 4년제 대학교, 초등학교 이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 비해 중학교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 이상은 증가하였고 특히, 대학교(39.9%)와 대학원 이상(37.4%)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 가구주는 2000년에 비하여 2.6% 감소하였으나 고령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지역에서 39.4%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동. 읍면 지역 모두 대학교 이상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다.

<표 6> 가구주의 지역별 교육정도

(단위 : 천명,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전 국	14,312	(100.0)	15,887	(100.0)	1,575	11.0
초등이하	2,915	(20.4)	2,839	(17.9)	-75	-2.6
중 학 교	1,848	(12.9)	1,776	(11.2)	-72	-3.9
고등학교	5,265	(36.8)	5,629	(35.4)	363	6.9
대학(4년제미만)	1,261	(8.8)	1,427	(9.0)	166	13.2
대 학 교	2,506	(17.5)	3,506	(22.1)	1,001	39.9
대학원이상	516	(3.6)	710	(4.5)	193	37.4
동 지역	11,226	(100.0)	12,745	(100.0)	1,518	13.5
초등이하	1,564	(13.9)	1,601	(12.6)	37	2.3
중 학 교	1,404	(12.5)	1,355	(10.6)	-49	-3.5
고등학교	4,427	(39.4)	4,719	(37.0)	292	6.6
대학(4년제미만)	1,101	(9.8)	1,234	(9.7)	133	12.1
대 학 교	2,259	(20.1)	3,183	(25.0)	924	40.9
대학원이상	473	(4.2)	653	(5.1)	180	38.1
읍 면 지역	3,082	(100.0)	3,142	(100.0)	60	1.9
초등이하	1,350	(43.8)	1,238	(39.4)	-112	-8.3
중 학 교	444	(14.4)	421	(13.4)	-23	-5.2
고등학교	838	(27.2)	910	(29.0)	72	8.5
대학(4년제미만)	160	(5.2)	193	(6.2)	34	21.1
대 학 교	247	(8.0)	323	(10.3)	76	31.0
대학원이상	43	(1.4)	56	(1.8)	13	30.7

가구주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가 70.0%로 가장 많으나 2000년에 비해 5.0%p 감소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자 가구주는 84.6%가 유배우이나 여자는 17.9%만이 유배우이며, 사별은 남자는 2.3%인데 비해 여자는 44.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가구주의 혼인상태

(단위 : 천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 (2000~2005)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증감	증감 률
계	14,312 (100.0)	1,456 (10.2)	10,739 (75.0)	1,562 (10.9)	553 (3.9)	15,887 (100.0)	2,029 (12.8)	11,120 (70.0)	1,832 (11.5)	904 (5.7)	15,873	11.1
남 자	11,659 (100.0)	890 (7.6)	10,300 (88.3)	223 (1.9)	246 (2.1)	12,402 (100.0)	1,220 (9.8)	10,496 (84.6)	284 (2.3)	402 (3.2)	743	6.3
여 자	2,653 (100.0)	568 (21.4)	440 (16.6)	1,339 (50.5)	307 (11.6)	3,485 (100.0)	809 (23.2)	625 (17.9)	1,548 (44.4)	502 (14.4)	832	31.4

5절 1인가구

1인 가구는 3,171천 가구로 2000년 2,224천 가구에 비하여 946천 가구 (42.5%)가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도시지역의 30~40대 취업연령 계층과 농촌지역의 7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표 8> 연령별 1인가구

(단위 : 천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 국	2,224	100.0	3,171	100.0	946	42.5
30세미만	561	25.2	723	22.8	162	29.0
30~39세	415	18.7	629	19.9	214	51.6
40~49세	295	13.3	474	15.0	179	60.7
50~59세	246	11.1	366	11.5	120	48.7
60~69세	352	15.8	430	13.6	78	22.3
70세이상	355	16.0	548	17.3	193	54.3
동지역	1,643	100.0	2,440	100.0	797	48.5
30세미만	505	30.7	657	26.9	153	30.3
30~39세	367	22.4	565	23.2	198	53.8
40~49세	241	14.7	396	16.2	154	64.0
50~59세	171	10.4	276	11.3	106	61.9
60~69세	193	11.7	268	11.0	76	39.2
70세이상	165	10.1	277	11.4	112	67.7
읍면지역	582	100.0	731	100.0	149	25.6
30세미만	56	9.6	66	9.0	10	17.2
30~39세	48	8.2	64	8.8	17	34.9
40~49세	54	9.2	78	10.7	25	46.1
50~59세	75	13.0	90	12.3	14	19.1
60~69세	159	27.3	162	22.1	3	1.8
70세이상	190	32.6	271	37.0	81	42.6

6절 주거 형태

가구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44.5% (7,064천가구)로 가장 많으며, 아파트 41.7%, 다세대주택 7.4% 순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2000년에 비해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은 감소한 것이다.

가구주 연령별로 거주하는 주택유형을 보면, 30세 미만과 50세 이상은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30대, 40대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 가구주 연령별 주택유형별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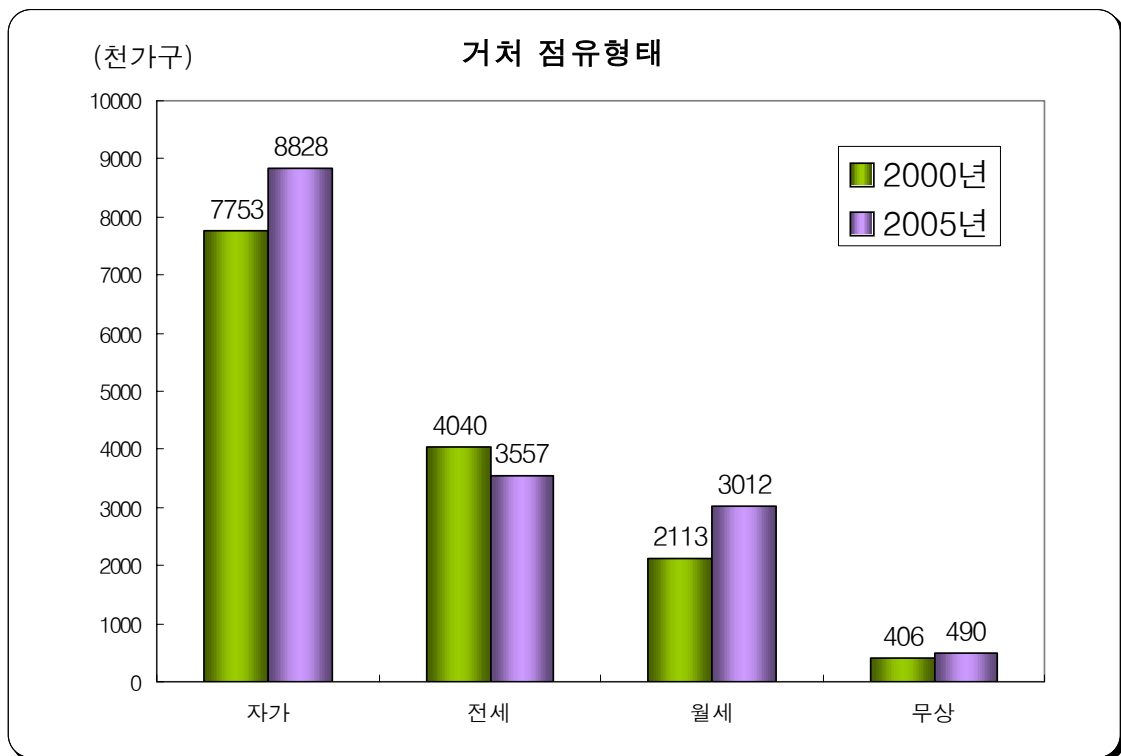
(단위 : 천가구, %)

	계	단독주택	아 파 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 택	영 업 용 건 물 내 주 택	주 택 이 외 의 거 처
2000년	14,312 (100.0)	7,103 (49.6)	5,238 (36.6)	836 (5.8)	458 (3.2)	593 (4.1)	84 (0.6)
30세미만	1,435 (100.0)	843 (58.7)	415 (28.9)	66 (4.6)	46 (3.2)	48 (3.3)	18 (1.3)
30~39세	3,788 (100.0)	1,404 (37.1)	1,855 (49.0)	234 (6.2)	143 (3.8)	132 (3.5)	19 (0.5)
40~49세	3,807 (100.0)	1,557 (40.9)	1,677 (44.1)	250 (6.6)	129 (3.4)	175 (4.6)	20 (0.5)
50~59세	2,511 (100.0)	1,349 (53.7)	764 (30.4)	166 (6.6)	83 (3.3)	135 (5.4)	14 (0.6)
60세이상	2,770 (100.1)	1,950 (70.4)	527 (19.0)	121 (4.4)	58 (2.1)	103 (3.7)	13 (0.5)
2005년	15,887 (100.0)	7,064 (44.5)	6,629 (41.7)	527 (3.3)	1,168 (7.4)	282 (1.8)	217 (1.4)
30세미만	1,388 (100.0)	806 (58.0)	348 (25.0)	27 (2.0)	106 (7.6)	26 (1.9)	76 (5.4)
30~39세	3,586 (100.0)	1,138 (31.7)	1,917 (53.4)	111 (3.1)	309 (8.6)	47 (1.3)	63 (1.8)
40~49세	4,369 (100.0)	1,511 (34.6)	2,247 (51.4)	158 (3.6)	340 (7.8)	77 (1.8)	36 (0.8)
50~59세	2,979 (100.0)	1,342 (45.1)	1,205 (40.5)	118 (3.9)	222 (7.5)	70 (2.3)	22 (0.7)
60세이상	3,565 (100.0)	2,267 (63.6)	912 (25.6)	112 (3.1)	191 (5.4)	62 (1.7)	20 (0.6)
증감(2000~ 2005) (증감률)	1,575 11.0	-39 -0.5	1,391 26.6	-309 -37.0	710 155.1	-311 -52.5	133 157.1

거처의 점유형태를 보면 자기집에 살고 있는 가구가 55.6%(8,828천 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세(22.4%), 월세(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자가 13.9%(1,075천 가구)와 월세는 42.5%(899천) 증가한 반면 전세는 12.0%(483천)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고 또한, 1인가구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가 비율이 높고, 적을수록 전·월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 가구주 연령별 거처 점유형태

(단위 : 천가구, %)

	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2000년	14,312 (100.0)	7,753 (54.2)	4,040 (28.2)	2,113 (14.8)	406 (2.8)
30세미만	1,435 (100.0)	205 (14.3)	689 (48.0)	483 (33.6)	58 (4.1)
30~39세	3,788 (100.0)	1,467 (38.7)	1,595 (42.1)	595 (15.7)	132 (3.5)
40~49세	3,807 (100.0)	2,195 (57.6)	976 (25.6)	539 (14.1)	97 (2.6)
50~59세	2,511 (100.0)	1,771 (70.5)	426 (17.0)	267 (10.6)	48 (1.9)
60세이상	2,770 (100.0)	2,116 (76.4)	353 (12.8)	230 (8.3)	70 (2.5)
2005년	15,887 (100.0)	8,828 (55.6)	3,557 (22.4)	3,012 (19.0)	490 (3.1)
30세미만	1,388 (100.0)	177 (12.7)	463 (33.3)	684 (49.3)	64 (4.6)
30~39세	3,586 (100.0)	1,409 (39.3)	1,251 (34.9)	786 (21.9)	139 (3.9)
40~49세	4,369 (100.0)	2,486 (56.9)	991 (22.7)	772 (17.7)	120 (2.7)
50~59세	2,979 (100.0)	2,055 (69.0)	443 (14.9)	414 (13.9)	67 (2.2)
60세이상	3,565 (100.0)	2,701 (75.8)	409 (11.5)	355 (9.9)	100 (2.8)
증감(2000~ 2005) (증감율)	1,575 11.0	1,075 13.9	-483 -12.0	899 42.5	85 20.9

가구의 사용방수를 보면 4개의 방을 사용하는 가구가 43.4%로 가장 많고, 3개 사용가구(25.6%), 5개 사용가구(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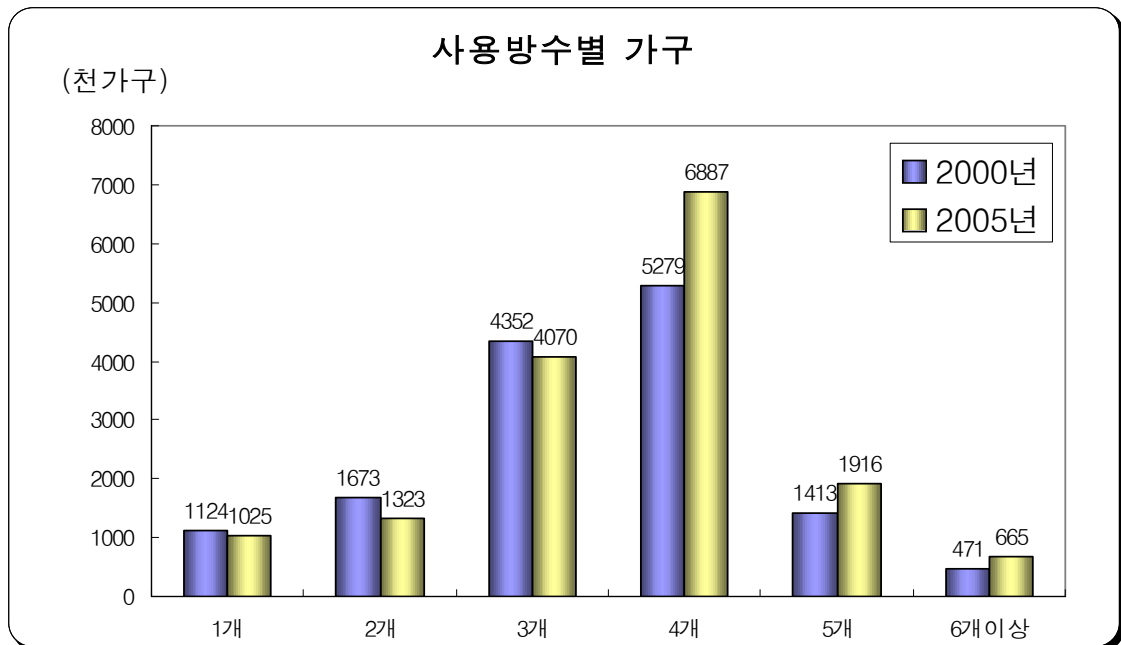
이는 2000년에 비해 4개 이상의 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3개 이하의 감소한 것이다.

가구의 평균 사용방수는 3.6개로, 2000년(3.4개)에 비해 0.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사용방수별 가구 및 평균사용방수

(단위 : 천가구, %, 개)

	사 용 방 수							평균사용방수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2000년	14,312 (100.0)	1,124 (7.9)	1,673 (11.7)	4,352 (30.4)	5,279 (36.9)	1,413 (9.9)	471 (3.3)	3.4
2005년	15,887 (100.0)	1,025 (6.5)	1,323 (8.3)	4,070 (25.6)	6,887 (43.4)	1,916 (12.1)	665 (4.2)	3.6
증감 (2000-2005)	1,575	-98	-350	-282	1,608	503	194	0.2
(증감률)	11.0	-8.7	-20.9	-6.5	30.5	35.6	41.3	



주거시설형태별 가구의 분포를 보면 입식부엌을 사용하는 가구 97.9%, 수세식 화장실 94.0%, 온수 목욕시설이 있는 가구는 95.8%이며,

2000년에 비해 입식부엌시설은 4.0%p, 수세식 화장실은 7.1%p, 온수 목욕시설은 8.4%p 증가하였고 동 및 읍면지역 모두 주거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주거시설형태

(단위 : 천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계	14,312	(100.0)	15,887	(100.0)	1,575	11.0
부엌시설						
입 식	13,442	(93.9)	15,554	(97.9)	2,112	15.7
채래식	812	(5.7)	275	(1.7)	-537	-66.1
없 음	57	(0.4)	59	(0.4)	1	2.0
화장실						
수세식	12,444	(86.9)	14,935	(94.0)	2,491	20.0
채래식	1,836	(12.8)	928	(5.8)	-909	-49.5
없 음	31	(0.2)	24	(0.2)	-7	-22.9
목욕시설						
온수시설	12,507	(87.4)	15,227	(95.8)	2,720	21.8
비온수시설	244	(1.7)	52	(0.3)	-191	-78.5
없 음	1,562	(10.9)	608	(3.8)	-954	-61.1

8절 타지주택 소유여부

「타지 주택 소유가구」란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가구주나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에 1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2005. 11. 1일 현재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794천 가구로 전체가구의 11.3%로 나타났다.

타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점유형태별로 보면 현재 자가에 살고 있는 가구가 58.4%로 가장 많고, 전세 28.2%, 월세 9.1%, 무상4.4%의 순이다.

전국에서 타지주택 소유비중이 큰 지역은 경기(13.0%), 대전(12.8%), 서울(12.1%), 인천(1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타지역 주택 소유가구의 거주형태

(단위 : 천가구, %)

		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전국	합계	15,887	(100.0)	8,828	(55.6)	3,557	(22.4)	3,012	(19.0)	490	(3.1)
	타지주택소유	1,794	(11.3)	1,047	(58.4)	505	(28.2)	163	(9.1)	79	(4.4)
서울	합계	3,310	(20.8)	1,476	(44.6)	1,100	(33.2)	680	(20.5)	54	(1.6)
	타지주택소유	399	(12.1)	206	(51.5)	159	(39.9)	27	(6.9)	7	(1.8)
부산	합계	1,186	(7.5)	673	(56.7)	262	(22.1)	225	(19.0)	26	(2.2)
	타지주택소유	131	(11.0)	89	(68.2)	29	(22.1)	9	(7.0)	4	(2.7)
대구	합계	815	(5.1)	439	(53.9)	172	(21.1)	182	(22.4)	21	(2.6)
	타지주택소유	86	(10.5)	55	(64.1)	21	(24.1)	7	(8.7)	3	(3.1)
인천	합계	823	(5.2)	499	(60.6)	176	(21.4)	127	(15.5)	21	(2.6)
	타지주택소유	95	(11.6)	60	(62.8)	25	(26.6)	7	(7.2)	3	(3.4)
광주	합계	460	(2.9)	247	(53.6)	99	(21.5)	103	(22.5)	11	(2.5)
	타지주택소유	44	(9.5)	29	(66.1)	9	(19.5)	5	(11.0)	1	(3.4)
대전	합계	479	(3.0)	249	(52.0)	110	(23.1)	107	(22.4)	12	(2.6)
	타지주택소유	61	(12.8)	35	(57.7)	18	(29.5)	5	(8.8)	2	(4.0)
울산	합계	339	(2.1)	199	(58.8)	59	(17.5)	69	(20.2)	12	(3.6)
	타지주택소유	39	(11.5)	25	(63.3)	8	(20.1)	4	(9.4)	3	(7.2)
경기	합계	3,329	(21.0)	1,771	(53.2)	896	(26.9)	572	(17.2)	90	(2.7)
	타지주택소유	432	(13.0)	238	(55.1)	147	(34.1)	34	(7.8)	13	(2.9)
강원	합계	521	(3.3)	302	(57.9)	68	(13.1)	118	(22.7)	33	(6.2)
	타지주택소유	59	(11.4)	35	(58.4)	10	(16.4)	9	(14.5)	6	(10.7)
충북	합계	505	(3.2)	304	(60.2)	73	(14.5)	107	(21.3)	21	(4.1)
	타지주택소유	50	(9.9)	30	(60.6)	9	(17.9)	7	(14.0)	4	(7.4)
충남	합계	660	(4.2)	415	(62.9)	93	(14.1)	115	(17.5)	36	(5.5)
	타지주택소유	65	(9.9)	36	(54.3)	14	(21.7)	8	(12.5)	8	(11.5)
전북	합계	620	(3.9)	408	(65.7)	79	(12.8)	111	(17.9)	22	(3.5)
	타지주택소유	52	(8.4)	35	(66.1)	9	(16.3)	6	(11.9)	3	(5.7)
전남	합계	666	(4.2)	463	(69.5)	97	(14.6)	75	(11.2)	31	(4.7)
	타지주택소유	57	(8.5)	33	(57.3)	11	(19.3)	6	(10.6)	7	(12.8)
경북	합계	939	(5.9)	626	(66.6)	107	(11.4)	160	(17.1)	46	(4.9)
	타지주택소유	90	(9.5)	58	(64.6)	13	(14.8)	11	(11.8)	8	(8.8)
경남	합계	1,056	(6.6)	662	(62.6)	152	(14.4)	207	(19.6)	36	(3.4)
	타지주택소유	114	(10.8)	72	(63.2)	22	(19.0)	14	(12.5)	6	(5.4)
제주	합계	179	(1.1)	98	(54.8)	12	(6.7)	52	(28.9)	17	(9.6)
	타지주택소유	19	(10.7)	13	(66.4)	2	(8.6)	3	(17.2)	1	(7.8)

제 2 장 주택 부문

1절 주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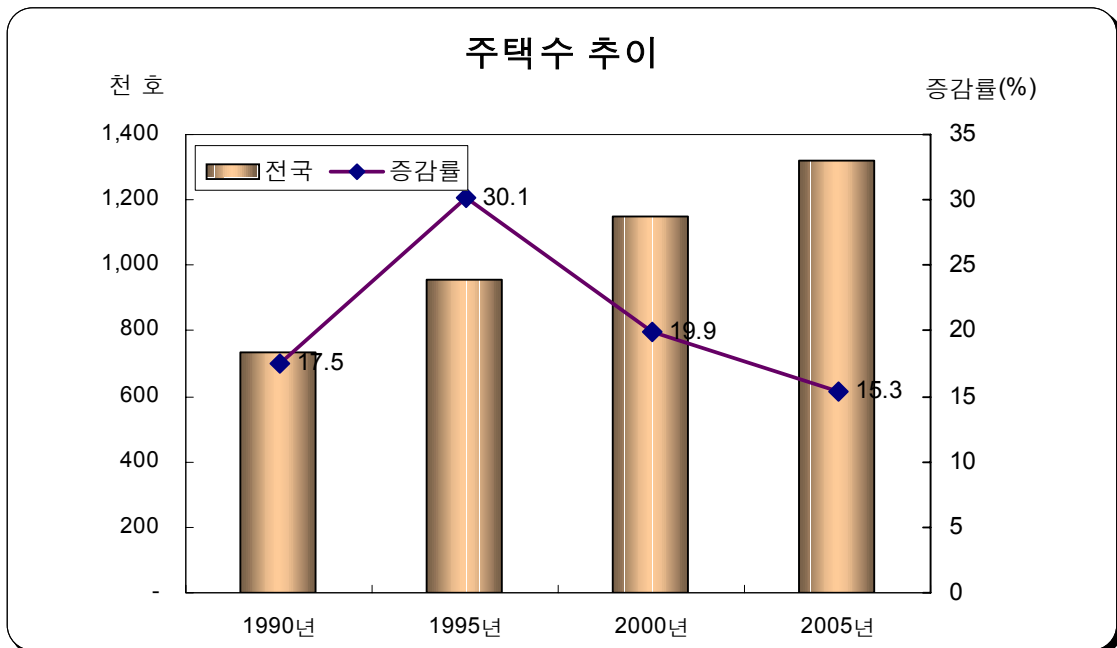
2005. 11. 1일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총주택수(빈집포함)는 13,223천호로 2000년에 비해 15.3% 증가하여 일반 가구 증가율 11.0%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에서 19.1% 증가하여 읍면지역 4.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 주택수

(단위 : 호,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증감	증감률
전 국	11,472,401	13,222,641	1,750,240	15.3
(빈집)	(513,059)	(727,814)	214,755	41.9
동 지 역	8,393,333	9,997,532	1,604,199	19.1
읍면지역	3,079,068	3,225,109	146,041	4.7



2절 주택유형

주택유형을 보면 아파트가 52.7%(6,963천호)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어섰다. 2000년에 비해 연립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단독주택 등이 감소한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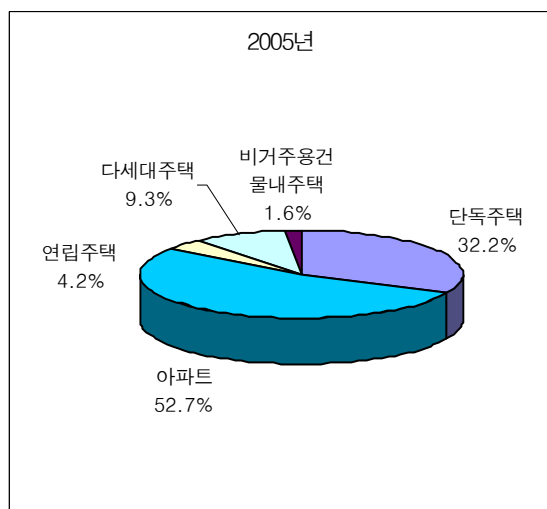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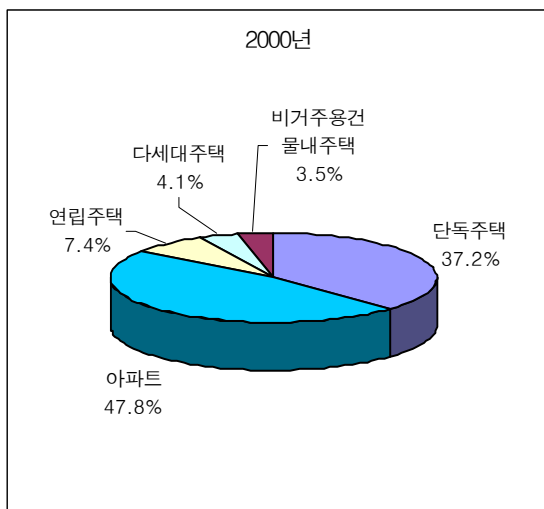
지역별 아파트 비중은 광주광역시(70.9%) 울산(64.1%) 대전(63.8%), 단독주택은 전남(63.2%) 경북 (54.0%)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세대주택은 2000년 472천호에서 757천호(2.6배)가 증가한 1,229천호로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75%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주택유형

(단위 : 천호,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천호	(%)	천호	(%)	천호	(%)	천호	(%)	천호	(%)	천호	(%)
2000년	11,472	(100.0)	4,269	(37.2)	5,480	(47.8)	850	(7.4)	472	(4.1)	401	(3.5)
2005년	13,223	(100.0)	4,264	(32.2)	6,963	(52.7)	559	(4.2)	1,229	(9.3)	209	(1.6)
증감 (증감률)	1,750 15.3		-6 -0.1		1,483 27.1		-291 -34.3		757 160.3		-193 -48.0	



<표 16> 시도별 주택유형

(단위 : 천호,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국	2000	11,472	(100.0)	4,269	(37.2)	5,480	(47.8)	850	(7.4)	472	(4.1)	401	(3.5)
	2005	13,223	(100.0)	4,264	(32.2)	6,963	(52.7)	559	(4.2)	1,229	(9.2)	209	(1.6)
	증감 (증감률)	1,750 15.3		-6 -0.1		1,483 27.1		-291 -34.3		757 158.0		-193 -48.0	
서울	2000	1,973	(100.0)	498	(25.3)	1,011	(51.2)	221	(11.2)	183	(9.3)	60	(3.1)
	2005	2,322	(100.0)	456	(19.6)	1,259	(54.2)	147	(6.3)	431	(18.5)	30	(1.3)
부산	2000	830	(100.0)	270	(32.6)	439	(52.8)	60	(7.3)	33	(3.9)	28	(3.4)
	2005	967	(100.0)	261	(26.9)	555	(57.4)	41	(4.2)	93	(9.7)	17	(1.8)
대구	2000	545	(100.0)	181	(33.3)	311	(57.1)	16	(3.0)	17	(3.1)	20	(3.6)
	2005	609	(100.0)	178	(29.3)	366	(60.1)	8	(1.2)	45	(7.4)	12	(2.0)
인천	2000	632	(100.0)	121	(19.2)	345	(54.6)	83	(13.2)	66	(10.4)	16	(2.6)
	2005	724	(100.0)	114	(15.7)	396	(54.8)	22	(3.0)	184	(25.2)	8	(1.2)
광주	2000	338	(100.0)	93	(27.6)	229	(67.7)	4	(1.2)	1	(0.2)	11	(3.3)
	2005	379	(100.0)	96	(25.3)	269	(70.9)	5	(1.4)	4	(1.0)	5	(1.4)
대전	2000	334	(100.0)	85	(25.6)	200	(60.1)	30	(8.9)	7	(2.2)	11	(3.4)
	2005	380	(100.0)	89	(23.5)	242	(63.8)	16	(4.2)	27	(7.1)	5	(1.4)
울산	2000	239	(100.0)	63	(26.3)	148	(62.0)	13	(5.3)	7	(2.9)	8	(3.6)
	2005	277	(100.0)	67	(24.1)	177	(64.1)	9	(3.1)	18	(6.5)	6	(2.3)
경기	2000	2,126	(100.0)	506	(23.8)	1,202	(56.6)	251	(11.8)	110	(5.2)	57	(2.7)
	2005	2,736	(100.0)	522	(19.1)	1,708	(62.4)	154	(5.6)	320	(11.7)	32	(1.2)
강원	2000	458	(100.0)	228	(49.9)	181	(39.5)	24	(5.3)	2	(0.5)	22	(5.1)
	2005	494	(100.0)	235	(47.7)	220	(44.5)	23	(4.6)	4	(0.9)	11	(2.3)
충북	2000	422	(100.0)	203	(48.0)	180	(42.6)	20	(4.7)	3	(0.8)	17	(4.1)
	2005	456	(100.0)	208	(45.5)	217	(47.5)	17	(3.7)	6	(1.4)	8	(1.8)
충남	2000	585	(100.0)	334	(57.1)	190	(32.4)	30	(5.1)	8	(1.4)	23	(4.2)
	2005	635	(100.0)	336	(53.0)	246	(38.7)	24	(3.7)	18	(2.9)	11	(1.7)
전북	2000	569	(100.0)	303	(53.2)	227	(39.9)	15	(2.6)	2	(0.4)	22	(4.0)
	2005	598	(100.0)	299	(50.1)	271	(45.3)	15	(2.5)	4	(0.6)	9	(1.5)
전남	2000	647	(100.0)	426	(65.8)	175	(27.1)	13	(2.0)	2	(0.3)	31	(4.9)
	2005	671	(100.0)	424	(63.2)	216	(32.1)	13	(2.0)	5	(0.8)	12	(1.8)
경북	2000	825	(100.0)	468	(56.7)	276	(33.5)	30	(3.7)	11	(1.3)	39	(4.9)
	2005	878	(100.0)	474	(54.0)	328	(37.4)	28	(3.2)	28	(3.2)	19	(2.2)
경남	2000	822	(100.0)	412	(50.1)	342	(41.5)	27	(3.3)	11	(1.3)	31	(3.8)
	2005	943	(100.0)	421	(44.7)	455	(48.3)	26	(2.7)	24	(2.5)	17	(1.8)
제주	2000	128	(100.0)	77	(60.5)	23	(18.3)	12	(9.2)	9	(7.4)	6	(4.8)
	2005	153	(100.0)	82	(53.1)	37	(24.3)	12	(7.9)	18	(11.9)	4	(2.7)

3절 주택유형별 거주가구

한 주택에 한 가구만 살고 있는 주택이 90.2%(11,267천호)로 2000년에 비해 3.1%p 증가하고, 2가구이상 거주 주택은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단독주택의 경우 1가구 거주주택이 70.7%, 2가구 거주주택이 12.4%이며,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1가구 거주주택이 각각 99.9%, 99.6%, 98.7%로 나타났다.

주택 당 평균 거주 가구수는 2000년 보다 0.1가구 줄어든 1.2가구였다.

<표 17> 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

(단위 : 천호, 가구, %)

	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이상	주택 당 평균거주 가구 수
2000년	10,959 (100.0)	9,550 (87.1)	637 (5.8)	334 (3.0)	181 (1.7)	120 (1.1)	138 (1.3)	1.3
단독주택	4,069 (100.0)	2,810 (69.1)	535 (13.1)	305 (7.5)	171 (4.2)	115 (2.8)	133 (3.3)	1.7
아파트	5,231 (100.0)	5,224 (99.9)	7 (0.1)	0 (0.0)	0 (0.0)	0 (0.0)	0 (0.0)	1.0
연립주택	813 (100.0)	790 (97.2)	22 (2.7)	1 (0.1)	0 (0.0)	0 (0.0)	0 (0.0)	1.0
다세대주택	453 (100.0)	448 (98.9)	5 (1.1)	0 (0.0)	0 (0.0)	0 (0.0)	0 (0.0)	1.0
영업용 건물내주택	393 (100.0)	277 (70.5)	68 (17.3)	28 (7.1)	11 (2.8)	5 (1.3)	4 (1.0)	1.5
2005년	12,495 (100.0)	11,267 (90.2)	536 (4.3)	284 (2.3)	155 (1.2)	102 (0.8)	150 (1.2)	1.2
단독주택	3,985 (100.0)	2,816 (70.7)	494 (12.4)	275 (6.9)	152 (3.8)	101 (2.5)	147 (3.7)	1.7
아파트	6,627 (100.0)	6,623 (99.9)	4 (0.1)	0 (0.0)	0 (0.0)	0 (0.0)	0 (0.0)	1.0
연립주택	520 (100.0)	514 (98.7)	7 (1.3)	0 (0.0)	0 (0.0)	0 (0.0)	0 (0.0)	0.9
다세대주택	1,164 (100.0)	1,160 (99.6)	4 (0.3)	0 (0.0)	0 (0.0)	0 (0.0)	0 (0.0)	1.0
영업용 건물내주택	198 (100.0)	155 (78.1)	27 (13.7)	9 (4.5)	3 (1.6)	2 (0.8)	3 (1.3)	1.3

4절 주택의 방수

주택의 방수를 기준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방이 4개인 주택이 48.0%로 가장 많고, 3개, 5개 등의 순이며 동지역이 읍면지역 보다 주택의 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방수는 4.8개로 단독주택 6.6개, 아파트 3.9개, 연립 3.9개, 다세대 3.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주택방수

(단위 : 천호, %)

	2000년			2005년		
	전국	동지역	읍면지역	전국	동지역	읍면지역
계	10,959 (100.0)	8,123 (100.0)	2,836 (100.0)	12,495 (100.0)	9,577 (100.0)	2,918 (100.0)
1개	86 (0.8)	57 (0.7)	29 (1.0)	102 (0.8)	83 (0.9)	19 (0.6)
2개	361 (3.3)	238 (2.9)	123 (4.3)	322 (2.6)	235 (2.5)	87 (3.0)
3개	2,376 (21.7)	1,815 (22.3)	561 (19.8)	2,363 (18.9)	1,837 (19.2)	525 (18.0)
4개	4,724 (43.1)	3,614 (44.5)	1,110 (39.1)	5,996 (48.0)	4,776 (49.9)	1,220 (41.8)
5개	1,510 (13.8)	827 (10.2)	683 (24.1)	1,802 (14.4)	1,054 (11.0)	747 (25.6)
6개	586 (5.3)	408 (5.0)	178 (6.3)	606 (4.8)	436 (4.5)	170 (5.8)
7개	278 (2.5)	216 (2.7)	62 (2.2)	257 (2.1)	202 (2.1)	54 (1.9)
8개이상	1,038 (9.5)	948 (11.7)	90 (3.2)	1,048 (8.4)	953 (10.0)	95 (3.3)

<표 19> 주택유형별 평균방수

(단위 : 개, %)

		평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전국	2000년	4.8	6.3	3.8	3.9	3.7	5.2
	2005년	4.8	6.6	3.9	3.9	3.7	5.1
동지역	2000년	5.0	8.0	3.8	3.9	3.7	5.6
	2005년	4.9	8.5	3.9	4.0	3.7	5.4
읍면지역	2000년	4.3	4.5	3.7	3.8	3.7	4.5
	2005년	4.4	4.7	3.7	3.8	3.8	4.4

5절 주택의 규모

연건평을 기준으로 주택의 분포를 살펴보면 ‘19~29평미만’이 38.2% (4,767천호)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00년에 비해 19평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고 19평 미만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이 속하는 ‘19~29평미만’의 주택이 2000년에 비해 797천호(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연건평별 주택규모

(단위 : 천호, %)

		계	9평 미만	9 ~ 14평 미만	14~ 19평 미만	19~ 29평 미만	29~ 39평 미만	39~ 49평 미만	49~ 69평 미만	69평 이상
전국	2000년	10,959	247	1,208	3,198	3,970	1,120	545	408	263
		(100.0)	(2.3)	(11.0)	(29.2)	(36.2)	(10.2)	(5.0)	(3.7)	(2.4)
	2005년	12,495	252	1,216	3,509	4,767	1,363	637	449	301
	(100.0)	(2.0)	(9.7)	(28.1)	(38.2)	(10.9)	(5.1)	(3.6)	(2.4)	
	증감	1,536	5	8	311	797	243	92	41	48
	(증감률)	14.0	2.0	0.7	9.7	20.1	21.7	16.8	10.0	18.2
동지 역	2000년	8,123	203	931	2,381	2,755	764	476	364	250
		(100.0)	(2.5)	(11.5)	(29.3)	(33.9)	(9.4)	(5.9)	(4.5)	(3.1)
	2005년	9,577	214	963	2,723	3,503	946	556	392	280
	(100.0)	(2.2)	(10.1)	(28.4)	(36.6)	(9.9)	(5.8)	(4.1)	(2.9)	
	증감	1,454	11	32	342	748	182	80	28	39
	(증감률)	17.9	5.4	3.4	14.4	27.2	23.8	16.8	7.8	15.5
읍면 지역	2000년	2,836	45	277	816	1,214	356	69	44	14
		(100.0)	(1.6)	(9.8)	(28.8)	(42.8)	(12.6)	(2.4)	(1.6)	(0.5)
	2005년	2,918	38	253	786	1,264	417	81	57	22
	(100.0)	(1.3)	(8.7)	(26.9)	(43.3)	(14.3)	(2.8)	(1.9)	(0.7)	
	증감	82	-7	-24	-30	50	61	12	13	8
	(증감률)	2.9	-15.6	-8.5	-3.7	4.1	17.2	17.0	28.8	57.0

6절 건축년도별 주택

건축시기를 5년 단위로 묶어서 살펴보면 90~94년이 22.7%, 95~99년이 23.0%, 2000년 이후 22.1% 등의 순으로 전체 주택의 67.8%가 90년이후 지어졌으며 25년 이상 된 주택은 12.7%이며, 특히 동지역은 90% 이상의 주택이 1980년 이후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건축년도별 주택

(단위 : 천호, %)

	전 국		동 지역		읍면 지역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구 성 비
계	12,495	100	9,577	100	2,918	100
1959년 이전	411	3.3	120	1.3	290	10.0
1960~1969년	302	2.4	145	1.5	157	5.4
1970~1979년	872	7.0	606	6.3	266	9.1
1980~1989년	2,445	19.6	1,997	20.9	448	15.3
1990~1994년	2,836	22.7	2,330	24.3	506	17.3
1995 ~1999년	2,873	23.0	2,205	23.0	669	22.9
2000년 이후	2,756	22.1	2,175	22.7	581	19.9

7절 주택유형별 빈집수

빈집은 728천호로 2000년(513천호)에 비해 41.9% 증가하였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36천호로 46.1%를 차지하며, 단독주택 279천호, 다세대 65천호, 연립주택 38천호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주택유형별 빈집 수

(단위 : 천호,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2000년	513	200	249	37	19	9
	(100.0)	(38.9)	(48.4)	(7.2)	(3.7)	(1.7)
2005년	728	279	336	38	65	10
	(100.0)	(38.3)	(46.1)	(5.2)	(8.9)	(1.4)
증 감	215	79	87	1	46	1
(증감률)	41.9	39.5	35.1	3.8	239.8	16.2

인구이동, 통근·통학 부문

※ 조사 대상 : 5년전 거주지 이동인구와 통근통학인구는 일반가구(원) 및 집단가구(원)이 포함되고 특별조사구(군인 등)와 외국인가구(원)은 제외됨

※ 주요용어

- 5년전 거주지 : 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년전(2000.11.1)에 거주 하였던 곳을 말함
- 인구이동 : 시군구 경계를 기준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을 말함
- 통근·통학인구
 - 통근인구 : 12세이상인구 중 정기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
 - 통학인구 : 12세이상인구 중 정규학교(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
- 통근·통학장소 : 근무처 또는 학교(원)의 소재지를 말하며 근무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된 활동지역을 말함
- 이용교통수단 : 평상시 출근 또는 등교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함
 - 도보는 별도의 이용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이용교통수단이 2종류 이상인 경우 주된 이용교통수단 2가지만 조사
- 주간인구 :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에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통근통학 인구(유입인구)를 더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통학 인구(유출인구)를 뺀 것
 - 주간인구지수 : $\text{주간인구} / \text{상주인구} \times 100$

제 1 장 인 구 이 동

1절 거주지 이동인구 규모

5년전 거주지(2000.11.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시군구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인구는 8,968천명으로 이동률은 20.4%였고, 성별로 보면 이동인구는 여자가 남자보다 62천명 많으나 이동률은 남자가 0.5%p 높았다. 시도 경계 기준으로 보면 「시도내 이동」 보다 「시도간 이동」이 1,508천명, 이동률은 3.4%p 각각 높게 나타났다.

2000년 기준과 비교하면 거주지 이동인구는 6.4%, 이동률은 2.4%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의 이동인구 감소 폭이 컸고, 시도간 경계를 기준으로 보면 「시도내 이동」이 「시도간 이동」보다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1> 거주지 이동인구

(단위 : 천명, %, %p)

	2000			2005			증 감	
	5세이상 인구	이동인구	이동률	5세이상 인구	이동인구	이동률	증감률	이동률
전 국	42,092	9,577	22.8	44,010	8,968	20.4	-6.4	-2.4
남자	20,671	4,718	22.8	21,570	4,453	20.6	-5.6	-2.2
여자	21,421	4,859	22.7	22,440	4,515	20.1	-7.1	-2.6
시도내이동	-	4,191	10.0	-	3,730	8.5	-11.0	-1.5
시도간이동	-	5,386	12.8	-	5,238	11.9	-2.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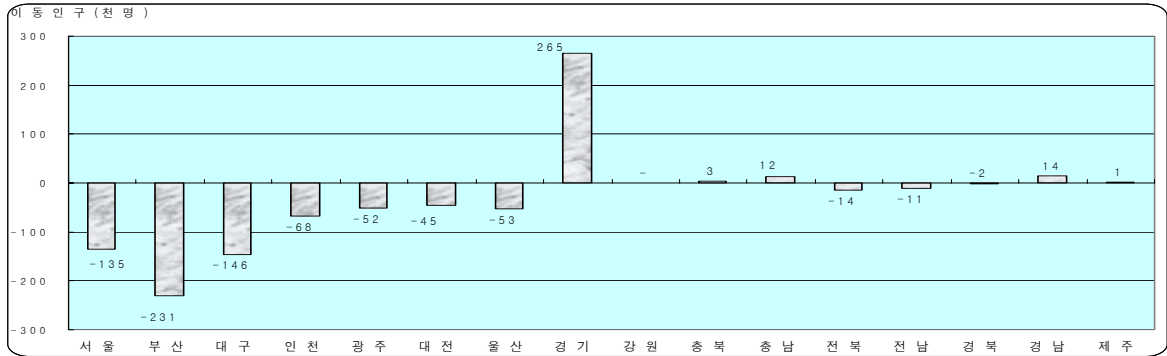
- 주) 1. 이동인구 :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이동한 인구임
 2. 이동률 = (이동인구 / 총인구) × 100

2절 지역간 인구이동

1) 시도내 및 시도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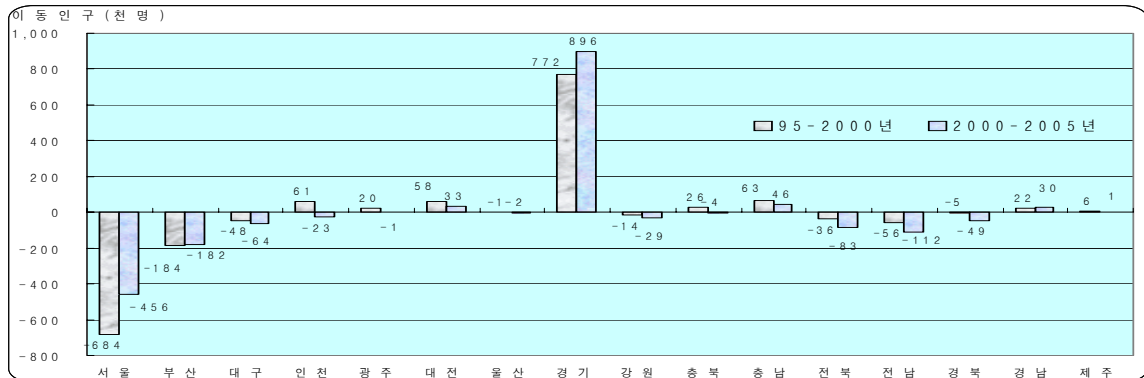
5년전 거주지 기준으로 시도내에서 이동한 인구는 3,730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11.0% 감소하였다. 대도시 지역의 도시내 이동인구는 서울(-135천명), 부산(-231천명), 대구(-146천명), 인천(-68천명), 광주(-52천명), 대전(-45천명), 울산(-53천명)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도 지역의 경우 경기(265천명), 충남(12천명), 경남(14천명) 지역은 증가하였으나 전남(-11천명), 전북(-14천명)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시도내 이동 추이



시도간 인구이동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유출인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의 유출인구를 대부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순이동 인구(유입 - 유출)는 2000년보다도 16.0%(123천명) 증가하였다.

[그림 2] 시도간 순이동 추이



<표 2> 지역간 인구이동 추이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 감					
	시도 내 이동	시도간 이동			시도 내 이동	시도간 이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유입	유출	순이 동		유입	유출	순이 동		증감 률	유입	증감 률	유출	증감 률
전국	4,191	5,386	5,386	0	3,730	5,238	5,238	0	-461	-11.0	-148	-2.8	-148	-2.8
서울	1,219	972	1,655	-684	1,084	1,015	1,471	-456	-135	-11.1	43	4.5	-184	-11.1
부산	492	216	400	-184	262	198	380	-182	-231	-46.9	-18	-8.3	-20	-4.9
대구	327	200	248	-48	181	179	244	-64	-146	-44.6	-21	-10.5	-4	-1.8
인천	215	339	278	61	147	290	312	-23	-68	-31.6	-49	-14.6	34	12.3
광주	135	164	144	20	83	143	144	-1	-52	-38.8	-22	-13.1	-	0.1
대전	111	210	152	58	66	196	163	33	-45	-40.4	-13	-6.4	12	7.7
울산	94	110	111	-1	41	94	96	-2	-53	-55.9	-16	-14.5	-15	-13.8
경기	861	1,680	908	772	1,125	1,787	892	896	265	30.7	107	6.4	-16	-1.8
강원	81	164	179	-14	81	148	178	-29	-	0.1	-16	-9.8	-1	-0.6
충북	61	169	143	26	64	148	152	-4	3	5.4	-21	-12.3	9	6.4
충남	62	262	199	63	74	263	217	46	12	18.7	1	0.3	18	8.9
전북	101	134	169	-36	87	99	182	-83	-14	-13.6	-35	-26.0	13	7.7
전남	77	171	227	-56	66	113	225	-112	-11	-14.2	-58	-33.7	-2	-0.9
경북	118	276	281	-5	116	246	295	-49	-2	-1.7	-30	-10.9	13	4.7
경남	209	283	261	22	224	284	254	30	14	6.8	1	0.2	-7	-2.9
제주	28	36	31	6	29	35	34	1	1	5.3	-1	-3.3	4	11.7

2) 대도시 지역 거주지 이동

대도시 지역으로부터의 유출인구는 2,811천명으로 유입인구 2,115천명보다 695천명 많았으며 대전을 제외하고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입인구는 대전, 울산, 광주를 제외하고는 인접지역으로부터의 유입 비율이 높았고 유출인구는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는 인접하지 않는 곳으로의 유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순이동 인구는 대전(33천명)이 증가하고, 서울(-456천명), 부산(-182천명), 대구(-64천명) 등 6개 도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도시 지역의 거주지 이동인구

(단위 : 천명, %)

		유 입(A)			유 출(B)			순이동 (A-B)
		계	인접시도	기타 시도	계	인접시도	기타 시도	
2000	계	2,211	1,130(51.1)	1,081(48.9)	2,989	1,830(61.2)	1,159(38.8)	-777
	서울	972	497(51.1)	475(48.9)	1,655	1,224(73.9)	432(26.1)	-684
	부산	216	107(49.6)	109(50.4)	400	191(47.8)	209(52.2)	-184
	대구	200	99(49.2)	102(50.8)	248	113(45.6)	135(54.4)	-48
	인천	339	247(72.9)	92(27.1)	278	184(66.1)	94(33.9)	61
	광주	164	81(49.1)	84(50.9)	144	51(35.7)	93(64.3)	20
	대전	210	46(21.9)	164(78.1)	152	33(21.6)	119(78.4)	58
	울산	110	54(49.3)	56(50.7)	111	34(30.4)	77(69.6)	-1
2005	계	2,115	1,095(51.8)	1,021(48.2)	2,811	1,767(62.9)	1,043(37.1)	-695
	서울	1,015	533(52.5)	482(47.5)	1,471	1,151(78.2)	320(21.8)	-456
	부산	198	100(50.4)	98(49.6)	380	182(47.8)	199(52.2)	-182
	대구	179	100(55.5)	80(44.5)	244	94(38.8)	149(61.2)	-64
	인천	290	196(67.7)	94(32.3)	312	235(75.2)	78(24.8)	-23
	광주	143	78(54.7)	65(45.3)	144	39(27.0)	105(73.0)	-1
	대전	196	46(23.4)	150(76.6)	163	33(20.4)	130(79.6)	33
	울산	94	42(44.9)	52(55.1)	96	33(34.4)	63(65.6)	-2

주) 인접시도는 서울(경기, 인천),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인천(서울, 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부산, 경남)

3) 수도권 유입인구

5년전 거주지 기준으로 수도권에 유입된 인구는 1,139천명으로 2000년에 비하여 10.5%(109천명) 증가하였고, 수도권 유입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충남, 강원, 부산, 전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하여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표 4> 수도권 유입인구의 5년전 거주지 분포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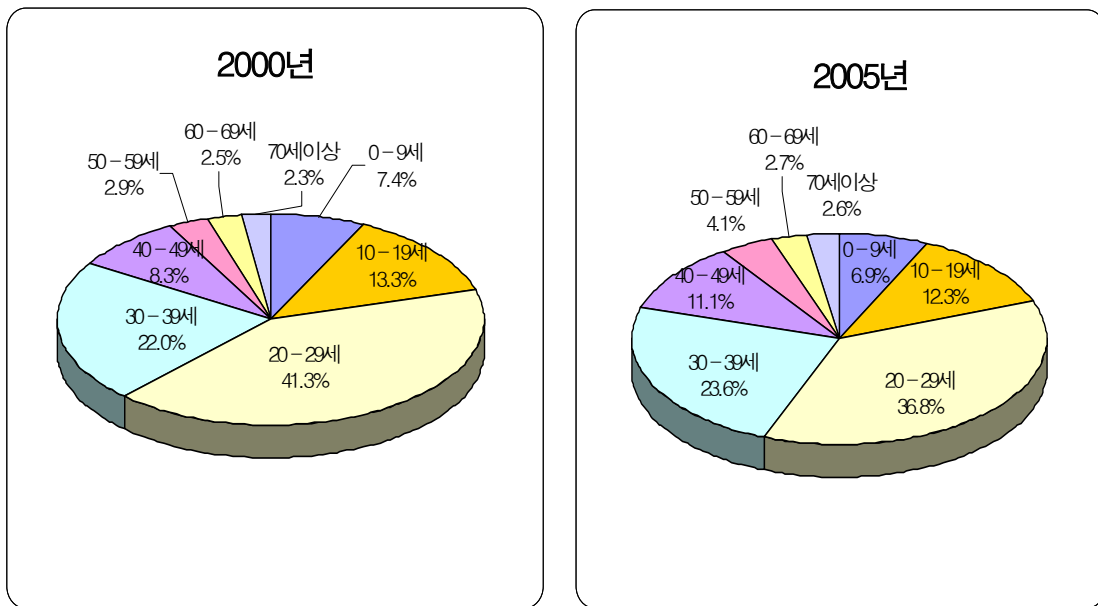
5년전 거주지	2000		2005		증 감	
	유입인구	구성비	유입인구	구성비	유입인구	증감률
계	1,030	100.0	1,139	100.0	109	10.5
부 산	112	10.9	120	10.5	8	7.3
대 구	71	6.9	84	7.4	13	18.5
광 주	64	6.2	76	6.7	11	17.7
대 전	70	6.8	84	7.4	14	20.6
울 산	27	2.6	28	2.5	1	5.0
강 원	117	11.4	123	10.8	6	5.3
충 북	75	7.2	84	7.4	10	12.8
충 남	107	10.4	123	10.8	16	15.1
전 북	108	10.5	116	10.2	8	7.7
전 남	101	9.8	96	8.4	-4	-4.4
경 북	89	8.7	101	8.9	12	13.4
경 남	72	7.0	82	7.2	10	14.0
제 주	18	1.7	20	1.8	2	13.4

5년전 거주지 기준으로 수도권 유입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590천명 (51.8%)으로 남자보다 41천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유입인구 규모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고, 성별 구성비율은 남자는 증가, 여자는 감소하였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가 36.8%로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30대가 23.6%로 20·30대의 젊은층이 60.4%를 차지하였다. 2000년에 비해 20대 이하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수도권 유입인구의 연령별 분포



<표 5> 수도권 유입인구의 성, 연령별 분포

(단위 : 천명, %)

	2000					2005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계	1,030 (100.0)	2,991 (100.0)	972 (100.0)	339 (100.0)	1,680 (100.0)	1,139 (100.0)	3,092 (100.0)	1,015 (100.0)	290 (100.0)	1,787 (100.0)
남 자	492 (47.8)	1,464 (49.0)	470 (48.4)	168 (49.5)	826 (49.2)	549 (48.2)	1,520 (49.1)	484 (47.7)	147 (50.6)	889 (49.7)
여 자	538 (52.2)	1,527 (51.0)	501 (51.6)	171 (50.5)	854 (50.8)	590 (51.8)	1,572 (50.9)	531 (52.3)	143 (49.4)	898 (50.3)
0 ~ 9	76 (7.4)	288 (9.6)	82 (8.4)	37 (11.0)	169 (10.1)	79 (6.9)	253 (8.2)	71 (7.0)	27 (9.4)	154 (8.6)
10 ~ 19	137 (13.3)	342 (11.4)	122 (12.5)	37 (10.8)	184 (10.9)	140 (12.3)	337 (10.9)	129 (12.7)	31 (10.8)	177 (9.9)
20 ~ 29	426 (41.3)	831 (27.8)	333 (34.3)	85 (25.0)	413 (24.6)	419 (36.8)	769 (24.9)	320 (31.6)	64 (22.1)	384 (21.5)
30 ~ 39	227 (22.0)	844 (28.2)	241 (24.8)	107 (31.7)	496 (29.5)	269 (23.6)	863 (27.9)	241 (23.8)	88 (30.4)	534 (29.9)
40 ~ 49	86 (8.3)	334 (11.2)	108 (11.1)	37 (10.9)	188 (11.2)	126 (11.1)	411 (13.3)	138 (13.6)	41 (14.0)	232 (13.0)
50 ~ 59	29 (2.9)	162 (5.4)	37 (3.8)	15 (4.5)	109 (6.5)	47 (4.1)	212 (6.9)	57 (5.6)	16 (5.7)	139 (7.8)
60 ~ 69	25 (2.5)	115 (3.8)	26 (2.6)	12 (3.6)	77 (4.6)	30 (2.7)	145 (4.7)	31 (3.1)	12 (4.1)	102 (5.7)
70이상	24 (2.3)	76 (2.5)	23 (2.3)	9 (2.6)	44 (2.6)	29 (2.6)	103 (3.3)	27 (2.6)	10 (3.6)	65 (3.7)

주) 서울, 인천, 경기 유입인구는 수도권내 이동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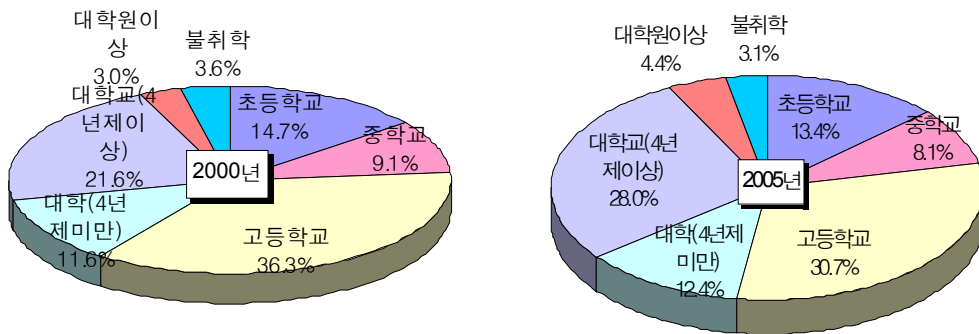
3절 거주지 이동인구의 특성

1) 교육정도별 거주지 이동인구(6세 이상)

5년전과 거주지를 달리하는 6세 이상 인구는 8,794천명으로 2000년 기준보다 562천명(-6.0%) 감소하였고,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4년제 이상 대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대학이상의 고학력자의 인구이동은 증가하였다.

[그림 4] 교육정도별 이동인구



<표6> 교육정도별 이동인구(6세이상)

(단위 : 천명, %, %p)

	2000		2005		증 감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증감률	구성비
전 국	9,356	100.0	8,794	100.0	-562	-6.0	0.0
초등학교	1,371	14.7	1,177	13.4	-194	-14.1	-1.3
중학교	851	9.1	710	8.1	-141	-16.6	-1.0
고등학교	3,400	36.3	2,696	30.7	-705	-20.7	-5.7
대학(4년제미만)	1,090	11.6	1,092	12.4	3	0.2	0.8
대학교(4년제이상)	2,022	21.6	2,467	28.0	444	22.0	6.4
대학원이상	285	3.0	383	4.4	98	34.6	1.3
불취학	337	3.6	270	3.1	-67	-19.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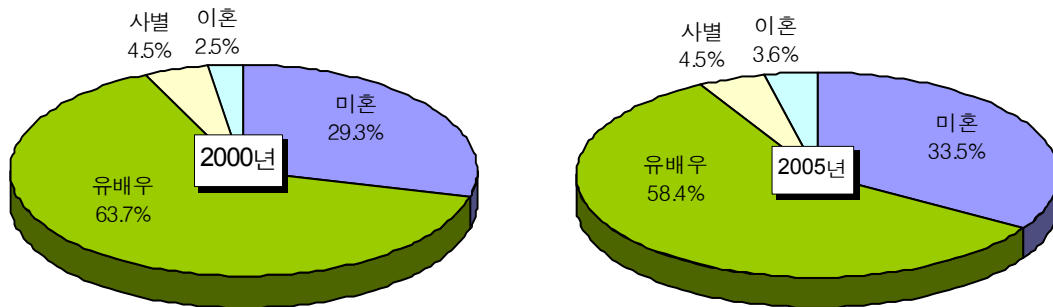
주) 불취학에는 미상이 포함됨

2) 혼인상태별 거주지 이동인구(15세 이상)

만 15세 이상 인구(37,406천명) 중 거주지 이동인구는 7,595천명으로 5년전보다 398천명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감소하였으나 감소 폭은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만 15세 이상 거주지 이동인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 미혼, 사별의 순이었으며, 유배우자의 이동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미혼, 이혼인구의 거주지이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혼인상태별 거주지 이동인구



<표 7> 혼인상태별 거주지 이동인구(15세 이상)

(단위 : 천명, %, %p)

	2000			2005			증 감		
	이동인구	남자	여자	이동인구	남자	여자	이동인구	남자	여자
계	7,993 (100.0)	3,888 (100.0)	4,105 (100.0)	7,595 (100.0)	3,743 (100.0)	3,852 (100.0)	-398 -	-145 -	-253 -
미 혼	2,343 (29.3)	1,283 (33.0)	1,060 (25.8)	2,546 (33.5)	1,390 (37.1)	1,156 (30.0)	202 (4.2)	107 (4.1)	95 (4.2)
유배우	5,096 (63.7)	2,480 (63.8)	2,616 (63.7)	4,436 (58.4)	2,196 (58.7)	2,240 (58.1)	-660 (-5.4)	-284 (-5.1)	-376 (-5.6)
사 별	357 (4.5)	49 (1.2)	308 (7.5)	343 (4.5)	49 (1.3)	294 (7.6)	-14 (0.0)	- (0.1)	-14 (0.1)
이 혼	196 (2.5)	76 (2.0)	120 (2.9)	271 (3.6)	109 (2.9)	162 (4.2)	75 (1.1)	33 (0.9)	42 (1.3)

제 2 장 통근·통학

1절 통근·통학 인구 규모(12세 이상)

2005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통근·통학인구는 12세 이상 인구의 61.3%인 24,181천명이며, 성별로 보면 남자의 통근·통학률(75.3%)이 여자(48.0%)보다 27.3%p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1.9%p 낮게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통근·통학 인구는 2.4%(572천명) 증가하였고 통근·통학률은 1.8%p 감소(63.1% ⇒ 61.3%) 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 여자는 4.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동지역 5.8% 증가, 읍면지역은 9.6% 감소로 나타났다.

<표 8> 통근·통학인구 규모 및 통근·통학률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 감	
	12세이상 인구	통근· 통학 인구	통 근 통학률	12세이상 인구	통근· 통학 인구	통 근 통학률	통근· 통학 인구	증감률
전 국	37,404	23,609	63.1	39,465	24,181	61.3	572	2.4
남 자	18,179	14,261	78.4	19,186	14,449	75.3	188	1.3
여 자	19,225	9,348	48.6	20,279	9,732	48.0	384	4.1
동 지 역	29,655	18,467	62.3	32,068	19,533	60.9	1,066	5.8
읍면지역	7,748	5,141	66.4	7,397	4,648	62.8	-493	-9.6

2절 통근·통학률(12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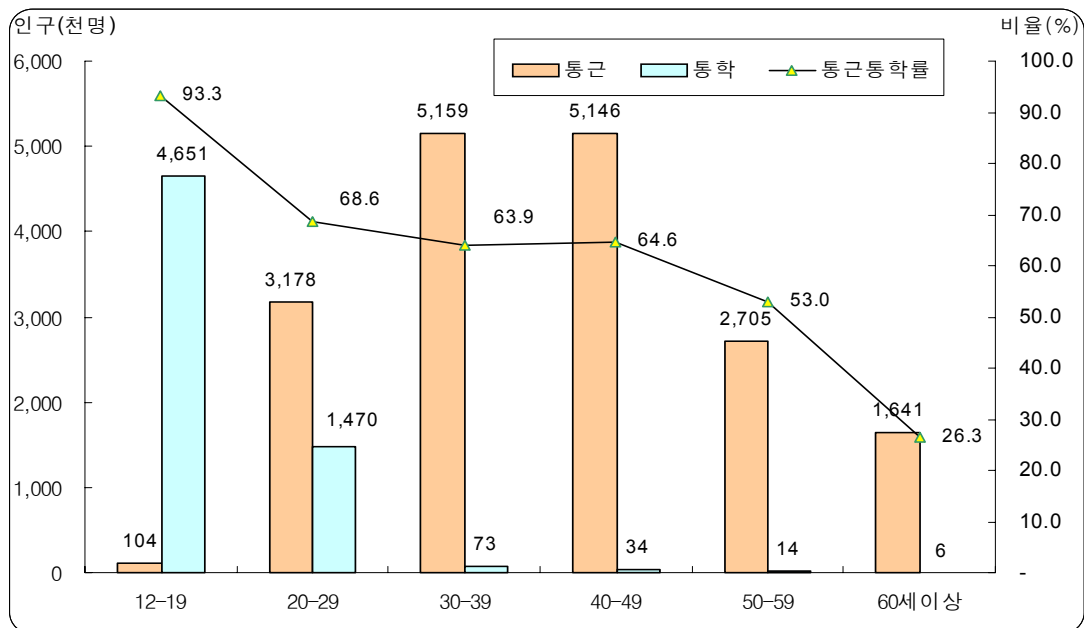
통근·통학률 61.3%(24,181천명)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통근율은 45.4%(17,933천명), 통학률은 15.8%(6,248천명)로 2000년 기준보다 통근율은 0.6%p, 통학률은 1.3%p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통근율은 남자 58.2%, 여자 33.4%로 2000년에 비하여 남자는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증가하였고, 통학률은 남자 17.1%, 여자 14.6%로 2000년에 비하여 각각 1.4%p,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성별 통근·통학률

(단위 : %, %p)

	2000			2005			증 감		
	전체	통근율	통학률	전체	통근율	통학률	전체	통근율	통학률
계	63.1	46.0	17.1	61.3	45.4	15.8	-1.8	-0.6	-1.3
남자	78.4	59.9	18.5	75.3	58.2	17.1	-3.1	-1.7	-1.4
여자	48.6	32.8	15.9	48.0	33.4	14.6	-0.6	0.6	-1.3

[그림 6] 연령별 통근, 통학인구 및 통근·통학률



통근·통학률을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보면, 통근율은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통학률은 10대 91.2%, 20대 21.7%를 차지하나 30대 이후는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근율을 성별, 연령계층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남자는 30대(84.7%)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50대 71.1%, 60대 이상은 36.8%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20대(47.0%)에서 정점을 보이지만 30대보다는 4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60대 이상은 18.5%로 남자의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0> 성, 연령계층별 통근·통학인구

(단위 : 천명, %)

	12세이상 인 구	통근·통학인구		통근인구		통학인구	
		통근· 통학률	통근율	통학률	통학률		
전 국	39,465	24,181	61.3	17,933	45.4	6,248	15.8
12 ~ 19	5,099	4,755	93.3	104	2.0	4,651	91.2
20 ~ 29	6,771	4,648	68.6	3,178	46.9	1,470	21.7
30 ~ 39	8,191	5,232	63.9	5,159	63.0	73	0.9
40 ~ 49	8,013	5,180	64.6	5,146	64.2	34	0.4
50 ~ 59	5,134	2,719	53.0	2,705	52.7	14	0.3
60세이상	6,257	1,648	26.3	1,641	26.2	6	0.1
남 자	19,186	14,449	75.3	11,166	58.2	3,283	17.1
12 ~ 19	2,651	2,458	92.7	42	1.6	2,416	91.1
20 ~ 29	3,209	2,304	71.8	1,505	46.9	799	24.9
30 ~ 39	4,104	3,517	85.7	3,477	84.7	40	1.0
40 ~ 49	4,031	3,371	83.6	3,355	83.2	17	0.4
50 ~ 59	2,553	1,823	71.4	1,816	71.1	8	0.3
60세이상	2,636	975	37.0	971	36.8	3	0.1
여 자	20,279	9,732	48.0	6,768	33.4	2,965	14.6
12 ~ 19	2,447	2,297	93.9	62	2.5	2,236	91.4
20 ~ 29	3,562	2,343	65.8	1,673	47.0	670	18.8
30 ~ 39	4,087	1,715	42.0	1,682	41.1	33	0.8
40 ~ 49	3,981	1,808	45.4	1,791	45.0	17	0.4
50 ~ 59	2,581	895	34.7	889	34.5	6	0.2
60세이상	3,621	673	18.6	670	18.5	3	0.1

3절 대도시의 통근·통학

1) 수도권외의 통근·통학 흐름

2005년 기준 수도권 통근·통학인구는 2,737천명으로 2000년 2,500천명보다 237천명 증가하였다. 수도권외의 유입·유출인구 규모를 보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경기 1,022천명, 인천 135천명, 기타 지역에서 17천명으로 1,174천명이 유입되고 있으며 경기, 인천, 기타지역 등으로의 유출인구는 612천명으로 나타나 낮 동안 562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유입인구 648천명, 유출인구 1,201천명으로 553천명 감소하였고, 인천은 유입인구 162천명, 유출인구 280천명으로 118천명 감소하였다.

<표 11> 수도권외 통근·통학 흐름

(단위 : 천명)

통근· 통학지 현가주지	2000					2005					증 감		
	서울	인천	경기	기타	계	서울	인천	경기	기타	계	서울	인천	경기
계	2,500	1,087	124	601	688	2,737	1,174	162	648	753	87	38	47
서울	586	(4,657)	56	472	58	612	(4,551)	65	492	55	(-105)	9	20
인천	254	138	(983)	107	9	280	135	(1,010)	132	13	-3	(27)	25
경기	1,058	934	67	(3,442)	57	1,201	1,022	95	(4,104)	84	88	28	(662)
기타	602	15	1	22	564	644	17	2	24	601	2	1	2

통근· 통학지 현가주지	통근					통학				
	서울	인천	경기	기타	계	서울	인천	경기	기타	계
계	2,202	1,006	137	520	539	535	168	25	128	214
서울	464	(3,325)	54	387	23	148	(1,227)	11	105	32
인천	228	112	(718)	111	5	52	23	(292)	21	8
경기	1,002	881	81	(2,980)	40	199	142	14	(1,124)	44
기타	508	13	2	21	471	136	3	-	3	130

주) ()는 시내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임

2) 서울특별시의 통근·통학 흐름

서울시 내부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규모는 4,551천명으로 2000년보다 106천명 감소하였다. 강북, 강북의 통근·통학 흐름을 살펴보면 한강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강·남북간 통근·통학인구는 879천명으로 2000년 기준의 707천명보다 172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강북에서 강남으로의 통근·통학인구는 102천명, 강남에서 강북으로의 통근·통학인구는 70천명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 강북내에서의 통근·통학인구는 155천명, 강남내에서의 통근·통학인구는 122천명 각각 감소하였다.

<표 12> 서울시 내부의 통근·통학 흐름

(단위 : 천명)

통근· 통학지 현거주지	2000		2005		증 감			
	강 북	강 남	강 북	강 남	강 북	강 남		
계	4,657	2,404	2,253	4,551	2,319	2,232	-85	-21
강 북	2,349	2,023	326	2,296	1,868	428	-155	102
강 남	2,307	381	1,927	2,255	451	1,804	70	-122

통근· 통학지 현거주지	통근· 통학지	통근		통학		
		강 북	강 남	강 북	강 남	
계	3,323	1,613	1,710	1,228	706	522
강 북	1,688	1,288	400	608	580	28
강 남	1,635	325	1,310	620	126	494

주) 1. 서울시 구(區)간 이동인구 기준임

2. 강북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남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 광역시의 통근·통학

2005. 11월 1일 현재 6대 광역시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근·통학 인구는 1,052천명으로 2000년 기준보다 100천명 증가하였다. 울산은 제외하고 5개 광역시는 통근·통학의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았다. 이는 광역시 인접지역의 산업공단 등으로 통근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인근 시군으로 통근하기 때문이다.

통학인구는 광역시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부산, 광주, 대전은 유입초과를, 대구, 인천, 울산은 유출초과를 보이고 있다.

6대 광역시의 통근·통학에 따른 유입지 및 유출지는 부산은 경남 김해시, 대구는 경북 경산시, 인천은 경기 부천시와 상위 1위로 나타났다.

<표 13> 광역시의 통근·통학 흐름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감(률)			
	통근·통학		통근		통학		통근·통학		통근		통학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		%
계	323	629	237	500	85	129	363	689	287	557	75	132	40	12.5	60	9.4
부산	60	123	44	108	16	15	69	124	53	112	16	12	10	15.9	1	0.6
대구	45	124	31	78	14	46	42	138	32	93	10	45	-3	-6.0	14	11.0
인천	124	254	98	211	26	43	162	280	137	228	25	52	39	31.3	26	10.0
광주	32	55	18	47	13	9	24	63	15	54	9	8	-7	-23.4	7	13.0
대전	35	53	21	45	15	8	35	63	22	55	12	8	-	-1.4	10	19.5
울산	27	20	25	11	2	8	30	22	28	15	2	7	3	10.3	2	10.2

<표 14> 광역시 유입 유출 인구 상위 지역

순위	유입지						유출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	김해시 (31)	경산시 (24)	부천시 (42)	화순군 (7)	청주시 (4)	양산시 (7)	김해시 (43)	경산시 (68)	부천시 (47)	나주시 (14)	금산군 (8)	경주시 (11)
2	양산시 (18)	칠곡군 (4)	강서구 (12)	나주시 (4)	연기군 (3)	해운대구(3)	양산시 (37)	구미시 (18)	김포시 (20)	담양군 (7)	논산시 (7)	양산시 (3)
3	진해시 (6)	구미시 (2)	시흥시 (11)	담양군 (4)	공주시 (3)	경주시 (3)	울주군 (8)	칠곡군 (16)	영등포구(17)	화순군 (6)	공주시 (7)	금정구 (1)

주) ()은 유입 및 유출인구(천명)임

4) 대도시의 통근·통학 이동구간(12세이상, 시내 이동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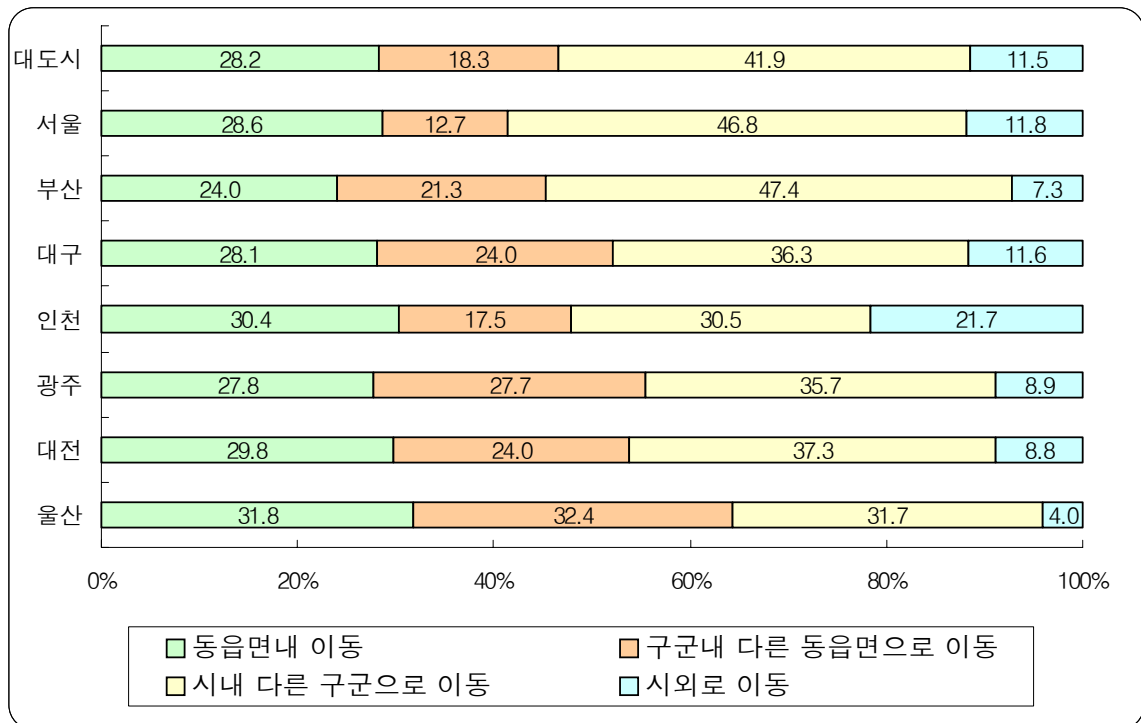
대도시의 통근·통학의 이동구간을 보면 총 통근·통학 인구 11,310천명 중 「거주지 시내」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88.5%(10,008천명), 「시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1.5%(1,300천명)로 나타났다.

「같은 시내」의 통근·통학 인구 중 「같은 구군」은 46.5%, 「다른 구군」은 41.9%이며, 「같은 구군내」에서도 「같은 동읍면」 28.2%, 「다른 동읍면」은 18.3% 이다.

「같은 시내」의 통근·통학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6.0%로 가장 높고, 인천은 78.3%로 가장 낮아 「시외로」의 통근·통학률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면 「같은 구(군)내」 통근·통학인구는 모두 감소한 반면 「다른 구(군)」으로의 통근·통학인구는 모두 증가하였다.

[그림 7] 대도시 통근·통학 이동구간 비교



<표 15> 대도시 통근·통학 이동구간

(단위 : 천명, %, %p)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00	11,284	5,242	1,786	1,190	1,238	658	674	497
시내에서	10,069	4,657	1,663	1,065	983	602	622	477
	(89.2)	(88.8)	(93.1)	(89.6)	(79.5)	(91.6)	(92.2)	(96.0)
- 같은 구군내	6,352	2,694	954	712	735	440	464	353
	(56.3)	(51.4)	(53.4)	(59.9)	(59.4)	(66.8)	(68.7)	(71.2)
·같은 동읍면내	2,130	948	331	210	257	122	141	121
	(18.9)	(18.1)	(18.5)	(17.6)	(20.7)	(18.6)	(20.9)	(24.5)
·다른 동읍면	4,222	1,746	623	502	479	318	323	232
	(37.4)	(33.3)	(34.9)	(42.2)	(38.7)	(48.3)	(47.8)	(46.7)
- 다른 구(군)	3,717	1,962	709	353	248	163	158	123
	(32.9)	(37.4)	(39.7)	(29.7)	(20)	(24.8)	(23.4)	(24.9)
시외로	1,215	586	123	124	254	55	53	20
	(10.8)	(11.2)	(6.9)	(10.4)	(20.5)	(8.4)	(7.8)	(4.0)
2005	11,310	5,164	1,710	1,188	1,291	706	716	535
시내에서	10,008	4,552	1,586	1,050	1,010	644	653	513
	(88.5)	(88.1)	(92.7)	(88.4)	(78.3)	(91.1)	(91.2)	(96.0)
- 같은 구군내	5,264	2,132	775	619	617	392	386	343
	(46.5)	(41.3)	(45.3)	(52.1)	(47.8)	(55.4)	(53.9)	(64.2)
·같은 동읍면내	3,192	1,476	411	334	392	196	214	170
	(28.2)	(28.6)	(24.0)	(28.1)	(30.4)	(27.8)	(29.8)	(31.8)
·다른 동읍면	2,071	657	364	285	225	195	172	173
	(18.3)	(12.7)	(21.3)	(24.0)	(17.5)	(27.7)	(24.0)	(32.4)
- 다른 구(군)	4,744	2,419	811	432	393	252	267	170
	(41.9)	(46.8)	(47.4)	(36.3)	(30.5)	(35.7)	(37.3)	(31.7)
시외로	1,300	612	124	138	280	63	63	22
	(11.5)	(11.8)	(7.3)	(11.6)	(21.7)	(8.9)	(8.8)	(4.0)
증 감	26	-78	-76	-1	53	48	42	38
시내에서	-62	-105	-77	-15	27	41	32	36
	(-0.7)	(-0.7)	(-0.4)	(-1.2)	(-1.2)	(-0.5)	(-1.0)	(0.0)
- 같은 구군내	-1,089	-562	-179	-94	-118	-48	-78	-10
	(-9.8)	(-10.1)	(-8.1)	(-7.8)	(-11.6)	(-11.4)	(-14.8)	(-7.0)
·같은 동읍면내	1,062	528	79	124	135	74	73	48
	(9.3)	(10.5)	(5.5)	(10.5)	(9.7)	(9.2)	(8.9)	(7.3)
·다른 동읍면	-2,151	-1,090	-259	-217	-253	-122	-150	-59
	(-19.1)	(-20.6)	(-13.6)	(-18.2)	(-21.2)	(-20.6)	(-23.8)	(-14.3)
- 다른 구(군)	1,027	457	103	78	145	89	109	46
	(9.0)	(9.4)	(7.7)	(6.6)	(10.5)	(10.9)	(13.9)	(6.8)
시외로	85	26	1	14	26	7	10	2
	(0.7)	(0.7)	(0.4)	(1.2)	(1.2)	(0.5)	(1.0)	(0.0)

동읍면 경계 기준으로 통근·통학지와 거주지가 다른 비율은 71.8% (8,118천명)로 2000년에 비해 9.3%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대도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시별로는 부산시가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6> 통근·통학지와 거주지 일치 여부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 감	
	통근·통학 인구	일치	불일치	통근·통학 인구	일치	불일치	불일치	증감률
계	11,285 (100.0)	2,130 (18.9)	9,154 (81.1)	11,310 (100.0)	3,192 (28.2)	8,118 (71.8)	-1,036	-11.3
서울	5,242 (100.0)	948 (18.1)	4,294 (81.9)	5,164 (100.0)	1,476 (28.6)	3,688 (71.4)	-606	-14.1
부산	1,786 (100.0)	331 (18.5)	1,455 (81.5)	1,710 (100.0)	411 (24.0)	1,299 (76.0)	-156	-10.7
대구	1,190 (100.0)	210 (17.6)	980 (82.4)	1,188 (100.0)	334 (28.1)	854 (71.9)	-125	-12.8
인천	1,238 (100.0)	257 (20.7)	981 (79.3)	1,291 (100.0)	392 (30.4)	899 (69.6)	-82	-8.4
광주	658 (100.0)	122 (18.6)	536 (81.4)	706 (100.0)	196 (27.8)	510 (72.2)	-26	-4.8
대전	674 (100.0)	141 (20.9)	533 (79.1)	716 (100.0)	214 (29.8)	503 (70.2)	-31	-5.8
울산	497 (100.0)	121 (24.5)	375 (75.5)	535 (100.0)	170 (31.8)	365 (68.2)	-10	-2.8

5절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

1) 지역별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

전체 통근·통학인구(24,181천명) 중 96.9%는 하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3.1%는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인 동지역에서는 96.3%, 읍면지역에서는 99.2%가 하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하나의 교통수단 이용자가 4.2%(947천명) 증가하였다.

통근·통학인구의 이용교통수단은 승용차가 32.3%(7,803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도보 29.3%(7,088천명), 버스 22.8%(5,502천명), 전철·지하철 7.2%(1,750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승용차 이용자 비율이 버스 이용자 비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승용차 이용자는 20.1%(1,305천명), 전철·지하철 이용자는 17.5%(261천명) 증가한 반면 버스 이용자는 18.5%(1,246천명) 감소하였다.

도보로 통근·통학을 하는 사람은 2000년에 비해 14.9%(91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읍면동내 통근·통학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은 승용차(32.9%), 읍면지역은 도보(41.2%)가 주된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동, 읍면 지역 모두 승용차는 증가하고 버스는 감소했으며, 도보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늘고 읍면지역에서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지역별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 감(률)	
		동지역	읍면 지역		동지역	읍면 지역		%
통근·통학인구	23,609	18,467	5,141	24,181	19,533	4,648	572	2.4
·단일수단	22,474	17,398	5,076	23,421	18,809	4,612	947	4.2
	(95.2)	(94.2)	(98.7)	(96.9)	(96.3)	(99.2)		
도 보	6,168	3,974	2,195	7,088	5,172	1,915	919	14.9
	(26.1)	(21.5)	(42.7)	(29.3)	(26.5)	(41.2)		
승용차	6,498	5,360	1,138	7,803	6,422	1,381	1,305	20.1
	(27.5)	(29.0)	(22.1)	(32.3)	(32.9)	(29.7)		
버 스	6,748	5,740	1,008	5,502	4,762	740	-1,246	-18.5
	(28.6)	(31.1)	(19.6)	(22.8)	(24.4)	(15.9)		
전철,지하철	1,489	1,485	5	1,750	1,742	8	261	17.5
	(6.3)	(8.0)	(0.1)	(7.2)	(8.9)	(0.2)		
기 차	41	34	7	31	25	5	-10	-25.6
	(0.2)	(0.2)	(0.1)	(0.1)	(0.1)	(0.1)		
택 시	178	164	14	118	108	10	-60	-33.5
	(0.8)	(0.9)	(0.3)	(0.5)	(0.6)	(0.2)		
자전거	308	189	119	290	207	83	-19	-6.1
	(1.3)	(1.0)	(2.3)	(1.2)	(1.1)	(1.8)		
기 타	1,043	452	591	840	371	469	-203	-19.4
	(4.4)	(2.4)	(11.5)	(3.5)	(1.9)	(10.1)		
·복합수단	1,135	1,069	66	759	723	36	-376	-33.1
	(4.8)	(5.8)	(1.3)	(3.1)	(3.7)	(0.8)		

주) 1. 버스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타버스 등 포함
 2. 도보는 도보로만 통근하는 경우임(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는 제외)

2) 대도시의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

대도시의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은 승용차 28.6%, 도보 26.7%, 버스 24.3%, 전철·지하철 12.4% 등으로 2000년 조사결과 대비 승용차 이용비율이 버스 이용자 비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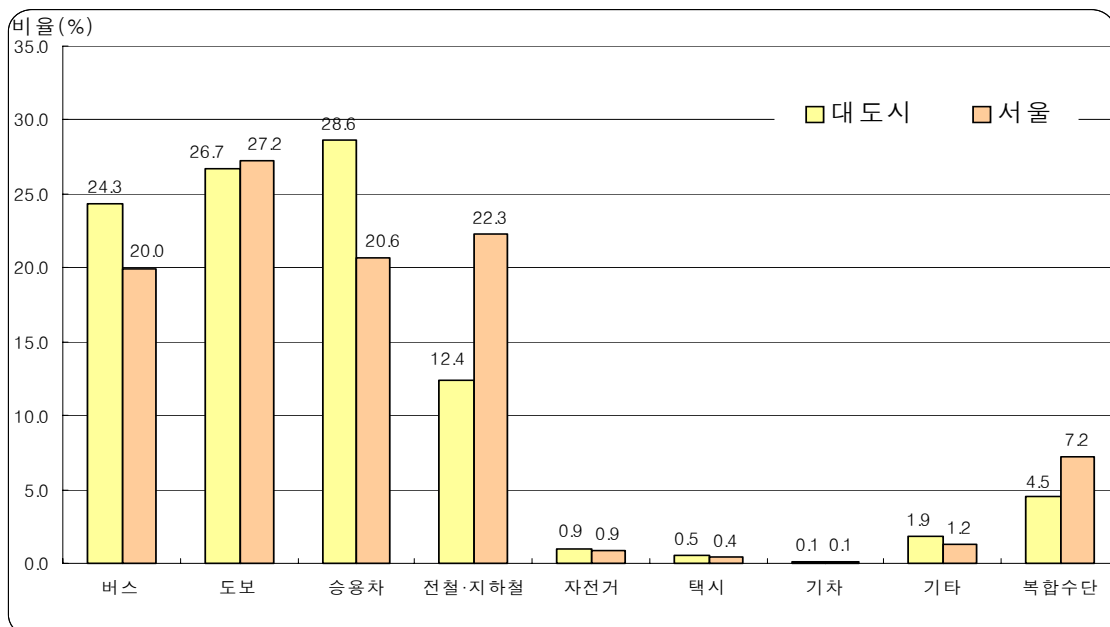
서울시의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은 도보(27.2%), 전철·지하철(22.3%), 승용차(20.6%), 버스(20.0%) 등이며, 2000년에 비해 버스(-4.8%p)는 낮아진 반면, 도보(5.2%p), 승용차(0.6%p), 전철·지하철(3.1%p)의 이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지하철 환승률 6.3%를 감안하면 전철·지하철 이용률은 28.6% 수준에 달한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부산은 버스가, 기타 광역시는 승용차가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이용률은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인구규모가 큰 서울 및 부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8] 대도시와 서울의 이용교통수단별 비교



<표 18> 대도시의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 구성비

(단위 : 천명, %)

	2000								2005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통근·통학 인구	11,285	5,242	1,786	1,190	1,238	658	674	497	11,310	5,164	1,710	1,188	1,291	706	716	535
단일 수단	93.0	89.0	94.9	97.8	94.3	98.6	98.8	98.2	95.5	92.7	96.6	98.7	96.2	99.4	99.4	99.2
도 보	21.5	22.0	21.1	20.2	20.4	20.6	22.8	21.6	26.7	27.2	25.4	27.1	25.0	27.2	27.7	27.1
승용차	25.7	20.0	23.2	33.5	32.2	33.0	38.1	33.6	28.6	20.6	29.0	38.1	34.4	38.4	43.4	37.4
버 스	31.1	24.8	41.8	36.7	29.5	40.2	32.8	34.9	24.3	20.0	32.5	25.9	25.5	29.8	24.3	26.9
전철 지하철	10.7	19.2	5.0	1.5	8.0	0.0	0.0	0.0	12.4	22.3	6.4	2.6	8.1	0.5	0.0	0.0
기 차	0.2	0.2	0.2	0.2	0.1	0.0	0.4	0.1	0.1	0.1	0.1	0.1	0.0	0.0	0.4	0.0
택 시	0.8	0.7	0.9	1.1	0.7	0.8	1.1	1.1	0.5	0.4	0.6	0.5	0.5	0.5	0.6	0.8
자전거	0.8	0.6	0.3	1.3	0.9	1.2	1.1	1.3	0.9	0.9	0.5	1.5	0.8	1.0	1.0	1.9
기 타	2.3	1.5	2.4	3.4	2.5	2.7	2.6	5.8	1.9	1.2	2.1	2.7	2.0	1.9	1.9	5.1
복합 수단	7.0	11.0	5.1	2.2	5.7	1.4	1.2	1.8	4.5	7.2	3.4	1.3	3.8	0.6	0.6	0.8
버스+ 전철	4.4	7.4	3.1	0.7	3.7	0.0	0.0	0.1	3.2	5.5	2.2	0.6	2.8	0.1	0.0	0.0
전철+ 그외	0.8	1.4	0.3	0.1	0.6	0.0	0.0	0.0	0.5	0.8	0.3	0.1	0.3	0.0	0.0	0.0
기타	1.8	2.2	1.6	1.4	1.4	1.4	1.1	1.7	0.8	0.9	1.0	0.6	0.7	0.5	0.6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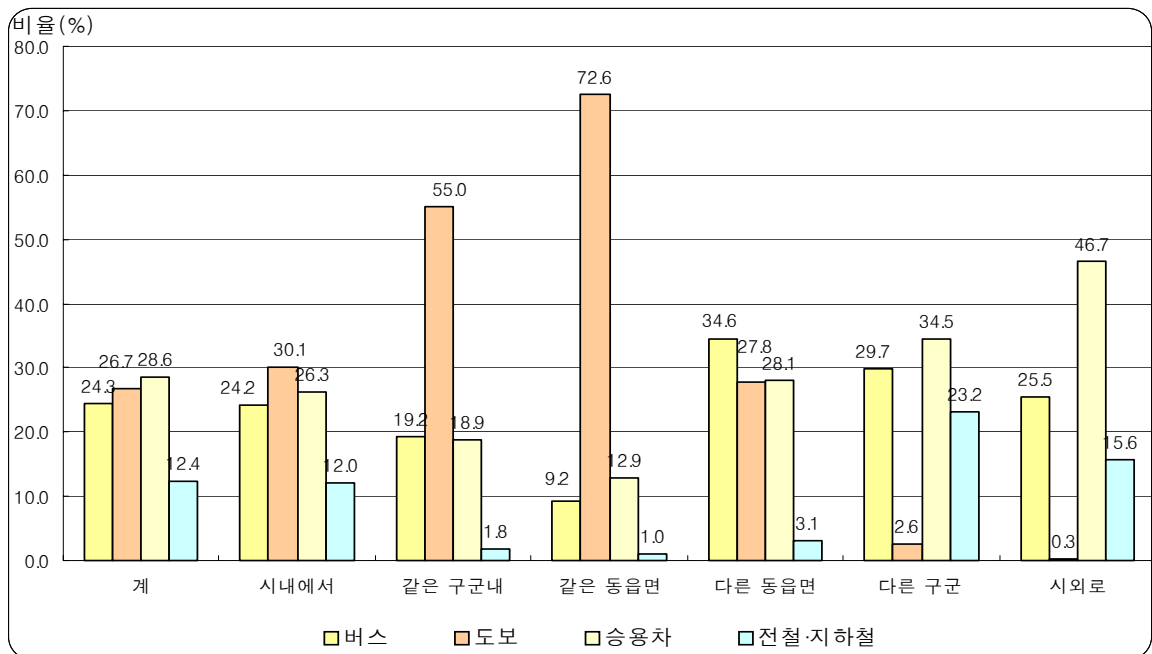
3) 대도시의 이동구간별 이용교통수단

7대 특·광역시 지역의 통학·통근인구의 이동구간별 이용교통수단은 전체적으로 승용차(28.6%), 도보(26.7%), 버스(24.3%), 전철·지하철(12.4%) 순이며, 전국과 비교하면 대도시에서 승용차와 도보 이용 비율은 낮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도시 인구의 통근·통학은 주로 「시내에서」는 도보(30.1%), 승용차(26.3%), 버스(24.2%), 전철·지하철(12.0%) 순이며, 「시외로」 통근·통학은 승용차(46.7%), 버스(25.5%), 전철·지하철(15.6%) 순으로 나타났다.

「시내에서」 통근·통학 중 「같은 읍면동내」는 주로 도보(72.6%)를, 「다른 동읍면」으로는 버스(34.6%)를, 「다른 구군」으로는 승용차(34.5%)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림 9] 대도시의 이동구간별 이용교통수단



<표 19> 7대 특·광역시 이동구간별 이용교통수단

(단위 : 천명, %)

	계	특·광역시내					다른 구군	시외로
		같은 구군내			다른 구군			
		같은 동읍면	다른 동읍면					
통근·통학인구	11,285 (100.0)	10,069 (100.0)	6,352 (100.0)	2,130 (100.0)	4,222 (100.0)	3,717 (100.0)	1,215 (100.0)	
·단일수단	10,495 (93.0)	9,447 (93.8)	6,142 (96.7)	2,114 (99.2)	4,028 (95.4)	3,305 (88.9)	1,048 (86.2)	
도 보	2,421 (21.5)	2,416 (24.0)	2,353 (37.0)	1,500 (70.4)	853 (20.2)	63 (1.7)	5 (0.4)	
승용차	2,903 (25.7)	2,410 (23.9)	1,307 (20.6)	232 (10.9)	1,075 (25.5)	1,103 (29.7)	493 (40.6)	
버 스	3,506 (31.1)	3,185 (31.6)	1,885 (29.7)	267 (12.5)	1,619 (38.3)	1,300 (35.0)	321 (26.4)	
전철,지하철	1,211 (10.7)	1,026 (10.2)	299 (4.7)	19 (0.9)	279 (6.6)	728 (19.6)	184 (15.2)	
기 차	18 (0.2)	4 (0.0)	1 (0.0)	- (0.0)	1 (0.0)	3 (0.1)	13 (1.1)	
택 시	91 (0.8)	90 (0.9)	59 (0.9)	12 (0.6)	47 (1.1)	31 (0.8)	1 (0.1)	
자전거	88 (0.8)	87 (0.9)	75 (1.2)	29 (1.4)	46 (1.1)	12 (0.3)	1 (0.1)	
기 타	257 (2.3)	228 (2.3)	162 (2.6)	55 (2.6)	108 (2.5)	66 (1.8)	29 (2.4)	
·복합수단	790 (7.0)	622 (6.2)	211 (3.3)	17 (0.8)	194 (4.6)	412 (11.1)	167 (13.8)	
통근·통학인구	11,310 (100.0)	10,008 (100.0)	5,264 (100.0)	3,192 (100.0)	2,071 (100.0)	4,744 (100.0)	1,301 (100.0)	
·단일수단	10,800 (95.5)	9,615 (96.1)	5,223 (99.2)	3,180 (99.6)	2,043 (98.6)	4,392 (92.6)	1,185 (91.1)	
도 보	3,021 (26.7)	3,017 (30.1)	2,892 (55.0)	2,317 (72.6)	575 (27.8)	124 (2.6)	4 (0.3)	
승용차	3,240 (28.6)	2,632 (26.3)	994 (18.9)	412 (12.9)	582 (28.1)	1,639 (34.5)	607 (46.7)	
버 스	2,752 (24.3)	2,420 (24.2)	1,009 (19.2)	293 (9.2)	717 (34.6)	1,411 (29.7)	332 (25.5)	
전철,지하철	1,401 (12.4)	1,198 (12.0)	96 (1.8)	31 (1.0)	65 (3.1)	1,102 (23.2)	203 (15.6)	
기 차	13 (0.1)	1 (0.0)	- (0.0)	- (0.0)	- (0.0)	1 (0.0)	12 (1.0)	
택 시	56 (0.5)	55 (0.6)	32 (0.6)	17 (0.5)	16 (0.8)	23 (0.5)	1 (0.1)	
자전거	105 (0.9)	104 (1.0)	79 (1.5)	39 (1.2)	40 (1.9)	25 (0.5)	1 (0.1)	
기 타	213 (1.9)	188 (1.9)	120 (2.3)	71 (2.2)	49 (2.4)	68 (1.4)	25 (1.9)	
·복합수단	509 (4.5)	393 (3.9)	41 (0.8)	12 (0.4)	28 (1.4)	352 (7.4)	116 (8.9)	

4) 통근인구의 연령계층별 이용교통수단

우리나라 전체 통근인구의 이용교통수단은 승용차(41.3%), 도보(24.2%), 버스(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주된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2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은 버스를, 30~50대 연령층은 승용차를, 60대 이상은 도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10대 연령층은 버스(43.8%)와 도보(38.8%)를 주로 이용하며, 30~50대는 승용차 이용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도보(59.3%) 통근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근무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0> 통근인구의 연령계층별 이용교통수단

(단위 : 천명, %)

	계	12~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통근인구	17,933 (100.0)	104 (100.0)	3,178 (100.0)	5,159 (100.0)	5,146 (100.0)	2,705 (100.0)	1,641 (100.0)
·단일수단	17,397 (97.0)	102 (97.6)	3,031 (95.4)	4,983 (96.6)	5,023 (97.6)	2,640 (97.6)	1,619 (98.6)
도 보	4,335 (24.2)	40 (38.8)	528 (16.6)	841 (16.3)	1,145 (22.2)	808 (29.9)	973 (59.3)
승용차	7,414 (41.3)	7 (6.3)	948 (29.8)	2,683 (52.0)	2,550 (49.5)	1,022 (37.8)	206 (12.5)
버 스	3,147 (17.5)	46 (43.8)	1,009 (31.8)	794 (15.4)	741 (14.4)	411 (15.2)	146 (8.9)
전철,지하철	1,337 (7.5)	6 (5.7)	450 (14.1)	435 (8.4)	254 (4.9)	137 (5.1)	56 (3.4)
기 차	19 (0.1)		3 (0.1)	6 (0.1)	6 (0.1)	3 (0.1)	1 (0.1)
택 시	111 (0.6)	1 (0.8)	24 (0.8)	27 (0.5)	33 (0.6)	20 (0.7)	7 (0.4)
자전거	206 (1.1)	1 (1.0)	23 (0.7)	42 (0.8)	48 (0.9)	42 (1.5)	50 (3.0)
기 타	828 (4.6)	1 (1.1)	46 (1.5)	155 (3.0)	247 (4.8)	199 (7.3)	180 (11.0)
·복합수단	536 (3.0)	2 (2.4)	147 (4.6)	176 (3.4)	123 (2.4)	64 (2.4)	23 (1.4)

5) 통학인구의 학교급별 이용교통수단

학교를 다니는 통학인구(6,248천명)의 이용교통수단은 도보(44.1%), 버스(37.7%), 전철·지하철(6.6%)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은 대부분 도보(87.2%)로 통학하고 있으며, 버스 이용자는 8.2% 수준이다. 중학교 학생은 도보(67.1%)·버스(24.7%), 고등학교 학생은 버스(52.3%)·도보(35.0%)로 대부분 버스와 도보를 이용하고 있다. 대학이상 학생의 경우는 버스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전철·지하철도 높은 편이다.

승용차의 이용률은 대학원이상(20.2%), 대학(6.3%), 대학교(5.7%) 순으로 2000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1> 통학인구의 학교급별 이용교통수단

(단위 : 천명, %)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4년미만)	대학교 (4년이상)	대학원 이상	기타
통학인구	6,248 (100.0)	479 (100.0)	1,946 (100.0)	1,724 (100.0)	431 (100.0)	1,275 (100.0)	89 (100.0)	304 (100.0)
·단일수단	6,024 (96.4)	478 (99.8)	1,937 (99.5)	1,695 (98.3)	394 (91.3)	1,154 (90.5)	80 (89.8)	287 (94.2)
도 보	2,753 (44.1)	418 (87.2)	1,306 (67.1)	603 (35.0)	62 (14.5)	282 (22.1)	16 (18.0)	66 (21.7)
승용차	389 (6.2)	16 (3.3)	87 (4.5)	113 (6.5)	27 (6.3)	72 (5.7)	18 (20.2)	56 (18.4)
버 스	2,355 (37.7)	39 (8.2)	481 (24.7)	902 (52.3)	233 (54.2)	563 (44.1)	24 (27.5)	113 (37.1)
전철,지하철	413 (6.6)	1 (0.1)	11 (0.6)	51 (3.0)	65 (15.2)	220 (17.3)	20 (22.5)	45 (14.7)
기 차	12 (0.2)	- (0.0)	- (0.0)	1 (0.0)	2 (0.5)	7 (0.6)	1 (0.8)	1 (0.3)
택 시	7 (0.1)	- (0.0)	1 (0.1)	3 (0.2)	1 (0.2)	1 (0.1)	1 (0.1)	1 (0.3)
자전거	84 (1.3)	4 (0.8)	49 (2.5)	21 (1.2)	1 (0.3)	6 (0.5)	6 (0.5)	3 (0.8)
기 타	12 (0.2)	1 (0.1)	2 (0.1)	2 (0.1)	1 (0.2)	3 (0.2)	3 (0.2)	3 (0.9)
·복합수단	223 (3.6)	1 (0.2)	9 (0.5)	29 (1.7)	38 (8.7)	121 (9.5)	9 (10.2)	18 (5.8)

6절 통근·통학 소요시간

1) 통근·통학 소요시간별 인구

통근·통학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30분미만이 60.3%(14,576천명)로 가장 높고, 30분~1시간미만 26.2%(6,320천명), 1시간~2시간미만 12.4%(2,984천명), 2시간이상 1.2%(302천명) 순이며, 2000년에 비해 30분미만 통근·통학 인구는 4.7%p 증가, 30분 이상은 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30분미만이 동지역은 55.9%, 읍면지역은 78.5%로 동(도시)지역에서 통근·통학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동, 읍면지역 모두 30분미만은 증가하고 30분 이상은 감소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7대도시는 9개도보다 30분미만은 16.1%p 적고, 30~60분미만은 10.2%p, 60분이상은 6.0%p 많아 대도시의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개광역시보다 30분미만에서 13.2%p 적고, 1시간 이상은 9.5%p 높았다.

<표 22> 통근·통학 소요시간

(단위 : 천명, %)

	소요시간							
	계	15분미만	15 ~ 30	30 ~ 45	45 ~ 60	60 ~ 90	90 ~ 120	120이상
2000								
전 국	23,609 (100.0)	6,669 (28.2)	6,460 (27.4)	6,239 (26.4)	775 (3.3)	2,486 (10.5)	660 (2.8)	321 (1.4)
동 지 역	18,467 (100.0)	4,215 (22.8)	5,023 (27.2)	5,384 (29.2)	692 (3.7)	2,272 (12.3)	596 (3.2)	285 (1.5)
읍면지역	5,141 (100.0)	2,454 (47.7)	1,437 (27.9)	854 (16.6)	83 (1.6)	214 (4.2)	64 (1.2)	36 (0.7)
7대도시	11,285 (100.0)	2,268 (20.1)	2,856 (25.3)	3,553 (31.5)	492 (4.4)	1,555 (13.8)	376 (3.3)	183 (1.6)
서 울	5,242 (100.0)	948 (18.1)	1,152 (22.0)	1,637 (31.2)	281 (5.4)	905 (17.3)	218 (4.2)	101 (1.9)
6개광역시	6,042 (100.0)	1,320 (21.9)	1,704 (28.2)	1,916 (31.7)	211 (3.5)	650 (10.8)	158 (2.6)	82 (1.4)
9개도	12,324 (100.0)	4,400 (35.7)	3,604 (29.2)	2,686 (21.8)	283 (2.3)	931 (7.6)	284 (2.3)	137 (1.1)
2005								
전 국	24,181 (100.0)	7,680 (31.8)	6,896 (28.5)	5,556 (23.0)	764 (3.2)	2,338 (9.7)	646 (2.7)	302 (1.2)
동 지 역	19,533 (100.0)	5,369 (27.5)	5,556 (28.4)	4,870 (24.9)	701 (3.6)	2,173 (11.1)	594 (3.0)	272 (1.4)
읍면지역	4,648 (100.0)	2,311 (49.7)	1,340 (28.8)	686 (14.8)	64 (1.4)	165 (3.6)	52 (1.1)	30 (0.6)
7대도시	11,310 (100.0)	2,791 (24.7)	3,058 (27.0)	3,093 (27.4)	475 (4.2)	1,400 (12.4)	337 (3.0)	156 (1.4)
서울	5,164 (100.0)	1,110 (21.5)	1,189 (23.0)	1,456 (28.2)	276 (5.3)	848 (16.4)	200 (3.9)	85 (1.6)
6개광역시	6,146 (100.0)	1,681 (27.3)	1,869 (30.4)	1,637 (26.6)	199 (3.2)	552 (9.0)	137 (2.2)	71 (1.2)
9개도	12,871 (100.0)	4,889 (38.0)	3,838 (29.8)	2,462 (19.1)	290 (2.3)	938 (7.3)	309 (2.4)	146 (1.1)

2) 통근·통학 평균 소요시간

통근·통학인구가 직장 및 학교에 다니는 데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전국이 30.6분으로 2000년 32.4분에 비해 1.8분 단축되었고, 모든 시도의 소요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광주, 대구 지역의 단축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5분으로 가장 길며, 다음으로 인천(36.7분), 경기(35.6분), 부산(33.1분) 등의 순이며, 수도권지역이 타 지역보다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지역별 통근·통학 평균소요시간

(단위 : 분)

시도명	2000	2005	증 감	시도명	2000	2005	증 감
전 국	32.4	30.6	-1.8				
서 울	40.5	38.5	-1.9	강 원	20.8	19.9	-0.9
부 산	35.6	33.1	-2.5	충 북	23.7	22.4	-1.4
대 구	33.3	29.0	-4.3	충 남	21.4	20.4	-1.0
인 천	38.6	36.7	-1.9	전 북	24.4	22.2	-2.2
광 주	31.7	27.1	-4.6	전 남	21.6	20.1	-1.5
대 전	30.3	27.8	-2.6	경 북	22.2	20.3	-1.9
울 산	28.4	25.0	-3.4	경 남	24.4	23.3	-1.1
경 기	37.2	35.6	-1.5	제 주	23.5	21.4	-2.2

직장에 다니는 통근인구의 이용교통수단별 평균 소요시간은 기차 84.5분, 복합수단 63.8분, 전철·지하철 56.5분, 버스 39.1분, 승용차 32.0분 등이며, 2000년에 비해 복합수단, 기차, 자전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수단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이용교통수단별 평균 소요시간

(단위 : 분)

교통수단별	2000	2005	증 감	교통수단별	2000	2005	증 감
계	31.9	30.9	-1.0				
- 단일수단	30.5	29.9	-0.6	·자전거	16.9	18.5	1.5
·버 스	39.5	39.1	-0.4	·택 시	19.8	17.4	-2.4
·도 보	13.7	13.8	0.1	·기 차	79.0	84.5	5.5
·승용차	33.3	32.0	-1.3	·기 타	21.7	20.5	-1.2
·전철지하철	57.9	56.5	-1.4	- 복합수단	60.7	63.8	3.1

학교급별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국 평균 29.8분으로 2000년에 비해 3.7분 줄었다.

2000년에 비해 각급학교 학생의 통학 평균소요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학교급별 통학 평균 소요시간

(단위 : 분)

학교급별	2000	2005	증 감	학교급별	2000	2005	증 감
계	33.6	29.8	-3.7				
초등학교	13.8	12.3	-1.5	대학(4년제미만)	53.2	51.3	-1.9
중 학 교	20.4	17.4	-3.0	대학교(4년제이상)	52.3	49.5	-2.8
고등학교	30.2	26.3	-4.0	대학원 이상	52.6	50.8	-1.8

제 3 장 주간인구

1절 시도별 주간인구

12세 이상의 통근·통학 인구(24,181천명) 중 다른 시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2,737천명으로 전체 통근·통학 인구의 11.3%를 차지하며 2000년에 비해 0.7%p 증가하였다.

	<u>2000</u>	<u>2005</u>	<u>증감(%p)</u>
시도간 통근·통학율(%)	10.6	11.3	0.7

시도간 통근·통학 인구의 유입 및 유출을 보면 서울시는 인천, 경기 등 다른 시도에서 1,174천명이 서울로 통근·통학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인구는 612천명으로 유출인구 보다 유입인구가 562천명 많아 주간인구지수가 105.8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ast \text{주간인구지수} = (\text{상주인구} + \text{유입인구} - \text{유출인구}) / \text{상주인구} \times 100$$

6개 광역시의 시도간 통근·통학 인구를 보면 울산은 제외한 광역시는 유출이 많아 100미만의 주간인구지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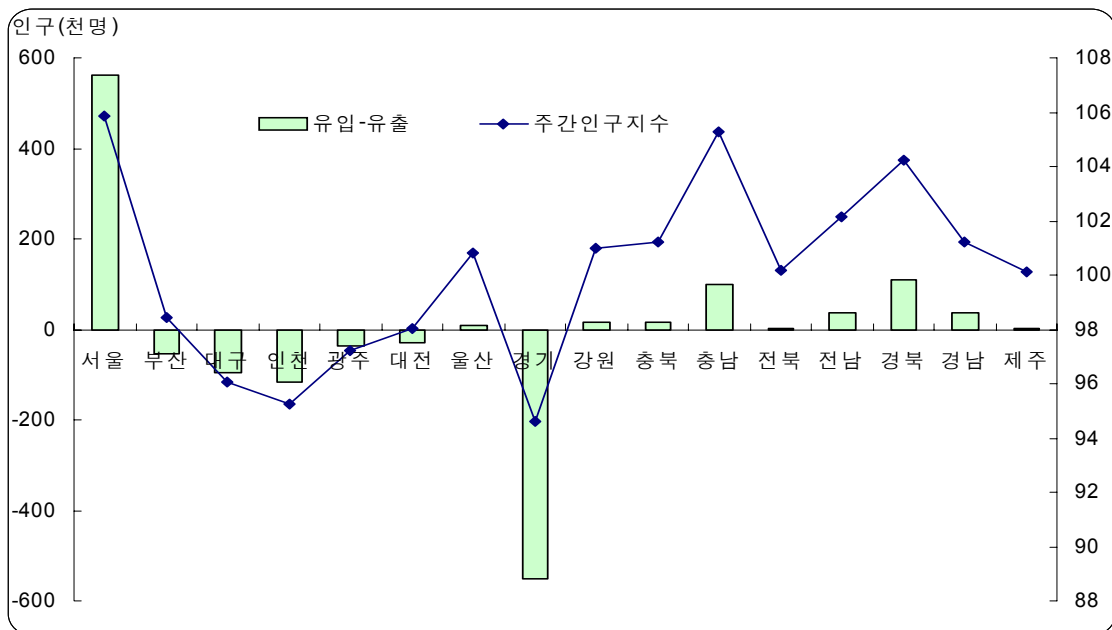
9개도 중 경기도는 통근·통학 인구가 서울, 인천 등으로 유출되어 주간인구지수(94.6)가 낮으나 다른 도는 인접 광역시의 유출인구를 흡수하여 상주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시도별 주간인구

(단위 : 천명)

	상주인구	유·출입인구			주간인구	주간인구 지수
		유 입	유 출	순유입 (유입-유출)		
전 국	46,393	2,737	2,737	-	46,393	100.0
서 울	9,632	1,174	612	562	10,194	105.8
부 산	3,460	69	124	-55	3,406	98.4
대 구	2,418	42	138	-95	2,323	96.1
인 천	2,481	162	280	-118	2,364	95.3
광 주	1,393	24	63	-38	1,355	97.2
대 전	1,418	35	63	-28	1,390	98.0
울 산	1,030	30	22	8	1,038	100.8
경 기	10,214	648	1,201	-553	9,661	94.6
강 원	1,437	24	10	14	1,451	101.0
충 북	1,433	46	29	17	1,450	101.2
충 남	1,855	138	39	98	1,953	105.3
전 북	1,753	14	11	3	1,756	100.2
전 남	1,789	62	24	38	1,828	102.1
경 북	2,558	154	45	109	2,667	104.2
경 남	2,998	112	76	36	3,034	101.2
제 주	524	1	-	1	524	100.1

[그림 10] 시도별 유출입 인구 및 주간인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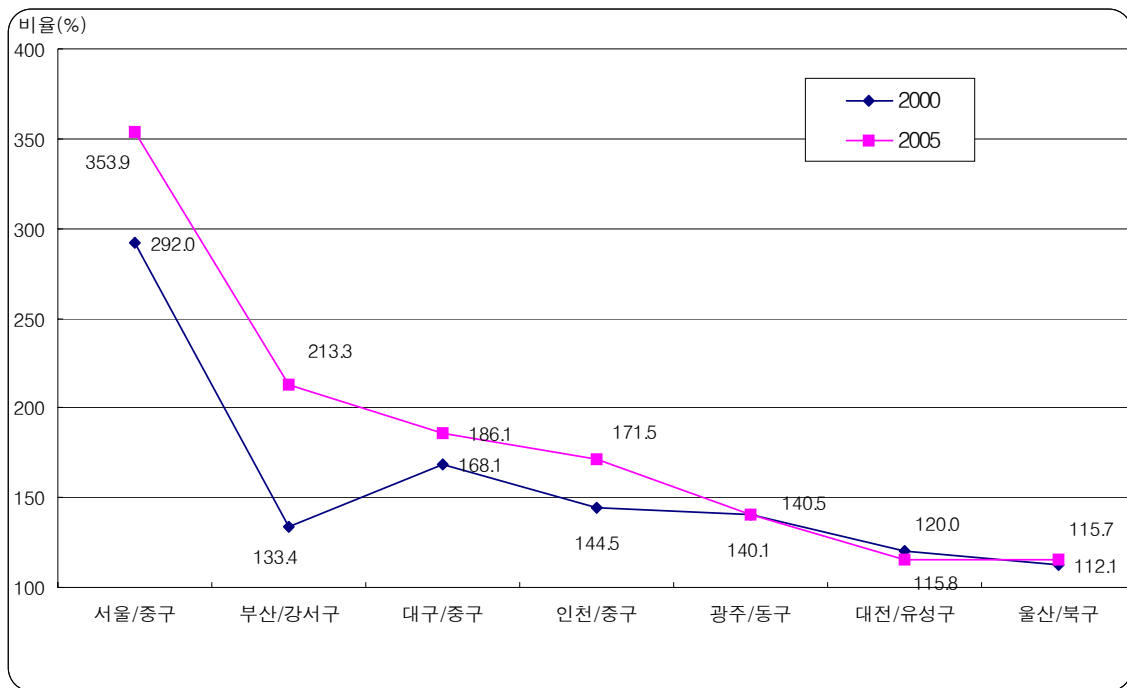
2절 대도시의 구(군)별 주간인구

7대 대도시 구(군)중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로 353.9이며 유입초과인구는 318천명으로 강남구 409천명 보다 적으나 상주인구(125천명)가 적어 주간인구지수는 더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의 주간인구를 살펴보면 부산 강서구, 대구, 인천 지역의 중구, 광주 동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의 주간인구지수가 각 시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2000년에 비해 구(군) 상위 주간인구의 변화를 보면 부산 사상구, 인천 남동구가 새로이 주간인구 상위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대도시별 주간인구지수 최고 지역



<표 27> 대도시의 구(군)별 주간인구 상위순위 지역

(단위 : 천명)

순 위	2000				2005			
	구시군명	상주 인구	주간 인구	주간인구 지수	구시군명	상주 인구	주간 인구	주간인구 지수
서울특별시								
1	중구	128	375	292.0	중구	125	443	353.9
2	종로구	166	358	215.7	종로구	152	382	251.0
3	강남구	512	851	166.4	강남구	501	910	181.7
4	영등포구	381	526	137.9	서초구	366	511	139.8
부산광역시								
1	중구	57	108	190.5	강서구	45	96	213.3
2	강서구	52	70	133.4	중구	52	102	197.3
3	동구	119	139	117.0	동구	102	132	129.5
4	부산진구	407	447	109.9	사상구	269	296	109.9
대구광역시								
1	중구	84	142	168.1	중구	73	136	186.1
2	북구	393	413	105.0	달성군	147	148	100.1
3	남구	188	190	100.8	북구	453	451	99.7
4	달성군	146	138	94.9	남구	177	172	97.3
인천광역시								
1	중구	65	93	144.5	중구	84	145	171.5
2	동구	71	82	114.7	동구	73	82	112.1
3	옹진군	13	14	109.4	옹진군	12	13	109.3
4	강화군	59	62	104.2	남동구	364	386	106.2
광주광역시								
1	동구	114	160	140.5	동구	118	165	140.1
2	광산구	244	251	102.9	광산구	303	312	103.2
3	북구	469	449	95.7	북구	453	416	91.8
4	서구	276	246	89.1	서구	309	282	91.4
대전광역시								
1	유성구	158	189	120.0	유성구	219	253	115.8
2	동구	242	249	102.8	대덕구	218	229	104.8
3	대덕구	230	226	98.4	동구	228	223	97.6
4	중구	249	240	96.7	중구	252	241	95.8
울산광역시								
1	북구	117	131	112.1	북구	139	161	115.7
2	남구	318	346	108.5	울주군	162	174	107.2
3	동구	179	183	101.8	남구	332	355	106.8
4	울주군	158	161	101.7	동구	174	175	100.9

3절 시군구별 주간인구 상위 및 하위 지역

전국 234개 시군구별 주간인구 중 상위 10위까지는 모두 특·광역시(區)로 나타났다.

통근·통학 인구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도봉구(76.5)이며 이어 부산 북구(7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시군구별 주간인구 상위 및 하위 순위

순위	상 위			하 위		
	구시군	주간인구수 지	최다유입지	구시군	주간인구수 지	최다유출지
1	서울 중구	353.9	경기 고양시 서울 성북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도봉구	76.5	서울 노원구 서울 중구 서울 강북구
2	서울 종로구	251.0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시	부산 북구	77.4	부산 사상구 경남 김해시 부산시 진구
3	부산 강서구	213.3	부산 사하구 부산 북구 경남 김해시	울산 중구	77.7	울산 남구 울산 북구 울산 울주군
4	부산 중구	197.3	부산 서구 부산 사하구 부산 영도구	서울 중랑구	78.8	서울 동대문구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5	대구 중구	186.1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대구 북구	서울 강북구	79.4	서울 성북구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6	서울 강남구	181.7	경기 성남시 서울 송파구 서울 관악구	서울 은평구	79.8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서대문구
7	인천 중구	171.5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	경기 광명시	80.3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8	광주 동구	140.1	광주 북구 광주 남구 광주 서구	경기 의왕시	80.7	경기 안양시 경기 군포시 서울 강남구
9	서울 서초구	139.8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	81.0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서울 동작구
10	서울 용산구	133.8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영등포구	인천 연수구	81.7	인천 남동구 인천 남구 인천 중구

주거실태 부문

1. 거주기간

1.1 가구주 성, 연령별 거주기간

다음 <표1>은 2000년도 거주기간별 분포와 2005년도 가구주의 성, 연령별 거주기간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1> 가구주 성, 연령별 거주기간

(단위 : 천가구, %)

	계	1년미만	1~2	2~3	3~5	5~10	10~15	15~20	20~25	25년이상
2000	14,310 (100.0)	2,598 (18.2)	2,230 (15.6)	1,235 (8.6)	1,510 (10.6)	3,176 (22.2)	1,135 (7.9)	489 (3.4)	413 (2.9)	1,522 (10.6)
2005	15,889 (100.0)	2,736 (17.2)	2,035 (12.8)	1,784 (11.2)	2,167 (13.6)	3,029 (19.1)	1,556 (9.8)	559 (3.5)	432 (2.7)	1,583 (10.0)
남자	12,391	(16.2)	(12.5)	(11.4)	(14.3)	(20.0)	(10.2)	(3.6)	(2.7)	(8.9)
여자	3,497	(20.8)	(13.9)	(10.6)	(11.2)	(15.6)	(8.2)	(3.1)	(2.7)	(13.8)
19세이하	70	(68.7)	(15.3)	(5.1)	(3.7)	(4.8)	(1.3)	(0.6)	(0.2)	(0.1)
20~29	1,289	(48.4)	(24.8)	(11.1)	(7.1)	(5.6)	(1.6)	(0.5)	(0.3)	(0.5)
30~39	3,590	(25.6)	(19.7)	(16.1)	(17.1)	(16.4)	(2.8)	(0.6)	(0.4)	(1.3)
40~49	4,413	(14.7)	(12.3)	(12.5)	(16.8)	(25.5)	(11.5)	(2.5)	(1.2)	(3.0)
50~59	2,983	(9.7)	(8.9)	(9.6)	(13.4)	(22.2)	(16.3)	(6.4)	(4.3)	(9.3)
60세이상	3,544	(5.9)	(5.4)	(6.2)	(9.0)	(16.2)	(12.5)	(6.6)	(6.5)	(31.6)

※ 계에는 거주기간 미상가구 포함

<표1>을 통해 2005년 가구의 거주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5~10년 거주가구가 19.1%로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가구의 거주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5~10년 거주가구가 19.1%로 가장 많고, 1년미만 거주가구가 17.2%, 3~5년 거주가구가 13.6% 이다. 2년 미만의 단기간 거주가구의 비율은 2000년 33.8%에서 2005년 30.0%로 5년전보다 3.8%p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30%의 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가구주의 경우 5~10년이 20.0%로 가장 많고, 여자 가구주의 경우 1년미만 거주가구가 20.8%로 가장 많다.

1.2 점유형태별 거주기간

다음 <표2>는 2005년 가구의 주택(거처) 점유형태별 거주기간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2> 점유형태별 거주기간

(단위 : 천가구, %)

	계	1년미만	1~2	2~3	3~5	5~10	10~15	15~20	20~25	25년이상
계	15,889 (100.0)	2,736 (17.2)	2,035 (12.8)	1,784 (11.2)	2,167 (13.6)	3,029 (19.1)	1,556 (9.8)	559 (3.5)	432 (2.7)	1,583 (10.0)
자기집	8,897	(6.9)	(6.9)	(8.9)	(13.8)	(22.4)	(14.1)	(5.5)	(4.4)	(17.0)
전세	3,331	(27.1)	(21.8)	(15.9)	(15.4)	(15.2)	(3.1)	(0.7)	(0.4)	(0.4)
월세	2,832	(35.8)	(20.0)	(13.1)	(11.5)	(12.7)	(5.3)	(0.8)	(0.4)	(0.4)
사글세	225	(39.9)	(18.4)	(10.4)	(9.5)	(14.0)	(3.5)	(1.1)	(1.1)	(2.0)
무상	604	(19.6)	(14.6)	(11.4)	(12.9)	(22.1)	(7.2)	(3.1)	(2.3)	(6.5)

※ 계에는 거주기간 미상가구 포함

<표2>를 통해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5~10년이 22.4%로 가장 많고, 임차 가구의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주택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거주기간별 분포를 보자. 자가 가구의 경우 5~10년이 22.4%, 25년 이상이 17.0%, 10~15년 14.1% 순이다. 전세, 월세, 사글세 등 임차가구의 경우 1년 미만 거주가구 비율이 전세 가구 27.1%, 월세 가구 35.8%, 사글세 가구 39.9%로 1년 미만의 거주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임차가구가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거시설 형태별 가구현황

다음 <표3>은 2005년도 가구주의 성, 연령별 주거시설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가구 비율은 92.0% 이고,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가구의 비율은 8.0%이다.

<표3> 가구주 성, 연령별 주거시설

(단위 : 천가구)

	계		주거시설을 모두 갖춘 주택 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시설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구성비 (%)		구성비(%)		구성비(%)
계	15,889 (100.0)	100.0	14,616 (92.0)	100.0	1,272 (8.0)	100.0
남자	12,391	78.0	11,513	78.8	878	69.0
여자	3,497	22.0	3,103	21.2	394	31.0
19세이하	70	0.4	65	0.4	6	0.5
20~29세	1,289	8.1	1,238	8.5	51	4.0
30~39세	3,590	22.6	3,483	23.8	107	8.4
40~49세	4,413	27.8	4,188	28.7	225	17.7
50~59세	2,983	18.8	2,736	18.7	247	19.4
60세이상	3,544	22.3	2,906	19.9	638	50.1

<표3>에서 보듯, 전체 15,889천 가구 중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14,616천 가구이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가구는 1,272천 가구이다. 주거시설을 갖추지 못한 가구에 대해 성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주거시설을 갖추지 못한 1,272 가구 중 가구주가 남자인 가구는 878천 가구로 주거시설 미비가구의 69%를 차지하며, 여자인 가구는 394 천 가구로 31%를 차지한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는 638 천 가구로 주거시설 미비가구의 50.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 가구주의 주거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거주 층 (지하반지하, 지상, 옥상·옥탑)

다음 <표4>는 2005년도 가구의 점유형태별 거주층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4> 점유형태별 거주층

(단위 : 천가구, %)

		계	지하(반지하)	지상	옥상(옥탑)
계		15,889 (100.0)	588 (100.0)	15,250 (100.0)	50 (100.0)
점유형태	자가	8,897	(14.1)	(57.8)	(7.1)
	임차	6,387	(82.7)	(38.4)	(85.3)
	무상	604	(3.1)	(3.8)	(7.6)

<표4>를 통해 지상층은 자가 비율이 높고, 지하(반지하) 거주가구의 임차가구 비율은 82.7%, 옥상(옥탑)은 85.3%로 지하(반지하) 또는 옥상(옥탑) 거주가구는 임차가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5>는 2005년도 전국 각 지역에 거쳐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거주가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5> 시도별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거주가구

(단위 : 천가구)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거주가구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거주가구	
		구성비(%)			구성비(%)
전국	638	(100.0)			
서울	386	(60.5)	강원	2	(0.3)
부산	9	(1.4)	충북	2	(0.3)
대구	4	(0.7)	충남	3	(0.5)
인천	46	(7.3)	전북	1	(0.1)
광주	1	(0.1)	전남		(0.1)
대전	7	(1.1)	경북	1	(0.2)
울산	1	(0.2)	경남	3	(0.5)
경기	170	(26.6)	제주	1	(0.2)

<표5>를 통해서는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거주가구의 60.5%는 서울, 26.6%는 경기, 7.3%는 인천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에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거주가구의 94.4%가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6>은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로 거주층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6> 가구주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거주층

(단위 : 천가구, %)

		계	지하(반지하)	지상	옥상(옥탑)
계		15,889 (100.0)	588 (3.7)	15,250 (96.0)	50 (0.3)
가구주 성별	남자	12,391	(3.2)	(96.5)	(0.3)
	여자	3,497	(5.5)	(94.0)	(0.5)
가구주 연령	19세이하	70	(6.1)	(93.1)	(0.8)
	20~29	1,289	(7.4)	(91.6)	(1.1)
	30~39	3,590	(4.1)	(95.6)	(0.4)
	40~49	4,413	(3.8)	(95.9)	(0.2)
	50~59	2,983	(3.0)	(96.8)	(0.2)
	60세이상	3,544	(2.4)	(97.5)	(0.2)
세대구성	1세대가구	2,575	(2.8)	(96.9)	(0.2)
	부부	2,278	(2.2)	(97.6)	(0.2)
	2세대가구	8,798	(3.1)	(96.8)	(0.1)
	부부+자녀	6,692	(2.5)	(97.4)	(0.1)
	한부모가구	1,393	(6.0)	(93.7)	(0.3)
	3세대가구	1,120	(2.1)	(97.9)	(0.1)
	4세대이상가구	17	(1.8)	(98.2)	(0.0)
	1인가구	3,169	(6.5)	(92.5)	(1.0)
비혈연가구	210	(7.4)	(91.7)	(0.9)	

먼저 성별로는 여자가구주 가구의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거주비율이 6.0%로 남자 가구주 가구 3.5% 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20대 가구주 가구의 지하(반지하)·옥상(옥탑) 비율이 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9세이하 가구주 가구가 6.9%, 30대 가구주 가구 4.5%, 40대 가구주 가구 4.0% 순이다. 세대구성별로는 2세대가구 중 「부부+자녀」 가구의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거주비율은 2.6%이다. 반면, 「한부모」 가구의 경우 6.3%로 한부모 가구의 거주환경이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의 경우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거주비율은 7.5% 이며, 비혈연가구는 8.3%로 나타났다.

4. 임차료(주거전용)

4.1 점유형태별 평균 임차료

다음 <표7>은 점유형태별 가구 구성비와 평균 임차료 평균 사용방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구수는 임차료에 영업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즉, 영업겸용가구 528천 가구를 제외한 수이다.

<표7> 점유형태별 평균 임차료 및 사용방수

(단위 : 천가구, 개, 만원)

	가구(주거전용)		평균임차료		평균사용방수
	가구수	구성비(%)	보증금	월세	
계	15,361	100.0	-	-	3.6
자기집	8,681	56.5	-	-	4.1
전세	3,238	21.1	5,109	-	3.4
월세	2,672	17.4	1,157	21	2.6
사글세	210	1.4	-	28	2.5
무상	560	3.6	-	-	3.3

※ 가구수에는 영업겸용가구(임차료에 영업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528천 가구 제외

<표7>을 통해 임차가구의 평균 임차료를 보자. 평균 전세금은 5,109만원, 평균 월세는 21만원, 평균 사글세는 28만원이며,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이 1,157만원이다. 거실, 식당방을 포함한 사용방수는 자가의 경우 4.1개, 전세의 경우 3.4개, 월세의 경우 2.6개, 사글세의 경우 2.5개라고 조사되었다.

임차료에 관해 전세가구, 월세가구, 사글세가구별로 세분하여 살펴보자.

4.2 전세가구

4.2.1 주택의 종류별 전세금 규모

다음 <표8>은 2000년, 2005년 전세금 규모별로 전세가가 어떻게 분포하였으며 변화되었는지에 관해, 또 2005년 주택(거처)의 종류 및 전세금 규모별로 전세가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8> 주택(거처)의 종류 및 전세 규모별 전세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500만 원 미만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1억원	1억원 이상	평균 전세금
2000	3,783 (100.0)	56 (1.5)	164 (4.3)	827 (21.9)	1,090 (28.8)	661 (17.5)	365 (9.6)	523 (13.8)	97 (2.6)	-
2005	3,238 (100.0)	38 (1.2)	61 (1.9)	393 (12.1)	662 (20.5)	518 (16.0)	338 (10.5)	848 (26.2)	379 (11.7)	5,109
주택	3,192	(1.2)	(1.9)	(12.2)	(20.6)	(16.0)	(10.3)	(26.1)	(11.8)	5,106
단독주택	1,453	(0.9)	(3.4)	(19.3)	(28.2)	(19.1)	(10.7)	(17.1)	(1.4)	3,207
아파트	1,325	(1.6)	(0.6)	(5.0)	(11.8)	(11.9)	(8.9)	(35.2)	(24.9)	7,409
연립주택	107	(2.9)	(1.7)	(11.2)	(22.8)	(17.5)	(12.2)	(25.0)	(6.5)	4,247
다세대주택	279	(0.1)	(0.4)	(10.5)	(21.8)	(18.3)	(13.3)	(29.6)	(6.0)	4,474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7	(0.7)	(1.8)	(10.4)	(20.0)	(20.8)	(14.0)	(28.0)	(4.4)	4,155
주택이외의 거처	46	(1.0)	(1.3)	(4.9)	(12.0)	(15.0)	(23.1)	(34.5)	(8.2)	5,317

<표8>에서 보듯,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7,409만원 단독주택의 평균전세금은 3,207만원이다. 이를 전세금의 규모별 주택의 종류별로 세분하여 보자. 먼저 전세가구의 전세금별 분포를 보면, 「5천만원~1억원」이 26.2%로 가장 많고, 「2천만원~3천만원」 20.5%, 「3천만원~4천만원」 16.0% 순이다. 반면 5년전인 2000년 조사에서는 「2천만원~3천만원」인 전세가가 28.8%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2천만원」 21.9% 순이었다. 주택(거처) 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전세금이 「2천만원~3천만원」인 가구가 28.2%로 가장 많고, 아파트의 경우는 「5천만원~1억원」인 가구가 35.2%로 가장 많으며, 「1억원이상」인 가구도 24.9%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전세금은 5,109만원이며, 아파트의 경우 평균 전세금이 7,40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주택이외의 거처(오피스텔 등) 5,317만원, 다세대 주택 4,474만원, 연립주택 4,247만원,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4,155만원, 단독주택 3,207만원 순이다.

4.2.2 가구주의 성, 연령별 전세금 규모

다음 <표9>는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전세금 규모별 전세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준다. 40대 가구주의 평균 전세금이 5,750만원으로 가장 높다.

<표9>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전세금 규모별 전세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500만원 미만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1억원	1억원 이상	평균 전세금
계	3,238 (100.0)	38 (1.2)	61 (1.9)	393 (12.1)	662 (20.5)	518 (16.0)	338 (10.5)	848 (26.2)	379 (11.7)	5,109 -
남자	2,476	(1.1)	(1.5)	(10.2)	(19.0)	(15.8)	(10.6)	(28.4)	(13.4)	5,462
여자	762	(1.3)	(3.3)	(18.4)	(25.1)	(16.7)	(9.9)	(19.0)	(6.3)	3,961
19세이하	10	(2.4)	(4.3)	(24.6)	(32.7)	(14.0)	(8.7)	(10.9)	(2.3)	2,909
20~29세	418	(1.4)	(1.5)	(16.8)	(26.4)	(18.4)	(11.6)	(20.2)	(3.7)	3,729
30~39세	1,168	(1.1)	(1.0)	(9.0)	(18.0)	(16.1)	(11.5)	(31.7)	(11.7)	5,315
40~49세	897	(1.1)	(1.5)	(10.6)	(19.8)	(15.2)	(10.0)	(26.0)	(15.8)	5,750
50~59세	385	(1.0)	(2.3)	(12.0)	(20.1)	(16.0)	(9.7)	(24.3)	(14.5)	5,513
60세이상	360	(1.6)	(5.7)	(20.7)	(23.2)	(15.0)	(7.6)	(18.1)	(8.0)	4,072

남자가 가구주인 경우 전세금이 「5천만원~1억원」인 가구가 28.4%로 가장 많고, 여자가 가구주인 경우는 전세금이 「2천만원~3천만원」인 가구가 25.1%로 가장 많다. 한편 가구주가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금이 「2천만원~3천만원」인 가구가, 30대~50대에서는 「5천만원~1억원」, 60대 이상에서는 다시 「2천만원~3천만원」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평균 전세금이 5,462만원으로 여자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전세금 3,961만원보다 많았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주 가구의 평균 전세금이 5,7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50대 5,513만원, 30대 5,31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4.2.3 지역별 전세금 규모

다음 <표10>은 2005년도의 시도 및 전세규모별 전세가구의 분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서울의 경우 평균 전세금이 7,191만원이며, 경기도는 5,404만원이다.

<표10> 시도 및 전세 규모별 전세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500만원 미만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1억원	1억원 이상	평균 전세금
전국	3,238 (100.0)	38 (1.2)	61 (1.9)	393 (12.1)	662 (20.5)	518 (16.0)	338 (10.5)	848 (26.2)	379 (11.7)	5,109 -
서울	1,028	(0.3)	(0.6)	(4.9)	(11.3)	(13.4)	(12.3)	(34.8)	(22.4)	7,191
부산	220	(1.2)	(3.7)	(17.5)	(27.2)	(17.8)	(8.4)	(19.2)	(5.0)	3,740
대구	153	(0.7)	(1.8)	(13.9)	(29.9)	(21.3)	(9.7)	(17.9)	(4.9)	3,810
인천	168	(0.6)	(2.2)	(20.9)	(26.6)	(16.7)	(8.9)	(20.7)	(3.3)	3,601
광주	88	(1.0)	(3.2)	(14.9)	(28.4)	(18.6)	(10.9)	(22.0)	(0.8)	3,411
대전	101	(3.4)	(2.1)	(15.6)	(24.2)	(15.0)	(9.3)	(22.7)	(7.6)	4,181
울산	47	(1.8)	(2.5)	(14.2)	(29.0)	(16.7)	(8.7)	(24.1)	(3.1)	3,787
경기	828	(0.9)	(1.2)	(9.5)	(17.5)	(15.9)	(10.8)	(31.1)	(13.1)	5,404
강원	61	(9.1)	(2.5)	(24.1)	(31.3)	(18.1)	(5.0)	(9.3)	(0.6)	2,573
충북	71	(1.9)	(4.4)	(34.7)	(30.3)	(12.4)	(6.4)	(8.9)	(1.0)	2,557
충남	88	(1.2)	(3.6)	(22.8)	(29.0)	(16.5)	(9.0)	(15.6)	(2.2)	3,219
전북	72	(2.1)	(6.5)	(24.7)	(32.3)	(17.9)	(9.6)	(6.3)	(0.6)	2,602
전남	87	(1.8)	(3.3)	(20.2)	(32.7)	(23.5)	(8.9)	(9.5)	(0.1)	2,811
경북	92	(1.7)	(3.0)	(22.4)	(39.5)	(18.9)	(5.8)	(7.9)	(0.7)	2,674
경남	126	(4.2)	(4.5)	(13.8)	(25.3)	(18.0)	(10.9)	(21.2)	(2.1)	3,453
제주	9	(1.0)	(0.8)	(6.8)	(29.7)	(23.8)	(21.5)	(13.5)	(2.7)	3,534

<표10>에서 보듯, 도별 평균 전세금은 서울이 7,191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기 5,404만원, 대전 4,181만원, 대구 3,810만원, 울산 3,787만원 순으로 높다. 충북의 경우 평균 전세금이 2,557만원으로 가장 낮고, 다음이 강원 2,573만원, 전북 2,602만원, 경북 2,674만원, 전남 2,811만원 순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 전세금 분포를 보면, 서울은 「5천만원~1억원」, 「1억이상」의 구성비가 각각 34.8%, 22.4%로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 제주는 「3천만원~4천만원」, 「4천만원~5천만원」에서, 경북은 「2천만원 ~3천만원」에서, 충북은 「1천만원~2천만원」에서의 구성비가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3 월세 가구

다음 <표11>은 보증금 및 월세 규모별로 월세가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월세가구중 85%가 보증금 있는 가구이며, 평균 보증금은 1,157만원이다.

<표11> 보증금 및 월세 규모별 월세가구

(단위 : 천가구, %)

보증금 월세	계	보증금 없음	보증금 있음									평균 보증금
			100 만원 미만	100~ 200	200~ 300	300~ 500	500~ 700	700~ 1000	1000~ 2000	2000 만원 이상		
계	2,672 (100.0)	401 (100.0)	2,271 (100.0)	71 (3.1)	235 (10.4)	245 (10.8)	242 (10.7)	413 (18.2)	73 (3.2)	505 (22.2)	488 (21.5)	1,157 -
5만원미만	127	(1.1)	(100.0)	(2.3)	(37.2)	(28.9)	(5.1)	(2.3)	(1.5)	(6.9)	(15.8)	734
5~10	319	(6.5)	(100.0)	(1.7)	(6.2)	(10.6)	(10.8)	(7.6)	(5.2)	(17.5)	(40.5)	1,728
10~15	453	(22.3)	(100.0)	(4.9)	(9.6)	(5.7)	(5.1)	(9.9)	(7.3)	(28.0)	(29.5)	1,475
15~20	318	(16.2)	(100.0)	(6.5)	(13.9)	(10.9)	(9.4)	(12.9)	(2.6)	(25.1)	(18.8)	1,065
20~30	783	(31.1)	(100.0)	(3.2)	(11.0)	(13.8)	(14.9)	(22.4)	(1.9)	(19.0)	(13.9)	864
30~40	452	(15.6)	(100.0)	(1.6)	(6.5)	(9.0)	(14.4)	(31.8)	(1.8)	(22.7)	(12.1)	871
40~50	121	(3.6)	(100.0)	(0.7)	(2.3)	(3.3)	(6.0)	(31.6)	(1.3)	(34.1)	(20.7)	1,214
50만원이 상	99	(3.6)	(100.0)	(0.9)	(1.7)	(1.0)	(2.3)	(16.7)	(1.3)	(35.3)	(40.7)	2,249
평균월세	21	21	21	18	16	18	21	25	16	23	20	

월세가구 2,672천 가구 중 2,271천 가구 즉, 85.0%가 보증금 있는 월세가구이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가구는 401천 가구로 월세가구의 15.0%를 차지한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가구 중에서는 월세 20~30만원인 가구가 3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15만원 22.3%, 15~20만원이 16.2%, 30~40만원이 15.6% 순으로 분포한다. 월세 보증금이 1000~2000만원인 가구가 22.2%로 가장 많고, 2000만원이상인 가구는 21.5%, 500~700만원 18.2%, 200~300만원 10.8%, 300~500만원 10.7% 순으로 분포한다. 평균 월세는 보증금이 없는 경우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모두 21만원이며 평균 보증금은 1,157만원임을 알 수 있다.

4.4 사글세 가구

다음 <표12>는 주택(거처)의 종류 및 사글세 규모별로 사글세 가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글세 가구의 89.1%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2> 주택(거처)의 종류 및 사글세 규모별 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5만원 미만	5~10	10~15	15~20	20~30	30~40	40~50	50만원 이상	평균 사글세
계	210 (100.0)	3 (1.5)	15 (7.2)	39 (18.7)	34 (16.4)	66 (31.4)	25 (12.0)	5 (2.3)	22 (10.5)	28 -
주택	206	(1.4)	(7.2)	(18.8)	(16.6)	(31.6)	(11.8)	(2.0)	(10.5)	28
단독주택	187	(1.5)	(7.7)	(19.9)	(17.1)	(31.5)	(10.7)	(1.5)	(10.3)	28
아파트	10	(0.1)	(3.2)	(6.6)	(13.6)	(31.8)	(21.0)	(7.9)	(15.8)	35
연립주택	2	(0.0)	(1.9)	(14.0)	(10.2)	(38.9)	(26.0)	(3.3)	(5.7)	28
다세대주택	4	(0.0)	(2.2)	(3.1)	(6.3)	(37.3)	(32.9)	(8.7)	(9.6)	34
비거주용건물내주 택	3	(2.6)	(5.5)	(17.8)	(14.9)	(28.7)	(12.9)	(6.1)	(11.6)	30
주택이외의 거처	4	(7.6)	(5.5)	(12.3)	(8.1)	(22.4)	(22.4)	(15.2)	(6.6)	28

사글세 210천 가구 중 사글세가 20~30만원인 가구가 66천 가구로 31.4%를 차지하며, 다음이 10~15만원 39천 가구 18.7% ,15~20만원 34천 가구 16.4% 순으로 나타났다. 사글세 가구의 주택(거처) 종류는 단독주택이 전체의 89.1%인 187천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5.0%인 10천 가구(5.0%)로 나타났다. 평균 사글세는 28만원이며, 아파트의 경우 평균 사글세가 35만원,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사글세는 28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자동차 보유

5.1 가구주 성, 연령별 자동차 보유가구

다음 <표13>은 2000년 가구의 자동차 보유 현황과 2005년 가구주의 성, 연령에 따른 자동차 보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61.4%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12.1%의 가구는 자동차를 2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가구주 성, 연령별 자동차 보유가구

(단위 : 천가구, %)

	가구수	자동차 보유			자동차 미보유
		계	1대	2대이상	
2000	14,310 (100.0)	8,334 (58.2)	7,230 (50.5)	1,104 (7.7)	5,976 (41.8)
2005	15,889 (100.0)	9,761 (61.4)	7,846 (49.4)	1,915 (12.1)	6,124 (38.5)
남자	12,391	(71.3)	(56.6)	(14.7)	(28.7)
여자	3,497	(26.5)	(23.7)	(2.8)	(73.5)
19세이하	70	(2.9)	(2.8)	(0.1)	(97.1)
20~29	1,289	(38.0)	(34.7)	(3.4)	(61.9)
30~39	3,590	(76.4)	(64.7)	(11.7)	(23.5)
40~49	4,413	(75.5)	(58.9)	(16.6)	(24.5)
50~59	2,983	(68.1)	(51.0)	(17.1)	(31.9)
60세이상	3,544	(32.8)	(27.0)	(5.8)	(67.2)

※ 가구수에는 자동차 보유여부 미상 포함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15,889천 가구의 61.4%인 9,761천 가구이며, 이중 전체 가구의 12.1%인 1,915천 가구는 자동차를 2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5년전 2000년 조사당시 58.2%보다 3.2%p증가한 것이다.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가구주인 경우 자동차 보유가구의 비율은 71.3%로 이는 여자가 가구주인 경우의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 26.5%보다 약 2.7배 높은 것이다. 가구주 연령대별 자동차 보유가구비율을 보면, 가구주가 30대인 경우 자동차 보유가구의 비율이 76.4%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 75.5%, 50대 68.1%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2 지역별 자동차 보유현황

다음 <표14>는 2005년 각 시도별로 가구의 자동차 보유현황에 관해 보여주고 있다. 울산의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이 7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4> 시도별 자동차 보유가구

(단위 : 천가구, %)

	가구수	자동차 보유			자동차 미보유
		계	1대	2대이상	
전국	15,889 (100.0)	9,761 (61.4)	7,846 (49.4)	1,915 (12.1)	6,124 (38.5)
서울	3,310	(54.4)	(46.7)	(7.6)	(45.6)
부산	1,187	(54.2)	(46.3)	(7.9)	(45.8)
대구	815	(65.9)	(50.6)	(15.4)	(34.1)
인천	823	(64.1)	(53.5)	(10.6)	(35.9)
광주	460	(64.8)	(51.0)	(13.8)	(35.2)
대전	479	(69.0)	(52.2)	(16.8)	(30.9)
울산	339	(75.0)	(60.7)	(14.3)	(25.0)
경기	3,330	(69.4)	(55.4)	(14.0)	(30.6)
강원	521	(61.8)	(47.9)	(13.9)	(38.2)
충북	505	(62.2)	(48.1)	(14.1)	(37.8)
충남	660	(60.7)	(45.7)	(15.0)	(39.3)
전북	620	(57.1)	(44.5)	(12.6)	(42.9)
전남	666	(50.1)	(40.1)	(10.0)	(49.9)
경북	939	(59.8)	(45.5)	(14.3)	(40.2)
경남	1,056	(62.4)	(49.1)	(13.2)	(37.6)
제주	179	(65.5)	(45.3)	(20.2)	(34.3)

※ 가구수에는 자동차 보유여부 미상 포함

시도별 가구의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울산이 전체 가구 339천 가구의 75%인 254천 가구가 자동차를 보유하여 가장 높은 자동차 보유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69.4%, 대전 69.0%, 대구 65.9% 순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다. 반면, 가구의 자동차 보유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50.1%로 전남이었고, 부산 54.2%, 서울이 54.4%로 그 뒤를 이었다.

5.3 가구의 점유형태별 자동차 보유

다음 <표15>는 가구의 점유형태에 따른 자동차 보유 가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집 거주가구의 69.1%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전세가구의 61.8%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5> 가구의 점유형태별 자동차 보유가구

(단위 : 천가구, %)

	가구수	자동차 보유			자동차 미보유
		계	1대	2대이상	
계	15,889 (100.0)	9,761 (61.4)	7,846 (49.4)	1,915 (12.1)	6,124 (38.5)
자기집	8,897	(69.1)	(52.8)	(16.3)	(30.9)
전세	3,331	(61.8)	(53.5)	(8.3)	(38.2)
월세	2,832	(40.9)	(36.3)	(4.6)	(59.1)
사글세	225	(31.8)	(28.4)	(3.5)	(68.1)
무상	604	(53.5)	(45.6)	(7.9)	(46.4)

※ 가구수에는 자동차 보유여부 미상 포함

점유형태별 가구의 자동차 보유비율을 자세히 보면, 자기집 거주가구의 경우 69.1%의 가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전세가구 61.8%, 월세 40.9%, 사글세 31.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대이상의 자동차 보유 가구 비율도 자기집 거주가구가 16.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전세 8.3%, 월세 4.6%, 사글세 3.5% 순이다.

5.4 가구주의 직업별 자동차 보유

다음 <표 16>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가구의 자동차 보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인 가구의 93.7%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가구주의 직업별 자동차 보유가구

(단위 : 천가구, %)

	가구수	자동차 보유			자동차 미보유
		계	1대	2대이상	
계	15,889 (100.0)	9,761 (61.4)	7,846 (49.4)	1,915 (12.1)	6,124 (38.5)
일 하였음	11,513	(71.9)	(56.9)	(15.0)	(28.0)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605	(93.7)	(57.6)	(36.0)	(6.3)
1. 전문가	991	(81.2)	(60.1)	(21.1)	(18.7)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54	(82.3)	(66.5)	(15.7)	(17.7)
3. 사무 종사자	1,681	(80.3)	(66.4)	(13.9)	(19.7)
4. 서비스 종사자	907	(57.0)	(48.8)	(8.2)	(42.9)
5. 판매 종사자	1,100	(74.0)	(56.4)	(17.5)	(26.0)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183	(47.2)	(33.8)	(13.4)	(52.8)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94	(74.4)	(61.6)	(12.8)	(25.6)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45	(78.2)	(64.0)	(14.2)	(21.8)
9. 단순 노무종사자	953	(49.6)	(42.5)	(7.1)	(50.4)
A. 기타	72	(94.3)	(81.3)	(13.0)	(5.7)
직업 미상	27	(65.6)	(54.5)	(11.1)	(34.2)
일 하지 않았음	4,377	(33.9)	(29.5)	(4.4)	(66.0)

※ 가구수에는 가구주의 취업여부 및 자동차 보유여부 미상 포함

가구주 직업별 자동차 보유가구비율을 보면, 가구주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인 경우 93.7%의 가구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인 경우 82.3%의 가구가, 「전문가」인 경우 81.2%의 가구가, 「사무 종사자」인 경우 80.3%의 가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동차 보유비율이 낮은 직업군은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47.2%, 「단순 노무종사자」 49.6%, 「서비스 종사자」 57.0%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5 자동차 보유여부와 통근·통학 교통수단

다음 <표 17>은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통근·통학 교통수단의 분포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가 통근·통학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가구수에서 제외되었다. 자동차 보유가구 가구주의 65.2%가 승용차로 통근·통학을 하며, 14.2%는 도보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표17> 자동차 보유가구 가구주의 통근·통학 교통수단

(단위 : 천가구, %)

	가구수	자동차 보유	자동차 미보유
계	11,097 (100.0)	7,844 (100.0)	3,251 (100.0)
단일수단	10,793	(97.5)	(96.7)
걸어서	2,510	(14.2)	(43.0)
승용차	5,280	(65.2)	(5.0)
시내·좌석·마을버스	982	(3.9)	(20.7)
통근·통학버스	442	(2.9)	(6.6)
고속·시외버스	44	(0.3)	(0.7)
전철, 지하철	712	(4.4)	(11.2)
기차	13	(0.1)	(0.1)
택시	78	(0.5)	(1.3)
자전거	149	(0.8)	(2.5)
기타	583	(5.1)	(5.6)
복합수단	304	(2.5)	(3.3)
승용차+기타	112	(1.3)	(0.2)

※ 가구수에는 가구주가 통근·통학하지 않는 가구(4,792천 가구) 제외

※ 가구수에는 자동차 보유여부 미상 포함

<표 17>을 통해 자동차 보유가구 중 통근·통학하는 가구주의 이용교통수단을 자세히 보자. 승용차이용이 5,116천 가구(65.2%)로 가장 많고, 14.2%인 1,112천 가구는 도보를, 4.4%인 348천 가구는 전철·지하철을 이용해 통근·통학한다.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3,251천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은 도보가 43.0%인 1,398천 가구로 가장 많고, 시내·좌석·마을버스등 버스를 이용하는 20.7%인 673천 가구, 전철·지하철을 이용하는 가구가 11.2%인 364천 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자동차 보유가구의 주차시설

6.1 거처의 종류별 주차시설

<표18>은 2000년과 2005년 자동차 보유 가구의 경우 어떤 종류의 주차시설을 이용하였는지를 주택(거처)의 종류별로 정리한 것이다. 2005년 자동차 보유가구의 주차시설 중 자가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5년전 대비 5.9%p 증가한 7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주택(거처)의 종류별 주차시설

(단위 : 천가구, %)

	계	단일 주차시설							복합
		자가 주차장	영업용 또는 건물부설 주차장	노상 주차장	도로변 · 골목길	공휴지	기타		
2000	8,334 (100.0)	8,234 (98.8)	5,786 (69.4)	208 (2.5)	389 (4.7)	1,549 (18.6)	273 (3.3)	30 (0.4)	100 (1.2)
주택	8,300 (98.8)	(69.5)	(2.4)	(4.7)	(18.6)	(3.2)	(0.4)	(1.2)	
단독주택	3,102 (98.4)	(36.1)	(3.6)	(9.4)	(41.5)	(7.2)	(0.7)	(1.6)	
아파트	4,056 (99.2)	(98.4)	(0.3)	(0.2)	(0.3)	(0.1)	(0.0)	(0.8)	
연립주택	518 (98.5)	(76.3)	(1.8)	(4.6)	(13.2)	(2.3)	(0.2)	(1.5)	
다세대주택	264 (98.1)	(54.5)	(3.8)	(9.0)	(27.3)	(2.9)	(0.7)	(1.9)	
비거주용건물내주택	360 (98.8)	(33.8)	(16.1)	(12.0)	(29.9)	(6.0)	(0.9)	(1.2)	
주택이외의 거처	34 (99.1)	(47.0)	(16.5)	(4.4)	(13.7)	(16.2)	(1.2)	(0.9)	
2005	9,761 (100.0)	9,549 (97.8)	7,352 (75.3)	217 (2.2)	543 (5.6)	1,272 (13.0)	134 (1.4)	31 (0.3)	212 (2.2)
주택	9,673 (97.8)	(75.3)	(2.1)	(5.6)	(13.1)	(1.3)	(0.3)	(2.2)	
단독주택	3,196 (97.6)	(41.5)	(4.1)	(13.1)	(34.5)	(3.6)	(0.7)	(2.4)	
아파트	5,297 (98.1)	(97.2)	(0.4)	(0.3)	(0.2)	(0.1)	(0.0)	(1.9)	
연립주택	327 (97.3)	(83.5)	(1.4)	(4.4)	(6.9)	(0.8)	(0.2)	(2.7)	
다세대주택	685 (96.8)	(68.0)	(2.6)	(10.6)	(14.1)	(1.0)	(0.5)	(3.2)	
비거주용건물내주택	167 (97.3)	(42.5)	(17.8)	(11.4)	(22.6)	(2.4)	(0.7)	(2.7)	
주택이외의 거처	89 (99.1)	(75.7)	(11.6)	(2.3)	(4.4)	(4.4)	(0.7)	(0.9)	

2005년 자동차 보유가구의 주차시설을 보면, 자가주차장 가구의 비율이 75.3%, 주차선이 없는 도로변·골목길을 이용하는 가구가 13.0%, 주차선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가구가 5.6%, 영업용 또는 건물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가구가 2.2%, 공휴지를 이용하는 가구가 1.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자가주차장 비율은 5.9%p, 노상주차장 비율은 0.9%p 상승한 것이며, 도로변·골목길은 5.6%p, 공휴지 1.9%p, 영업용 또는 건물부설 주차장은 0.3%p 감소한 것이다. 거처의 종류별로 주차시설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자가주차장 이용 비율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단독주택의 자가주차장 이용 비율이 4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자가주차장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자가주차장 이용 비율은 98.4%에서 97.2%로 1.2%p 감소하였고 복합주차시설의 이용 비율은 0.8%에서 1.9%로 1.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가구의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파트 이외 다른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6.2 자동차 보유가구의 건축년도별 주차시설

다음 <표19>는 자동차 보유가구가 어떠한 주차시설을 이용하는지에 관해 주택 건축년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최근에 건축된 주택일수록 자가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증가하며, 도로변·골목길을 이용하는 감소한다.

<표19> 자동차 보유가구의 주택 건축년도별 주차시설

(단위 : 천가구, %)

	계	단일 주차시설							복합
		자가 주차장	영업용 또는 건물부 설 주차장	노상 주차장	도로변· 골목길	공휴지	기타		
계	9,761	9,549	7,352	217	543	1,272	134	31	212
구성비	(100.0)	(97.8)	(75.3)	(2.2)	(5.6)	(13.0)	(1.4)	(0.3)	(2.2)
2000년이후	2,398	(97.8)	(86.7)	(1.7)	(3.1)	(5.7)	(0.6)	(0.1)	(2.2)
1995~1999년	2,446	(97.8)	(84.6)	(1.6)	(3.1)	(7.5)	(0.8)	(0.2)	(2.2)
1990~1994년	2,279	(97.7)	(75.2)	(2.2)	(5.9)	(12.9)	(1.1)	(0.4)	(2.3)
1985~1989년	1,134	(97.9)	(62.8)	(2.8)	(9.1)	(21.0)	(1.6)	(0.5)	(2.1)
1980~1984년	702	(97.7)	(59.0)	(3.1)	(9.0)	(24.0)	(2.3)	(0.4)	(2.3)
1970~1979년	524	(97.8)	(44.2)	(4.1)	(12.5)	(32.7)	(3.7)	(0.7)	(2.2)
1960~1969년	116	(98.0)	(39.8)	(5.0)	(12.8)	(32.6)	(6.9)	(0.9)	(2.0)
1959년이전	133	(98.3)	(51.2)	(3.0)	(9.3)	(26.7)	(7.7)	(0.5)	(1.7)

※계에는 건축년도 미상 포함

자동차 보유가구의 주택(거처) 건축년도별 주차시설을 보면, 2000년이후 건축된 주택(거처)의 경우 86.7%, 1995~1999년 건축 주택은 84.6%, 1990~1994년 건축 주택은 75.2%의 가구가 자가 주차장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1970~1979년에 건축된 주택의 경우 도로변·골목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32.7%이나 2000년 이후 건축된 주택의 경우 5.7%가 도로변·골목길에 주차하여 최근에 건축된 주택일수록 자가주차장 비율이 증가하고 도로변·골목길 주차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 부문

1. 성, 연령별 취업자

다음 <표1>은 2000년과 2005년도 취업자의 수와 증감률을 성 연령별로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전체 취업자 중 여자의 비율은 38.3%로 5년 전 대비 0.8%p 증가한 것이다. 2005년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42.3세로 5년 전 보다 1.4세 증가하였다.

<표1> 성,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p)

	2000		2005		증감	
		%		%		%p
계	18,456	100.0	19,277	100.0	821	0.0
남자	11,540	62.5	11,902	61.7	362	-0.8
여자	6,916	37.5	7,375	38.3	459	0.8
19세이하	248	1.3	107	0.6	-142	-0.8
20~29	3,729	20.2	3,348	17.4	-381	-2.8
30~39	5,490	29.7	5,414	28.1	-76	-1.7
40~49	4,805	26.0	5,533	28.7	728	2.7
50~59	2,537	13.7	3,019	15.7	482	1.9
60세이상	1,646	8.9	1,857	9.6	211	0.7
평균연령	40.9	-	42.3	-	1.4	-
남자	41.4	-	43.0	-	1.6	-
여자	40.1	-	41.3	-	1.1	-

2005년 조사결과 전체 취업자중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1.7%,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3% 이다. 남자의 구성비는 2000년 조사 당시 62.5%에서 0.8%p 감소한 것이고, 여자의 구성비는 37.5%에서 0.8%p 증가한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가 연령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자. 전체 취업자의 28.7%가 40대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30대는 전체취업자의 28.1%, 20대는 17.4%, 50대는 1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40대 이상의 취업자수는 1,421천명 증가한 것이고, 30대 이하 취업자 수는 599천명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00년 40.9세에서 1.4세 증가한 42.3세이다. 특히 남자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3.0세, 여자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1.3세로 남자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역별 취업자

다음 <표2>는 2005년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와 취업자의 성비에 관한 지역별 정보를 담고 있다. 취업자 성비가 가장 높은 곳은 울산시 북구로 남자 취업자가 여자 취업자보다 2.7배 많다.

<표2> 시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시도	15세이상	일 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성비 (남자/여자)
			%		%		
전국	37,406	19,277	51.5	18,112	48.4	100.0	1.6
특·광역시	17,828	8,702	48.8	9,117	51.1	45.1	1.6
서울	8,013	4,003	50.0	4,005	50.0	20.8	1.6
부산	2,878	1,315	45.7	1,563	54.3	6.8	1.6
대구	1,951	906	46.4	1,044	53.5	4.7	1.7
인천	1,971	995	50.5	975	49.4	5.2	1.8
광주	1,089	523	48.0	566	51.9	2.7	1.6
대전	1,127	542	48.1	584	51.9	2.8	1.7
울산	799	418	52.4	381	47.6	2.2	2.1
도지역	19,577	10,575	54.0	8,995	45.9	54.9	1.6
경기	7,989	4,221	52.8	3,765	47.1	21.9	1.8
강원	1,170	593	50.7	577	49.3	3.1	1.6
충북	1,154	607	52.6	546	47.3	3.2	1.5
충남	1,506	874	58.1	631	41.9	4.5	1.5
전북	1,414	713	50.5	700	49.5	3.7	1.5
전남	1,450	826	56.9	624	43.0	4.3	1.3
경북	2,099	1,187	56.6	911	43.4	6.2	1.4
경남	2,388	1,309	54.8	1,079	45.2	6.8	1.5
제주	407	245	60.1	161	39.6	1.3	1.2

※ 15세이상 인구에는 취업여부 미상 포함

<표2>를 통해 취업자의 시도별 구성비를 살펴보자. 경기도에 전체 취업자의 21.9%인 4,221천명이 거주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에 전체 취업자의 20.8%인 4,003천명, 부산에 6.8%인 1,315천명, 경남에 6.8%인 1,309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각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자. 제주지역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는데, 이는 제주지역의 여성 취업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광역시중에서는 울산의 취업자 비율이 52.4%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50.5%로 인천이며 서울이 50.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취업자 성비의 경우 울산의 취업자 성비가 2.1로 가장 높다. 이는 여자 취업자 1인당 남자 취업자가 2.1명임을 의미한다. 표에는 없지만 시군구별 취업자의 성비는 울산시 북구가 여자 취업자 1인당 남자 취업자가 2.7명으로 2.7이고, 울산시 동구의 경우 2.6, 경남 거제시는 2.3, 경기도 시흥시는 2.1, 충남 계룡시는 2.1로 성비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3. 산업별 취업자

다음 <표3>은 성, 연령 및 산업별 취업자 수의 분포를, [그림1]은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각 산업별 연령과 성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의 평균 연령을 각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경우 58.5세, 광공업 39.2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40.7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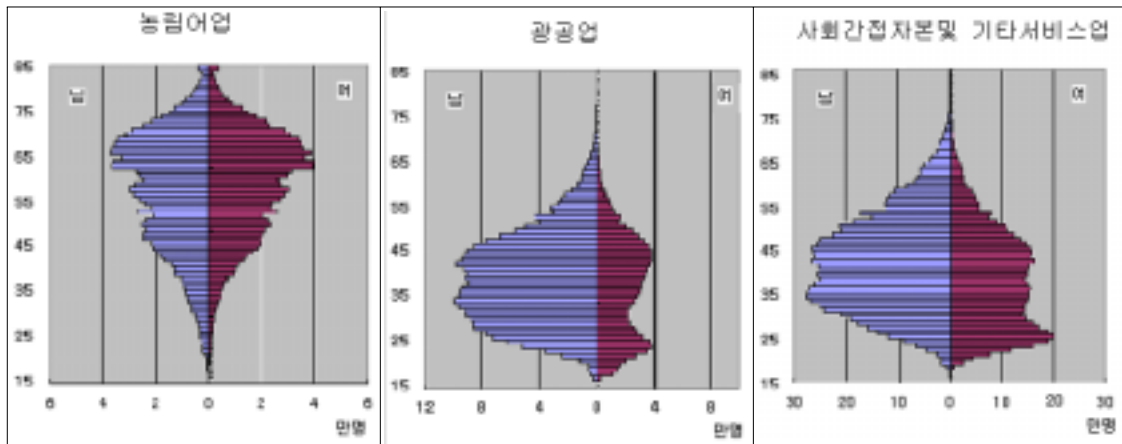
<표3> 성, 연령 및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세, %)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보건 사회복지	오락문화 개인 서비스업		
계	19,277 (100.0)	2,100 (100.0)	3,824 (100.0)	3,804 (100.0)	13,293 (100.0)	1,529 (100.0)	2,897 (100.0)	1,493 (100.0)	1,117 (100.0)	1,095 (100.0)	1,122 (100.0)	2,740 (100.0)	1,300 (100.0)
남자	11,902	(52.1)	(71.6)	(71.5)	(60.4)	(91.3)	(57.6)	(35.5)	(86.5)	(61.2)	(70.1)	(45.6)	(58.9)
여자	7,375	(47.9)	(28.4)	(28.5)	(39.6)	(8.7)	(42.4)	(64.5)	(13.5)	(38.8)	(29.9)	(54.4)	(41.1)
19세이하	107	(0.1)	(1.1)	(1.1)	(0.5)	(0.1)	(0.6)	(1.2)	(0.2)	(0.1)	(0.3)	(0.4)	(0.8)
20~29	3,348	(1.9)	(20.7)	(20.8)	(18.8)	(10.8)	(19.0)	(13.8)	(12.5)	(15.4)	(26.5)	(25.9)	(19.9)
30~39	5,414	(6.5)	(31.7)	(31.7)	(30.5)	(31.0)	(30.5)	(23.1)	(27.3)	(31.7)	(36.1)	(33.1)	(29.5)
40~49	5,533	(17.1)	(31.3)	(31.3)	(29.8)	(36.2)	(29.6)	(37.7)	(32.8)	(27.9)	(21.0)	(25.9)	(28.3)
50~59	3,019	(24.1)	(12.4)	(12.3)	(15.3)	(18.1)	(14.3)	(19.2)	(21.5)	(14.6)	(10.8)	(12.0)	(15.8)
60세이상	1,857	(50.3)	(2.8)	(2.8)	(5.2)	(3.7)	(6.0)	(5.1)	(5.8)	(10.2)	(5.3)	(2.7)	(5.6)
평균 연령	2000	40.9	55.7	37.6	37.6	39.1	40.7	39.0	40.5	40.4	40.1	36.6	37.1
	2005	42.3	58.5	39.2	39.2	40.7	42.3	40.7	42.6	43.1	42.3	38.2	40.6

※ 계에는 산업 미상 포함

[그림 1] 산업별 인구피라미드



남자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건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통신업」, 「제조업」이다. 각 산업 종사자의 91.3%, 86.5%, 71.5%가 남자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림어업」은 여성취업자 구성비가 타 산업에 비해 높다. 각 산업 종사자의 64.5%, 54.4%, 47.9%가 여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별로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자.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의 50.3%가 60세 이상 인구이며, 「광공업」은 31.7%가 30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30.5%가 30대 인구이다. 「농림어업」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8.5세이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종사자의 평균연령은 40.7세, 「광공업」의 경우 39.2세 이다. 이는 2000년 조사당시 보다 「농림어업」의 경우 2.8세 증가한 것이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및 「광공업」은 각각 1.6세 증가한 것이다.

4. 직업별 취업자

4.1 규모 및 구조

다음 <표4>는 2000년과 2005년의 성 연령 및 직업별 취업자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2] 직업별 평균연령, [그림3]은 직업별 인구피라미드로 이를 통해 각각의 직업의 종사자가 연령, 성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여성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직업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군으로 각각 2000년도 대비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5.1%p, 3.4%p, 2.9%p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를 통해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체 취업자의 16.3%가 「사무종사자」 직군에 분포하고 있어 그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6%, 「판매종사자」 11.0%,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10.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0%, 「전문가」 9.9%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직군은 타 직업에 비해 남성 구성비가 높다. 각 직군의 취업자중 89.3%, 83.6%, 79.8%가 남성이다. 반면 여성 구성비가 타 직업에 비해 높은 직군은 「서비스종사자」, 「전문가」,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등으로 각 직군 종사자의 63.2%, 49.1%, 48.6%, 47.6%가 여성이다. 직업별로 성비를 보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군의 성비가 8.4로 각 직군별로 가장 높다. 이는 여성 취업자 1명당 남성 취업자가 8.4명임을 뜻한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직군은 5.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직군은 4.0 으로 성비가 높은 직군에 속한다. 이는 [그림3]의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문가」 직군의 여성취업자 비율은 2000년 44.0%에서 5.1%p 증가한 49.1%이고,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군은 28.1%에서 3.4%p 증가한 31.5%,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은 2000년 7.8%에서 2.9%p 증가한 10.7%로 다른 직업에 비해 여성취업자의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

직업별 평균 연령을 살펴보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직군은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58.6세, 「단순노무종사자」 47.5세,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7.0세로 다른 직업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은 편이다. 반면, 「사무종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군의 종사자 평균연령은 각각 36.5세, 37.1세 37.5세로 다른 직업에 비해 종사자 낮다. 이러한 분포는 [그림 2]를 통해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4> 성, 연령별 취업자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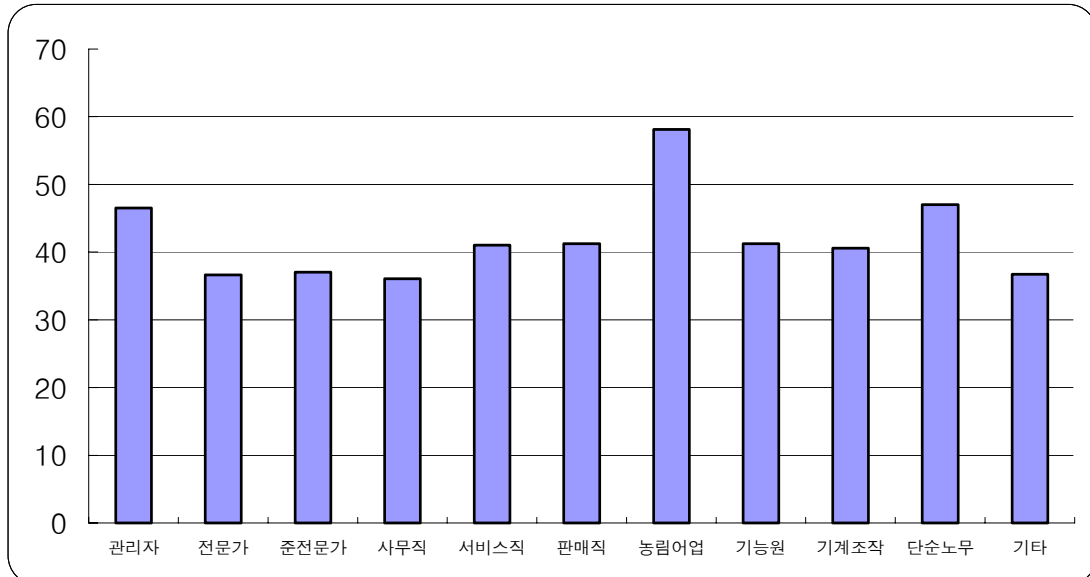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세, %)

	계	0	1	2	3	4	5	6	7	8	9	기타
2000	18,456 (100.0)	974 (5.3)	1,688 (9.1)	1,438 (7.8)	2,509 (13.6)	1,753 (9.5)	2,302 (12.5)	2,357 (12.8)	1,924 (10.4)	2,059 (11.2)	1,380 (7.5)	71 (0.4)
남자	11,540	(92.2)	(56.0)	(71.9)	(55.6)	(37.2)	(50.2)	(52.8)	(80.8)	(82.0)	(65.3)	(99.1)
여자	6,916	(7.8)	(44.0)	(28.1)	(44.4)	(62.8)	(49.8)	(47.2)	(19.2)	(18.0)	(34.7)	(0.9)
성비(남/여)	1.7	11.9	1.3	2.6	1.3	0.6	1.0	1.1	4.2	4.6	1.9	110.5
평균연령	40.9	44.3	35.9	36.0	34.0	39.9	40.1	55.8	39.4	38.9	45.3	36.4
2005	19,277 (100.0)	693 (3.6)	1,912 (9.9)	1,732 (9.0)	3,144 (16.3)	1,864 (9.7)	2,116 (11.0)	2,053 (10.6)	1,928 (10.0)	2,239 (11.6)	1,447 (7.5)	79 (0.4)
남자	(61.7)	(89.3)	(50.9)	(68.5)	(57.2)	(36.8)	(51.4)	(52.4)	(83.6)	(79.8)	(65.5)	(97.3)
여자	(38.3)	(10.7)	(49.1)	(31.5)	(42.8)	(63.2)	(48.6)	(47.6)	(16.4)	(20.2)	(34.5)	(2.7)
성비(남/여)	1.6	8.4	1.0	2.2	1.3	0.6	1.1	1.1	5.1	4.0	1.9	36.2
평균연령	42.3	47.0	37.1	37.5	36.5	41.5	41.7	58.6	41.7	41.1	47.5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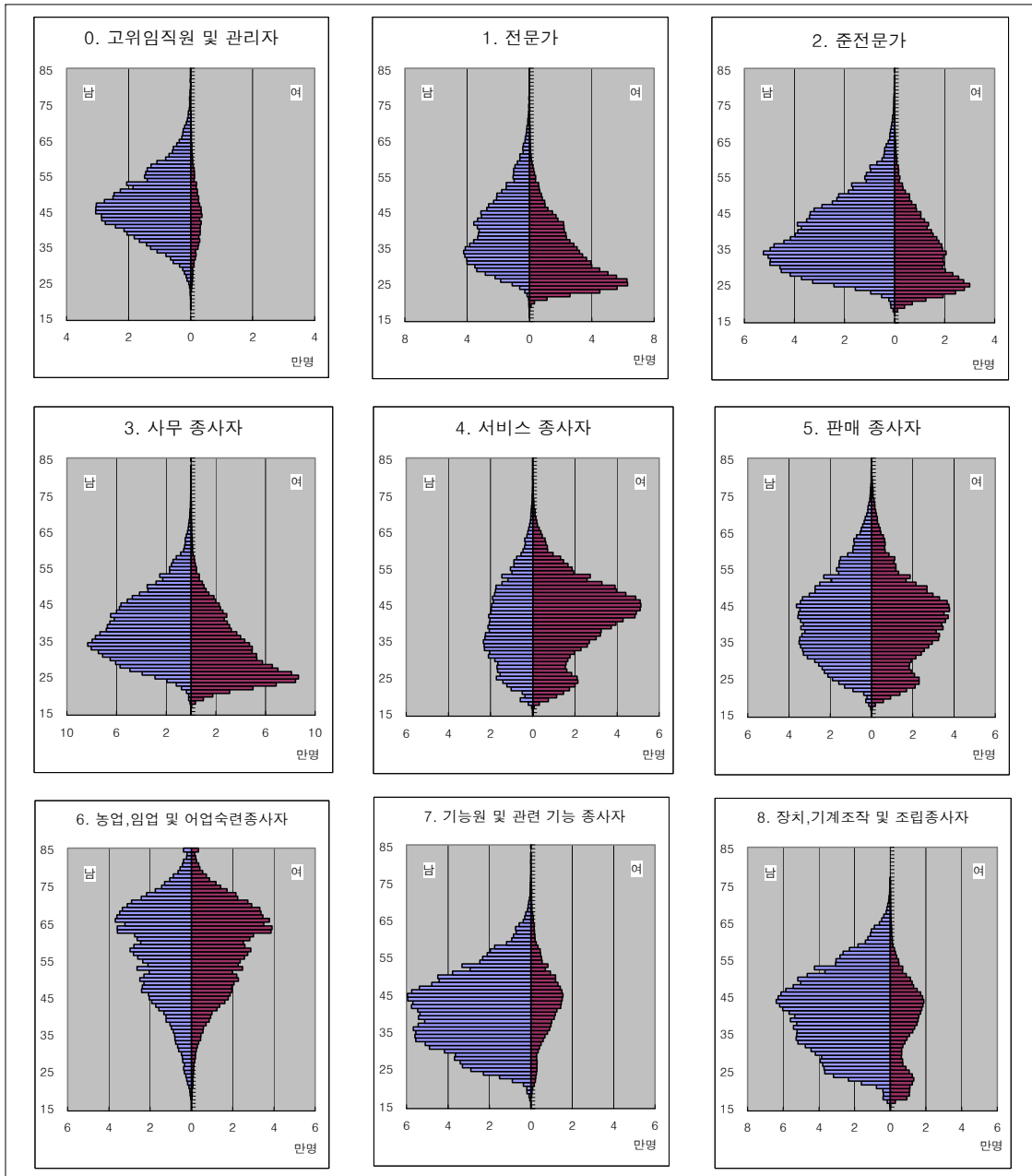
※ 계에는 직업 미상 포함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그림 2] 직업별 평균연령



[그림3] 직업별 인구피라미드



4.2 가구주 부부의 직업

다음 <표5>는 가구주 부부의 직업별 분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중 부부 모두 일하는 가구는 3,633천 가구로 전체의 35.2%를 차지한다.

<표5> 가구주 부부의 직업

(단위 : 천가구, %)

부인 남편	계	일하지 않았음	일 하였음										
				0	1	2	3	4	5	6	7	8	9
계	10,315 (100.0)	6,273 (60.8)	4,041 (39.2)	47 (0.5)	400 (3.9)	239 (2.3)	589 (5.7)	639 (6.2)	633 (6.1)	712 (6.9)	222 (2.2)	264 (2.6)	286 (2.8)
일하지 않았음	1,904 (18.5)	1,496 (14.5)	408 (4.0)	5 (0.0)	26 (0.3)	17 (0.2)	32 (0.3)	93 (0.9)	67 (0.6)	30 (0.3)	29 (0.3)	34 (0.3)	73 (0.7)
일하였 음	8,410 (81.5)	4,776 (46.3)	3,633 (35.2)	42 (0.4)	374 (3.6)	222 (2.2)	557 (5.4)	545 (5.3)	566 (5.5)	682 (6.6)	193 (1.9)	230 (2.2)	212 (2.1)
0	541	(66.8)	(33.2)	(2.1)	(5.6)	(2.7)	(9.2)	(4.7)	(4.3)	(0.5)	(1.1)	(1.8)	(1.2)
1	693	(62.5)	(37.5)	(0.9)	(19.6)	(4.5)	(6.3)	(1.9)	(2.4)	(0.2)	(0.4)	(0.4)	(0.4)
2	803	(64.6)	(35.4)	(0.6)	(6.5)	(7.3)	(8.8)	(3.6)	(4.7)	(0.3)	(0.9)	(1.5)	(1.2)
3	1,267	(62.9)	(37.1)	(0.6)	(6.0)	(3.8)	(11.6)	(5.1)	(5.0)	(0.3)	(1.1)	(2.1)	(1.4)
4	449	(45.3)	(54.7)	(0.5)	(2.4)	(1.6)	(8.0)	(34.0)	(3.6)	(0.3)	(0.8)	(1.0)	(2.4)
5	772	(49.9)	(50.1)	(0.3)	(2.5)	(1.9)	(7.2)	(3.6)	(30.7)	(0.3)	(1.2)	(1.2)	(1.3)
6	876	(18.2)	(81.8)	(0.1)	(0.3)	(0.2)	(0.6)	(2.2)	(1.5)	(73.7)	(0.7)	(1.0)	(1.5)
7	1,102	(62.3)	(37.7)	(0.2)	(1.8)	(1.7)	(6.4)	(6.2)	(5.8)	(0.5)	(8.0)	(3.8)	(3.3)
8	1,223	(64.6)	(35.4)	(0.3)	(1.5)	(1.5)	(4.6)	(7.0)	(5.3)	(0.7)	(3.0)	(7.7)	(3.7)
9	600	(63.0)	(37.0)	(0.2)	(0.8)	(0.9)	(3.1)	(9.7)	(4.8)	(1.4)	(2.9)	(3.4)	(10.0)
2000년 부부 직업 일치도				(2.0)	(17.4)	(5.6)	(9.5)	(38.3)	(35.0)	(74.3)	(9.3)	(6.7)	(10.8)

※ 계에는 직업 미상 포함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가구주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10,315천 가구 중 부부가 함께 일한 가구는 전체의 35.2%인 3,633천 가구이며, 남편만 일한 가구는 46.3%인 4,776천 가구이다. 부인만 일한 가구는 408천 가구이고, 부부 모두가 일하지 않은 가구는 1,496천 가구이다. 부부 모두 일한 가구 중 부부의 직업 일치도를 보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노동자」가 73.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서비스종사자」 34.0%, 「판매 종사자」 30.7%, 「전문가」 19.6%, 「사무종사자」 11.6% 「단순노무종사자」 10.0% 순이다. 「전문가」 직군의 부부 직업 일치도는 2000년 조사 당시 17.4%에서 2.2%p 증가한 19.6%이고, 「사무종사자」 직군은 9.5%에서 2.1%p 증가한 11.6%, 「기술공 및 준전문가」 5.6%에서 1.7%p 증가한 7.3%다. 이 직업들은 5년전 대비 부부 직업일치도가 많이 증가한 직업에 속한다.

5.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취업자의 분포를 보자. 다음 <표6>은 종사상지위별 취업자가 성, 연령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임금근로자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고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하고 있다

<표6> 성, 연령 및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계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없는자영자		고용원을 둔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		%		%		%
2000	18,456	11,557	62.6	4,037	21.9	1,239	6.7	1,623	8.8
2005	19,277	12,524	65.0	4,029	20.9	1,292	6.7	1,431	7.4
남	11,902	7,767	65.3	2,922	24.6	1,050	8.8	162	1.4
여	7,375	4,757	64.5	1,107	15.0	242	3.3	1,269	17.2
성비(남/여)	1.6	1.6	-	2.6	-	4.3	-	0.1	-
성비(여/남)	0.6	0.6	-	0.4	-	0.2	-	7.8	-
19세이하	107	101	94.3	2	2.3		0.3	3	3.0
20~29	3,348	3,088	92.2	135	4.0	38	1.1	86	2.6
30~39	5,414	4,141	76.5	712	13.2	320	5.9	240	4.4
40~49	5,533	3,281	59.3	1,253	22.7	573	10.3	426	7.7
50~59	3,019	1,469	48.7	949	31.4	275	9.1	326	10.8
60세이상	1,857	444	23.9	977	52.6	86	4.6	349	18.8

<표6>을 통해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보면 취업자중 65.0%가 「임금근로자」, 20.9%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7.4%가 「무급가족 종사자」, 6.7%가 「고용원을 둔 사업주」이다. 2005년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5.0%로 2000년 조사 당시 62.6%보다 2.4%p 증가한 것이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는 2000년 조사 당시 21.9%에서 20.9%로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 8.8%에서 7.4%로 감소하였다.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여자 1명당 남자 4.3명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고, 「무급가족종사자」는 남자 1명당 여자 7.8명으로 여자비율이 높다. 연령별로 임금근로자 비율을 보면 20대 이하의 90%이상이 임금근로자이다. 임금근로자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구성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고용원을 둔 자영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성비가 증가한다.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40대에서 10.3%로 가장 높고 50대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다.

6. 근로장소별 취업자

다음 <표7>은 2005년도 성, 연령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중 74.5%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13.8%는 야외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표7> 성, 연령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

(단위 : 천명, 세, %)

	계	사업장	자기집	남의집	거리	야외작업현장	운송수단	기타
계	19,277 (100.0)	14,370 (74.5)	628 (3.3)	367 (1.9)	709 (3.7)	2,663 (13.8)	469 (2.4)	69 (0.4)
남자	11,902	8,721	292	149	506	1,729	455	48
여자	7,375	5,649	336	218	203	934	14	20
성비	(1.6)	(1.5)	(0.9)	(0.7)	(2.5)	(1.9)	(33.3)	(2.4)
19세이하	107 (0.6)	99 (0.7)	1 (0.1)	2 (0.7)	2 (0.3)	3 (0.1)	(0.1)	(0.5)
20~29	3,348 (17.4)	3,038 (21.1)	35 (5.5)	53 (14.5)	71 (10)	109 (4.1)	32 (6.8)	11 (15.5)
30~39	5,414 (28.1)	4,500 (31.3)	122 (19.3)	103 (28)	197 (27.7)	357 (13.4)	115 (24.6)	19 (27.2)
40~49	5,533 (28.7)	4,189 (29.1)	195 (31.1)	124 (33.7)	233 (32.9)	600 (22.5)	171 (36.5)	20 (29.9)
50~59	3,019 (15.7)	1,912 (13.3)	165 (26.2)	63 (17.2)	143 (20.1)	605 (22.7)	119 (25.3)	12 (18.2)
60세이상	1,857 (9.6)	633 (4.4)	112 (17.8)	22 (6)	63 (8.9)	990 (37.2)	31 (6.7)	6 (8.7)
평균연령	42.3	39.7	48.6	42.1	44.2	54.0	45.1	42.7

전체 취업자 중 74.5%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13.8%는 「야외 작업현장」, 3.7%는 「거리」, 3.3%는 「자기집」, 2.4%는 「운송수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취업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장소별로 여성 취업자 1명당 남성 취업자 수를 보면, 「운송수단」에서 일하는 경우의 여성 취업자 1명당 남성 취업자 33.3명으로 성비가 가장 높았고, 「거리」는 여성 1명당 남성 2.5명, 「야외 작업현장」은 여성 1명당 남성 1.9명이다. 여성의 구성비가 높은 근로장소는 「남의집」과 「자기집」으로 각각 여성취업자 1명당 남성취업자가 1.5명, 1.2명이다.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사업장」에는 취업자의 31.3%가 30대로 가장 많고, 「운송수단」· 「남의집」· 「거리」· 「자기집」은 40대의 구성비가 각각 36.5%, 33.7%, 32.9%, 31.1% 가장 높으며, 「야외 작업현장」의 취업자 중 37.2%가 60대 이상으로 구성비가 가장 높다.

차 례

- 표본 분석 결과
- 제 1 장 여성

 - 1절 여성인구
 - 2절 출생아
 - 3절 추가계획 자녀수

- 제 2 장 아동

 - 1절 아동보육상태
 - 2절 부모동거 및 모의 취업여부별 아동보육상태
 - 3절 아동 연령별 모의 취업상태

- 제 3 장 고령자

 - 1절 고령인구 규모 및 추이.....
 - 2절 시도, 시군구별 고령인구
 - 3절 혼인상태 및 세대구성
 - 4절 경제활동
 - 5절 생활비

제 4 장 활동제약자

1절 성, 연령

2절 활동제약 형태

3절 경제활동

4절 세대구성

제 5 장 혼인(초혼)연령

1절 성, 연령별 혼인연령.....

2절 지역 및 교육정도별 혼인연령.....

3절 부부의 혼인(초혼)연령

제 6 장 1인 가구

1절 규모 및 추이

2절 연령 및 혼인상태.....

3절 경제활동

4절 주거실태

표본분석결과

< 여성·아동·고령자·활동제약자·혼인연령·1인가구 부문 >

제1장 여성

1절 여성인구

1.1 연령

다음 <표1>은 2000년도와 2005년도 여성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구성비 등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1> 연령대별 여성인구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감	증감률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계	22,917	100.0	23,576	100.0	659	2.9
9세이하	3,102	13.5	2,660	11.3	-442	-14.3
10~19세	3,227	14.1	3,093	13.1	-134	-4.2
20~29세	3,860	16.8	3,560	15.1	-300	-7.8
30~39세	4,094	17.9	4,083	17.3	-11	-0.3
40~49세	3,423	14.9	3,980	16.9	557	16.3
50~59세	2,174	9.5	2,580	10.9	406	18.7
60세이상	3,037	13.3	3,620	15.4	584	19.2
15세미만	4,551	19.9	4,278	18.1	-273	-6.0
15~64세	16,281	71.0	16,669	70.7	388	2.4
65세이상	2,084	9.1	2,629	11.2	544	26.1
평균연령	34.5	-	36.8	-	2.3	-

<표1>을 살펴보면, 2005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여성인구는 23,576천명으로 30대가 4,083천명(17.3%)으로 가장 많고, 40대 3,980천명(16.9%), 60세 이상이 3,620천명 (15.4%), 20대 3,560천명(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2.9% (659천명) 증가하였으며, 30대 이하 여성인구는 887천명 감소하고 40대 이상은 1,547천명 증가하였다. 고령여성인구(65세 이상)는 544천명(26.1%), 생산가능연령 여성인구(15~64세)는 388천명(2.4%) 증가하였으나 유소년 여성인구(15세 미만)는 273천명(-6.0%) 감소하였다. 여성인구의 평균연령은 36.8세로 5년전 34.5세보다 2.3세 증가하였다.

1.2 교육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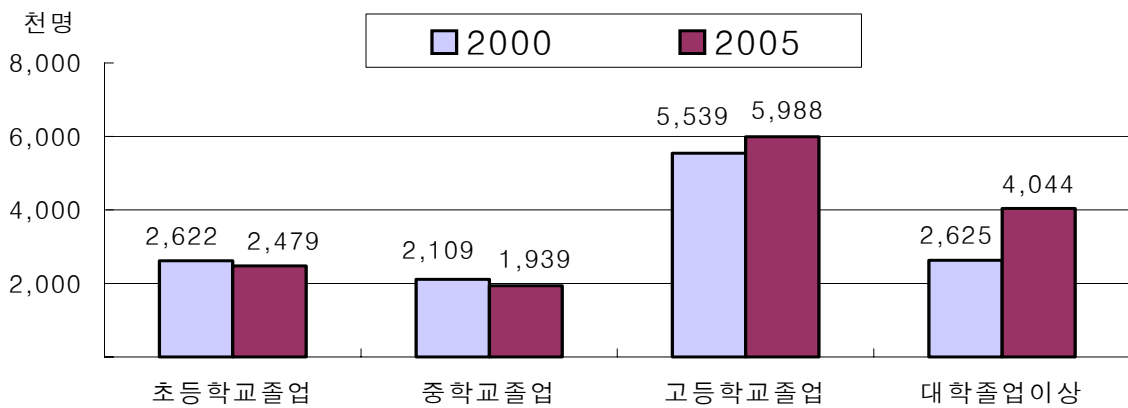
다음 <표2>는 2000년도와 2005년도 여성인구의 교육정도별 분포와 구성비 등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2> 교육정도별(졸업기준) 여성인구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감		증감률	
	남자	여자	구성비	남자	여자	구성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5세이상인구	14,037	14,768	100.0	15,216	16,077	100.0	1,178	1,310	8.4	8.9
초등학교	1,586	2,622	17.8	1,420	2,479	15.4	-165	-143	-10.4	-5.5
중학교	1,730	2,109	14.3	1,557	1,939	12.1	-173	-169	-10.0	-8.0
고등학교	5,882	5,539	37.5	6,096	5,988	37.2	214	449	3.6	8.1
대학이상	4,301	2,625	17.8	5,700	4,044	25.2	1,399	1,419	32.5	54.1
남녀비중	62.1	37.9		58.5	41.5					

[그림1] 교육정도별 여성인구



<표2>를 살펴보면, 2005년 25세이상 여성인구(16,077천명) 중 고등학교 졸업이 5,988천명(37.2%), 대학 졸업이상이 4,044천명(25.2%), 초등학교 졸업이 2,479천명(15.4%), 중학교 졸업이 1,939천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대학 졸업이상 인구는 증가 규모(1,419천명)나 증가율(54.1%) 모두 남자(1,399천명, 32.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졸업이상 인구 중 여성 비중은 41.5%로 5년 전 37.9%보다 3.6%p 증가하여, 대학 졸업이상 고학력 인구의 남녀 비중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혼인상태

다음 <표3>은 2000년도와 2005년도 연령별, 혼인상태별 여성인구의 분포와 구성비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15세이상 여성인구 19,298천명 중 유배우 인구는 11,295천명(58.5%), 미혼 4,897천명(25.4%), 사별 2,488천명(12.9%), 이혼 618천명(3.2%)으로 나타났다.

<표3> 혼인상태별 여성인구

(단위 : 천명, %)

	2000					2005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18,366	4,617	11,013	2,350	381	19,298	4,897	11,295	2,488	618
(구성비)	(100.0)	(25.1)	(60.0)	(12.8)	(2.1)	(100.0)	(25.4)	(58.5)	(12.9)	(3.2)
15-19세	1,778	99.3	0.7	0.0	0.0	1,474	99.6	0.4	0.0	0.0
20-24세	1,820	89.1	10.7	0.0	0.1	1,746	93.7	6.2	0.0	0.1
25-29세	2,040	40.1	59.1	0.1	0.6	1,814	59.1	40.1	0.1	0.7
30-34세	2,025	10.7	86.9	0.5	1.8	2,036	19.0	78.2	0.3	2.4
35-39세	2,069	4.3	90.7	1.6	3.4	2,047	7.6	86.8	1.0	4.5
40-44세	1,967	2.6	88.9	3.8	4.8	2,041	3.6	87.3	2.5	6.5
45-49세	1,456	1.7	86.1	7.5	4.6	1,939	2.4	84.9	5.5	7.2
50-54세	1,165	1.1	81.5	13.8	3.7	1,429	1.7	81.8	10.5	6.0
55-59세	1,009	0.7	74.2	22.6	2.5	1,151	1.1	76.2	18.4	4.3
60-64세	952	0.5	64.1	33.8	1.5	991	0.8	67.0	29.6	2.6
65세이상	2,084	0.3	31.3	67.6	0.7	2,629	0.5	35.9	62.5	1.0
25~34세	4,065	25.5	73.0	0.3	1.2	3,850	37.9	60.3	0.2	1.6

※ 계에는 혼인상태 및 연령 미상 포함

이는 5년전 대비 유배우 인구 비중은 1.5%p (60.0%→58.5%) 감소하고, 이혼은 1.1%p, 미혼 0.3%p, 사별 0.1%p 증가한 것이며 연령별로는 주 출산연령인 25~34세의 유배우 비중은 5년전 대비 12.7%p (73.0%→60.3%) 감소하고, 만혼화 영향 등으로 미혼 비중은 12.4%p (25.5%→37.9%) 증가하였다.

2절 출생아

2.1 가임여성인구

다음 <표4>는 연도별 가임여성인구의 증감과 증감률 추이를 보여준다. 2005년 가임여성인구(15-49세)는 13,097천명으로 5년전 13,155천명보다 58천명 감소하였으며 가임여성인구는 200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5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표4> 가임여성인구

(단위 : 천명, %)

	1990		1995		2000		2005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가임여성(15~49세)	12,374	11.5	12,811	3.5	13,155	2.7	13,097	-0.4
증감	1,275		437		344		-58	
유배우 가임여성	7,479	11.4	7,958	6.4	8,053	1.2	7,640	-5.1
증감	767		479		95		-413	

<표4>를 살펴보면 출생아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배우 가임여성인구는 7,640천명으로 5년전 8,053천명보다 413천명(-5.1%) 감소하였으며, 유배우 가임여성인구도 2005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2 연령 및 교육정도별 출생아수

다음 <표5>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연령별, 교육정도별 출생아수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기혼여성 14,414천명 중 두자녀를 출생한 여성이 6,312천명(43.8%)로 가장 많고, 세자녀 2,332천명(16.2%), 한자녀 2,255천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표5> 연령 및 교육정도별 출생아수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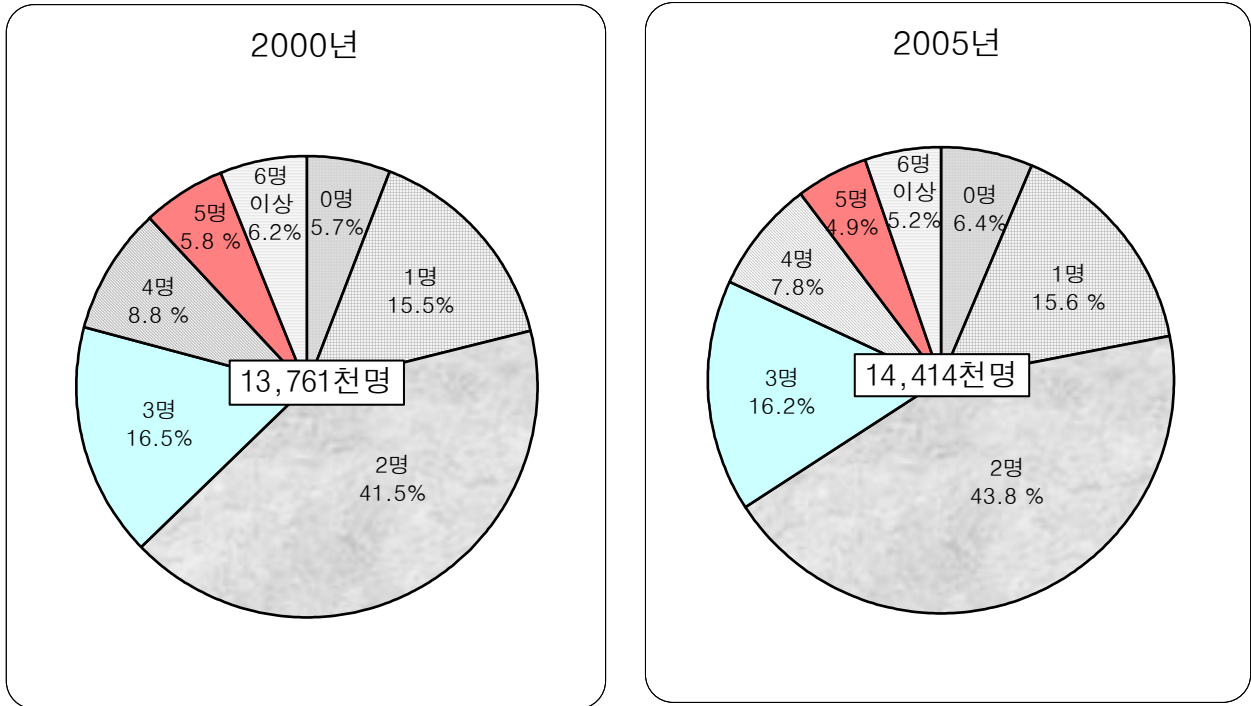
연령	기혼여성	출생아수							평균출생아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2000	13,761 (100.0)	783 (5.7)	2,134 (15.5)	5,709 (41.5)	2,268 (16.5)	1,205 (8.8)	798 (5.8)	853 (6.2)	2.5 -
2005	14,414 (100.0)	921 (6.4)	2,255 (15.6)	6,312 (43.8)	2,332 (16.2)	1,122 (7.8)	706 (4.9)	755 (5.2)	2.4 -
읍면지역	3,084	5.0	10.5	30.3	17.9	13.0	10.4	13.0	3.2
동지역	11,330	6.8	17.1	47.5	15.7	6.4	3.4	3.1	2.2
15~19세	4	66.4	31.1	2.5	-	-	-	-	0.4
20~29세	859	36.3	40.6	20.9	1.7	0.1	0.0	-	0.9
30~39세	3,556	7.8	23.8	58.6	9.1	0.6	0.1	0.0	1.7
40~49세	3,859	3.2	15.6	65.4	13.6	1.8	0.3	0.1	2.0
50~59세	2,540	2.5	9.4	44.2	29.7	10.2	2.9	1.0	2.5
60세이상	3,595	4.0	6.1	11.2	19.9	21.4	17.2	20.2	4.0

※ 기혼여성에는 출생아수 미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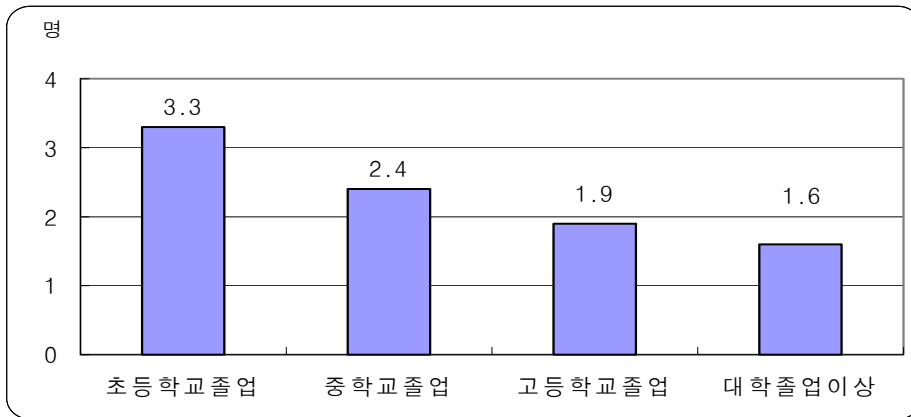
교육정도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졸업이상
평균출생아수	3.3	2.4	1.9	1.6

<표5>를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20대 기혼여성은 한자녀 출생 비중(40.6%)이, 30대~50대는 두자녀 출생비중이 58.6%(30대), 65.4%(40대), 44.2%(50대)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은 네자녀 출생비중(2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세자녀 이상 출생여성은 34.1%로 3.2%p(37.3%→34.1%) 감소하고 두자녀 이하 출생 여성은 3.1%p(62.7%→65.8%) 증가하였으나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2.4명으로 2000년 2.5명에서 0.1명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0.9명, 30대는 1.7명, 40대는 2.0명, 50대는 2.5명, 60대 이상은 4.0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읍면지역 평균출생아수는 3.2명으로 동지역(2.2명)보다 1.0명 많게 나타났다.

[그림2]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별 구성비 추이



[그림3] 교육정도별 평균출생아수



교육정도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의 평균출생아수가 3.3명, 중학교 졸업 2.4명, 고등학교 졸업 1.9명, 대학졸업 이상은 1.6명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출생아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3 경제활동상태별 출생아수

다음 <표6>은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평균출생아수를 보여준다. 모의 취업여부별 평균출생아수는 미취업 기혼여성이 2.5명으로 취업 기혼여성(2.3명)보다 0.2명 많으며, 모의 종사상의 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평균출생아수가 2.9명으로 가장 높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8명, 고용원을 둔 사업주 2.0명이며, 임금근로자의 평균출생아수는 1.8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3.9명으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종사자 2.4명, 전문가 1.5명으로 나타났다.

<표6> 경제활동상태별 평균출생아수

(단위 : 명)

종사상지위	평균 출생아수	직업	평균 출생아수
15세이상	2.4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0
취업자	2.3	1. 전문가	1.5
임금근로자	1.8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1.6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8	3. 사무 종사자	1.6
고용원을 둔 사업주	2.0	4. 서비스 종사자	2.0
무급가족종사자	2.9	5. 판매 종사자	2.1
미취업자	2.5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3.9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1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0
		9. 단순 노무 종사자	2.4

2.4 출생 · 생존 · 동거 · 타지거주 자녀수

다음 <표7>은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평균출생아수, 평균생존자녀수, 평균동거자녀수, 평균타지거주자녀수를 보여준다.

<표7> 연령별 출생, 생존, 동거, 타지거주 자녀수

(단위 : 명)

연령	평균출생아수	평균생존자녀수	평균동거자녀수	평균타지자녀수
15세이상	2.4	2.4	1.2	1.2
15~19	0.4	0.4	0.4	-
20~29	0.9	0.9	0.9	0.0
30~39	1.7	1.7	1.7	0.0
40~49	2.0	2.0	1.5	0.5
50~59	2.5	2.5	1.0	1.5
60세이상	4.0	3.8	0.5	3.3

<표7>을 살펴보면 20대 기혼 여성의 평균출생아수 및 평균 동거자녀수는 각각 0.9명이며, 30대는 각각 1.7명이며, 40대 기혼 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2.0명이며, 이 중 동거자녀수가 1.5명, 타지 거주 자녀수가 0.5명으로 나타나며, 50대의 경우 평균출생아수는 2.5명이며, 타지거주 자녀수가 1.5명으로 동거자녀수 1.0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이상 기혼여성의 경우 평균출생아수는 4.0명이며, 이 중 3.8명이 생존하여 0.5명이 동거하고 있으며 3.3명이 타지에 거주하고 있다.

3절 추가계획 자녀수

3.1 연령별 추가계획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다음 <표8>은 우리나라 가임기혼여성의 연령대별 추가계획자녀수 및 기대자녀수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 가임기혼여성 8,279천명 중 추가자녀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1,070천명(12.9%), 추가자녀 계획이 없는 여성이 7,209천명(87.1%)이었으며, 평균 출생아수는 1.7명이며 추가계획자녀수는 0.2명으로 기대자녀수는 1.9명이다.

<표8> 연령별 추가계획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단위 : 천명, 명)

연령	가임기혼여성 (15~49세)	추가자녀계획 없음	추가자녀계획 있음	출생아수	추가계획 자녀수	기대 자녀수
가임연령	8,279 (100.0)	7,209 (87.1)	1,070 (12.9)	1.7	0.2	1.9
15~19	4	24.5	75.5	0.4	1.2	1.6
20~29	859	40.8	59.2	0.9	0.8	1.7
30~39	3,556	85.0	15.0	1.7	0.2	1.9
40~49	3,859	99.4	0.6	2.0	0.0	2.0

※ 기대자녀수 = 출생아수 + 추가계획자녀수

<표8>을 살펴보면 10대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0.4명, 추가계획자녀수는 1.2명으로 기대자녀수는 1.6명이며, 20대 기혼여성의 경우 평균출생아수는 0.9명, 추가계획자녀수는 0.8명으로 기대자녀수는 1.7명이었다. 30대 기혼여성의 경우 평균출생아수는 1.7명, 추가계획자녀수는 0.2명으로 기대자녀수는 1.9명이었으며, 40대 기혼여성의 경우 평균출생아수는 2.0명이며, 추가계획자녀수는 0.0명으로 나타났다.

3.2 출생아수별 추가계획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다음 <표9>는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연령대별 출생아수별 추가계획자녀수 및 출생아수별 기대자녀수를 보여준다.

<표9> 연령, 출생아수별 추가계획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단위 : 명)

연령	추가계획자녀수				기대자녀수			
	계	출생아수별 추가계획자녀수			계	출생아수별 기대자녀수		
		0명	1명	2명		0명	1명	2명
가임여성	0.2	1.1	0.3	0.0	1.9	1.1	1.3	2.0
15~19	1.2	1.4	0.8	0.2	1.6	1.4	1.8	2.2
20~29	0.9	1.5	0.7	0.1	1.7	1.5	1.7	2.1
30~39	0.2	1.0	0.3	0.0	1.9	1.0	1.3	2.0
40~49	0.0	0.1	0.0	0.0	2.0	0.1	1.0	2.0

<표9>를 살펴보면 출생자녀가 없는 가임 기혼여성의 평균 추가계획자녀수는 1.1명이며, 10대가 1.4명, 20대가 1.5명, 30대가 1.0명, 40대는 0.1명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출생자녀가 없는 가임 기혼여성의 최종 기대자녀수는 10대 1.4명, 20대 1.5명, 30대 1.0명, 40대 0.1명이었다. 출생자녀가 1명인 경우, 평균 추가계획자녀수는 0.3명이며, 10대는 0.8명, 20대는 0.7명, 30대는 0.3명, 40대 0.0명으로 기대자녀수는 평균이 1.3명, 10대 1.8명, 20대 1.7명, 30대 1.3명, 40대 1.0명으로 나타났다. 출생자녀가 2명인 경우, 평균 추가계획자녀수는 0.0명이고, 10대 0.2명, 20대 0.1명, 30대 이상 0.0명이며, 기대자녀수는 평균이 2.0명, 10대 2.2명, 20대 2.1명, 30대·40대 2.0명으로 나타났다.

제2장 아동

1절 아동보육상태

다음 <표10>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재학이하의 아동보육상태를 보여준다.

<표10> 아동보육상태

(단위 : 천명, %)

2000	보육상태						복수항목선택 세부내용		
	계	비율	단일 항목선택	비율	복수항목선택	비율			
계	8,191	100.0	6,134	74.9	2,057	25.1	계	2,057	25.1
부모	5,067	61.9	3,420	41.8	1,647	20.1	부모 + 학원	979	12.0
조부모	604	7.4	407	5.0	197	2.4	부모 + 어린이집	148	1.8
기타 가족, 친인척	81	1.0	54	0.7	27	0.3	부모 + 유치원	372	4.5
가사도우미, 이웃사람	49	0.6	31	0.4	18	0.2	학원 + 혼자, 아동끼리	139	1.7
유치원	763	9.3	288	3.5	475	5.8	조부모 + 학원	82	1.0
어린이집, 기타 보육시설	417	5.1	231	2.8	186	2.3	부모 + 조부모	38	0.5
놀이방	143	1.7	78	1.0	65	0.8	조부모+어린이집	20	0.2
학원	2,630	32.1	1,364	16.7	1,266	15.5	부모 + 혼자, 아동끼리	45	0.5
혼자, 아동끼리	463	5.7	249	3.0	215	2.6	조부모 + 유치원	37	0.5
기타	26	0.3	13	0.2	14	0.2	기타	197	2.4

2005	보육상태						복수항목선택 세부내용		
	계	비율	단일 항목선택	비율	복수항목선택	비율			
계	7,374	100.0	5,006	67.9	2,365	32.1	계	2,365	32.1
부모	4,842	65.7	2,915	39.5	1,927	26.1	부모 + 학원	1,148	15.6
조부모	648	8.8	398	5.4	250	3.4	부모 + 어린이집, 놀이방	324	4.4
기타 가족, 친인척	77	1.0	45	0.6	32	0.4	부모 + 유치원	322	4.4
가사도우미, 이웃사람	50	0.7	28	0.4	22	0.3	학원 + 혼자, 아동끼리	152	2.1
유치원	575	7.8	176	2.4	399	5.4	조부모 + 학원	104	1.4
어린이집, 놀이방	683	9.3	292	4.0	391	5.3	부모 + 조부모	54	0.7
기타 보육시설	24	0.3	11	0.2	13	0.2	조부모+어린이집, 놀이방	44	0.6
학원	2,408	32.7	953	12.9	1,455	19.7	부모 + 혼자, 아동끼리	43	0.6
혼자, 아동끼리	392	5.3	172	2.3	220	3.0	조부모 + 유치원	37	0.5
기타	36	0.5	16	0.2	20	0.3	기타	137	1.9

※ 아동보육상태는 주된 것 2개까지 선택가능토록 조사되었음; 복수항목선택은 해당 응답항목에 각각 반영되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예) 부모+학원 => 부모(1), 학원(1)

※ 계에는 아동보육상태 미상 포함

<표10>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재학이하(0~12세)인 아동 7,374천명에 대한 주간 보육상태를 보면, 「자녀의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2,915천명(39.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모 + 학원」이 1,148천명(15.6%), 「학원」이 953천명(12.9%), 「조부모」 398천명(5.4%) 순이며,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는 경우 2,915천명과 부모와 다른 보육방법이 결합된 복합보육 1,927천명을 합한 부모가 일부라도 돌보는 경우는 4,842천명(65.7%)이며, 조부모가 일부라도 돌보는 경우는 648천명(8.8%)이다. 주간에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은 172천명(2.3%)으로 나타났다. 5년전 대비 「자녀의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는 비율은 2.3%p (41.8%→39.5%) 감소하고, 일부라도 돌보는 비율은 3.8%p (61.9%→65.7%) 증가하였으며, 「자녀의 부모 + 학원」은 3.6% (12.0%→15.6%) 증가하였으며, 조부모가 일부라도 돌보는 비율은 5년전 대비 1.4%p (7.4%→8.8%) 증가하고,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비율은 0.7%p(3.0%→2.3%) 감소하였다.

2절 부모동거 및 모의 취업여부별 아동보육상태

다음 <표11>에서 모의 취업 여부(취업/미취업)에 따른 아동보육상태를 보면 학원(19.6%/9.0%), 조부모(8.7%/1.1%), 어린이집·놀이방(6.3%/2.6%), 혼자 또는 아동끼리(4.4%/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1> 부모동거 및 모의 취업여부별 아동보육상태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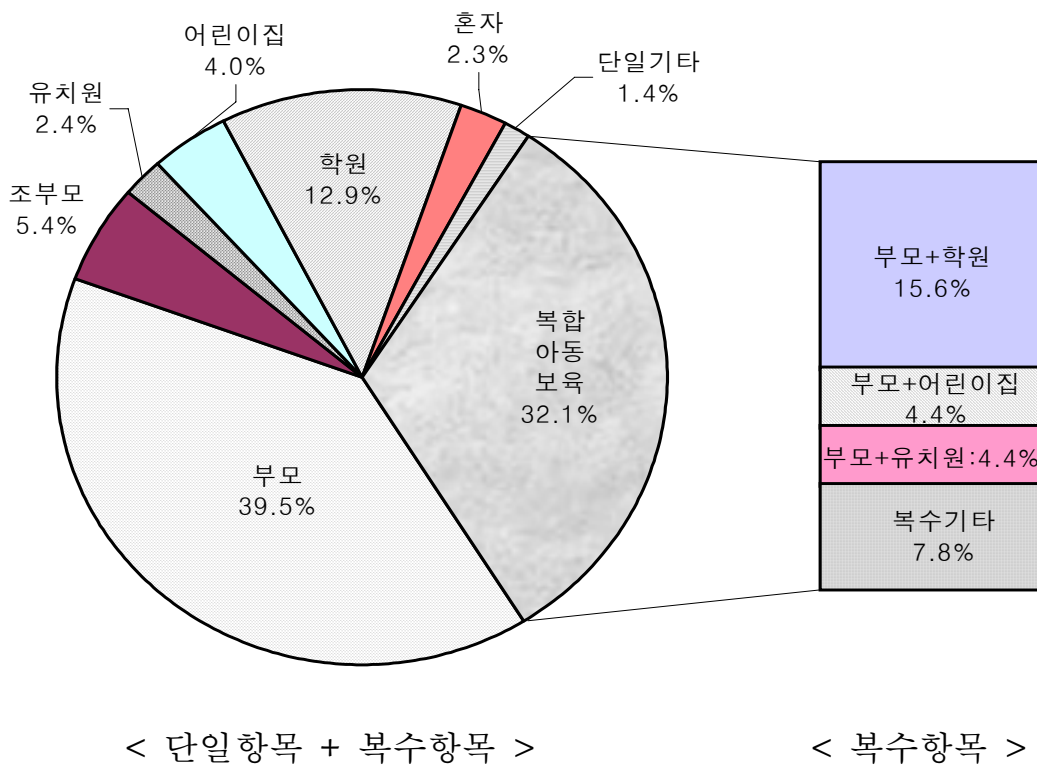
	계	단일 항목선택											복수항목선택			
		단일 계	부모	조부 모	기타 가족	가사 도우미	유 치 원	어 린 이 집 놀 이 방	기 타 보 육 시 설	학 원	혼 자 또 는 아 동 끼 리	기 타	복 합 계	부 모 + 학 원	부 모 + 어 린 이 집	부 모 + 유 치 원
계	7,374	67.9	39.5	5.4	0.6	0.4	2.4	4.0	0.2	12.9	2.3	0.2	32.1	15.6	4.4	4.4
부모동거	6,556	67.5	41.9	3.6	0.4	0.4	2.4	4.0	0.1	12.7	1.8	0.2	32.5	16.4	4.7	4.7
모만동거	477	68.8	30.6	8.1	1.1	0.3	2.0	4.4	0.3	16.2	5.5	0.4	31.2	13.2	3.3	2.7
부만동거	191	73.3	9.5	26.4	2.1	0.6	2.1	3.9	0.4	16.0	11.8	0.6	25.2	3.7	0.8	0.6
부모비동거	149	77.4	0.8	50.4	6.8	0.2	1.5	3.0	0.4	9.2	4.5	0.7	22.6	0.3	0.1	0.1
모취업	2,582	65.0	20.7	8.7	1.0	1.0	2.7	6.3	0.2	19.6	4.4	0.3	35.0	13.8	3.8	2.5
모미취업	4,451	69.0	53.0	1.1	0.1	0.0	2.2	2.6	0.1	9.0	0.7	0.1	31.0	17.6	5.0	5.7
차이		-4.1	-32.3	7.6	0.8	0.9	0.5	3.6	0.2	10.6	3.7	0.2	4.1	-3.8	-1.2	-3.2

※ 계에는 아동보육상태 미상 포함, 부모비동거에는 부모동거여부 미상 포함

<표 11>을 살펴보면 부모 동거여부별 주간 아동보육상태를 보면 「자녀의 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부모 모두 동거”일 경우의 41.9%, “모만 동거” 30.6%, “부만 동거” 9.5% 순이며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부모 모두 비동거”인 경우가 50.4%이며, “부만 동거” 26.4%, “모만 동거”의 8.1% 였다. 「학원」은 “모만 동거”인 경우가 16.2%, “부만 동거”의 16.0%, “부모 모두 동거”의 12.7%에 해당되며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은 “부만 동거”인 경우의 11.8%, “모만 동거”의 5.5%, “부모 모두 비동거”의 4.5%에 해당되었다.

함께 살고 있는 모가 취업 중인 아동은 모가 미취업 중인 아동에 비해 「자녀의 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32.3%p, 「부모+학원」이 3.8%p, 「부모+유치원」이 3.2%p 적게, 「학원」이 10.6%p, 「조부모」 7.6%p,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3.7%p, 「어린이집, 놀이방」 3.6%p 많게 나타났다.

[그림4] 아동보육상태별 아동 비율



3절 아동 연령별 모의 취업상태

다음 <표12>에서 함께 사는 모의 취업상태를 보면 모가 취업 중인 아동은 2,582천명(35.0%), 미취업은 4,451천명(60.4%)으로 나타났다.

<표12> 아동연령, 모의 취업상태별 보육아동수

(단위 : 천명, %)

	계	모의 취업상태					
		취업		미취업		미상	
			비율		비율		비율
계	7,374	2,582	35.0	4,451	60.4	341	4.6
6세이하	3,588	1,014	28.3	2,454	68.4	120	3.3
0	413	77	18.7	329	79.7	7	1.6
1	454	104	22.9	338	74.6	11	2.5
2	473	120	25.4	340	71.9	13	2.7
3	486	137	28.2	333	68.6	16	3.2
4	553	170	30.7	364	65.8	20	3.6
5	615	201	32.7	389	63.3	25	4.0
6	594	205	34.5	361	60.7	29	4.8
7~12세	3,786	1,568	41.4	1,996	52.7	222	5.9
7	629	229	36.5	367	58.4	32	5.1
8	649	253	39.0	361	55.6	35	5.4
9	673	279	41.5	355	52.8	38	5.7
10	687	296	43.0	350	51.0	41	5.9
11	674	298	44.1	334	49.6	42	6.3
12	474	212	44.8	228	48.1	34	7.1

<표12>에서 미취학연령인 0~6세 아동의 경우, 취업 중인 모를 둔 아동이 1,014천명(28.3%), 미취업 모를 둔 아동이 2,454천명(68.4%)이며, 초등학교 재학 연령인 7~12세의 경우, 취업 중인 모를 둔 아동이 1,568천명(41.4%), 미취업 모를 둔 아동이 1,996천명(52.7%)이었다. 이를 보면 아동 연령이 적을수록 모의 취업률이 낮고,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동보육 부담이 모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3장 고령자

1절 고령인구 규모 및 추이

다음 <표13>에서 우리나라 총인구 증가율은 2.3%이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4,365천명으로 그 중 여자가 2,629천명(60.2%), 남자가 1,736천명(39.8%)이며, 이는 5년전 3,372천명에 비해 993천명(29.5%) 증가하였다.

<표13> 고령인구 규모 및 추이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인구	45,985		47,041		1,056	2.3
65세이상	3,372	100.0	4,365	100.0	993	29.5
남자	1,287	38.2	1,736	39.8	449	34.9
여자	2,084	61.8	2,629	60.2	544	26.1
동지역	2,001	59.4	2,747	62.9	745	37.2
읍면지역	1,370	40.6	1,618	37.1	248	18.1

<표13>을 자세히 살펴보면, 5년전 대비 남자 고령자 비중은 1.6%p(38.2%→39.8%) 증가하고 여자고령자 비중은 1.6%p(61.8%→60.2%) 감소하여 남녀 고령자 비중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 고령인구를 보면 동지역 거주자가 2,747천명(62.9%), 읍면지역 거주자가 1,618천명(37.1%)이며, 이는 5년전에 비해 동지역 거주 고령인구는 745천명(37.2%) 증가하였으며 읍면지역 고령인구는 248천명(18.1%) 증가하였다.

2. 시도, 시군구별 고령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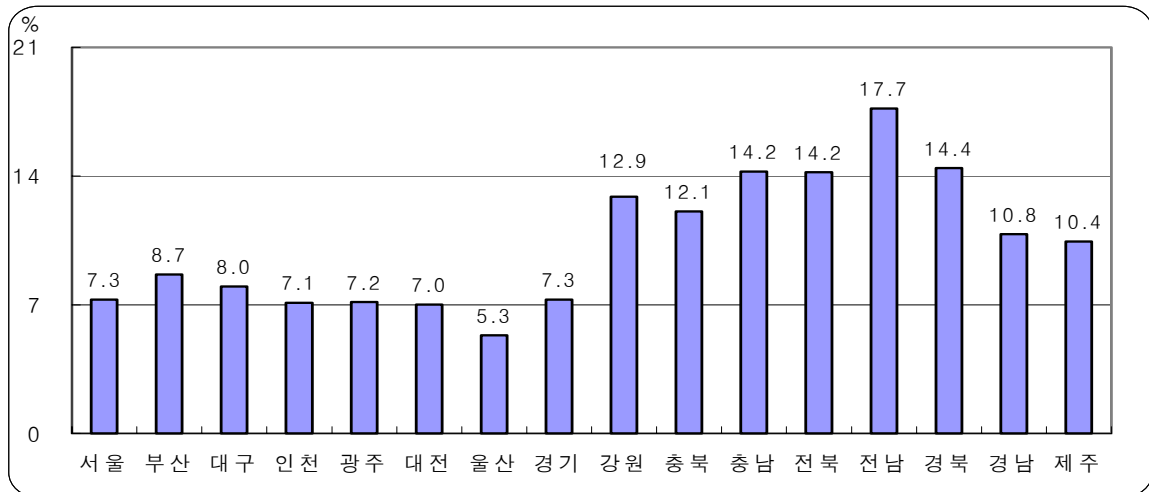
다음 <표14>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군구별로는 전체 234개 시군구 중 초고령사회 시군구는 63개(26.9%), 고령사회 시군구는 37개(15.8%), 고령화사회 시군구는 87개(37.2%)이다.

<표14> 고령화 수준별 시군구

(단위 : 개, %)

	2000		2005		증감	증감률
	개	%	개	%		
계	234	100.0	234	100.0	-	-
7%미만	84	35.9	47	20.1	-37	-15.8
고령화사회	76	32.5	87	37.2	11	4.7
고령사회	45	19.2	37	15.8	-8	-3.4
초고령사회	29	12.4	63	26.9	34	14.5

[그림5]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표15>에서 동지역 고령자 비율은 7.2%로 고령화사회, 읍면지역은 18.6%로 고령사회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이 17.7%로 인구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되어 있고 경북 14.4%, 충남 14.2%, 전북

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 5.3%, 대전 7.0%, 인천 7.1%, 광주 7.2%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경북, 충남, 전북은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는 고령인구비율이 7%를 넘어 새롭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즉,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고령 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참고로 65세이상 인구 구성비가 7%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로, 14%이상인 경우는 고령사회로, 20%이상인 경우는 초고령사회로 본다

<표15> 시도별 고령인구

(단위 : 천명, %)

	2000			2005		
	총인구	65세이상	비율	총인구	65세이상	비율
전국	45,985	3,372	7.3	47,041	4,365	9.3
동지역	36,642	2,001	5.5	38,338	2,747	7.2
읍면지역	9,343	1,370	14.7	8,704	1,618	18.6
서울	9,854	535	5.4	9,763	711	7.3
부산	3,655	225	6.2	3,513	304	8.7
대구	2,474	147	5.9	2,456	197	8.0
인천	2,466	137	5.5	2,518	179	7.1
광주	1,351	75	5.6	1,414	101	7.2
대전	1,366	75	5.5	1,439	101	7.0
울산	1,012	41	4.0	1,045	56	5.3
경기	8,938	519	5.8	10,341	753	7.3
강원	1,485	147	9.9	1,461	188	12.9
충북	1,463	142	9.7	1,454	176	12.1
충남	1,840	222	12.1	1,879	268	14.2
전북	1,887	212	11.2	1,779	253	14.2
전남	1,994	271	13.6	1,815	321	17.7
경북	2,716	314	11.6	2,595	374	14.4
경남	2,971	267	9.0	3,041	330	10.8
제주	513	43	8.4	531	55	10.4

3절 혼인상태 및 세대구성

다음 <표16>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령자(4,365천명)의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2,419천명(55.4%)로 가장 많고, 사별 1,875천명(42.9%), 이혼 50천명(1.1%), 미혼 22천명(0.5%)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5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사별은 4.1%p (47.0%→42.9%) 감소하고 유배우는 3.4%p (52.0%→55.4%) 증가하였다. 즉 평균수명 증가 및 남녀 평균수명 차이 감소 등으로 유배우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혼인상태별 고령인구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감	
		구성비		구성비		%p
계	3,372	100.0	4,365	100.0	993	-
미혼	10	0.3	22	0.5	11	0.2
유배우	1,752	52.0	2,419	55.4	668	3.4
사별	1,584	47.0	1,875	42.9	291	-4.1
이혼	25	0.7	50	1.1	25	0.4

다음 <표17> 세대구성별 고령인구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3세대 이상 가구 비중은 7.4%p (30.6%→23.2%) 감소하였으나, 1세대가구는 4.1%p (28.5%→32.6%) 증가하였고, 1인가구도 1.8%p (16.1%→17.9%) 증가하였다.

<표17> 세대구성별 고령인구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감	
		구성비		구성비		%p
계	3,372	100.0	4,365	100.0	993	-
1세대가구	960	28.5	1,424	32.6	464	4.1
2세대가구	799	23.7	1,075	24.6	275	0.9
3세대가구	1,001	29.7	989	22.7	-12	-7.0
4세대이상가구	29	0.9	23	0.5	-6	-0.4
1인가구	543	16.1	783	17.9	240	1.8
비친족가구	15	0.4	20	0.4	5	0.0
집단가구	25	0.7	52	1.2	27	0.4

4절 경제활동

<표18>을 살펴보면 고령자의 직업별 분포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비율이 69.0%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 종사자」 10.5%, 「판매종사자」 6.0%, 「서비스종사자」 2.8%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비중은 4.3%p (73.3%→69.0%) 감소하고, 「단순노무 종사자」 2.6%p (7.9%→10.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9%p (1.5%→2.4%) 증가하였다.

<표18> 직업 및 종사상지위별 고령인구

(단위 : 천명, %)

	직업	2000		2005		증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천명	%p
	계	842	100.0	1,057	100.0	216	0.0
직업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 관리자	20	2.4	21	2.0	2	-0.3
	1.전문가	16	1.9	21	1.9	5	0.1
	2.기술공 및 준전문가	14	1.7	17	1.6	3	-0.1
	3.사무종사자	10	1.2	18	1.7	8	0.5
	4.서비스종사자	20	2.3	29	2.8	10	0.4
	5.판매종사자	53	6.3	63	6.0	10	-0.3
	6.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617	73.3	729	69.0	112	-4.3
	7.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4	1.6	22	2.1	9	0.5
	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	1.5	25	2.4	13	0.9
9.단순노무종사자	66	7.9	111	10.5	44	2.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14	13.6	168	15.9	54	2.3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513	61.0	638	60.3	125	-0.6
	고용원을 둔 사업주	26	3.0	36	3.4	10	0.4
	무급가족종사자	189	22.4	215	20.4	27	-2.0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비율이 60.3%로 가장 높고, 「무급가족종사자」 20.4%, 「임금근로자」 15.9%, 「고용원을 둔 사업주」 3.4%순으로 나타났

5절 생활비

<표19>을 살펴보면 전체 고령자 4,367천명 중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마련하는 고령자는 1,319천명(30.2%)이며, 일부라도 마련하는 고령자는 1,926천명(44.1%)이었다.

<표19> 고령자 생활비

(단위 : 천명, %)

	고령자 생활비						복수항목선택 세부내용		
	계	비율	단일항목선택	비율	복수항목선택	비율			
계	4,367	100.0	3,258	74.6	1,109	25.4	1,109	25.4	
본인 스스로 마련	1,926	44.1	1,319	30.2	607	13.9	본인, 배우자의 일, 직업 + 따로 사는 자녀	201 4.6	
· 본인, 배우자의 일, 직업	1,137	26.0	685	15.7	452	10.3	함께 사는 자녀 + 따로 사는 자녀	138 3.2	
· 예금, 적금	390	8.9	133	3.0	257	5.9	예금, 적금 + 따로 사는 자녀	101 2.3	
· 연금	381	8.7	167	3.8	214	4.9	본인, 배우자의 일, 직업 + 연금	74 1.7	
· 부동산	254	5.8	91	2.1	163	3.7	본인, 배우자의 일, 직업 + 함께 사는 자녀	57 1.3	
· 주식, 채권, 증권	5	0.1	1	0.0	4	0.1	따로 사는 자녀 + 국가·지자체 보조	56 1.3	
함께 사는 자녀	1,224	28.0	928	21.3	296	6.8	부동산 + 따로 사는 자녀	54 1.2	
따로 사는 자녀	1,544	35.4	912	20.9	632	14.5	본인, 배우자의 일, 직업 + 예금, 적금	50 1.2	
친·인척	36	0.8	21	0.5	14	0.3	기타	376 8.6	
국가지자체보조	389	8.9	256	5.9	134	3.1			
종교사회단체보조	40	0.9	22	0.5	19	0.4			
기타	72	1.7	45	1.0	28	0.6			

- ※ 1. 표본항목 집계결과로 전수집계 고령자수와 일부 차이남
 2. 복수항목선택은 해당 응답항목에 각각 반영되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예) 본인 일 + 자녀 => 본인 일(1), 자녀(1)

그 외에는 928천명(21.3%)이 「함께 사는 자녀」를 통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따로 사는 자녀」 912천명(20.9%),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685천명(15.7%),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256천명 (5.9%)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원천을 2개 응답한 경우는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 따로 사는 자녀」가 201천명(4.6%), 「함께 사는 자녀 + 따로 사는 자녀」 138천명(3.2%), 「예금·적금 + 따로 사는 자녀」가 101천명(2.3%)이었다.

제4장 활동제약자

1절 성, 연령

<표20>에서 5세이상 인구 44,010천명 중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이 있는 인구는 2,439천명(5.5%), 일상생활 활동제약이 있는 인구는 1,769천명(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0> 성, 연령별 활동제약자

(단위 : 천명, %)

	5세이상 인구	활동제약 없음	하나라도 있음	정신적·육체적, 일상생활 모두 활동제약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	일상생활 활동제약
계	44,010 (100.0)	41,177 (93.6)	2,577 (5.9)	1,630 (3.7)	2,439 (5.5)	1,769 (4.0)
남자	21,570	94.5	4.9	3.0	4.6	3.3
여자	22,440	92.7	6.7	4.3	6.4	4.7
5~19세	9,643	98.7	0.7	0.4	0.6	0.5
20~29	6,771	98.1	1.2	0.6	1.0	0.9
30~39	8,191	97.6	1.7	0.9	1.4	1.2
40~49	8,013	96.3	3.1	1.7	2.8	2.0
50~59	5,134	92.8	6.7	3.6	6.3	4.0
60세이상	6,257	72.5	27.0	18.5	26.5	19.1

※ 활동제약은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하도록 조사하였음

※ 5세이상 인구에는 활동제약 미상 포함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과 일상생활 활동제약이 모두 있는 인구는 1,630천명(3.7%),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이나 일상생활 활동제약이 하나라도 있는 인구는 2,577천명(5.9%) 이었으며, 성별로는 활동제약이 하나라도 있는 여자비율은 6.7%로 남자(4.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 6,257천명 중 1,657천명(26.5%)은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을 갖고 있으며, 「일상생활 활동제약자」는 1,194천명(19.1%)이며, 두 가지 제약 중 하나라도 있는 인구는 1,692천명(27.0%) 이었다.

2절 활동제약 형태

<표21>을 살펴보면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이 하나라도 있는 인구(2,439천명) 중 「육체적 활동제약자」는 1,829천명(4.2%), 「시각·청각·언어 장애」 470천명(1.1%), 「정신적 활동제약자」 377천명(0.9%), 「중풍」 183천명(0.4%), 「치매」 81천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표21> 활동제약 형태

(단위 : 천명, %)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		일상생활 활동제약		
	활동제약자	비율		활동제약자	비율
하나라도 있음	2,439	5.5	하나라도 있음	1,769	4.0
시각·청각·언어장애	470	1.1	배우기·기억·집중하기	630	1.4
치매	81	0.2	집안 활동 (옷입기, 목욕하기 등)	397	0.9
중풍	183	0.4	집밖 활동 (쇼핑, 병원가기 등)	1,203	2.7
육체적 제약 (걷기, 계단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1,829	4.2	취업활동(15세이상)	555	1.3
정신적 제약 (학습어려움, 정신적 질환 등)	377	0.9			

※ 활동제약은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하도록 조사하였음

일상생활 활동제약이 하나라도 있는 인구(1,769천명) 중 「집밖 활동 제약자」가 1,203천명 (2.7%),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제약자」 630천명(1.4%), 「취업활동 제약자」 555천명(1.3%), 「집안 활동 제약자」 397천명(0.9%) 순으로 나타났다.

3절 경제활동

<표22>를 살펴보면 15세이상 「활동제약자」 인구(2,535천명) 중 취업자는 558천명(22.0%), 미취업자는 1,976천명(78.0%)으로 나타났다.

<표22> 활동제약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천명, %)

	활동제약 없음		하나라도 있음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		일상생활 활동제약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15세이상	34,653	100.0	2,535	100.0	2,404	100.0	1,739	100.0
취업자	18,606	53.7	558	22.0	499	20.7	303	17.4
미취업자	16,042	46.3	1,976	78.0	1,905	79.2	1,436	82.6
0.의회의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	680	3.7	9	1.6	7	1.4	4	1.4
1.전문가	1,885	10.1	14	2.5	10	1.9	8	2.5
2.기술공 및 준전문가	1,704	9.2	17	3.1	13	2.5	9	2.9
3.사무종사자	3,096	16.6	27	4.9	19	3.7	14	4.7
4.서비스종사자	1,819	9.8	34	6.1	28	5.7	16	5.4
5.판매종사자	2,059	11.1	43	7.7	36	7.3	22	7.1
6.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1,779	9.6	272	48.6	260	52.1	165	54.4
7.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881	10.1	35	6.3	30	6.0	16	5.4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190	11.8	36	6.4	30	6.0	16	5.4
9.단순노무종사자	1,368	7.3	70	12.6	66	13.2	32	10.6

※ 활동제약은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하도록 조사하였음.

15세이상에는 취업자 미상 취업자에는 직업 미상 포함

15세이상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 인구 2,404천명 중 취업자는 499천명(20.7%)이고, 15세이상 「일상생활 활동제약」 인구 1,739천명 중 취업자는 303천명(17.4%)이며, 「활동제약자」의 취업자 비율(22.0%)은 활동제약이 없는 인구에 대한 취업자 비율(53.7%)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활동제약자의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48.6%, 「단순노무종사자」 12.6%, 「판매종사자」 7.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3% 순으로 나타났다.

4절 세대구성

<표23>을 살펴보면 활동제약자(2,577천명)의 세대구성은 2세대가구가 914천명(35.4%), 1세대가구가 629천명(24.4%), 1인가구가 489천명(19.0%), 3세대가구가 392천명(15.2%) 순으로 나타났다.

<표23> 세대구성별 활동제약자

(단위 : 천명, %)

	활동제약 없음		활동제약 있음		구성비 차이
		구성비		구성비	
계	41,177	100.0	2,577	100.0	-
1세대가구	4,753	11.5	629	24.4	12.9
2세대가구	28,119	68.3	914	35.4	-32.8
3세대가구	4,570	11.1	392	15.2	4.1
4세대가구	78	0.2	11	0.4	0.2
1인가구	2,638	6.4	489	19.0	12.6
비친족가구	504	1.2	15	0.6	-0.6
집단가구	514	1.2	127	4.9	3.7

활동제약이 없는 인구의 세대구성과 비교해보면 1세대가구 비중이 12.9%p, 1인가구 12.6%p, 3세대가구 4.1%p, 집단가구 3.7%p 높고, 2세대가구 비중은 32.8%p, 비친족가구 비중은 0.6%p 낮게 나타났다.

제5장 혼인(초혼)연령

1절 성, 연령별 혼인연령

<표24>는 우리나라 남녀의 혼인(초혼)연령별 분포를 보여주며, 남자는 25~29세가 54.6%, 20~24세가 19.4%, 30~34세가 18.3% 순으로, 여자는 20~24세가 46.4%, 25~29세가 30.2%, 19세이하가 16.6% 순으로 나타났다.

<표24> 성, 연령별 혼인연령

(단위 : 천명, %)

초혼연령 연령	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39	40세이상	평균초혼 연령(세)
여자	14,414 (100.0)	2,392 (16.6)	6,684 (46.4)	4,358 (30.2)	697 (4.8)	163 (1.1)	86 (0.6)	24.0
15~19세	4	98.4	-	-	-	-	-	18.2
20~29	859	6.5	48.6	44.8	-	-	-	24.4
30~39	3,556	3.8	38.9	48.0	8.5	0.8	-	25.7
40~49	3,859	9.2	50.7	32.4	5.1	1.8	0.7	24.6
50~59	2,540	15.0	56.6	22.8	3.7	1.0	0.8	23.6
60세이상	3,595	40.7	41.4	12.1	2.9	1.1	1.1	21.8
남자	12,126 (100.0)	392 (3.2)	2,350 (19.4)	6,625 (54.6)	2,214 (18.3)	380 (3.1)	143 (1.2)	27.6
15~19세	1	97.9	-	-	-	-	-	18.3
20~29	359	3.4	30.6	65.7	-	-	-	25.6
30~39	2,887	1.0	11.7	59.4	25.6	2.3	-	28.3
40~49	3,760	1.9	16.6	56.1	19.7	4.2	1.3	28.1
50~59	2,500	2.1	20.4	58.2	15.0	2.6	1.5	27.5
60세이상	2,619	8.7	29.4	42.3	13.8	3.4	2.1	26.6

※ 계에는 혼인(초혼)연령 미상 포함

15세이상 인구의 혼인연령은 남자는 27.6세 여자는 24.0세로 남자가 3.6세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남자 60세이상은 26.6세, 50대 27.5세, 40대 28.1세, 30대 28.3세이며, 여자는 60세이상이 21.8세, 50대 23.6세, 40대 24.6세, 30대 25.7세로 나타났다.

2절 지역 및 교육정도별 혼인연령

<표25>는 교육정도별 초혼연령을 보여 주며, 여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 23.4세, 고등학교 24.7세, 대학이상 26.2세이며 남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 26.9세, 고등학교 27.6세, 대학이상 28.5세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녀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25> 지역 및 교육정도별 혼인연령

(단위 : 세)

	계	교육정도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읍면지역	동지역
여자	24.0	23.4	24.7	26.2	22.7	24.3
20~29세	24.4	21.6	23.5	25.4	23.7	24.5
30~39세	25.7	23.8	25.1	26.6	25.2	25.7
40~49세	24.6	23.5	24.7	26.1	24.1	24.7
50~59세	23.6	23.4	24.4	25.3	22.8	23.8
60세이상	21.8	23.0	23.9	25.0	20.9	22.2
남자	27.6	26.9	27.6	28.5	26.8	27.9
20~29세	25.6	22.8	24.9	26.5	25.1	25.7
30~39세	28.3	27.1	27.8	28.8	28.0	28.4
40~49세	28.1	27.2	27.9	28.6	27.9	28.1
50~59세	27.5	27.0	27.6	28.3	27.0	27.7
60세이상	26.6	26.1	26.7	27.2	25.4	27.2

지역별로는 여자의 읍면지역 초혼연령은 22.7세, 동지역은 24.3세이며 남자는 읍면지역이 26.8세, 동지역이 27.9세로, 동지역 초혼연령이 읍면지역보다 남자는 1.1세, 여자는 1.6세 높게 나타났다.

3절 부부의 혼인(초혼)연령

<표26>을 살펴보면 함께 사는 기혼부부 10,443천쌍 중 남자연상인 부부가 8,688천쌍(83.2%), 동갑인 부부가 1,008천쌍(9.6%), 여자 연상인 부부가 747천쌍(7.2%)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혼인연도별로 보면 70년대 결혼한 부부의 남자 연상비율이 88.8%로 가장 높고, 80년대부터 남자연상 비율은 감소하고 여자연상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26> 부부의 혼인연령

(단위 : 천쌍, %)

혼인연도	계	여자 연상				동갑	남자 연상				차이	
		5이상	3~4	1~2	소계		소계	1~2	3~4	5이상	(여>남)	(여<남)
계	10,443 (100.0)	55 (0.5)	116 (1.1)	576 (5.5)	747 (7.2)	1,008 (9.6)	8,688 (83.2)	2,578 (24.7)	2,865 (27.4)	3,245 (31.1)	2.0	4.2
1950년 이전	127	0.1	1.4	7.7	9.3	9.0	81.7	24.3	23.7	33.7	1.7	4.4
1950년대	514	0.2	1.2	6.6	8.0	8.9	83.1	21.6	25.4	36.0	1.7	4.6
1960년대	1,027	0.3	0.8	4.2	5.3	6.7	88.0	19.7	26.5	41.8	1.9	4.8
1970년대	1,847	0.4	0.8	3.7	4.9	6.4	88.8	20.8	26.6	41.3	2.1	4.7
1980년대	2,619	0.5	1.0	4.9	6.3	9.3	84.3	26.9	29.8	27.7	2.0	3.9
1990년대	2,890	0.6	1.1	5.9	7.5	11.0	81.5	26.6	28.5	26.4	2.0	3.9
2000년대	1,419	1.1	2.0	8.7	11.7	14.2	74.1	26.6	23.7	23.8	2.1	4.0

2000년이후 결혼한 인구의 남자 연상비율은 74.1%, 동갑 14.2%, 여자연상 11.7%이며, 부부의 혼인연령 차이는 남자 연상인 부부는 평균4.2세, 여자 연상인 경우는 평균 2.0세이었다.

제6장 1인 가구

1절 규모 및 추이

<표27>을 살펴보면, 2005년 1인가구수는 3,171천 가구로 전체가구(15,887천 가구)의 20.0%이며, 5년전 2,224천 가구에서 947천 가구(42.5%) 증가하였으며 그 중 여자 가구가 1,753천 가구(55.3%)로 남자 가구(1,418천 가구, 44.7%)보다 많다.

<표27> 1인가구 규모 및 추이

(단위 : 천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가구	9,571	20.1	11,355	18.6	12,958	14.1	14,312	10.4	15,887	11.0
1인가구	661	72.7	1,021	54.5	1,642	60.8	2,224	35.4	3,171	42.5
비율	(6.9)		(9.0)		(12.7)		(15.5)		(20.0)	
남자	246	79.6	431	75.3	711	67.8	945	32.9	1,418	50.0
여자	415	68.8	590	42.2	932	57.8	1,279	37.3	1,753	37.0

1인가구 비율은 90년(9.0%), 95년(12.7%), 2000년(15.5%), 2005년(20.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년전 대비, 1인가구 증가율은 42.5%로 전체가구 증가율(11.0%)보다 높은 수준이며, 총조사 실시연도별 1인가구 증가율은 90년(54.5%), 95년(60.8%), 2000년(35.4%), 2005년(42.5%)로, 2000년에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2절 연령 및 혼인상태

<표28>에서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978천 가구(30.8%)로 가장 높고, 20대 679천 가구(21.4%), 30대 629천 가구(19.9%), 40대 474천 가구(15.0%)순으로, 5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연령별 1인가구의 증가율은 40대가 60.7%로 가장 높고, 다음이 30대 51.6%, 50대 48.7% 순으로 나타났다.

<표28> 연령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단위 : 천가구, %)

	2000		2005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2,224	100.0	3,171	100.0	947	42.5
15~19세	47	2.1	44	1.4	-2	-4.6
20~29	514	23.1	679	21.4	165	32.0
30~39	415	18.7	629	19.9	214	51.6
40~49	295	13.3	474	15.0	179	60.7
50~59	246	11.1	366	11.5	120	48.7
60세이상	707	31.8	978	30.8	271	38.4
미혼	957	43.0	1,427	45.0	470	49.1
유배우자	267	12.0	368	11.6	101	37.9
사별	781	35.1	1,002	31.6	221	28.3
이혼	219	9.8	373	11.8	154	70.5

혼인상태별 분포는 미혼이 1,427천 가구(45.0%)로 가장 많고, 사별 1,002천 가구(31.6%), 이혼 373천 가구(11.8%), 유배우 368천 가구(11.6%) 순이며, 5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미혼 1인가구는 470천 가구(49.1%), 사별 221천 가구(28.3%), 이혼 154천 가구(70.5%), 유배우 101천 가구(37.9%) 모두 증가하였다. 배우자가 있으나 직장 등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1인가구가 368천 가구로 2000년 267천 가구에서 101천 가구(37.9%) 증가하였다.

3절 경제활동

<표29>에서 1인가구 3,168천 가구 중 취업 중인 1인가구는 1,698천 가구 (53.6%), 미취업은 1,468천 가구(46.3%)이며 이를 5년전과 비교하면, 취업 중인 가구는 461천 가구(37.2%) 증가하고, 미취업은 483천 가구(49.0%) 증가하였다.

<표29> 경제활동별 1인가구

(단위 : 천가구, %)

	2000	2005	증감	증감률
계	2,224	3,168	944	42.5
취업	1,238	1,698	461	37.2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1	36	-6	-13.9
전문가	121	181	59	49.0
기술공 및 준전문가	89	146	57	63.9
사무종사자	142	236	93	65.7
서비스종사자	168	218	49	29.4
판매종사자	127	157	31	24.3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184	209	25	13.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28	162	34	26.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2	167	55	48.8
단순노무종사자	123	177	55	44.8
기타	2	4	2	-
미취업	985	1,468	483	49.0

※ 계에는 취업여부 미상, 취업에는 직업 미상 포함

표본항목 집계결과로 전수집계 1인가구수와 일부 차이남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236천 가구로 가장 많으며, 증가율도 93천 가구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증가율이 높은 직업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 57천 가구(63.9%), 전문가 59천 가구(49.0%) 순으로 나타났다.

4절 주거실태

<표30>에서 1인가구의 거처종류는 단독주택이 2,056천 가구(64.8%)로 가장 많고, 아파트 668천 가구(21.1%), 다세대주택 169천 가구(5.3%), 오피스텔 110천 가구 (3.5%) 순이며, 5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다세대 주택·오피스텔 거주비율이 각각 3.3%p, 3.0%p 증가하고,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5.5%p 감소하였다. 점유형태는 월세비율이 35.6%, 자기집 31.1%, 전세 24.0%이며, 5년전 대비 월세비중은 8.3%p(27.3%→35.6%) 증가하고 기타 점유형태는 감소하였다.

<표30> 거처종류 및 점유형태별 1인가구

(단위 : 천가구, %)

		2000		2005		증감	
			구성비		구성비		%p
계		2,224	100.0	3,171	100.0	947	-
거처 종류	주택	2,191	98.5	3,032	95.6	841	-2.9
	· 단독주택	1,563	70.3	2,056	64.8	493	-5.5
	· 아파트	407	18.3	668	21.1	261	2.8
	· 연립주택	74	3.3	64	2.0	-10	-1.3
	· 다세대주택	44	2.0	169	5.3	125	3.3
	· 비거주용건물내주택	103	4.6	75	2.4	-28	-2.3
	주택이외거처	33	1.5	139	4.4	105	2.9
	· 오피스텔	10	0.5	110	3.5	100	3.0
· 기타	23	1.0	28	0.9	5	-0.1	
점유 형태	자기집	726	32.6	986	31.1	260	-1.5
	전세	645	29.0	762	24.0	117	-4.9
	월세	608	27.3	1,129	35.6	521	8.3
	사글세	116	5.2	141	4.4	25	-0.8
	무상	129	5.8	153	4.8	24	-1.0

2005년 인구총조사에 반영된 출산의 현황과 전망

권태환 (서울대, 명예교수)

제 1 장 머리말

1960년 이후 한국 출산력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전쟁으로 피폐된 상태에서 매우 높은 통제되지 못한 출산력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1962년 정부는 적극적인 출산억제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합계출산율은 6을 넘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여, 20여 년 후인 1980년대 중반에는 인구재생산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인구급증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의 숨을 내뿜기 무섭게, 이제는 새로운 공포, 인구의 빠른 감소와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¹⁾ 출산력은 제1차 변천에 이어 휴식도 없이 바로 20세기 후반부터 서구사회가 겪기 시작한 제2차 변천으로 돌진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후인 1995년에는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수준인 1.65를 기록하였고, 감소는 계속하여 2005년에는 가정적인 상태에서 한 세대에 인구가 반감하게 되는 상태인 합계출산율 1.08에 이르렀다.

<표 1>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1995-2006

(단위: %)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FR	1.65	1.47	1.3	1.17	1.19	1.16	1.08	1.13
15-19	3.6	2.5	2.2	2.6	2.5	2.3	2.1	2.2
20-24	62.9	39	31.6	26.6	23.7	20.4	17.9	17.7
25-29	177.1	150.6	130.1	111.3	112.3	104.6	92.3	89.9
30-34	69.6	84.2	78.3	75	79.9	84.2	82.4	90.2
35-39	15.2	17.4	17.2	16.7	17.3	18.6	19	21.5
40-44	2.3	2.6	2.5	2.4	2.5	2.5	2.5	2.6
45-49	0.2	0.2	0.2	0.2	0.2	0.2	0.2	0.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연보 (출생 및 사망), 각 연도.

1)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두섭, 2005 참조할 것.

여기서 당연히 몇 가지 인구학적 질문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근본적인 것은 “제2차 출산력변천의 성격은 무엇이며, 과연 인구는 언제 다시 안정 성장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인류의 인구역사상 제2차 출산력변천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며, 인류 문명에 대한 그 영향력은 가히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출산연구의 초점은 제2차 출산력변천의 성격규명과 인구의 재안정 상태로의 전이에 놓여 있다. 이미 제2차 변천에 깊숙이 진입한 사회에서는 광범하게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선진국의 경험을 기초로 서둘러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인구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게 사회의 모든 영역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개인의 출산행위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과거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소가족 메시지는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앞으로 날아오고 있다. 이제는 전통적 가족이 저출산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저출산이 전통적 가족의 안정성에 장애 요인임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극도의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족형성의 기초인 보편혼의 개념이 사라져 가고 있다. 만혼과 함께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현상도 널리 나타나고 있다. 아직 무자녀 가족의 이념이 지배적은 아니지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부각되는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복지의 확충은 그 자체로는 매우 중요한 바람직한 국가 정책임에는 틀림 없지만, 엄격하게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 대부분이 이미 반대의 맥락에서, 즉 저출산 정책으로 주장되고 실시되어 오던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력 연구는 매력을 갖기가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출산력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활성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거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와 일부 이와 연관된 다양한 자료의 생산, 그리고 출산에 대한 관심의 다각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혼인의 연구와 정책에서 자녀의 재생산은 이미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와 자녀양육의 조화로운 병행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저출산은 청소년, 학교교육, 성평등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관념적, 제도적 변화를 추동하고 방향 짓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긴박성에 대한 인식은 이제는 모두가 공유하는 바가 되었고, 따라서 각종 출산과 관련된 조사 자료들이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책적 목적에서 수행된 이들 조사 자료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가령, 통합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단편적이며 과제 지향적인 특징을 갖기 쉽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만, 정책적 연구는 아직도 전체 틀을 바꾸는 창조적인 내용보다는 주어진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정적인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슷한 조사의 남발과 자료의 생산, 다른 조사 자료와의 통합적 분석의 결여, 조사의 지속성 결여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통계청의 2005년 센서스 결과분석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 연구의 관심이나 틀에서 떠나,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 반영된 출산현상을 살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보다는 센서스 자료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읽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른 말로, 체계성과 집중성을 강조하는 연구라기보다는 탐색적이고 시사적인 성격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탐색적인 성격의 연구는 흔히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연구에서 간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주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공헌을 하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센서스에서 제공해온 출산관련 항목인 총출산아수의 추세, 총출산아수와 더불어 최근에 수집되기 시작한 추가계획자녀수를 통한 생애 기대가족규모의 개관, 그리고 어머니와 동거하는 0-4세 인구를 통한 출산의 양상과 여성의 가족 생애주기에 관한 단편적인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제 2 장 자료의 종류와 구성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동태통계는 보고의 완전성이 매우 낮아 인구학적 지표작성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²⁾ 반면 센서스 자료는 매우 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인구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각종 출산관련조사가 실시되어 새로운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대부분이 가족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출산력과 출산행위 분석에는 부적합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가 세계출산력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각종 분석이 활성화되면서 조사 자료를 이용한 출산력 연구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중반에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동태통계의 개선이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이것이 출산력 분석의 기초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센서스를 이용한 출산력과 출산행위의 분석은 매우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센서스에 기초한 출산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 밖에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서스는 인구연구에 있어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센서스의 역사와 명성, 그리고 센서스가 제공하는 자료의 포괄성과 질에 근거한다. 특히 많은 사례의 관찰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인구학적 행위에 대한 분석에서는 인구센서스만큼 큰 장점을 갖는 자료도 드물다.³⁾

이미 동태통계를 이용한 출산력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 특히 최근의 업적으로는 전광희(2006)의 연구를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그는 연령별 출산수준의 특징과 합계출산율의 변동 구성요인을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최근 센서스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출산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하나는 기혼여성의 출산관련 현황으로 여기에는 성별 총 출생자녀 수와 사망아수, 동거 및 별거자녀수, 그리고 추가 출생계획자녀수가 포함된다. 그러나 개별 출산에 대한 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것은 0-4세 인구자료이다. 이것은 엄격하게는 출산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이들 자료를 이용한 성공적인 출산력 측정의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가령,

2) 통계청의 평가에 따르면 1975년 56.2%였던 출생신고의 완전성은 1990년에는 95.2%로 올라가고 있다 (Kim M-K, 2004: 57).

3) 한국 인구센서스에 관해서는 김민경(2000)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Cho L-J, 1973; Kwon T-H, 1977: Ch. VI), 그리고 2005년 센서스에서는 자녀들에 대해 “모와의 동거 여부를 묻고 있어”, 이 자료를 모와 연결시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0-4세 인구는 유용성이 큰 출산관련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0-4세 자료는 특히 최근 5년 사이의 출산력과 출산행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센서스 분석연구라는 취지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이 연구는 기혼 여성의 출생자녀수와 기대자녀수를 이용한 총체적 출산상황의 이해와 0-4세 자녀의 재구성자료를 사용한 2001-2005년의 출산상황의 파악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둘은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갖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서 직접적인 출생관련 문항이 등장한 것은 1960년이었다. 여기에는 기혼여성에게 “총출생아수”를 묻는 항목이 나타나고, 그 결과도 상세히 제표 되었다.⁴⁾ 그 이후, 1995년을 제외하고는, 2005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센서스에 이 항목과 그 때 그 때 생존자녀수나 동거자녀수 등의 항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김민경, 2000: 제4장; 권태환·김두섭, 2002: 244 참조). 그리고 이들 자료는, 10-20% 표본자료에 입각해,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출산력”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과 2005년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제목의 센서스 보고서로서 출간되었다. 그러나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집된 이들 자료는 우리나라 출산력의 분석에는 별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센서스 보고서의 출간이 늦어 자료의 시의성이 약하였다는 점, 총출생아수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출산력 분석기법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 1960년대 중반부터 가족계획 및 출산력 조사가 활성화되었다는 점, 1980년 이후 동태통계의 질이 출산력 분석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은 아직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이것이야 말로 40년 이상에 걸친 우리나라 출산력 변천의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통합성을 지닌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2005년 센서스에 반영된 출산현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통합적인 시계열 분석까지는 행하지 못하고 있다.

4) 13세에서 49세까지는 매우 간격, 그 이후는 5세 간격으로 제표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용한 연령은 다른 센서스 보고서의 “만 나이”와는 다른 소위 “세는 나이”이며, 이 연구에서는 1960년도의 추세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표3>에도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출산억제가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기 이전이었고, 당시 장면정권이나 이전의 이승만정권도 가족계획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당시 센서스를 도왔던 UN 자문단의 권고가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2005년 센서스 자료는 10% 표본조사를 기초로 만든 2% 원자료 표본이다. 2005년 센서스에서는 모든 기혼여성에게 자녀출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아 출생아수와 여아 출생아수, 그리고, 센서스에서는 처음으로, 추가계획자녀수를 묻고 있다. 남녀별로 생존 및 사망 자녀수, 동거 및 별거 자녀수를 묻고 있다. 이를 통해 집계된 총출생아수와 추가계획 자녀수에 관한 제표는 센서스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2%표본자료와의 연결 분석하기가 어려워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였다. 또한 센서스의 개인 정보는 본인에 관한 정보만을 기록하고 있다. 가령 3세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정보는 이 아이의 정보란에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모나 주 양육자의 정보를 포함한 0-4세 자녀의 표본 파일은 자녀의 모 동거여부에 관한 항목과 가구 파일을 이용해 별도로 구성하였다. 모와 동거하는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여성들 가운데서 제시된 조건에 맞는 여성을 어머니로 선택하여 그 여성의 정보를 해당 자녀의 정보와 결합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정보는 가구구성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 및 자녀의 성 및 기혼여성의 출생 남아 수 및 여아 수, 동거 자녀 수였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일치하지 않아 동거 어머니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자료 오류로 판단해 별도로 뽑아 직접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총 43,744개의 관찰 사례 가운데, 이렇게 수정된 경우는 360개에 달했다. 한편 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통해 주 양육자를 확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한 출산율의 측정이나 추세에 있지 않다. 대신 센서스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출산현상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센서스 자료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2% 표본에서의 결과가 동태통계의 출생신고 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 중심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센서스 0-4세 인구와 대체로 이들이 출생한 연도와 일치하는 2001-2005년의 출생신고 통계를 비교 제시하였다. 이 표에 따르면, 만약 동태통계 자료가 100% 완전성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센서스의 0-4세 인구 집계의 완전성은 연령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센서스의 4세 인구는 출생 시부터의 사망확률을 고려하면 거의 완전한 집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완전성은 나이가 적을수록 떨어져 0세에 이르면 95%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 2% 표본 집계는 센서스에 비해 93.3%에서 96.7% 정도의 완전성을 보일 따름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도 표본이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데서 주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표본과 동태자료와의 차이는 더 커, 0세 표본인구는 2005년 출생의 90%에도 달하지 못한다. 이점은 2% 표본 집계결과에 입각한 분석결과의 평가와 이해를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동태통계 결과와의 비교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2001-2005년의 동태통계 출산아 수와, 센서스 및 2% 센서스 표본의 0-4세 인구비교
(단위: %)

동태통계 출생연도 / 센서스 연령	자료간 비교			2000센서스 연령 / 2005 센서스 연령	%
	센서스 / 동태통계	2%표본/ 동태통계	2%표본/ 센서스		
2005 / 0세	94.46	88.14	93.30	0세 / 5세	97.08
2004 / 1세	95.64	90.58	94.71	1세 / 6세	98.85
2003 / 2세	95.74	91.37	95.44	2세 / 7세	99.52
2002 / 3세	98.14	94.89	96.68	3세 / 8세	99.38
2001 / 4세	99.67	93.56	93.88	4세 / 9세	99.01
합계	96.87	91.85	94.82	0-4/5-9세	98.7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연보 (출생 및 사망), 각 해당 연도; 2000년 및 2005년 인구총조사 보고서; 2005년 인구총조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제 3장 기혼 여성의 출산추이

과거 대부분의 사회에서 출산은 혼인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에서 총체적인 출산력의 변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주로 유배우자의 비율과 유배우자의 출산수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출산력변천은 주로 유배우 출산수준의 감소에 의해 설명이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제2차 출산력변천에는 유배우 출산수준보다는 유배우 여성 비율의 급격한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전광희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변화의 요인으로서 유배우율의 변화는 1970-85년 사이 20% 정도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그 영향의 정도가 급증하고 있다(전광희, 1997: 62-65; 2006: 83). 이는 물론 1985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 자체의 변화의 폭이 급격히 줄어든 데 기인한다. 전광희에 기초해 유배우율의 변화가 직접 합계출산율에 미친 절대값을 계산해 보면, 유배우율 변화의 영향의 절대 값은 1970년대에 0.13-0.14 포인트에서 그 이후에는 0.2 포인트 수준으로 올라가다, 1995-20년에는 0.14 수준으로 떨어지고 2000-2005년에는 다시 0.34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유배우 출산율은 장기적으로는 저하의 추세를 나타내지만, 부분적으로는 상승과 저하를 반복하고, 전반적으로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합계출산율 또는 출산수준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력의 영향은 낮은 연관성을 보이고, 이러한 형상은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배우율만을 대상으로 하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2020년까지는 계속 합계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유배우자의 출산력의 저하 없이도 현재의 출산 규범과 실행이 지속된다면 출산 수준의 지속적인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2005년 연령별 출산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혼인상태 분포변화에 의한 합계출산율 감소 추계분 (절대값)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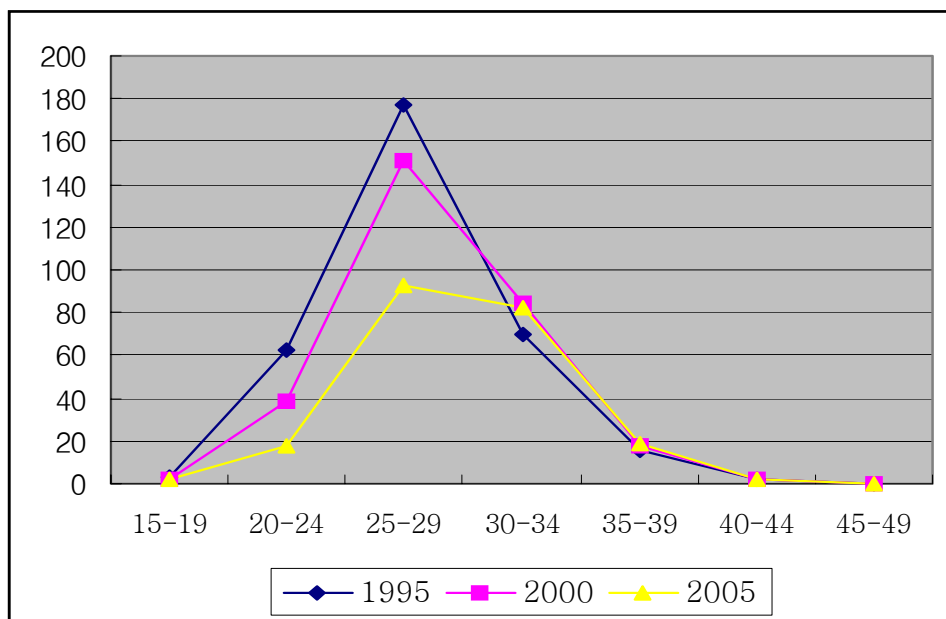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
2000-05	0.141	0.140	-0.002	0.001
2010-20	0.164	0.164	-0.001	0.001
2020-30	-0.012	-0.014	0.000	-0.002

주) 계산방법은 전광희, 2006: 81-83 참조.

자료: 2005-2030년의 혼인분포 추계는 통계청(2007), 장래가구추계결과 65-70에 수록된 것을 사용함. (미간행)

한편 유배우율은 미혼, 사별 및 이혼의 추세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최근 이들 세 혼인의 구성요소는 모두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미혼과 이혼의 추세는 출산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사별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혼비율의 증가는 1920년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그 직접적인 결과는 여성의 초혼 연령의 변화로 파악된다. 센서스를 이용해 연령별 미혼자 비율로부터 계산한 평균 초혼 연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은 1925년 15.9세에서 80년 후인 2005년에는 28.8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Kwon T-H, 2007).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는 가장 중요한 출산력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생애 미혼자 비율은 강력한 보편혼 규범의 작용으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고, 이는 출산력의 저하를 어느 선에서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버팀목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생애 출산수준의 지표로 간주되는 평균 가족규모나 이상적인 또는 원하는 자녀수가, 재생산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출산수준에서도, 2명 정도로 별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1) 연령별 출산율의 추세, 1995, 2000 및 2005년



그러나 최근의 여러 조사 자료는 보편혼의 규범이 급속히 약화되고, 만혼의 경향과 함께, 평생 비혼 상태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김승권, 2003: 12-14; 김태현, 2005: 17-18; 은기수, 2003: 102-107). 또한 평생 비혼의 정도나 생애 출산수준에 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만혼의 추세는, 연령별 출산수준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유형을 나타내는 모

형은 연령만 옮겨지지 비슷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전광희, 2006: 85). 그러나 한국에서는 1995년 이후의 추세를 보면, <그림 1>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전혀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다른 말로, 만혼이 30세 이전의 출산력을 크게 낮추나 그것이 30세 이후의 출산력을 높이는 데로는 연결되고 있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짙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제까지와는 달리 유배우자가 이상 자녀수에 따라 출산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이상 자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크며, 이러한 상태에서 재생산 수준으로의 출생수준의 상승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혼은 1990년에 들어오면서 급증하고 있다(통계청, 2006: 141-143 참조). 그러나 이혼의 출산력에 대한 부적 영향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이혼의 절대적인 다수가 높은 재생산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낮은 연령층에서는 이혼 여성의 재혼률이 상당히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사별자의 비율 감소는 출산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이혼을 증가의 효과를 상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한국의 유배우율에 영향을 미쳐온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만혼의 추세와 최근에 대두된 비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최근의 출산력 추세와 변화, 양상을 염두에 두고 2005년 센서스에 반영된 기혼 여성의 출산 행위와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기혼여성의 비율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출산력변천이 시작된 1966년부터 최저 출산력 수준을 보인 2005년의 약 40년 사이에, 기혼자 집단의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를 보인다. 가장 괄목할만한 기혼 비율의 저하를 보인 것은 20-24세와 25-29세 집단이다. 이들 연령집단에서 기혼자의 비율은 48.3%에서 6.3%, 92.3%에서 41.4%로 줄어들어, 각각 42% 포인트와 51% 포인트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경우, 기혼자 비율은 약 40년 사이에 77.0%에서 74.7%로, 2.3% 포인트의 감소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재생산 연령층에 속하는 15-49세 집단에서는 기혼자 비율이 70.8%에서 63.2%로 총 7.2% 포인트의 감소를 나타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보편혼의 전통과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의 대부분이 20-29세 연령에서의 미혼자 비율의 증가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만혼의 추세와는 달리, 비혼은 이제까지는 출산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출산력의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임

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만혼은 불가피하게 선호 및 기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최저출산이 될 것이다. 30세 이후의 결혼 여성은 대부분 경제활동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경력의 단절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연주, 2003). 따라서 이들 가운데는 1자녀 또는 무자녀 가족을 선택 하는 경향이 쉽게 퍼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표 4> 센서스에서 조사된 기혼 여성 비율, 1966-2005

(단위: %)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합계	76.96	75.20	71.49	71.41	71.89	72.30	74.95	74.66
15-19세	3.88	2.79	2.30	1.79	0.85	0.52	0.67	0.30
20-24세	48.37	42.89	36.92	34.36	27.91	19.95	11.21	6.34
25-29세	92.27	90.56	88.66	86.33	81.63	78.31	60.29	41.26
30-34세	99.00	98.66	98.07	97.33	95.74	94.71	89.44	81.42
35-39세	99.69	99.59	99.38	98.98	98.39	97.47	95.79	92.59
40-44세	99.88	99.84	99.69	99.54	99.28	98.87	97.46	96.41
45-49세	99.90	99.91	99.73	99.71	99.57	99.30	98.22	97.49
50-54세	99.92	99.93	99.81	99.80	99.74	99.55	98.94	98.13
55-59세	99.93	99.94	99.76	99.83	99.81	99.64	99.25	98.73
60-64세	99.93	99.96	99.74	99.86	99.84	99.73	99.44	99.08
65-69세	99.93	99.92	99.64	99.89	99.87	99.76	99.59	99.30
70-74세	99.92	99.94	99.61	99.88	99.87	99.78	99.62	99.41
75 이상	99.93	99.96	99.74	99.90	99.66	99.80	99.68	99.35
15-49세	70.75	68.53	63.99	63.70	63.71	63.68	65.28	63.18

자료: 각 해당연도 센서스 보고서.

<표 5>에는 1966년에서 2005년에 걸쳐 센서스를 통해 수집된 기혼 여성의 출산력 추세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모든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66년의 4.16명에서 2005년에는 2.3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인구재생산 연령인 15-49세의 경우, 같은 40년 동안 평균 총출생아수는 4.16명에서 1.74명으로 약 60% 가까운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기혼자의 출산수준은 기혼자가 현재 유배우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 5> 센서스에서 조사된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1966-2005

(단위: %)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합계	4.16	4.15	3.95	3.59	3.26	2.97	2.54	2.43
15-19세	0.50	0.50	0.48	0.45	0.44	0.32	0.51	0.36
20-24세	1.10	1.03	1.00	0.92	0.86	0.70	0.70	0.65
25-29세	2.31	2.15	1.97	1.75	1.54	1.28	1.11	0.91
30-34세	3.78	3.53	3.18	2.67	2.29	1.89	1.71	1.52
35-39세	4.85	4.55	4.11	3.43	2.80	2.35	1.92	1.87
40-44세	5.53	5.28	4.79	4.16	3.44	2.83	2.01	1.94
45-49세	5.66	5.62	5.23	4.69	4.07	3.43	2.31	2.00
50-54세	5.49	5.65	5.47	5.09	4.58	4.07	2.72	2.30
55-59세	5.26	5.42	5.44	5.30	4.91	4.56	3.27	2.72
60-64세	5.08	5.22	5.19	5.30	5.13	4.90	3.89	3.30
65-69세	4.96	5.05	5.00	5.10	5.13	5.10	4.29	3.88
70-74세	4.85	4.91	4.86	4.93	4.97	5.11	4.52	4.27
75 이상	4.80	4.75	4.71	4.73	4.79	4.94	4.61	4.50
15-49세	4.16	3.70	3.43	2.94	2.52	2.13	1.81	1.74

자료: 각 해당연도 센서스 보고서.

<표 6>의 2005년 센서스 2% 표본 결과에 의하면 29세 이하에서는 무배우 기혼자가 유배우자보다 평균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출생하고 있다. 이는 이들 초기 혼인연령에서는 자녀출생으로 인한 이혼이 최근에 상당히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5-49세의 재생산 연령층을 총괄하면 이혼, 사별 여성의 출생 자녀수는 유배우자의 출생 자녀수의 95% 수준에 이른다. 이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30세 이상에서 급속히 벌어져, 30-35세에서는 전자가 후자의 85.4%, 35-39세에서는 81.5%, 40-44세에서는 78.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계획 자녀수의 차이는 훨씬 더 커, 이혼 및 사별자의 경우 유배우자의 계획자녀수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20-24세의 이혼 및 사별 여성들의 경우도 추가 계획 자녀수가 유배우자의 10%선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05년 센서스에서 총출생아수와 추가계획자녀수에 대한 응답자의 수가 이혼 및 사별자의 경우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더 나아가 현재 혼인생활 중이 아닌 이들의 응답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관련해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가계획자녀수와 이를 총출생자녀수와 합해 나오는 총기대자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한 기대

출산력에 대한 논의는 유배우자에 한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출산관련 항목 응답에 미혼여성은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는 2005년 센서스 결과를 중심으로 한 출산관련 논의는 유배우자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 6>유배우부인과 비유배우 기혼부인의 출생아수 및 추가계획 자녀수 (단위: %)

혼인상태	연령집단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유배우	20-24	0.65	1.04
	29-29	0.92	0.84
	30-34	1.54	0.33
	35-39	1.91	0.07
	40-44	1.98	0.01
	15-49	1.77	0.18
이혼+사별	20-24	0.97	0.11
	29-29	1.10	0.06
	30-34	1.29	0.01
	35-39	1.55	0.01
	40-44	1.67	0.00
	15-49	1.68	0.01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제 4 장 유배우 여성의 출산 행위와 유형

<표 7>에는 2005년 센서스(표본조사)의 2% 표본을 통해 나타난 재생산 연령층 여성들의 출산관련 지표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현재의 혼인연령과 현재 유배우자의 혼인연령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4%가 이미 혼인한, 최고의 혼인연령을 기록하고 있는, 30-34세 여성의 경우도 2005년 현재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여성들의 혼인연령 27.7세에 비해 2.4세 정도, 그리고 2005년 센서스의 미혼자 비율에서 계산한 것보다는 3.5년 정도 낮다(통계청, 2006: 136; Kwon T-H, 2007: T2). 한편 총출생자녀수는 대부분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것으로 판단되는⁵⁾ 이 연령층의 평균 출생자녀수는 1.54명이고 추가계획 자녀수는 0.33명을 기록해, 현재 혼인생활 중인 30-34 여성들의 평균 생애 기대출생자녀수는 1.87이 된다. 한편 25-25세와 20-24세의 경우에도 총기대자녀수가 1.76명과 1.69명에 달해, 전반적으로 현재 유배우 집단의 기대 출산수준은 2005년 현재의 기간 합계출산율 1.0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그리고 <표 1>의 2001-2005년 출산수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먼저 <표 7>에 제시된 평균 생애 기대자녀수는, 뒤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낮은 혼인연령 집단에서 높은 경향이 보인다는 점, 다음으로 여기에는 비혼여성과 무배우 기혼여성이 배제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이는 다른 말로, 혼인연령 및 비혼의 경향과 관련된 연령별 유배우자의 비율이 실제 기대출산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다른 한편, 현재 낮은 연령층에서 앞으로 유배우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1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모든 재생산 연령층에서 연령이 낮아지면 생애 기대자녀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추세를 조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2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유배우 여성의 경우에도 실제 출생자녀수가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자녀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코호트 별로 분석할 때, 이상적 자녀수와 생애 출생수의 괴리가 매우 작았고, 그것도 이상적 자녀수보다 출생아수가 약간 컸다(권태환, 1997: 34-36). 이러한 점은 단적으로 현재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관련 조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30세의 경우 평균 혼인연령은 25.11세이며, 34세의 경우 25.33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7>유배우자의 연령집단별 평균 혼인연령, 출생아수 및 계획 자녀수 (단위: %)

혼인상태	연령집단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총기대자녀수
15-19	17.81	0.35	1.22	1.57
20-24	21.06	0.65	1.04	1.69
25-29	24.31	0.92	0.84	1.76
30-34	25.35	1.54	0.33	1.87
35-39	25.11	1.91	0.07	1.97
40-44	24.49	1.98	0.01	1.99
45-49	23.74	2.05	0.00	2.05
15-49	24.57	1.77	0.18	1.95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그러면 유배우 여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총출생아수 및 생애 기대자녀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표 8>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자신의 현재 거주지 배경, 교육수준, 종교를 택하여 이들 각각에 따른 총출생아수 및 생애 기대자녀수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⁶⁾

현 거주지에 따라서는 총출생아수와 생애 기대자녀수, 그리고 추가계획자녀수, 모두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총출생아수와 생애 기대자녀수는 모든 연령층에서 다 같이 농촌에서 보다 큰 수치를 보인다. 반면 추가 계획자녀수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 3가지 지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현재의 총출생아수로 다른 2개는 이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계획자녀수는 총출생아수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생애 기대자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 차이의 폭은 감소한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30-34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교육수준과 총출생아수 및 생애 기대자녀수는 역상관성을 보인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 및 기대자녀수는 적어진다. 그러나 25-29세 집단에서는 중고등학교 출신 여성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보다 현재 더 많은 출생아수를 가지고 있고, 또 더 큰 미래 가족규모를 가질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의미 있는 것인지, 즉 새로운 출산력 차별행위의 등장인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종교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징적으로 종교가 없는 여성들에게서 가장 낮은 현재 및 생애 기대 출산수준이 관찰된다. 다음, 일상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천주교 여성들이 이에 버금가는 저출산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 불교, 기타로 구성되는 나머지 종교집단에 속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재 및 미래 출산력 집단을 형성한다.

6) 자료의 구조상 직업이나 중사상의 지위와 같은 중요한 남편과 연관된 배경변수는 고려할 수 없었음. 한편 각종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인 차별출산력의 분석은 김두섭, 2007: 제6장에 제시되어 있다.

현재 및 생애 기대 출산수준의 차별 유형은, 그 관찰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3가지에 국한되어 있지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 배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유형이 연령집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종교에 따른 차이가 비종교 집단과 종교를 가진 여성들 사이에 뚜렷하며,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의 교리와는 달리 매우 낮은 출산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배경적 요인에 따른 차이의 양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8> 사회경제적 배경별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및 총기대자녀수
(단위: %)

연령집단	사회경제적배경		총출생아	추가계획자녀	총기대자녀
25-29	합계		0.92	0.84	1.76
	거주지 배경	도시	0.86	0.86	1.72
		농촌	1.18	0.73	1.91
	교육수준	초등 이하	1.10	0.55	1.66
		중 고등	1.16	0.66	1.82
		대학 이상	0.72	0.99	1.71
	종교	없음	0.92	0.81	1.73
		불교	0.95	0.84	1.79
		개신교	0.91	0.90	1.81
		천주교	0.83	0.90	1.73
		기타	0.91	0.87	1.78
30-34	합계		1.54	0.33	1.87
	거주지 배경	도시	1.50	0.33	1.83
		농촌	1.74	0.29	2.03
	교육수준	초등 이하	1.75	0.19	1.94
		중 고등	1.70	0.24	1.94
		대학 이상	1.38	0.41	1.79
	종교	없음	1.53	0.31	1.84
		불교	1.60	0.32	1.91
		개신교	1.53	0.36	1.89
		천주교	1.51	0.35	1.86
		기타	1.62	0.34	1.96
35-39	합계		1.91	0.07	1.97
	거주지 배경	도시	1.88	0.07	1.95
		농촌	2.03	0.07	2.10
	교육수준	초등 이하	2.03	0.08	2.11
		중 고등	1.95	0.06	2.01
		대학 이상	1.83	0.09	1.91
	종교	없음	1.88	0.06	1.94
		불교	1.94	0.07	2.01
		개신교	1.93	0.08	2.01
		천주교	1.19	0.07	1.98
		기타	1.95	0.08	2.03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9> 총자녀수 및 성 구성에 따른 평균 추가계획자녀수

(단위: %)

연령집단	총자녀수	성구성					
		합계	남0+여1	남1+여0	남0+여2	남1+여1	남2+여0
20-24	0	1.46					
	1	0.79	0.80	0.77			
	2	0.25			0.42	0.10	0.37
25-29	0	1.48					
	1	0.71	0.74	0.68			
	2	0.14			0.24	0.11	0.12
30-34	0	1.25					
	1	0.49	0.54	0.45			
	2	0.06			0.12	0.04	0.05
35-39	0	0.68					
	1	0.18	0.21	0.15			
	2	0.02			0.04	0.01	0.01
15-49	0	1.14					
	1	0.34	0.40	0.29			
	2	0.02			0.05	0.01	0.02

주) 유배우 여성에 한함.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급격한 출산력 저하와 함께 관찰된 한국 출산력의 독특한 대표적인 양상의 하나로 남녀 출생성비의 급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출산순위에서 더욱 뚜렷하였으며, 이는 다른 말로, 남자 아이가 없을 때, 다음 자녀 출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녀의 성구성에 따른 다음 출산수준의 차이는 2005년 센서스에서는 매우 미미할 정도로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출생자녀수가 1인 경우, 그 자녀가 남아인 경우와 여아인 경우에, 모든 연령집단에서, 추가 자녀출생을 계획하는 경향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연령이 낮아질수록 현재의 자녀가 여아인 경우와 남아인 경우에 추가로 자녀를 원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일 때, 다음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는 20-29세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집단에서 3번째 출생을 계획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자 아이만 둘이거나 여자 아이만 둘일 때에, 아들과 딸 각각 1명인 경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녀선호에 있어, 남아선호가 약화되고 대신 남녀 균형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젊은 연령층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동태통계와 2005센서스 2% 표본자료의 비교: 첫출산 비율과 다태아 비율
(단위: %)

출생연도	동태통계			연령	2005 센서스 표본	
	총출생아	첫출산 %	다태아%		첫출산 %	다태아%
1995	716,993	48.32	0.97			
2000	636,780	47.19	1.63			
2001	557,228	47.65	1.74	4세	45.3	2.0
2002	494,625	48.75	1.91	3세	46.6	2.3
2003	493,471	49.55	1.89	2세	47.8	2.1
2004	476,052	51.09	2.01	1세	48.1	2.2
2005	438,062	51.75	2.15	0세	49.7	2.0
2006	451,514	52.04	2.14			

주1) 센서스 표본의 경우는 모가 동거중인 자녀에 한함.

2) 2% 센서스 표본의 경우, 다태아인 경우 각각의 출생에 다른 순위를 부여하였음.

3) 2% 센서스 표본의 경우, “첫출산”은 총출산이 1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연보, 각 해당연도; 2005년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제 5 장 0-4세 인구의 출생상황과 양육환경

센서스의 0-4세 인구자료를 이용해 출산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령에 상응하는 동태통계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표 10>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쉽게 비교가 가능한 0-4세 인구 중 첫 출산의 비율과 다태아의 비율을⁷⁾ 선택하여 이들을 동태통계 자료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표 11>에서는 출생자들의 평균 출생순위를 비교 제시하고 있다. 2005년 센서스에서 0-4세 인구는 2000년 11월 1일에서 2005년 10월 30일 사이의 출생자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에 관한 출생관련 정보를 동태통계 자료와 비교할 때는 2001-2005년 출생자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첫 출산자의 비율은 동태통계가 센서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표본을 일반가구에 한정시킨 2005년 센서스 2% 표본자료의 성격과 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를 분석에서 제외시킨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첫 출산 자녀의 비율의 변화는, 그 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자료 모두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는 현상을, 그리고 평균 출산 순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다태아 비율의 경우 센서스 0-4세 인구의 경우 나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2.3%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태통계에서는 다태아 비율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폭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2004-2006년의 수치는 센서스의 추정 값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센서스 자료가 동태통계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동태통계보다 더 안정된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는 센서스의 0-4세 인구를 통한 출산현상의 논의가 충분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 다태아는 동일 가구 내에 동일 연도 출생 자녀 수가 둘 이상이며 이들이 동일 모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가리킨다.

<표 11> 어머니와 동거하는 0-4세 자녀의 출산순위 분포와 평균 출산순위
(단위: %, 순위)

출산순위	센서스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1	49.7	48.1	47.8	46.6	45.3	47.4
2	40.6	40.8	42.1	43.3	44.4	42.4
3+	9.7	11.1	10.1	10.1	10.3	10.2
평균순위	1.61	1.65	1.64	1.65	1.66	1.64
동태통계 자료 비교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평균순위	1.59	1.60	1.61	1.62	1.64	1.65

자료: <표 10> 참조

<표 10>과 <표 11>을 통해 명백한 것은 적어도 2001년 이후 최근에 올수록 출산 자녀 가운데 첫 출산의 비율이 계속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50%선에 도달하였고, 그 결과 최근 출생자들의 평균 출산순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미루어진 혼인의 급증으로 인한 것인지, 혼인연령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둘째 아이 기피 또는 한 아이 선호의 확산 때문인지는 별도의 분석을 요한다. 그 주요 요인이 무엇이든, 이 현상은 일단 현재 최저 출산수준의 상황에서도 한국 출산력은 저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즉 이미 급격히 다가온 인구위기가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산 자녀들의 양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누구와 동거하느냐 일 것이다. 특히 핵심 출산연령에서 이혼이 급증하고,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상황의 파악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자녀양육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모의 역할이며, 그 대체 변수는 아마도 자녀와 모의 동거 여부일 것이다. 2005년 센서스에서는 개별 자녀에 대해 모의 동거여부를 묻고 있고, 앞의 “자료의 구성”에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자녀의 주 동거 양육자에 관한 제표가 아래에 제시된 <표 12>다.

<표 12> 0-4세 자녀의 연령별 주 동거양육자 상황

(단위: %)

동거상황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모동거	98.1	97.0	97.2	96.1	96.1	96.8
부동거	0.5	0.8	1.0	1.9	1.9	1.3
기타	1.4	2.2	1.8	2.0	2.0	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이 표에 따르면, 2005년 센서스 당시 0-4세 자녀 가운데 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96.8%에 이르고, 부모 모두와 별거하고 있는 자녀가 1.9%를 보인다. 그러나 기타의 경우는 대부분 자녀의 “조모”로 되어 있어 이들 자녀는 3대 가족에서 생활하는 셈이 된다. 모와의 동거자는 나이가 많아지면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모동거” 자녀는 0세에서 98.1%이던 것이 3-4세에 이르면 96.1%로 감소한다. 모 동거자의 감소는 주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13>에는 자녀와 동거하는 모의 혼인상태가, <표 14>에는 모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 양육자로 판단되는 부의 혼인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모동거”의 경우, 모는 0세 자녀의 99.7%, 4세 자녀의 98.2%, 0-4세 자녀의 98.8%에 이르는 거의 대부분이 남편과 동거하는 유배우 상태에 있다. <표 12>와 <표 13>을 결합하여보면, 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자녀는 0세 자녀에서 97.8%, 4세 자녀에서 94.4%, 0-4세 자녀의 경우 95.6%로 나타난다. 한편 <표 14>를 보면, “부동거”의 경우, 0-4세에서 유배우자는 35.1%에 불과하며, 60.4%가 이혼자임을 알 수 있다. 0세와 4세를 비교하면, 부동거의 상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0세 자녀의 부의 유배우 비율은 72.2%에 달하나, 4세 자녀에 이르면 그 비율이 22.8%로 준다. 0세 자녀의 부 유배우도, 부인과 비동거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그 대부분이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나 소위 여자가 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 동거의 대부분도 부모 별거나 이혼의 경우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이혼의 경우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0-4세 자녀는 1/3 정도만이 모와 동거하고 나머지는 부 또는 조모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0-4세 자녀와 동거하는 모의 혼인상태

(단위: %)

혼인상태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사례수	7577명	8364명	8766명	9018명	10019명	43744명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99.7	99.1	98.8	98.4	98.2	98.8
사별	0.1	0.2	0.2	0.2	0.3	0.2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4> 모 없이 0-4세 자녀와 동거하는 부의 혼인상태

(단위: %)

혼인상태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사례수	36명	70명	90명	183명	197명	576명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72.2	45.7	35.6	36.6	22.8	35.1
사별	0.0	8.6	3.3	4.4	4.6	4.5
이혼	27.8	45.7	61.1	59.0	72.6	60.4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그러면 2005년 센서스에서 0-4세 자녀를 출생한 여성은, 어떠한 생애 단계에 있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45% 정도가, 0세 자녀를 가진 자녀의 50% 정도가 처음 자녀를 출생하였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첫 자녀 출생 여성들의 자녀 출생시 연령은 전체적으로는 28.1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혼인연령은 26.4세로, 혼인에서 첫 출산으로의 이행이 1.7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첫 출생 당시의 출산여성의 연령, 첫 출생 여성의 혼인연령, 혼인에서 첫 출생으로의 이행 기간 모두 2005년 현재 4세 자녀집단에서 가장 적거나 짧고, 최근 출생 집단에 오면 올수록 연령은 올라가고, 간격은 넓어져, 0세 집단의 출생연령은 28.6세, 혼인연령은 26.7세, 그리고 그 차이는 2.1세에 이르게 된다. 이는 2001-2005년의 4년 사이에 가족의 형성과 가족형성에서 자녀 출생으로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모두 연기되어 왔음을 알려 준다. <표 15>에 비교자료로서 제시된 동태통계에서 계산된 모의 첫 자녀 평균 출생연령은 상응하는 연령 또는 출생연도에서 거의 같은 수치를 보인다. 동태통계에서 계산된 것이 일관되고 0.2-0.3세 정도 높게 나타난다. 한편 총출생의 경우, 그 차이는 0.1-0.2세로 더 줄어든다. 그것은 아마도 동태통계의 지연신고

또는 센서스 자료에서 모 비동거 자녀가 빠진 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하간 이는 센서스 자료의 정확성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둘째 이상의 출생으로 인한 가족규모의 확대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의 혼인연령은 첫 출생 여성에 비해 약 1.1-1.2세 정도 낮으며 출생연령은 2.3-2.6세 정도 높다. 그리고 0-4세 집단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변화 추세가 관찰된다. 최근에 올수록 혼인연령과 출생연령이 높아지고 둘 사이의 차이도 커진다. 이 둘의 차이 또는 이행기간의 차이는 1-3세에서 일부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나지만, <표 1>에 제시된 2001-2005년도의 합계출산력 추세를 고려하면, 이것도 오차라기보다는, 오히려 출산력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현재 0-4세가 된 둘째 자녀를 출생한 여성들이 비록 혼인연령은 다르지만 첫 자녀를 출생한 여성들과 같은 이행 기간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면 2001-2005년에 출생한 둘째 출생의 첫 출생으로부터의 이행기간은 0-4세 집단 전체로는 3.6년이 된다. 그리고 그 안의 자녀연령집단 별로는 3.4년에서 3.8년의 분포를 보인다.⁸⁾ 우연히도 이 첫째에서 둘째 출생으로의 이행기간은 0-4세의 모든 자녀의 모의 출생시 연령과 혼인연령의 차이와 일치한다. 이들 자녀의 개별 자녀 출생의 경우는, 대체로 최근에 가까울수록 혼인연령과 출생시 모의 연령의 차이가 늘기는 하지만, 3.5년에서 3.75년 사이에 머문다. 또한 현재 젊은 연령층의 유배우 여성의 생애 기대자녀수가 1.8명 정도이고 2005년의 0-4세 출생자의 평균 출생순위가 1.64명임을 고려할 때, 자녀의 출생은 혼인 후 평균 4년 정도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생애에서 혼인에서 자녀 출생으로 이어지는 가족형성과 확산의 기간은 이미 매우 짧아 졌고, 당분간 이 기간은 유지되거나 더 짧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8) 2001-2005년의 첫 출생자의 혼인에서 첫 출생으로의 이행은 물론 이들의 첫 자녀 출생으로의 이행보다 늦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따라서 첫 출생에서 둘째 출생으로의 이행은 더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표15>에서 “둘째+”는 셋째 또한 일부 포함하고 있고, 이는 이미 둘째 출생만을 포함시켰을 경우보다 이행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는 서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표15>에서 “둘째+”를 “둘째”로 간주해 계산한 첫째에서 둘째로의 이행기간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표 15> 어머니와 동거하는 2005년 센서스의 0-4세 자녀의 모의 평균 혼인연령과 자녀의 출생당시 모의 평균 출생연령과 동태통계 자료에서 계산된 2001-2005년 출생자 모의 출생시 연령

(단위: %)

자녀순위	모의 연령	센서스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총자녀	혼인	26.11	25.95	25.81	25.58	25.40	25.75
	출생	29.85	29.62	29.33	29.21	28.93	29.37
	차이	3.74	3.67	3.52	3.63	3.53	3.62
첫자녀	혼인	26.68	26.59	26.39	26.18	25.99	26.35
	출생	28.55	28.29	28.12	27.87	27.60	28.06
	차이	2.13	1.70	1.73	1.69	1.61	1.71
둘째+	혼인	25.55	25.36	25.28	25.06	24.91	25.21
	출생	31.13	30.85	30.44	30.38	30.03	30.55
	차이	5.59	5.50	5.16	5.32	5.12	5.34
동태통계 자료	출생순위	자녀출생연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합계	30.0	29.8	29.4	29.3	29.1	
	1	28.8	28.6	28.3	28.0	27.8	
	2	30.8	30.6	30.3	30.0	29.7	
	3+	33.2	33.0	32.8	32.7	32.4	

주) 센서스에서 “모의 자녀 출생연령”은 해당 자녀연령에 상응하는 모의 연령에서 0.5세를 뺀 수치임.

자료: 2005년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및 전광희, 2006: 87.

제 6 장 맺는 말

우리나라의 경우, 동태통계의 완전성이 낮았던 1980년 이전에는 출산력 연구가 인구센서스 자료와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동태통계의 질이 크게 개선되면서 출산력 지표의 작성과 추세 및 유형의 파악은 주로 동태신고 자료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1960년에 시작된 출산력 관련 문항은 200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센서스에 포함되었으며, 2005년에는 총출생아수 이외에 동태신고를 통해 수집할 수 없는 자료인 추가 자녀출산 계획, 생존-사망 자녀수, 동거-비동거 자녀수, 자녀들의 모와의 동거여부 등을 추가로 묻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그 목적이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된 기초 자료의 확보에 있지만, 출산력 연구의 폭과 전망을 넓히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들 자료의 유용성은 그 질 또는 완전성에 달려 있다. 아마도 센서스의 출산관련 자료들의 질과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출산력 관련 연구과제의 점검과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 그리고 그 결과의 다른 자료로부터 도출된 결과와의 비교일 것이다. 바로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의 체계성이나 정교함보다는, 센서스에 반영된 출산현상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고, 가능하면 그 결과를 동태통계의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과 한계를 살피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2005년 센서스 2% 표본 원자료가 기초 자료로 채택되었고, 고찰한 주요 내용은 총출산아수와 추가 자녀출산 계획, 이 둘을 합한 생애 기대자녀수, 기혼 여성의 초혼연령, 그리고 모와 동거하는 0-4세 자녀를 이용한 최근 출생의 출산 순위, 혼인-첫 출생-둘째 출생으로의 여성의 생애주기 이행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는 센서스를 통한 출산력 분석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첫 출생의 비율, 평균 출산 순위, 출생시 모의 연령 등과 같이 동태통계 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한 내용에서는 그 일치의 정도가 매우 높으며, 약간의 차이도 부분들 사이에 매우 일관성을 보이고, 자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바로 센서스 특히 2005년 센서스의 출산관련 주요 자료들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센서스 자료의 완전성이 동태통계와 비슷하다는 것은 출산력 분석에 있어

센서스가 동태동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태동계에서는 혼인 관련 사항은 혼인이나 이혼 신고를 통해 별도로 파악하고, 사별 현황의 파악은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혼인상태와 관련된 출산력 분석은 동태자료에서는 간단하지 않다. 혼인상태나 혼인연령이 출산력과 출산행위의 핵심적 배경요인이라면, 그리고 센서스의 출산관련 정보가 신뢰성이 매우 높다면, 이와 관련된 동태자료의 한계는 센서스를 통해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행위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이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해 출산을 이해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만들어 사용한 모의 정보와 결합된 0-4세 자녀의 파일은 여성의 생애주기 연구에 있어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0-4세 자녀 파일로는 개별 여성의 생산가족형성에서부터 최대 규모의 가족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파일을 0-9세로 확대하면 보다 충실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별거 자녀나 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 관한 분석은 부와 동거하는 자녀의 부의 혼인상태에 대한 간단한 고찰에 제한되어 있다. 모의 동거 여부와는 관계없이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도 부를 중심으로 한 출산의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한 가구에 아동 인구가 2명 이상일 경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는 물론 자녀들 사이에 출산서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이다. 소가족 가구나 핵가족 가구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확대가족이나 형제나 친척들이 동거하는 가족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가지고는 명확하게 성원들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 출산력과 출산행위 분석에서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의 지위를 가구주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현재의 가족을 핵 단위로 파악하는 “부부-자녀 관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미래 출산력 추세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출생아수와 생애 기대자녀수, 0-4세 자녀의 연령별 첫 출산과 혼인에서 출산으로의 이행 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출생률 반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의 경우 비혼과 이혼의 증가는 혼외 또는 미혼 출산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한 나라의

출산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혼인과 출산규범, 그리고 미혼자들의 자녀 양육환경이 바뀌면 미혼 출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센서스에서 모든 출산 관련 정보를 기혼 여성에 한정하여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센서스의 출산관련 항목의 응답대상을 미혼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7 장 참고문헌

- 권태환. 1997. “출산력 변천의 과정과 의미”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제 1권 제1집.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_____.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서울: 집문당.
- 김민경. 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서울: 글로벌.
- 김승권. 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2003-12 (통권 8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 2005.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2005-4 (통권 10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기수. 2003. “가족가치관”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 이연주. 2003. “결혼과 출산 등의 가족형성과 경제활동: 가정과 직장의 병립을 위하여” 『보건복지포럼』 2003-12 (통권 8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광희. 1997. “출산력 변화의 메커니즘”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 _____. 2006. “한국의 혼인력과 출산력: 추이와 전망” 『통계』 제32권 1,2호 통합본. 대한통계협회.
- 통계청. 2006. “2005년 동태통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인구와 사회』 2-2.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통계청. 2007. 『장래 가구추계 결과』. (미 간행)
- Cho L-J. 1973.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No. 29.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Kim M-K. 2004. “population and census and other data sources” in Kim D-S & Kim C-S (eds.), *The Population of Korea*, Seoul: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Kwon T-H. 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won T-H. 2007. “Trends and implications of delayed and non-marriage in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3-3.

<감사의 말>

필자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2005년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준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의 김두섭 소장, 자료처리와 분석을 위해 궂은 일을 도맡아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은기수 교수, 센서스 원자료를 필자가 원하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의 현성민 씨, 그리고 주요 인구자료를 쉽게 찾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KOSIS에 포괄적인 인구자료를 수록해준 통계청 관련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최근 한국 인구이동의 특징과 변화

최진호 (아주대)

제 1 장 연구목적과 방법

1절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한국 인구이동의 특징을 밝히고 과거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인구이동은 출생, 사망과 더불어 한 지역의 인구 규모의 증, 감이나 인구 구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인구학적 과정의 하나이다. 이때 출생이나 사망은 생물학적인 현상으로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한번밖에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구이동은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어떤 개인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이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구이동은 인구학적 과정 중에서도 단기간에 특정지역 인구의 규모나 구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이동의 영향력에 비하면 한국의 인구이동 연구는 출생이나 사망과 비교할 때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의 하나는 한국인들의 인구 이동이 다른 사회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이들 빈번한 인구이동을 모두 다 추적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인구센서스는 1970년부터 인구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인 5년 전 거주지와 1년 전 거주지를 포함하고 있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구이동의 분석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 센서스에 포함된 5년 전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한국인의 인구이동 성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로 인구이동의 흐름을 분석한 후, 특히 과거 수십 년간 문제가 되어 온 수도권 인구집중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구이동을 분석하려 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정책 수립에 긴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절 자료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다. 2005년 인구센서스는 5년 전 거주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2005년 센서스 당시의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를 비교함으로써 인구이동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처럼 센서스의 두 시점을 비교하여 이동을 분석할 경우의 약점은 단순히 두 시점의 거주지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이 5년 동안에 여러 번 이동을 했더라도 한 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또 같은 기간 중 이동이 있었지만 5년 전 거주지로 다시 되돌아간 경우에는 실제로는 두 번 이동이 있었지만 이 분석에서는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복이동과 귀환이동의 누락을 감안한다면 실제의 이동의 양은 분석에서 나타난 이동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이 연구는 2005년 센서스의 10% 표본 집계 결과와 센서스 2% 표본 원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2 장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인구학의 다른 분야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 보통 인구이동의 분석에 쓰이는 자료에는 인구 센서스자료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자료나 표본조사자료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연구는 주로 인구 센서스자료를 많이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서 5년 전 거주지 항목이 처음으로 조사된 것은 1970년 센서스 부터로서 그 이후 1년 전 거주지, 혹은 출생지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들 거주지 항목을 이용하여 인구이동의 총량, 지역 간, 혹은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의 방향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동자의 특성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김대영, 이효구, 1979; Kim and Sloboda, 1981; 이한순, 이우리, 1983; 최진호, 1982, 1986, 1994, 1997; Noh, 1991).

또 1980년 이후에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인구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행하여졌으며(문현상, 한영자, 1989), 1985년부터는 매 센서스결과를 분석하는 연구 중에 인구이동도 포함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최인현 외, 1989; 최진호, 최병선, 1993; 김남일 외, 1997; 최진호, 2002).

제 3 장 한국의 국내 인구이동

1절 인구이동 추이

먼저 <표 1>은 1970, 1980, 1990, 2000 그리고 2005년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각 5년간의 총 이동자수와 이동률을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이동은 시·군·구의 행정 구역을 벗어나서 거주지를 옮긴 경우로 정의한다.

<표 1> 한국의 인구이동 추이, 1965-2005

(단위: 천 명, %)

	총이동자수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기타이동	이동률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1965-1970	4,394 (100.0)	1,918 (43.7)	2,457 (55.9)	20 (0.5)	16.2	7.1	9.1
1975-1980	7,658 (100.0)	3,879 (50.7)	3,739 (48.8)	40 (0.5)	22.8	11.5	11.1
1985-1990	9,871 (100.0)	4,380 (44.4)	5,435 (55.1)	55 (0.6)	24.6	10.9	13.5
1995-2000	9,711 (100.0)	4,191 (43.2)	5,386 (55.5)	134 (1.4)	23.1	10.0	12.8
2000-2005	9141 (100.0)	3730 (40.8)	5238 (57.3)	173 (1.9)	20.8	8.5	11.9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표에서 보면 2000-2005년의 최근 5년간 시·군·구의 경계를 벗어나서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는 총 914만 명으로서 2005년 현재 5세 이상 총 인구의 20.8%가 이동을 경험하였다. 총 이동자수는 1965-70년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해 오다 1985-1990년의 987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서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총 이동자들을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1975-1980년 기간만을 예외로 하고는 시·도간 이동이 시·도내 이동보다 많다. 최근 5년간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시·도간 이동자가 많아 전체 이동자의 57.3%에 이르고 있으며 시·도내 이동자는 40.8%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이동의 추세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총 이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시·도간

이동자의 비율이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인데 이는 대도시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주지 교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총 이동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이출 압력의 완화, 또 대도시내에서의 주거 안정에 의한 이동 요인의 감소 등에도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더불어 국외에서 전입한 기타이동도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 활발해 저가고 있는 국제화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2절 시·도간 인구이동

이제 이와 같은 총 인구이동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시·도별로 전입과 전출 그리고 순 이동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에서 보면 우선 서울의 경우 전입은 최근 5년 동안에 그 이전 1995-2000년보다 오히려 늘어나 101만 명이 전입하였고 전출은 거꾸로 감소해 147만 명이 전출하였다. 따라서 5년 동안의 순 이동은 1995-2000년보다 감소한 45만 6천명의 전출 초과를 보인다.

서울의 이동만을 놓고 보면 최근 5년간의 이동 패턴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서울의 전입자 수는 1985-9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5-2000년 5년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0-2005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는데 거꾸로 다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전출도 2000년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2005년에 이르면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로의 인구집중 압력이 1990년을 고비로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가 최근 5년에는 다시 반전되어 인구집중 압력이 커진 것을 의미해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를 보면 부산과 울산의 경우는 순 이동의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5년과 그 이전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표 2> 시·도간 인구이동, 1965-2005

(단위: 천 명)

	전입					전출					순이동				
	65-70	75-80	85-90	95-00	00-05	65-70	75-80	85-90	95-00	00-05	65-70	75-80	85-90	95-00	00-05
서울	1,191	1,256	1,333	971	1,015	248	753	1,377	1,656	1,471	943	503	-44	-685	-456
부산	309	539	373	216	198	127	221	348	400	380	182	318	25	-184	-182
대구	-	-	292	201	179	-	-	213	248	244	-	-	79	-47	-64
인천	-	-	413	339	290	-	-	174	279	312	-	-	239	60	-23
광주	-	-	186	164	143	-	-	122	144	144	-	-	64	20	-1
대전	-	-	199	210	196	-	-	96	152	163	-	-	103	58	33
울산	-	-	-	110	94	-	-	-	111	96	-	-	-	-1	-2
경기	346	905	1,457	1,680	1,787	320	437	727	908	892	26	468	730	772	896
강원	103	105	123	164	148	184	275	299	178	178	-81	-170	-176	-14	-29
충북	56	73	122	169	148	164	208	190	143	152	-108	-135	-68	26	-4
충남	99	166	137	262	263	308	332	326	199	217	-209	-166	-189	63	46
전북	55	65	81	133	99	205	274	267	169	182	-150	-209	-186	-36	-83
전남	58	89	140	171	113	277	429	437	226	225	-219	-340	-297	-55	-112
경북	146	264	245	275	246	303	400	453	281	295	-157	-136	-208	-6	-49
경남	98	296	360	283	284	307	385	372	262	254	-209	-89	-12	21	30
제주	14	22	29	36	35	12	25	33	31	34	2	-3	-4	5	1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그러나 나머지 광역시인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전입은 줄고 전출은 비슷하거나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전출 초과로 인한 부(-)의 순 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인천과 광주도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에 순 이동이 전출초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천의 경우 1995-2000년 기간에는 순 이동이 6만 명 이었으나 2000-2005년에는 2만 3천명의 부(-)의 순 이동을 기록하고 있다. 7개의 특별시나 광역시 중

에서 대전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가 순 이동에 있어 부(-)를 보여 과거 서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 도시에서도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근교지역의 교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이하게 대전만이 비록 그 이전보다 순 이동의 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의 순 이동을 보이고 있어 이채롭다.

한편 도중에서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정(+)의 순 이동을 보이는 곳이 경기, 충남, 경남, 그리고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주 등 네 곳이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는 전입은 지속적으로 늘고 전출은 감소해 순 이동의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2000-2005년 사이에 경기도는 178만 명이 전입하고 89만 명이 전출하여 90만 명의 전입초과를 기록하고 있다. 또 경남도 순 이동의 양이 1995-2000년의 2만1천명에서 2000-2005년에는 3만 명으로 증가해 서울대도시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산대도시권에서도 교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과 그 이전 5년간의 시·도간 이동에서 또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유출지역인 강원, 전북, 전남 등 지역에서 인구이동으로 인한 부(-)의 순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충북의 경우는 1995-2000년에는 순 이동이 정(+)이었으나 최근에는 부(-)로 반전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도간 이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을 개관해 보면 최근에 이르러 인구이동의 패턴이 다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제 이와 같은 시·도간 이동의 패턴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각 도의 총 이출자중 도외 이출비율과 그중에서 서울 이출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도별 총 이동자의 도외 및 서울 이동 비율, 1965-2005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경기	68.5	78.4	58.8	71.2	61.6	60.5	51.3	47.6	44.2	52.1
강원	63.0	47.3	71.6	36.7	72.4	29.1	68.7	27.5	68.8	27.2
충북	74.9	51.8	76.5	36.1	68.3	28.4	70.1	20.3	70.2	20.5
충남	75.9	63.3	69.7	47.0	81.7	28.2	76.2	20.1	74.6	19.7
전북	65.1	63.4	71.0	49.3	63.7	41.9	62.6	30.8	67.7	26.4
전남	57.9	62.8	61.3	47.3	79.6	30.4	74.6	20.8	77.3	18.5
경북	49.0	43.6	38.1	32.0	71.1	16.6	70.4	14.6	71.8	14.1
경남	70.6	21.5	64.7	15.3	53.1	15.6	55.6	13.4	53.2	14.3
제주	50.0	41.7	62.5	32.0	55.9	33.3	52.5	32.3	53.9	29.6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우선 표에서 보면 전체 시·군·구간 이동자 중에서 타도로 이동한 이동자의 비율이 높은 도는 전남, 충남, 경북, 충북의 순으로서 대체로 70%에서 77% 가까이 타도로 진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5년 전인 1995-2000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타도로의 진출 비율이 가장 낮은 도는 경기도로서 44.2%만이 타도로 진출하였다. 최근 5년간의 인구이동 경향을 그 이전 5년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도에서는 큰 변화 없이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는 도외 이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내에는 이출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유인 요소들이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기도와는 반대로 전북과 전남은 타도 이출자의 비율이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유출 지역들로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인구를 자체 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타도로 유출시키고 있다.

또 타도전출자 중에서 서울로 이동한 이동자의 비율을 보면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4%에서 30%의 도외 이동자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는 도외 이동자의 52%가 서울로 이동하고 있어 서울로부터 많은 인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서울로도 많은 인구를 내 보내고 있어 서울과의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미 서울과 그 주변 경기도 지역을 포함하는 서울대도시권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대도시권내에서의 단거리 이동이 매우 빈번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한편 서울로의 이출비율이 낮은 도는 경북, 경남, 전남, 충남으로서 이들 도에서는 도외 전출자의 20%미만만이 서울로 이동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이들 도들의 중심에 광역 대도시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위에 큰 도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북은 서울로의 이동 비율이 26-27%로 높게 나타난다.

제 4 장 수도권 인구이동

1절 수도권 인구이동추이

이제 이절에서는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근 5년간의 인구이동의 변화를 분석하려한다. <표 4>는 수도권의 이동을 좀 더 자세히 보기위해서 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 내외로의 전출과 전입, 그리고 순 이동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수도권으로의 전입을 보면 최근 5년간이 그 전보다 전입자 수가 약간 증가하였다. 즉 2000-2005년간 수도권으로의 총 전입자는 126만 명으로서 1995-2000년의 113만 명과 비교했을 때 13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도권으로의 전입자의 증가는 1995-2000년 기간이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기였기 때문에 전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최근에 들어서서 그 전 추세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4> 수도권의 인구이동, 1965-2005

(단위: 천명,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수도권내 이동	373	747	1,656	1,962	1,953
경기 → 서울	251	311	440	432	465
→ 인천	-	-	102	122	103
인천 → 서울	-	-	64	65	68
→ 경기	-	-	65	119	167
서울 → 경기	122	436	825	1,098	1,058
→ 인천	-	-	160	126	93
수도권외 전입	1,164 (100.0)	1,414 (100.0)	1,547 (100.0)	1,130 (100.0)	1,261 (100.0)
서울 →	940 (80.8)	945 (66.8)	829 (53.6)	535 (47.3)	548 (43.5)
인천 →	-	-	151 (9.8)	96 (8.5)	100 (8.0)
경기 →	224 (19.2)	469 (33.2)	567 (36.6)	499 (44.2)	612 (48.6)
수도권외 전출	195 (100.0)	443 (100.0)	622 (100.0)	881 (100.0)	722 (100.0)
서울 →	126 (64.6)	317 (71.6)	392 (63.0)	432 (49.0)	320 (44.3)
인천 →	-	-	45 (7.2)	95 (10.8)	78 (10.7)
경기 →	69 (35.4)	126 (28.4)	185 (29.8)	354 (40.2)	324 (44.9)
수도권 내외간 순이동					
수도권	969 (100.0)	971 (100.0)	925 (100.0)	249 (100.0)	539 (100.0)
서울	814 (84.0)	628 (64.7)	437 (47.2)	103 (41.4)	228 (42.3)
인천	-	-	106 (11.5)	1 (0.04)	22 (4.0)
경기	155(16.0)	343 (35.3)	382 (41.3)	145 (58.2)	289 (53.6)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이제 이들 전입자의 목적지를 보면 서울과 인천은 그 이전 기간보다 약간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대폭 증가해 1995-2000년의 49만 9천명에서 최근 5년간에는 61만 1천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전입자가 증가한 것은 주로 경기도로의 전입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전입자 전체에 대한 각 목적지별 비율도 서울과 인천은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입과는 반대로 수도권 외로의 전출은 최근 5년간이 그 이전 5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2000-2005년간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전출은 72만 2천명으로서 그 이전의 88만 1천명보다 15만 9천명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출자 감소의 폭은 서울이 오히려 경기도보다 커서 서울에서는 11만 2천명의 전출자의 감소를 기록 한 반면 경기도에서는 3만 명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입과 전출의 결과 수도권의 순 이동은 대폭 늘어나 2000-2005년에는 53만 9천명의 전입 초과를 기록하여 그 이전 기간보다 29만 명의 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순 이동에 있어서 서울은 12만 5천명이, 인천은 2만 1천명이, 그리고 경기도는 14만 4천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1990년대 후반기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잠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주춤하였다가 2000년 들어 다시 과거처럼 인구집중추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은 과거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즉 2000-2005년간 수도권 내에서 이동한 총 이동자는 195만 명으로서 그 이전 1995-2000년의 196만 명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이를 서울, 인천, 경기도등 목적지 별로 보면 서울을 목적지로 하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은 1995-2000년의 49만 7천명에서 2000-2005년에는 53만 3천명으로 증가한 반면 인천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경기도는 그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최근 5년간에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로 향한 이동이 과거보다 더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처럼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과거 5년 전보다 더 심화된 이유는 물론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서울 내에서의 주택공급에도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 위기의 정점이었던 1998년에는 주택건설이 2만 9천호에 불과한 반면 2002년에는 16만호로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990년대 후반기에 비해 2000년대 전반기에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규 주택의 공급이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한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수도권의 인구이동이 전국의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표에서 보면 2000-2005년의 5년간 전국의 5세 이상 인구 중 시·도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동을 한 사람은 모두 523만 8천명이다. 이들 중에서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은 126만 1천명이고, 수도권에서 거주하다가 수도권 외로 진출해 나간 사람이 72만 2천명이다. 또 195만 3천명은 수도권내의 다른 시·도로 이동한 사람들이다.

지난 1965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전국 시·도간 이동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7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 비중은 1995년부터는 점차로 증가하기 시작해 1995-2000년에는 73.8%, 그리고 최근 5년간에는 75.1%로 증가하였다.

이들 증가 요인을 다시 세분해서 보면 수도권에서의 전입 비중은 1965년의 47.4%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해 1995-2000년에는 21.0%로 감소했었으나 최근 5년에 다시 24.1%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서 수도권 외로의 전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5년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표 5> 전국이동 중 수도권 이동의 비중

(단위: 천 명,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수도권외에서 전입	1,164 (47.4)	1,414 (37.8)	1,547 (28.5)	1,130 (21.0)	1,261 (24.1)
수도권외로 전출	195 (7.9)	443 (11.8)	622 (11.4)	881 (16.4)	722 (13.8)
수도권내 이동	373 (15.2)	747 (20.0)	1,656 (30.5)	1,962 (36.4)	1,953 (37.3)
합계	1,732 (70.5)	2,604 (69.6)	3,825 (70.4)	3,973 (73.8)	3,936 (75.1)
전국 시·도간 이동	2,457 (100.0)	3,739 (100.0)	5,435 (100.0)	5,386 (100.0)	5,238 (100.0)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한편 수도권내의 시·도간 이동비중은 1965년 이래 일관성 있게 증가해 1965-1970년의 15.2%에서 2000-2005년에는 37.3%로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국의 시·도간 이동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그 비중은 커지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자의 절대 수는 최근 5년이 그 전보다 감소하기 시작해 1995-2000년의 397만 3천명에서 2000-2005년에는 393만 6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시·도 간 이동자의 총수도 1985-1990년의 543만 5천명을 최고로 그 이후 점

차 감소해 1995-2000년에는 538만 6천명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523만 8천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국의 총 시·도간 이동자수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전입자수는 절대 수에서 그리고 그 비중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0-2005년에는 그 전과 비교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2절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90년대 말에 잠시 주춤했던 수도권으로의 전입이 2000년대 초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데 이들의 전 거주지는 어디인가? 이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6>은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를 백분비로 정리한 것이다.

2000-2005년 기간 중 수도권 전입자 총수는 126만 1천명인데 시·도 지역별로 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와 충남으로 각각 수도권 전입자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 다음으로는 부산과 전북으로 9%가 넘는 비율을 보인다.

5년 전인 1995-2000년과 비교해 보면 수도권 전입자의 주요 배출 지역은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1995-2000년에도 수도권 전입자의 주요 배출지는 강원, 부산, 충남, 전북으로서 순위는 다소 바뀌었지만 최근 5년간과 다르지 않아 과거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전입자 중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1995-2000년과 최근을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증가한 도는 대구, 광주, 대전 등의 광역시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이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으로서 1995-2000년에 8.9%에서 최근에는 7.6%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입자 중에서 전남에서 이주한 이동자의 비율은 1975-1980년에는 20.3%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광주가 광역시로 독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져 최근까지도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수도권 전입자의 전거주지, 1965-2005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부산	5.8	5.5	7.6	9.8	9.5
대구	-	-	4.3	6.3	6.6
광주	-	-	4.1	5.6	6.0
대전	-	-	3.2	6.2	6.7
울산	-	-	-	2.4	2.2
강원	10.2	12.3	12.7	10.4	9.8
충북	9.3	8.6	7.5	6.5	6.7
충남	22.0	18.2	13.5	9.5	9.8
전북	13.2	13.6	12.7	9.5	9.2
전남	18.0	20.3	14.8	8.9	7.6
경북	13.4	12.7	8.7	7.8	8.0
경남	6.8	6.0	7.0	6.4	6.5
제주	0.2	0.8	1.1	1.6	1.6
외국 및 미상	0.9	2.0	2.7	9.0	9.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입자(천명)	1,163	1,415	1,1549	1,134	1,261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앞에서 분석한 수도권 전입자의 각 시·도별 비중은 각 시·도의 인구규모에 영향을 받아서 인구가 많은 시·도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표 7>에서는 각 지역의 인구규모를 감안한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을 비교함으로써 각 지역과 수도권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각 지역의 인구는 인구이동의 시작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최근 5년의 각 시·도의 수도권 이출률을 보면 적게는 경남의 2.8%에서 많게는 강원 8.3%의 사이에서 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경남은 그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위해서 편의상 울산을 포함한다. 울산을 포함한 경남의 수도권 이출률이 가장 낮은 것은 경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대해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남지역에는 부산과 울산등 대도시가 잘 발달해 있고, 또 동남해안 공업벨트를 포함한 다수의 취업기회가 존재하는데 비해서 수도권과는 멀리 떨어진 것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수도권으로의 이출률, 1965-2005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부산	4.7	3.2	3.4	3.2	3.3
대구	-	-	3.3	3.2	3.4
광주	-	-	7.1	5.6	5.6
대전	-	-	5.7	6.1	6.1
강원	6.5	9.3	11.4	8.7	8.3
충북	7.0	8.0	8.3	5.8	5.7
충남	8.8	8.7	9.9	6.6	6.7
전북	6.1	7.8	8.9	6.2	6.1
전남	5.2	7.2	8.1	5.3	4.8
경북	3.5	3.7	4.5	3.6	3.7
경남1)	2.5	2.6	3.1	2.9	2.8
제주	1.8	2.7	3.5	3.9	3.9

주) 울산 포함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반대로 인구이동 측면에서 수도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인데 2000-2005년 동안에 강원도 주민의 8.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강원도는 과거의 자료를 보아도 1975년 이래로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해 있으면서 지역 내 인구를 흡인할 만한 대도시가 발달해 있지 못하고 아울러 충분한 산업기반도 갖추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인구이동의 이출률 측면에서 강원도 이외에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은 충남으로 6.7%의 이출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전과 전북으로 각각 6.1%의 이출률을 보인다. 최근 5년간의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을 그 전 5년과 비교해 보면 많은 지역에서 이출률이 같거나 약간만 차이가 나거나 하여 거의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출률에 있어서 다소 변화가 있는 지역은 강원과 전남으로서 강원도의 경우는 이출률이 1995-2000년의 8.7%에서 최근에는 8.3%로 줄어들었으며, 전남의 경우에도 역시 5.3%에서 4.8%로 감소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출률의 변화는 이들 두 지역의 수도권에 대한 인구이동 압력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지 주목된다.

3절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앞에서 우리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분석을 통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압력이 1990년대 후반기의 경제 침체기를 거치면서 다소 완화되었으나 2000년대 전반기에는 그 추세가 반전되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그 전 5년과 비교해 다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압력이 아직도 지방에 과거처럼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이때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수도권으로 전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전입이유를 정확히 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인구센서스에서는 이동이유를 묻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접적으로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제 <표 8>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1995-2000년과 최근 2000-2005년의 5년간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전입자와 같은 기간 중에 수도권 외로 전출해 나간 전출자, 그리고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최근 5년간 수도권 전입자와 전출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우선 이동자의 성에 있어서는 전입자와 전출자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즉 수도권 전입자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전입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전출자 중에는 거꾸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이와 같이 전입자 중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경향은 1995-2000년 기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출자 중에서는 남녀의 비가 거의 비슷했었으나 최근에는 전출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아 다소 변모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수도권 전입자와 전출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입자의 경우는 15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전출자보다 그 비율이 높는데, 특히 20-24세와 25-29세 연령층에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예컨대 전입자 중에서는 20-24세 연령층의 비율이 13.7%인데 비해서 전출자의 경우는 7.9%이며, 마찬가지로 25-29세 연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19.0%, 11.8%로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표 8>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단위: %)

	구분	1995-2000			2000-2005		
		전입자	전출자	거주자	전입자	전출자	거주자
성	남자	47.5	50.9	49.4	46.9	53.3	49.0
	여자	52.5	49.1	50.6	53.1	46.7	51.0
연령	14세 이하	13.7	20.0	22.4	13.8	16.5	20.2
	15-19	6.4	4.5	7.6	5.5	3.7	6.3
	20-24	15.7	7.2	6.4	13.7	7.9	6.2
	25-29	22.1	14.4	9.1	19.0	11.8	7.8
	30-34	14.3	17.6	9.6	15.1	15.6	9.3
	35-39	9.8	14.4	9.9	10.5	13.3	9.4
	40-44	6.5	8.1	9.4	7.7	8.5	9.3
	45-49	3.4	4.0	6.7	4.8	6.6	8.8
	50-54	1.9	2.4	5.2	2.6	3.8	6.2
	55-59	1.3	2.0	4.3	1.9	3.2	4.9
	60이상	4.9	5.5	9.4	5.5	9.0	11.6
교육	불취학	5.4	7.0	13.3	4.3	6.5	10.4
	초등학교	12.2	17.2	16.6	11.6	14.8	15.3
	중학교	7.1	9.0	12.4	6.5	7.8	11.5
	고등학교	31.0	34.5	34.6	25.7	28.8	32.0
	대학교	43.3	31.5	22.7	45.6	37.0	27.7
	대학원이상	1.2	0.9	0.4	6.3	5.1	3.0
혼인상태	미혼	41.1	23.3	28.6	42.7	28.2	29.3
	유배우	52.7	70.0	63.0	50.3	62.8	61.0
	사별	4.2	4.1	6.2	4.1	4.9	6.4
	이혼	2.0	2.6	2.2	2.9	4.1	3.3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1.7	62.5	62.3	56.0	53.3	51.2
	미취업	38.3	37.6	37.8	44.0	46.7	48.8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이와는 반대로 14세 이하와 30세 이상에서는 전출자에서 그 비율이 높는데 특히 전입자와 전출자간 차이가 큰 연령층은 14세 이하와 35-39세, 그리고 60세 이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연령분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전입자 중에는 학업이나 취업기회에 이끌려서 전입하는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이며, 거꾸로 전출자 중에서는 은퇴에 따른 노년층의

전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95-2000년에도 그대로 발견되고 있었는데 다만 그 때와 다른 점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있어서 그 차이가 더 커 졌다고 하는 점이다.

한편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학력수준의 차이를 보면 전입자의 학력이 전출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그 차이는 대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전입자의 경우 대학교 재학이나 졸업의 비율은 45.6%이나 전출자의 경우는 37.0%이다. 따라서 수도권 전입자 중에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흥미 있는 것은 비이동자인 거주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교 학력 소유자의 비율이 27.7%로서 전입자와 전출자 모두와 비교해서 매우 낮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그것이 전입이든 혹은 전출이든 간에 교육과 관련된 이동을 상당수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즉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입했다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상당수가 취업과 동시에 수도권 외로 전출하는 경향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관련된 해석으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학력수준의 차이는 5년 전인 1995-2000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었는데 다만 최근에 와서는 전입자와 전출자 모두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5년전보다 높아져 최근의 학력 수준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앞에서 드러난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연령 분포의 차이는 그대로 혼인상태에 반영되어 전입자에 있어서는 전출자보다 미혼의 비율이 높고, 거꾸로 유배우의 비율은 전출자에 있어서 더 높다. 한편 경제활동 상태에 있어서는 전입자와 전출자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취업자 비율이 각각 56.0%, 53.3%로 전입자에 있어서 그 비율이 조금 높다.

경제활동상태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은 1995-2000년과 비교해 이동자나 비이동자 모두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최근에 낮아졌다는 점이다. 즉 1995-2000년에는 취업자 비율이 대체로 60%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2000-2005년에는 50%대에 머물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는 전출자에 비해 여자가 많으며, 연령은 상대적으로 젊어 20대의 연령층이 전입자 중에 많다. 학력수준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의 비율이 전입자에게서 높다. 이와 같은 최근 수도

권 이동자의 특성은 그 이전인 1995-2000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큰 변화가 없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절 수도권 내 지역별 이동자의 특성

앞에서는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을 수도권 전체로 묶어서 분석하였으나 이제 이들의 특성을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수도권을 중심도시인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들 수도권의 두 지역으로의 전입과 전출 그리고 이들 지역 간의 수도권 내 이동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수도권 이동자의 남녀별 성을 보면 대체로 수도권 내 이동과 수도권 외에서의 전입자 중에는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전출자에서는 남자가 많다. 그런데 수도권 전입자를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경우와 지방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전입한 경우를 나누어서 보면 서울로 전입한 이동자 중 여자는 54.5%로 경기나 인천으로 전입한 경우의 51.6%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수도권 전입자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이 아니고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람들 중에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처럼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로의 전입자 중에서 여자가 많은 것은 주로 여성취업과 관련된 이동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입의 경우와는 달리 수도권 전출자중 서울에서 전출한 경우와 경기 인천에서 전출한 경우 간에는 두 경우 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지만 이동자의 성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연령 분포에 있어서는 수도권 전입자중 특히 20-24, 25-29세의 젊은 층의 유입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흐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이동자 중 20-24세의 비율이 19.4%, 그리고 25-29세의 비율은 22.5%인데 비해서 지방에서 경기나 인천으로의 이동자 중 같은 연령층의 비율을 각각 10.9%와 18.1%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그중에서도 20-24세 연령집단의 차이가 더 큰데 이는 주로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의 대학생의 이동의 결과로 보여 진다.

이제 이들 이동자의 연령 분포를 수도권 이동의 6개의 흐름별로 비교해보면 지방에서 서울로의 전입은 주로 20대가 주도하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 경기나 인천의 흐름에서는 20대 후반과 30대의 비율이 특히 높다. 여기에 비해서 수도권에서의 전출 이동의 경우는 서울에서 전출하거나 경기 인천에서 전출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30대 전반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

대 후반과 30대 전반에서 비율이 높다.

<표 9> 수도권내 지역별 이동자의 특성, 2000-2005

(단위: %)

	구분	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 외 전입		수도권 외 전출	
		경기/인천 > 서울	서울 > 경기/인천	지방 > 서울	지방 > 경기/인천	서울 > 지방	경기/인천 > 지방
성별	남자	48.8	49.7	45.5	48.4	53.6	53.1
	여자	51.2	50.3	54.5	51.6	46.4	46.9
연령	14 이하	18.2	13.6	11.0	15.5	13.2	19.2
	15-19	4.9	2.7	6.5	5.0	2.9	4.4
	20-24	7.2	5.1	19.4	10.9	6.8	8.8
	25-29	11.9	11.1	22.5	18.1	12.8	11.1
	30-34	14.7	18.6	12.9	16.4	17.8	13.9
	35-39	13.1	13.5	7.5	11.4	12.6	13.9
	40-44	10.1	7.1	6.5	7.7	8.0	9.0
	45-49	7.0	5.9	4.5	4.5	6.7	6.5
	50-54	3.8	5.2	2.7	2.3	4.6	3.3
	55-59	2.7	5.2	1.8	1.9	4.0	2.5
	60이상	6.3	12.1	4.7	6.2	10.7	7.5
교육 정도 (1)	불취학	4.8	5.0	3.4	5.0	6.2	6.7
	초등학교	13.8	12.9	9.1	13.2	12.7	16.4
	중학교	7.9	7.4	5.2	7.1	7.0	8.5
	고등학교	26.5	29.6	21.3	30.0	26.6	30.7
	대학교	40.7	39.7	54.9	40.4	40.8	34.0
	대학원 이상	6.3	5.4	6.1	4.3	6.8	3.7
교육 정도 (2)	불취학	4.8	5.0	3.4	5.0	6.2	6.7
	초등학교	13.8	12.9	9.1	13.2	12.7	16.4
	중학교	7.9	7.4	5.2	7.1	7.0	8.5
	고등학교 재학/수료/중퇴	3.2	1.8	2.8	2.9	1.5	2.5
	고졸	23.3	27.8	18.5	27.0	25.0	28.1
	대학교 재학/수료/중퇴	7.1	5.7	15.8	7.1	9.1	10.8
	대졸	33.6	33.9	39.1	33.3	31.7	23.2
	대학원 재학/수료/중퇴	1.3	1.3	2.2	1.1	1.5	1.0
	대학원졸	5.0	4.2	3.9	3.2	5.3	2.7
혼인 상태	미혼	31.0	23.9	55.3	36.4	28.1	28.3
	배우자 있음	61.1	67.9	38.3	55.9	62.7	62.9
	사별	4.1	5.0	3.8	4.6	5.4	4.4
	이혼	3.8	3.2	2.6	3.1	3.8	4.4
경제 활동 상태	취업(일하였음+일시휴직)	56.9	54.4	54.6	58.0	54.6	52.3
	미취업	43.1	45.6	45.4	42.0	45.4	47.7
직업	전문/기술	32.3	28.5	36.0	28.1	27.5	22.6
	행정/관리	4.0	5.1	1.8	2.1	5.2	3.7
	사무	24.6	23.0	26.0	21.5	17.5	14.4
	판매	11.7	10.7	10.6	7.9	8.0	8.7
	서비스	9.5	8.8	11.3	10.2	11.4	10.9
	농림어업	0.1	1.2	0.2	0.6	8.5	9.4
	생산/운수/장비/노무	17.8	22.7	14.1	29.5	21.9	30.4

자료: 통계청, 2005년 인구센서스 2% 표본의 자료

이와 같은 연령 분포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데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는 특히 30대 전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동자의 연령분포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과 서울에서 수도권 외 지방으로의 이동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즉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에서는 12.1%, 서울에서 수도권 외로는 10.7%로서 다른 인구 이동 흐름에서 보여주는 6% 안팎의 비율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이는 노년층의 경우 은퇴나 자녀들의 출가 이후에 서울 외곽의 근교나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수도권 내 지역별 이동자의 교육정도는 각 급 학교의 재학과 수료, 중퇴, 졸업을 다 합쳐서 보면 수도권 내 6개의 모든 이동의 흐름에서 대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대학교 학력의 비중은 각 흐름마다 달라서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자 중에서 54.9%로 가장 높고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자중의 34.0%로 가장 낮다. 이 두 흐름을 제외한 다른 이동에서는 대학교 학력의 비율이 대체로 40%정도를 나타낸다.

이제 이들 중에서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 내·외로 이동하는 젊은 층의 규모를 추정해 보기 위해서 <표 9>에서는 교육정도를 재학, 수료, 중퇴와 졸업으로 다시 세분하여 그 비율을 산출하였다. 먼저 대학 졸업자의 비율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에서 서울로의 흐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아서 39.1%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자중에서 23.2%로 가장 낮다. 또 나머지 흐름 중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자중에는 33%가량이 대졸 학력을 갖고 있으며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출해 나간 이동자중에는 이보다 조금 그 비율이 낮아 31.7%를 보인다.

한편 대학 재학이나 수료, 중퇴의 비율을 보면 이들 흐름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데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에서는 그 비율이 15.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반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는 5.7%로 가장 낮다. 또 이 비율은 서울에서 지방의 흐름에서는 9.1%,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는 10.8%를 보여 수도권 관련 이동자중의 상당수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로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대학교 재학, 수료, 중퇴자를 다 합친 인구 중에서 대학교 재학자의 비율은 79%가량이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 흐름에서 미혼자의 비율이

55.3%로 가장 높고 지방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 36.4%로 그 다음으로 높다. 미혼자의 비율은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 가장 낮아 23.9%를 보이는데 이는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은 주로 기혼 층의 주택관련 이동이거나 혹은 은퇴 등의 가족관련 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제활동상태는 수도권 내 지역별 이동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취업자의 비율이 지방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 58.0%로 가장 높고 거꾸로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에서 52.3%로 제일 낮다.

이제 이들 취업자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수도권 외든지 수도권 내에서든지 서울로 향한 이동의 흐름에서 전문 기술직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즉 이 비율은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에서는 36.0%로 가장 높고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의 흐름에서는 3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한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전출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27.5%, 경기 인천에서는 22.6%로 가장 낮다. 이에 비해서 생산 운수 장비 노무직의 경우에는 전문 기술직의 경우와는 정 반대로 서울로 향한 이동의 흐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아 예컨대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에서는 14.1%를 보인다. 그러나 이 비율을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흐름에서는 3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방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에서 29.5%로 높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선 고급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 기술직은 여전히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지역에 생산직 노무자를 유인 할 수 있는 취업기회가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5 장 수도권인구집중

앞에서 우리는 최근 5년간인 2000-2005년의 인구이동 분석에서 전국의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이동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로의 진출이나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량은 최근 5년간에 1995-2000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외에서의 전입은 거꾸로 그 이전보다 약 13만 명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내외간의 순 이동도 1995-2000년에 24만 9천명의 전입초과에서 2000-2005년에는 53만 9천명의 전입초과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은 1995-2000년 기간 중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잠시 완화되었으나 2000-2005년에는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 인구집중 추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를 정리한 것이 <표 10>이다. 표에서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는 10년 간격으로, 그리고 1990년 이후는 5년 간격으로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수도권의 인구집중, 1960-2005

(단위: 천 명, %)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서울	2,445	5,525	8,364	10,613	10,231	9,895	9,820
경기도1)	2,749	3,353	4,934	7,974	9,958	11,459	12,946
수도권2)	5,194	8,879	13,298	18,587	20,189	21,354	22,766
전국	24,989	31,434	37,436	43,411	44,609	46,136	47,279
서울/전국	9.8	17.6	22.3	24.4	22.9	21.5	20.8
경기도/전국	11.0	10.7	13.2	18.4	22.3	24.8	27.4
수도권/전국	20.8	28.2	35.5	42.8	45.3	46.3	48.2

주1) 인천 포함.

2) 수도권 = 서울+경기도

자료: 경제기획원(1963, 1972, 1982a): 통계청(1993, 1997a, 2002a, 2006)

먼저 전국인구에 대한 서울인구의 비중은 199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4%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는 감소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20.8%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서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의 인구비중은 꾸준히 그 비중이 늘어나 2005년에는 27.4%에 달하였다. 경기도의 인구 비중이 서울보다 더 커진 시기는 2000년으로서 이때 경기도는 전국인구의 24.8%인데 비해서

서울은 21.5%로 인구 비중이 역전되었다.

2005년에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48.2%로서 1960년 이래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인구비중의 증가 폭이 최근 2000-2005년의 5년간에는 1.9% 포인트로서 지난 1995-2000년의 증가폭인 1.0% 포인트의 두 배 가량 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정도가 지난 1995-2000년보다 더 심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의 심화경향은 <표 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1>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는 10년 간격으로, 그리고 그 이후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5년 간격으로 전국 인구 증가분에 대한 수도권 인구 증가분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전국 인구 증가분에 대한 서울 인구 증가분의 비중은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거의 50%에 가까웠으나 그 이후 감소해 1990-1995년 기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그 마이너스의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고 있어 최근 2005년에는 마이너스 6.6%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인구증가분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95년 기간에는 165.6%에 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95-2000년에는 98.3%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2000-2005년에는 다시 증가해 130.1%에 이른다.

따라서 수도권 전체로 보면 이 비중은 1990-95년에 133.7%를 기록하였으나 1995-2000년에는 76.3%까지 감소하였었고 최근 5년간에는 다시 123.5%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에 전국에서 증가한 인구를 상회하는 인구가 수도권에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 들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수도권의 인구증가분, 1960-2005

(단위: 천 명, %)

	1960-1970	1970-1980	1980-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서울	3,080	2,839	2,249	-382	-336	-75
경기도1)	605	1,580	3,040	1,984	1,501	1,487
수도권2)	3,685	4,419	5,289	1,602	1,165	1,412
전국	6,445	6,002	5,975	1,198	1,527	1,143
서울/전국	47.8	47.3	37.6	-31.9	-22.0	-6.6
경기도/전국	9.4	26.3	50.9	165.6	98.3	130.1
수도권/전국	57.2	73.6	88.5	133.7	76.3	123.5

주1) 인천 포함.

2) 수도권 = 서울+경기도

자료: 경제기획원(1963, 1972, 1982a): 통계청(1993, 1997a, 2002a, 2006)

제 6 장 요약과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2005년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그 이전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이 연구에서는 인구 이동을 시·군·구의 행정 구역을 벗어나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총량은 1985-90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해 2000-2005년에는 914만 1천명이 이동하였다. 이동률은 20.8%로서 5명당 1명 꼴로 이동을 경험하였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도간 이동이 시·도내 이동보다 많다.

시·도간 인구이동분석에서 드러난 최근의 인구이동 특징은 과거 1990년대 후반기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완화경향이 최근 2000-2005년에는 다시 반전되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로의 전입이 이전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국 시·도간 이동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한편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나 각 지역별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에 있어서는 과거와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는 전출자에 비해 여자가 많으며, 연령은 상대적으로 젊어 20대가 많다. 학력수준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월등히 높으며 미혼의 비율이 전입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은 5년 전인 1995-2000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특히 서울로 전입하는 이동자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고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때 서울 전입자의 학력이 높은 것은 대학 진학을 위한 이동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데에도 기인한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인구이동패턴에 관한 분석이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는 최근 들어서 수도권의 인구집중경향이 다시 심화되고 있으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강화나 인위적인 지방으로의 인구의 분산 배치보다는 지방에서 인구를 흡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행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는 인구이동

의 분석이 시·도간 분석에 더하여 대도시권 단위로도 이루어져야 하는 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대도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주변에서는 이미 대도시권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행정구역의 의미가 옅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대도시권 내외의 이동 분석이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제 7 장 참 고 문 헌

- 김남일, 최순, 박우순, 양기석. 1997.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인구 특성 변화』. 통계청.
- 김대영, 이효구. 1976.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 1965-70』. 한국개발연구원.
- 문현상, 한영자. 1989. 『수도권 인구집중과 생활권간 인구이동분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이한순, 이우리. 1983. “한국내 인구이동의 패턴변화에 관한 계량적 연구, 1960-80을 중심으로.” 『인구문제논집』 제24권.
- 최인현, 윤종주, 김수봉, 정기원, Huguet. 1989. “인구이동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인구종합분석 보고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최진호. 1982.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1권.
- _____. 1986. “인구분석 및 이동의 특성과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제9권.
- _____. 1994. “한국의 인구이동 패턴 변화와 수도권의 인구이동.” 『한국인구학회지』. 제 17권.
- _____. 1997. “인구이동패턴의 변화, 1960-1990.” 『인구변화와 삶의 질』. 일신사.
- _____. 2002.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한국의 인구』. 제13장. 통계청
- 최진호, 최병선. 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 통계청.
- Kim, Dae Young and John Sloboda. 1981. "Migration and Korean Development."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 Noh, Hee-Bang. 1991. "The Spatial Pattern and Process of Migration in Korea, 1960-1985."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은기수 (서울대)

제 1 장 연구목적과 대상

1절 연구목적

인구학에서 인구이동 연구라 함은 주로 1년 전 거주지 혹은 5년 전 거주지를 파악해서 현재의 거주지와 비교한 후 지난 1년 동안 혹은 지난 5년 동안 인구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구이동이라는 것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인구현상임을 고려해 볼 때 1년 전 혹은 5년 전 거주지를 파악하고 현재의 거주지와 비교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인구이동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인구이동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더구나 이 정보를 이용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판별하는 인구이동 연구는 자칫 잘못하면 인구이동의 실상을 왜곡시킬 위험성도 안게 된다.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던 근대화 초기에 1년 전 혹은 5년 전 거주지와 현재의 거주지를 비교하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부분 그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인구이동도 중요해졌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매일 일어나는 인구이동개념에 기반을 둔 일일 인구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근·통학인구 혹은 주간인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통근·통학인구 혹은 주간인구에 대한 인식의 대두는 다음과 같은 전제들을 바탕으로 한다. 서울의 경우 1960년대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시작되었다. 인구이동의 최종 목적지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였다. 때문에 서울은 금세 농촌에서 몰릴듯 몰려오는 이동인구로 포화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오는 대규모의 이동인구를 수용할 주택 부족 현상과 더불어 모든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오는 이농민들은 서울에서 직업을 찾고 일을 하더라도 잠자리는

서울에 마련하지 못한 채 서울 주위 경기도에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이유로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이 되면 서울 외곽에서 서울 내로 들어가려는 인구가 줄을 이었고, 저녁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만한 교통시설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다른 한편,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두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있겠다. 물론 고정된 일자리도 있지만, 일터는 언제나 변할 가능성이 있고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도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 중, 고, 대학교 등 학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터와 직장이 일치하지 않고, 거주지와 직장이 별개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일 인구이동은 인구학의 새로운 연구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과 주택 등에 관련한 행정 분야에서도 핵심관건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 인구센서스 2% 원자료를 바탕으로 일일 인구이동 현상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전국적인 차원의 일일 인구이동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시작으로 이후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일 인구이동의 특성에 관해 살펴 보려고 한다. 이미 본 분석에 앞서 필자는 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1995년과 2000년의 일일 인구이동을 분석한 바 있다(은기수, 2002). 이에 선행 연구결과와 2005년 인구센서스 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일일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래는 일일 인구이동이 더 적합한 표현이겠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구센서스에서는 통근·통학자라는 개념과 주간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 인구이동이라는 표현대신에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일 인구이동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2절 연구대상

인구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구개념으로 상주인구가 있다. 그리고 인구를 파악할 때는 상주주의(de jure principle)와 현주주의(de facto principle)의 개념으로 파악한다(권태환·김두섭, 2002). 어느 방식으로 파악하든 그 인구는 상주인구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된다. 우리나라 센서스의 경우 원래는 조사당시 개개인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통상적으로 거주하거나 15일 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상주지가 되기 때문에 센서스 당시 일시적으로 이동 중인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동 중인 사람이 머무는 숙박지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런 원칙으로 파악된 인구가 바로

상주인구이다.

상주인구는 인구학적으로는 매우 유용하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상주인구 이외의 새로운 인구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실제 생활에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유발하는 인구는 상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동인구는 정확한 측정이 힘들고,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 산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이외의 새로운 인구로 통계 산출이 가능한 인구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가장 유효한 인구개념이 바로 주간인구라 하겠다. 주간인구는 상주인구와는 달리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인구를 가리킨다. 이는 일단 상주인구를 기본으로 하되 상주인구 가운데서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활동하는 인구는 제외되며, 아울러 비록 다른 지역에 상주하지만 주요 활동 시간대에는 이 특정 지역에 유입되어 활동하는 인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간단히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은기수, 2002: 526).

$$\begin{aligned} \text{주간인구} &= \text{상주인구} + \text{주간유입인구} - \text{주간유출인구} \\ &= \text{비통근} \cdot \text{통학자수} + \text{지역내 통근} \cdot \text{통학자수} \\ &\quad + \text{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통근} \cdot \text{통학자수} \end{aligned}$$

이 연구에서는 일단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일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일 인구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서 1995년과 2000년 그리고 2005년의 인구및주택총조사 보고서와 해당년도 인구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가 이용되었다.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

일일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필자가 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를 이용해 주간인구를 분석하면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 보았을 때에도 필자의 연구 외에는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5년 전에 출판된 은기수(2002)의 연구에서 간단히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간단히 기존연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주간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는 사람들이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어디서 어디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고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시간이 걸려 이동하는지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인구센서스에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라는 조사항목 및 결과가 포함되게 되었다. 다른 한 편, 대도시 중심부의 구청장들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과거 관선구청장 시절에는 각 대도시의 중심부가 가장 핵심적인 구청이었고, 구청장 자리도 제일 요직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으로 바뀌면서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구청장의 위세가 결정되고, 정부의 각종 교부금도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다보니 상주인구가 작은 대도시 중심부의 구는 과거와 달리 구청장의 위세나 행정적인 대우가 오히려 하락하였다. 상주인구는 작지만 중심부의 역할과 위력은 과거와 다름이 없는데도 중심구의 위상은 민선자치단체 시절에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심구의 경우 상주인구는 다른 주변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모든 행정, 금융, 서비스 시설 등이 주로 대도시 중심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다른 주변 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행정서비스가 상주인구보다도 유동인구에 의해 더 많이 유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결정되는 모순된 현상에 대도시 중심구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대도시 중심부는 상주인구보다는 자신들에게 여러 면에서 유리한 새로운 인구개념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1997년 은기수의 연구는 서울시 중구청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중구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서울시 중구의 요구는 상주인구보다는 실질적인 중요성이 더 큰 유동인구를 새로운 행정인구개념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필자가 보기에 유동인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 산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상주인구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인구개념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필자가 통계청에서 산출하고 있는 새로운 인구를 살펴본 바, 주간인구 개념이 현재 상태에서

중심구에 가장 적합한 인구개념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미 통계청에서도 인구센서스를 통해 주간인구가 산출되고 있었고, 누구도 인정하는 인구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일일 인구이동 개념에 부합되면서도 이해관계가 걸린 여러 기관에서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인구개념으로 주간인구 개념을 제시하였다.

2000년에 출판된 대도시 도심부의 연구에 수록되어 있는 필자의 또 다른 연구를 보자(은기수, 2000). 이 연구는 대도시 도심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의 일환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심부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를 대비시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주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주간에 일하는 인구의 규모는 여전히 많은 현상을 대비시켜 도심부의 공동화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즉, 외국의 대도시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다시 도심부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지만, 한국 특히 서울의 도심부의 경우에는 도심부에 거주하고 있다 떠난 인구가 되돌아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도심부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주간인구가 사라지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필자는 일일 인구이동을 좀 더 사회학적인 개념과 연결시켜 분석하기에 이른다(은기수, 2001). 이 2001년 연구는 서울 및 인근 외곽지역에서 일일 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계급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누가 도심에 살고 있으며, 또 누가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도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생업을 도심에서 영위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계급적 지위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검토하면서 사회학계에서는 최초로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는 집단과 동일한 생활 장소에 머무르면서 그 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집단들의 계급적인 성격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은기수의 2002년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000년 센서스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2000년 및 그 이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가능한 거슬러 올라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주간인구 추세의 변동을 살펴보고, 통근·통학의 동학을 살펴본 연구였다. 은기수(2002)의 연구를 통해 2000년까지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에서 일일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울에서 서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매일 인구이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서울의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필자의 연구 외에도 그동안 통근·통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있다. 송미령(1998)은 통근하는 사람들이 통근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전명진·정명지(2003)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서 통근통행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근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백종렬·정환영(2003)은 우리나라에서 통근 통학권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정환영은 수도권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대전 지역의 통근자의 특성에 관하여 분석한 바 있다. 정환영과 양경옥(1998)도 청주의 통근지역과 통근자 특성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손승호(2003), 곽영호(1991), 서종국(1998), 이상일(2001), 허우궁(1991) 등의 연구도 통근통학에 관한 공간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2002년 은기수의 연구를 계승하고 있다. 때문에 이 연구는 거의 동일한 문제의식 속에서 2000년까지의 일일 인구이동의 특성을 2005년의 인구센서스까지 이어보면 어떤 연속성과 단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로 요약될 수 있겠다.

제 3 장 전국 통근·통학인구

먼저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근·통학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주간 인구를 구성하는 인구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통근·통학인구이기 때문에 먼저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근·통학인구의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절 통근·통학인구 및 주간인구

다음 <표 1>은 1995, 2000, 2005년 등 세 시점에서 전국의 각 지역에서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통근·통학인구가 핵심적인 요소인 주간인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전국 지역별 통근·통학인구비율 및 주간인구지수

(단위: %)

지역	통근·통학인구비율			주간인구지수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서울	64.6	63.7	61.3	105	105	106
부산	61.5	58.7	56.5	98	98	98
대구	60.9	58.9	57.6	96	97	96
인천	63.1	63.1	61.6	96	95	95
광주	62.9	61.2	60.9	98	98	97
대전	62.0	61.5	60.0	98	99	98
울산	-	63.0	62.6	-	101	101
경기	62.8	63.9	62.6	93	95	95
강원	61.6	60.7	57.8	101	101	101
충북	64.6	64.6	61.5	101	101	101
충남	66.3	66.1	65.1	103	104	105
전북	65.8	63.5	59.8	100	100	100
전남	68.4	66.9	62.4	101	101	102
경북	65.0	63.4	61.8	104	103	104
경남	65.6	64.2	62.7	102	102	101
제주	70.6	68.9	56.7	100	100	100

주) 주간인구지수=주간인구/상주인구*100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표 1>을 보면 각 지역의 인구 가운데 매일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60%대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5년의 경우 각 지역의 상주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대구로 60.9%였다. 서울의 경우 전체 인구의 64.6%가 통근·통학을 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통근·통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제주 전체 인구의 70.6%가 통근·통학인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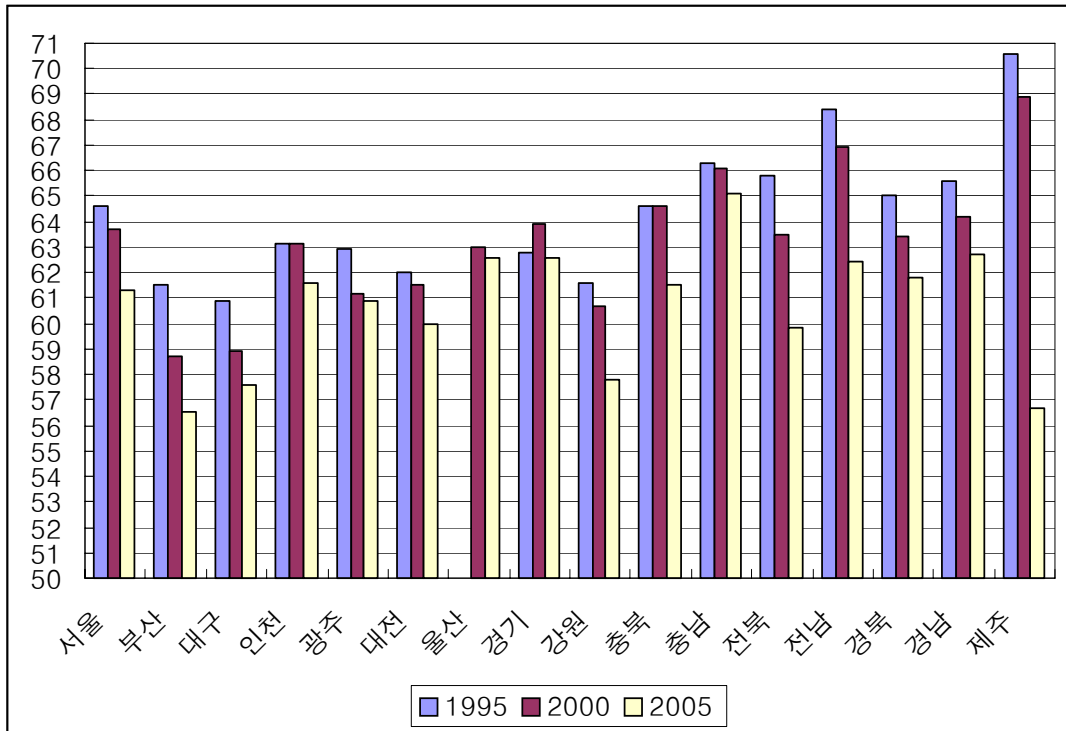
2000년에는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60% 이하로 내려간 지역이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의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는 각각 58.7%와 58.9%로 나타나 통근·통학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약간 하회하였다. 서울의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도 63.7%로 1995년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2000년에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제주 지역에서도 68.9%로 이전의 70%에 약간 못 미쳤다. 전반적으로 2000년은 1995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통근·통학인구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지역이 1995년에 62.8%에서 2000년에 63.9%로 약간 상승했을 뿐 나머지 시도지역에서는 통근·통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에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2005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60% 이하인 지역이 더 늘어났다. 부산 56.5%, 제주 56.7%, 대구 57.6%, 강원 57.8%, 전북 59.8% 등 전국에서 5개 시도의 통근·통학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60% 아래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에도 2005년에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61.3%로 낮아졌다.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65.1%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1995년 이래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다음 (그림 1)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통근·통학인구의 변화: 1995, 2000, 2005



(그림 1)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통근·통학인구의 감소는 제주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2005년으로 오면서 통근·통학인구의 감소가 전반적인 추세로 관찰되고 있다.

통근·통학인구의 감소는 주간인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 지역에서 통근·통학인구가 유출되면 주간인구가 줄어들고, 통근·통학인구가 유입되면 주간인구가 늘어난다. 결국 유입과 유출인구의 차이에 의해 어느 특정지역의 주간인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일단 통근·통학인구의 절대적 규모의 감소로 주간인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앞의 <표 1>은 주간인구지수의 변화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일일 인구가동이 시나 도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유입과 유출은 서로 상쇄되어 주간인구의 규모나 상주인구의 규모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주간인구지수는 주간인구를 상주인구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산출되는데, <표 1>에 따르면 전국의 각 시도의 주간인구지수는 2005년 현재 최소 95(인천)에서부터 최고 106(서울)으로 나타난다. 즉 인천은 주로 인구가 일일 인구이동을 통해 인천 밖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고, 반면에 서울은 일일 인구이동을 통해 서울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서울로 들어와 일을 하는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1995년 이래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주간인구지수는 1995년과 2000년 현재 105에서 2005년에는

106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즉 서울 내에서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는 감소한 반면 주간에 서울 외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가 1995년이나 2000년에 비해 약간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다음으로 주간인구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충남이다. 충남의 1995년 현재 주간인구지수는 103이었지만, 2000년에는 104로 그리고 2005년에는 105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에서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에 못 미치고 있다. 즉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통근·통학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에 활동하는 인구인 주간인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 아래 <표 2>는 주간인구지수 120이상인 지역을 골라 주간인구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주간인구지수 120 이상인 7대 대도시 시구, 1995-2005

(단위: 인구지수)

1995		2000		2005	
지역	주간인구지수	지역	주간인구지수	지역	주간인구지수
서울중구	395	서울중구	292	서울중구	354
부산중구	249	서울종로구	216	서울종로구	251
서울종로구	244	부산중구	191	부산강서구	213
인천중구	191	대구중구	168	부산중구	197
대구중구	167	서울강남구	166	대구중구	186
서울강남구	160	인천중구	145	서울강남구	182
서울영등포구	150	광주동구	141	인천중구	171
광주동구	140	서울영등포구	138	서울서초구	140
서울용산구	135	부산강서구	133	광주동구	140
대전유성구	134	서울용산구	131	서울용산구	134
서울동대문구	126	서울동대문구	130	서울영등포구	133
서울서초구	125	서울서초구	121	부산동구	130
		대전유성구	120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1995년 이래 주간인구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의 중구이다. 서울 중구의 상주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여 2005년 현재 128,44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의 중구는 서울의 최도심부이고 현재도 정부기관, 각 회사의 본점, 금융기관, 백화점 등 서비스업의 본점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상주인구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주간에 서울 중구로 출근하여 일을 하는 주간인구는 많고, 이를 주간인구 대 상주인구의 비로 계산하면 전국에서 가장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199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395로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거의 4배에 이르렀다. 200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295로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3배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하였지만, 2005년에는 다시 주간인구지수가 354로 증가하였다.

서울 종로구도 서울 중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구도심의 한 부분이면서 여전히 중요한 일터이기도 하다. 1995년에 서울 종로구의 주간인구지수는 249로 상주인구에 대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약 2.5배에 이르렀다. 2000년에는 이 규모가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 다시 주간인구지수가 251로 1995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서울의 부심부이지만 현재는 새로운 도심부나 다름없는 지역이 서울의 “강남”지역이다. 서울의 강남구의 주간인구지수는 1995년에 160, 2000년에 166, 2005년에 18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어느 면에서는 서울의 중심이 강남으로 옮겨간 듯한 인상을 주는데, 주간인구지수의 변화는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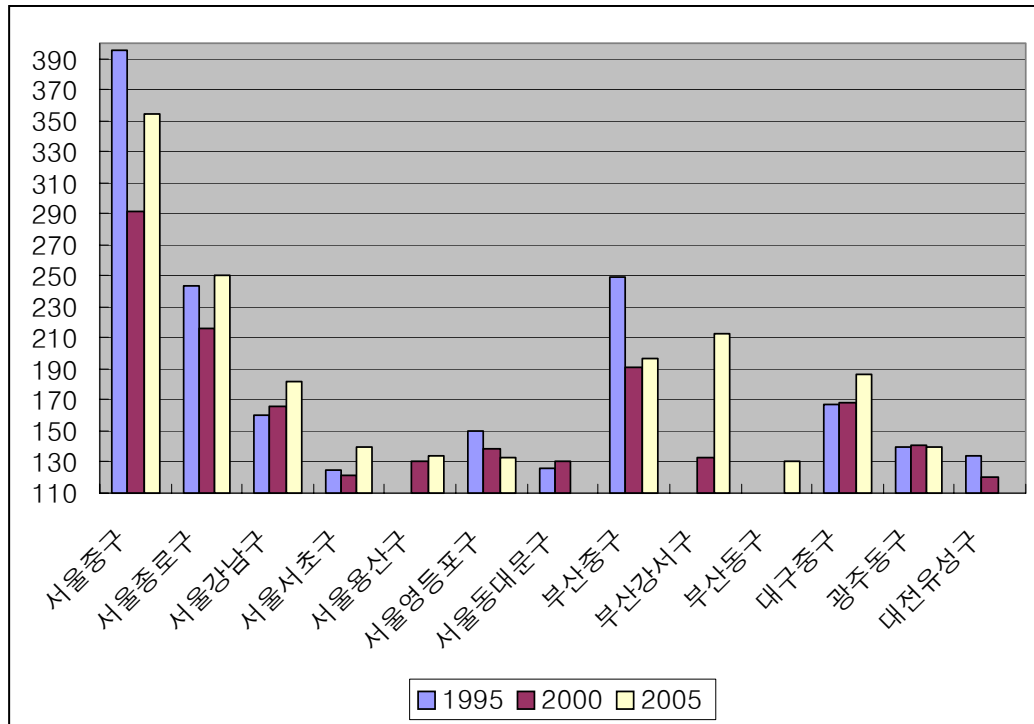
서울의 강남구와 함께 “강남”지역을 대표하는 서울 서초구의 경우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에는 125에서 2000년에는 121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40으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강남구와 서울의 서초구를 소위 “강남”지역의 핵심지역으로 본다면 2000년을 지나서 2005년에는 서울의 “강남”지역이 상주인구 가운데 유출되는 인구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간에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서울의 “강남”지역은 새로운 서울의 중심부로 부상했고, 주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몰려드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에 서울의 강북지역에 위치한 서울의 동대문구는 1995년과 200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20을 넘어 동대문구로 유입되는 인구의 규모가 컸으나 200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20 이하로 낮아져 더 이상 대규모의 주간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아니다. 대전의 유성구도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과 2000년에는 120 이상이었던지만, 2000년에는 120 이하로 낮아졌다.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가보면, 부산의 강서구는 주간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는 부산의 강서구는 주간인구지수가 108이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33로 높아졌고, 200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213으로 크게 높아졌다. 부산 강서구는 부산의 최도심부인 부산의 중구보다도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제일

큰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부산의 동구도 1995년과 2000년에는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120을 넘지 않았는데, 2005년에는 주간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큰 지역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1995-2005



반면에 대도시 가운데 주간인구지수가 90이하인 지역도 여럿 있다. 이 지역은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오히려 최소 10% 이상 낮은 지역이다. 즉 이들 지역은 베드타운의 기능이 강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이나 일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가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가장 작은 지역이다. 도봉구 이외에도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 등은 서울에서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북구, 수영구, 해운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상주인구 가운데 유출되는 인구를 유입인구가 상쇄하지 못해 주간인구지수가 낮다(<표 3> 참조).

<표 3> 주간인구지수 90 이하인 주요 시구, 2005

(단위: 인구지수)

지역	주간인구지수	지역	주간인구지수
서울 도봉구	76	부산 해운대구	84
부산 북구	77	서울 강서구	85
울산 중구	78	인천 부평구	85
서울 중랑구	79	인천 계양구	85
서울 강북구	79	광주 남구	85
서울 은평구	80	서울 노원구	86
서울 관악구	81	대구 동구	86
인천 연수구	82	대구 서구	87
서울 강동구	83	대구 수성구	89
부산 수영구	83	대전 서구	89
서울 양천구	84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2절 통근·통학인구의 특성

통근·통학인구의 특성은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일단 통근·통학인구의 특성을 연령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 <표 4>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연령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연령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 1995-2005

(단위: %)

연령	1995	2000	2005
12-14	99.6	99.6	98.9
15-19	89.5	88.8	87.7
20-24	62.8	62.0	60.4
25-29	60.9	63.9	66.3
30-34	59.1	61.7	62.6
35-39	61.7	64.6	64.9
40-44	62.9	65.1	66.2
45-49	61.5	62.7	62.9
50-54	58.7	57.0	57.1
55-59	53.6	49.2	47.8
60-64	29.9	41.2	37.4
65세 이상		23.2	21.6

주) 1995년은 60세 이상의 인구중 통근·통학 인구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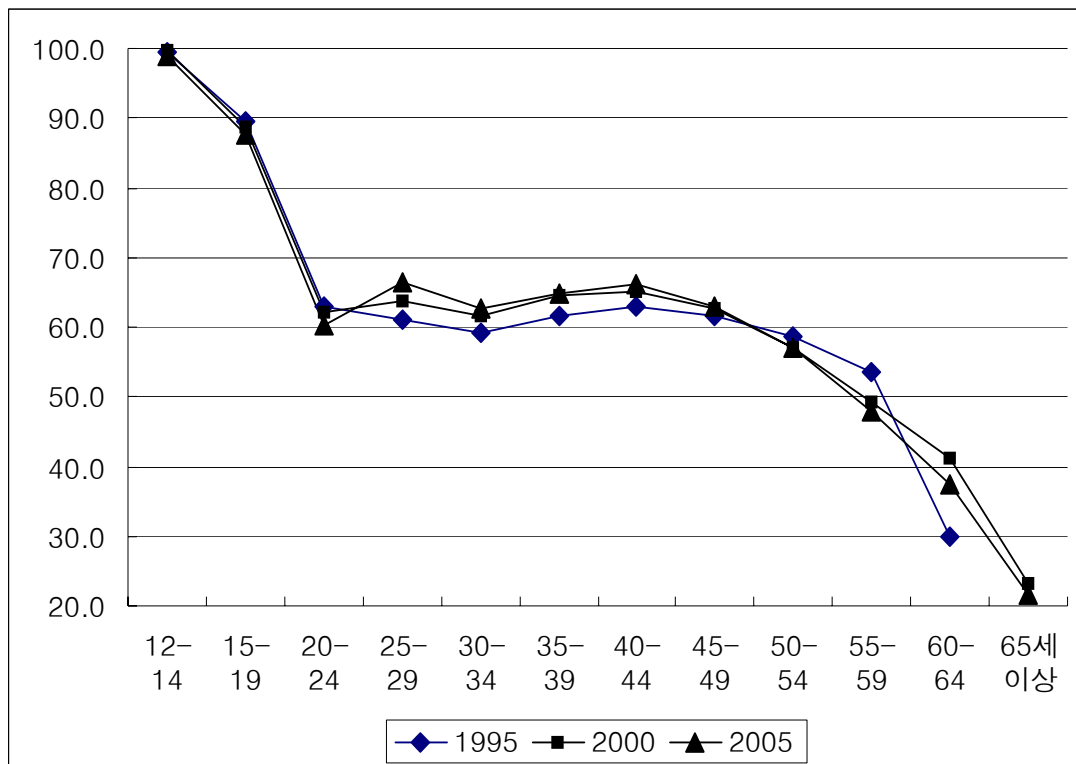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표 4>를 보면 먼저 통근·통학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10대임을 알 수 있다. 14세까지의 인구 가운데 98% 이상이 통학을 하고 있다. 이 연령층은 원칙적으로 노동하는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업을 위해 통학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설사 같은 지역 내에서 통학을 하더라도 이 연령층은 매일 거의 대부분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19세까지의 연령집단에서도 2005년 현재 87% 이상이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10대는 어느 연령층보다도 통근·통학의 비율이 큼을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20대에 이르면 통근·통학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15-19세 연령집단의 통근·통학 인구의 비율이 최소 88%에 달했었는데, 20-24세 연령집단 가운데 통근·통학 인구의 비율은 2005년 현재 60%로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다 25-29세 연령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다시 2005년 현재 66%로 다시 증가한다.

10대에 비하면 20대 이상의 통근·통학 인구비율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대부터 40대까지는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 연령층의 통근·통학 인구비율은 최소 60%에서 최대 66% 정도에 걸쳐 있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들면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2005년 현재 50-54세의 통근·통학 인구비율은 57%, 55-59세는 48%로 낮아지고, 60-64세 연령집단에서는 다시 37%로 낮아짐을 볼 수 있다.

(그림 3) 연령별 통근·통학인구 비율의 변화, 1995-2005



시기별 변화를 보면 10대와 20대 초반까지는 1995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꾸준히 감소한다. 그러나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는 오히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꾸준히 증가한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연령에 따른 통근·통학인구의 비율만을 보기 때문에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 중년층에서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여성들이 노동력시장에 진출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50대 및 그 이상의 연령층에 이르면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있다. 고령인구의 고용기회와 확대 혹은 고령층에서 일하려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통근·통학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고령연령층에서 실제로 통근하는 인구의 규모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표 5>부터 <표 7>까지는 전체 인구를 비통근·통학 및 통근·통학의 형태에 따라 연령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5>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1995

(단위: %)

이동형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비통근·통학	3.88	33.11	39.45	37.73	43.49	69.50
같은 시군구내	75.79	34.33	37.01	40.45	41.04	27.06
다른 시군구로	20.33	32.56	23.54	21.82	15.46	3.44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6>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2000

(단위: %)

이동형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비통근·통학	4.85	31.03	36.54	35.43	46.24	69.92
같은 시군구내	78.45	37.14	39.77	42.86	39.13	27.02
다른 시군구로	16.70	31.84	23.69	21.70	14.63	3.06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200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7>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200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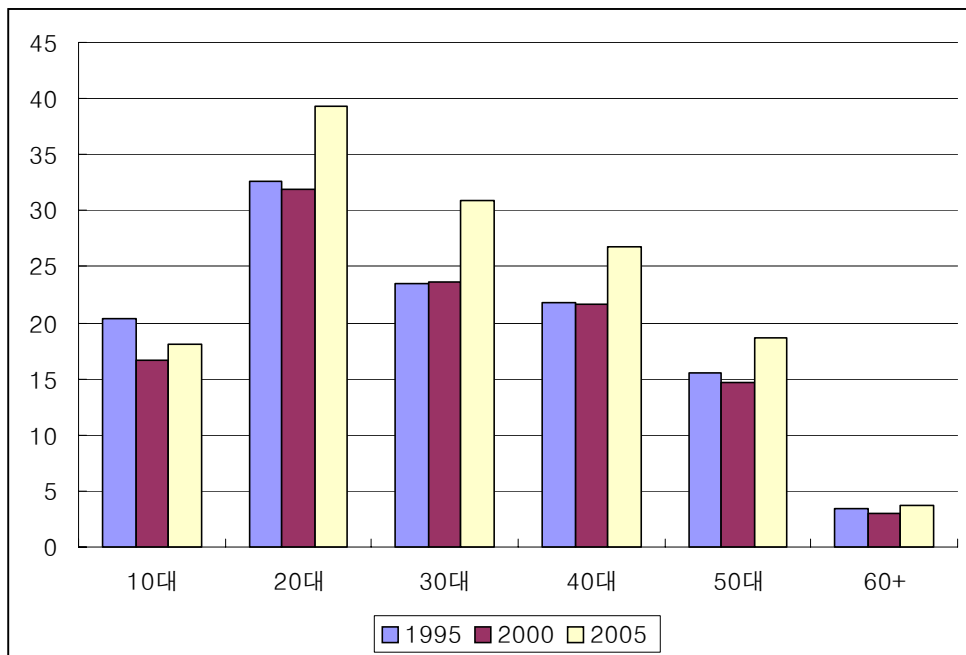
이동형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비통근·통학	4.45	30.85	36.07	34.81	45.19	68.48
같은 시군구내	77.41	29.82	32.99	38.54	36.22	27.78
다른 시군구로	18.14	39.33	30.94	26.84	18.59	3.74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200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10대는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연령층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가장 높지만, 이들은 대다수가 같은 시군구 내에서 통근·통학을 한다. 2000년에 10대 가운데 78.5%는 같은 시군구내에서 통근·통학을 했고, 1995년과 2005년에도 이 비율은 최저 76%에 달했다.

그러나 20대 이상은 비통근·통학, 같은 시군구내 통근·통학,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의 추세가 10대와는 상이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1995년부터 시기가 지날수록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에 증가가 나타난다. 10대는 감소하는데 20대 및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2000년 이후 왜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통근·통학인구 가운데 다른 시군구도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2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모두 한결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연령별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의 변화, 1995-2005



다음은 통근·통학 인구의 특성을 직업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 <표 8>부터 <표 10>은 비통근·통학, 같은 시군구내 통근·통학, 다른 시군구내 통근·통학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1995

(단위: %)

이동형태\직업	1	2	3	4	5	6	7	8	9	10
비통근·통학	4.31	5.37	3.65	2.11	23.83	18.73	6.13	8.74	9.20	8.75
같은 시군구내	43.53	44.79	44.92	47.08	53.03	50.03	92.67	55.81	59.95	62.96
다른 시군구로	52.16	49.84	51.43	50.81	23.14	31.24	1.20	35.45	30.84	28.29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직업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준전문가, 4. 사무직, 5. 서비스직, 6. 판매직,
7. 농림어업직, 8. 기능직, 9. 장치, 조립직, 10. 단순노무직
자료: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9>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2000

(단위: %)

이동형태\직업	1	2	3	4	5	6	7	8	9	10
비통근·통학	3.53	3.88	3.46	2.17	16.03	11.91	0.41	6.34	7.53	7.09
같은 시군구내	46.96	49.84	48.72	52.19	62.03	57.98	97.82	59.89	61.95	67.10
다른 시군구로	49.50	46.28	47.82	45.64	21.94	30.11	1.76	33.77	30.52	25.80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직업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준전문가, 4. 사무직, 5. 서비스직, 6. 판매직,
7. 농림어업직, 8. 기능직, 9. 장치, 조립직, 10. 단순노무직
자료: 200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0>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2005

(단위: %)

이동형태\직업	1	2	3	4	5	6	7	8	9	10
비통근·통학	4.71	4.19	3.96	2.78	12.69	9.65	5.00	6.20	7.60	7.82
같은 시군구내	39.90	41.83	42.40	40.24	58.04	50.59	93.33	52.53	54.55	60.84
다른 시군구로	55.38	53.98	53.64	56.97	29.27	39.76	1.67	41.27	41.27	31.34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직업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준전문가, 4. 사무직, 5. 서비스직, 6. 판매직,
7. 농림어업직, 8. 기능직, 9. 장치, 조립직, 10. 단순노무직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먼저 <표 10>의 2005년의 직업별 통근·통학형태를 보자. 10개의 범주로 구분된 직업 가운데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시에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직업군은 서비스직이다. 2005년 현재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2.7%는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직 다음으로 통근·통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직업은 판매직이다. 2005년 현재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9.65%는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거주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지에서 일하는 경우는 2005년 현재 3% 미만이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7%가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고위 임원직이나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모두 통근·통학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여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

그러나 기능직, 장치·조립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통근·통학을 하더라도 같은 시군구내에서 움직이는 비율이 다른 시군구로 확대하여 이동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

이를 요약하면 사무직 이상의 직업 위세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부분 통근·통학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시군구보다는 다른 시군구로 넘어서 통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통근을 하지 않고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이들의 경우에 통근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구로 넘어 통근하는 비율보다는 같은 시군구내에서 통근을 하며 일하는 비율이 높다. 기능직 등 직업 위세가 낮은 직종에서는 통근을 하는 비율이 높지만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곳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른 시군구로 넘어 통근하는 비율보다 높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세 개 시점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서 직업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서비스직과 판매직에서 비통근·통학의 인구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직의 경우 1995년에 출퇴근을 하지 않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3.8%였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0년에는 16%로 감소하고, 2005년에는 12.7%로 감소하고 있다. 판매직의 경우에도 비통근·통학의 비율이 1995년에는 18.7%에서 2000년에는 11.9%로 크게 감소하고, 2005년에 이 비율이 9.65%로 약간 더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감소한 비통근·통학인구가 대부분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직과 판매직을 제외한 다른 직종에서도, 농림어업직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직종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제 4 장 수도권 통근·통학인구

제 3 장에서는 전국 수준에서 통근·통학과 주간인구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통근·통학인구의 연령별, 직업별 특성을 통해 각각의 인구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분석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의 문제가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은 수도권에 한정하여 좀 더 자세히 통근·통학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절 수도권 통근·통학 형태

우리는 <표 1>을 통해 이미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의 통근·통학 인구의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서울 전체 인구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5년 64.6%, 2000년 63.7%, 2005년 61.3%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에는 서울보다 약간 낮지만 1995년 63.1%, 2000년 63.1%, 2005년 61.6% 등 역시 60% 이상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1995년 62.8%, 2000년 63.9%, 2005년 62.6% 등으로 역시 경기도 지역에서도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매일 매일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통근·통학인구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같은 시군구보다도 다른 시군구로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인구에 있다. 왜냐하면 상주인구와 주간인구를 구별 짓는 제일의 요소가 상주인구 가운데 다른 시군구로 유출되는 인구와 다른 시군구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다음 <표 11>은 서울의 각 구별로 그리고 인천 및 경기도의 여러 시 지역별로 각 지역에서 매일 다른 시군구로 유출되는 인구가 각 지역의 상주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 만 12세 이상 인구 중 다른 시군구 통근·통학 인구 비율
(단위: %)

지역	1995	2000	2005	지역	1995	2000	2005
서울 전체	35.2	30.8	36.1	인천	30.2	26.2	31.2
종로구	26.5	24.5	28.5	수원	17.8	19.6	38.9
중구	24.5	24.4	24.7	성남 수정	22.2	21.7	36.8*
용산구	32.2	27.5	34.1	성남 분당	38.0	33.5	36.4
성동구	25.9	31.3	36.6	의정부	28.4	29.5	29.1
광진구	35.2	31.7	37.8	안양	30.9	31.2	37.5
동대문구	31.1	24.7	31.8	부천	27.7	26.5	35.0
중랑구	35.7	31.3	35.9	광명	38.9	36.3	36.6
성북구	35.4	29.9	36.0	평택	10.3	10.0	11.3
강북구	40.2	33.2	37.6	동두천	17.4	16.4	19.0
도봉구	39.5	38.3	39.7	안산	15.0	18.5	29.6
노원구	37.6	33.7	35.5	고양 덕양	36.1	30.7	34.1
은평구	36.6	29.8	34.5	고양 일산		29.9	34.9*
서대문구	34.6	31.1	38.2	과천	44.3	41.1	38.0
마포구	34.4	29.6	37.5	구리	34.4	32.9	33.6
양천구	37.7	35.3	38.4	남양주	24.9	29.8	27.2
강서구	33.6	29.4	36.9	오산	23.4	28.0	35.4
구로구	34.9	33.4	38.7	시흥	32.6	30.7	26.7
금천구	37.1	31.5	34.3	군포	40.1	38.7	37.1
영등포구	31.1	29.0	36.5	의왕	43.1	43.0	41.6
동작구	41.1	33.8	41.6	하남	35.2	33.6	30.6
관악구	37.6	30.9	38.7	용인	10.8	25.3	31.0
서초구	36.1	31.1	37.0	파주		14.3	16.9
강남구	30.9	24.9	30.1	이천		8.6	8.6
송파구	34.3	29.5	33.9	안성		11.1	11.1
강동구	32.5	32.3	35.2	김포		17.9	20.4
				양주		13.4	23.3
				여주			8.5
				화성			22.3
				광주			25.3
				연천			7.2
				가평	7.1		
				양평	8.5		
				포천	6.7		

주) 성남 수정은 2005년에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를 포함, 고양 일산은 2005년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 서구를 포함함.

자료: 1995, 2000,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서울에서 구별 인구 가운데 매일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작은 구는 중구이다. 중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1995년 24.5%, 2000년 24.4%, 2005년 24.7% 등 거의 변함이 없으면서 25%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구 다음으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구의 전체 인구 가운데 30%에 못 미치는 구는 종로구이다. 종로구의 경우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1995년에 26.5%, 2000년에 24.5%, 2005년에 28.5%로 중구보다는 높지만, 다른 구보다는 낮으면서 30%미만만이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는 주간인구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서울의 도심부 지역에 거주하는 상주인구 가운데 매일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서울의 모든 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이는 중구나 종로구의 경우처럼 주간인구가 높은 데에는 다른 구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지만, 중구나 종로구에 거주하는 상주인구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정도도 다른 구에 비해 훨씬 적고, 이 또한 중구나 종로구의 주간인구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구나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의 다른 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30-42% 사이에 놓여 있다. 2005년 현재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임의로 몇 개 꼽아보면, 먼저 동작구를 들 수 있다. 동작구의 경우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무려 41.6%에 달한다. 전체 인구(실제로는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의 경우)의 40% 이상이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주간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동작구의 상주인구 가운데 많은 인구는 동작구보다는 다른 시군구에 생업의 터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동작구 다음으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봉구이다. 도봉구는 앞에서 이미 주간인구지수가 서울 및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임을 확인했었다. 그런데 도봉구의 인구 가운데 매일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은 동작구보다는 약간 낮은 39.7%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도봉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하거나 공부할 때 다른 시군구로 옮겨가 일하거나 공부하고, 반면에 다른 시군구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간에는 인구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즉 도봉구는 상주인구 중심의 베드타운의 속성이 강하다.

서울의 새로운 도심부의 하나인 강남구의 경우에는 구도심부인 중구나 종로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강남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5년에 30.9%에서 2000년에 24.9%로 크게 감소했다가 2005년에는 다시 30.1%로 증가한다. 그러나 강남구도 주간인구지수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 이는 유출인구가 적거나 유입인구가 많아야 가능한 현상인데, 다른 시군구로 유출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유출인구가 적으면서 동시에 유입인구는 많아 결과적으로 주간인

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경우 매일 다른 시군구로 인구이동을 하는 경우는 2005년 현재 31.2%이다.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10명 중 3명은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 지역에 있는 시 지역에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과천, 군포, 의왕이 눈에 띈다. 의왕에서는 1995년에 43.1%, 2000년에 43%, 2005년에 41.6%의 인구가 경계를 넘어 이동하면서 일이나 공부를 하였다. 비율이 매우 높으면서 시기별로 변화율도 크지 않다. 과천의 경우 1995년에는 일하는 인구의 44.3%가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0년에는 41.1%로 감소하더니 2005년에는 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도 과천시는 여전히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군포시의 경우 1995년에는 40.1%, 2000년에는 38.7%, 2005년에는 37.1%로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비율로 다른 시군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이와는 반대로 1995년부터 2005년에 이르면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몇 지역이 있다. 성남 수정과 중원 지역에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비율은 1995년에는 22.2%였다. 그러나 2005년에 이르면 이 비율이 36.8%로 크게 증가한다. 안양의 경우에도 1995년에는 30.9%에 머물러 있었지만 2005년에는 이 비율이 37.5%로 증가하였다. 부천의 경우에도 1995년에 27.7%였던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비율이 2005년에는 35%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안산의 경우에도 1995년에 15%에서 2005년에 29.6%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오산의 경우에도 1995년에 23.4%에서 2005년에 35.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인천 및 경기 일원에서 다른 시군구로 일일 인구이동을 하지만 이들의 이동 방향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아래 <표 12>에서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하고 있는 주간인구들의 이동유형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점검하여 인구이동의 방향에 관한 일차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표 12> 수도권내 주간인구 이동유형

(단위: %)

이동유형	1995	2000	2005
서울 → 서울	52.0	42.1	39.9
서울 → 인천	1.2	1.2	1.0
서울 → 경기	7.8	10.2	8.0
인천 → 서울	2.5	3.0	2.2
인천 → 인천	7.5	5.3	6.6
인천 → 경기	1.4	2.3	2.2
경기 → 서울	17.5	20.1	16.5
경기 → 인천	1.1	1.4	1.6
경기 → 경기	8.9	14.4	22.0
합	100.0	100.0	100.0

자료: 1995, 2000,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전체 인구 가운데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수도권의 주간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에 52%에서 2000년에 42% 그리고 2005년에는 39.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지역에서 경기지역으로 일일 인구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비율은 1995년 8.9%에서 2000년에 14.4% 그리고 2005년에는 2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일일 인구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수도권의 주간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에 17.5%에서 2000년에는 20%로 증가하였지만, 2005년에는 16.5%로 1995년의 수준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

<표 12>에 제시된 수도권 내 주간인구의 이동유형은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수도권이 확장되면서 과거에는 서울에 집중되었던 일자리가 이제 서울 밖으로도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과거에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어도 서울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간에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다면, 이제는 서울이 일터의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경기 지역에 살면서 같은 경기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 움직이는 주간인구의 비율은 수도권의 주간인구 전체 가운데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의 비율은 전체 수도권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에서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통근·통학자들의 이동유형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다음 <표 13>은 서울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이동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서울 내 주간인구 이동유형의 변화

(단위: %)

이동유형	1995	2000	2005
강북 → 강북	37.4	35.9	33.9
강북 → 강남	15.4	16.7	17.4
강남 → 강북	19.8	19.4	18.6
강남 → 강남	27.4	28.0	30.1
합	100.0	100.0	100.0

주) 여기서 강남, 강북은 순수히 한강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자료: 1995, 2000,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서울내에서 주간인구의 이동유형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간인구의 이동유형은 강북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이동유형

이다. 이 유형이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주간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7.4%에서 2000년에는 35.9% 그리고 2005년에는 다시 33.9%로 감소하고 있다. 비록 2005년에 33.9%로 감소하였어도 네가지 인구이동 유형 가운데에서는 제일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주요 이동유형은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다. 서울 내의 주간인구 가운데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1995년에 27.4%에서 2000년에는 28%로 그리고 다시 2005년에는 30.1%로 증가하고 있다. 강북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비율의 변화는 적지만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유형은 아주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서울 내에서 주간인구의 흐름이 강남으로 옮겨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절 수도권 주간인구의 변화

이제 이 절에서는 수도권 주간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14>를 통해서 서울의 주간인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자. 서울에서 유출되는 인구에 비해 유입되는 인구의 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이다. 1995년에는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가 13배, 2000년에는 거의 10배, 2005년에는 12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인구지수도 1995년에는 395, 2000년에는 292, 그리고 2005년에는 다시 354를 기록하고 있다. 중구 다음으로 유입에 대한 유출의 인구비가 높은 곳은 종로구이다. 종로구의 유입 대 유출 인구 비는 1995년에 6.5, 2000년에 6.4, 그리고 2005년에 7.0을 기록하고 있다. 중구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유출에 비해 유입이 매우 높은 지역의 하나이다. 이 결과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에는 244, 2000년에는 216 그리고 2005년에 다시 251로 증가하였다.

서울 구 도심부의 두 구를 제외하면 서울 강남구의 유입 대 유출 비가 가장 크다. 서울 강남구의 유입 대 유출 인구 비를 살펴보면 1995년에 2.9, 2000년에 3.9, 그리고 다시 2005년에는 4.0을 기록하여 중구나 종로구 등은 2000년에 유입 대 유출 인구비가 감소하지만, 강남구는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유입 대 유출의 비가 1이면 유입인구와 유출인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입 대 유출의 비가 1 이하로 내려가면 상주인구를 제외한다면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된다. 은평구의 유입 대 유출의 비는 1995년에 0.4, 2000년에도 0.4 그리고 2005년에는 0.3을 기록하여 유입에 비해 유출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은평구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곳으로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이 역시 유입에 비해 유출이 많은 곳이고, 이처럼 주간에 유출인구가 많은 곳은 결국 베드타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14> 서울의 유입·유출 비 및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단위: 비율)

구	유입/유출			주간인구지수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지수의 변화량 1995-2000	지수의 변화량 2000-2005
종로구	6.5	6.4	7.0	244	216	251	-28	35
중구	13.1	9.8	12.0	395	292	354	-103	62
용산구	2.1	2.3	2.1	135	131	134	-4	3
성동구	1.4	1.1	1.0	115	104	100	-11	-4
광진구	0.4	0.7	0.8	80	92	94	12	2
동대문구	1.8	2.4	1.4	126	130	112	4	-18
중랑구	0.4	0.4	0.3	78	83	79	5	-4
성북구	0.9	0.9	0.9	96	98	97	2	-1
강북구	0.2	0.4	0.4	69	82	79	13	-3
도봉구	0.6	0.5	0.3	83	81	76	-2	-5
노원구	0.5	0.4	0.5	80	85	86	5	1
은평구	0.4	0.4	0.3	79	84	80	5	-4
서대문구	1.3	1.4	1.3	112	110	108	-2	-2
마포구	1.1	1.2	1.2	102	106	106	4	0
양천구	0.4	0.4	0.5	76	82	84	6	2
강서구	0.7	0.7	0.5	90	93	85	3	-8
구로구	1.3	1.1	1.0	111	101	101	-10	0
금천구	0.5	0.6	1.0	80	89	99	9	-10
영등포구	2.5	2.5	2.0	150	138	133	-12	-5
동작구	0.5	0.6	0.7	81	90	91	9	1
관악구	0.5	0.6	0.4	81	88	81	7	-7
서초구	1.7	1.7	2.2	125	121	140	-4	19
강남구	2.9	3.9	4.0	160	166	182	6	16
송파구	0.7	0.8	0.9	90	95	97	5	2
강동구	0.5	0.5	0.4	84	86	83	2	-3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서울에 이어서 인천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주간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인천에서도 인천 중구는 중심부답게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가 훨씬 많다. 그래서 유입 인구 대 유출인구의 비를 구하면 인천 중구는 1995년에 4.6, 2000년에 3.7 그리고 2005년에 4.9를 기록하여 2000년에 일시적으로 주간인구의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천 중구를 제외하면 2005년에 파주시의 유입인구 대 유출인구의 비가 4.0에 이르러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가 4배나 많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각 구를 포함하여 경기도에 속한 각 시의 유입 대 유출인구의 비를 구하여 보면, 결론적으로 비가 1.0을 넘어서 상주인구를 제외하면 주간인구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은 인천동구(1.4), 인천 남동구(1.2), 평택시(1.3), 과천시(1.5), 시흥시(1.0), 이천시(1.6), 안성시(1.6), 김포시(1.4), 화성시(2.6), 광주시(1.0) 정도에 불과하다. 그 외의 수많은 경기시 지역에서는 유입 인구보다는 유출 인구가 더 많다.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유입에 비해 유출 인구가 많은 곳의 몇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는 1995년에는 유입 대 유출의 비가 0.2에 불과했다. 이곳은 2005년에 유입 대 유출의 비가 겨우 0.4를 기록했다. 인천 계양구도 1995년에 0.3, 2000년에 0.3을 기록했고, 2005년에 0.5 수준에 도달했다. 성남시나 의정부시, 고양시, 군포시, 의왕시 그리고 안양시도 유입 인구에 비해 유출 인구의 폭이 훨씬 크다.

2005년 현재 유입 인구에 비해 유출 인구가 더 많아 유입 대 유출의 비가 1 이하 이면서도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지역은 단 곳도 없다. 즉 유입에 비해 유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배출 요인이 강한 지역의 성격상 주간에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인천 및 경기 시부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단위: 비율)

구	유입/유출			주간인구지수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지수의 변화량 1995-2000	지수의 변화량 2000-2005
인천 중구	4.6	3.7	4.9	191	145	171	-46	26
인천 동구	1.0	1.7	1.4	100	115	112	15	-3
인천 남구	1.0	1.1	0.9	100	101	96	1	-5
인천 연수구	0.2	0.3	0.4	64	78	82	14	4
인천 남동구	0.9	0.9	1.2	98	98	106	0	8
인천 부평구	0.9	0.5	0.5	96	89	85	-7	-4
인천 계양구	0.3	0.3	0.5	74	86	85	12	-1
인천 서구	0.8	0.8	0.8	96	96	95	0	-1
수원시	1.1	1.0	0.6	102	99	93	-3	-6
성남시	0.5	0.5	0.7	82	89	92	7	3
의정부시	0.7	0.6	0.5	93	89	87	-4	-2
안양시	0.6	0.8	0.7	89	94	92	5	-2
부천시	0.5	0.6	0.6	86	91	90	5	-1
광명시	0.3	0.3	0.4	71	80	80	9	0
평택시	0.9	1.1	1.3	99	101	103	2	2
동두천시	0.9	0.9	0.6	99	98	92	-1	-6
안산시	1.3	1.2	0.9	105	103	98	-2	-5
고양시	0.3	0.4	0.5	76	85	88	9	3
과천시	1.1	1.1	1.5	102	105	115	3	10
구리시	0.6	0.7	0.6	85	92	90	7	-2
남양주시	0.5	0.3	0.3	87	84	85	-3	1
오산시	1.5	1.0	0.7	112	100	93	-12	-7
시흥시	0.9	0.7	1.0	96	94	101	-2	7
군포시	0.4	0.4	0.5	76	83	86	7	3
의왕시	0.4	0.4	0.4	75	80	81	5	1
하남시	0.3	0.6	0.8	76	88	94	12	6
용인시	1.0	1.2	0.8	115	104	95	-11	-9
파주시	1.9	1.0	1.0	98	100	100	2	0
이천시	1.9	1.7	1.6	107	105	104	-2	-1
안성시	0.8	1.9	1.6	106	108	106	2	-2
김포시	2.8	1.9	1.4	125	114	106	-11	-8
화성시			2.6			129		
광주시			1.0			99		
양주시			0.9			98		
포천시			4.0			118		

주)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는 1995년에는 군부이었음.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3절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서울의 주간인구지수는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을 총괄하여 주간인구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이에 오고가는 현황을 분석한 표를 보았을 때 인구가 서울로 몰려든다고 말할 정도의 서울의 위상이 지금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절에서는 서울의 각 구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순으로 5개 지역을 골라 살펴보자. 1995년과 2000년은 이미 은기수(2000)에서 상세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2005년만 예를 들기로 한다.¹⁾

1. 통근·통학 유입, 유출지

다음 <표 16>은 서울의 구 가운데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구만 뽑은 후 각각의 구에 유입되는 유입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부터 낮은 곳으로 다섯군데를 뽑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주간인구지수가 100이상인 서울의 구별 주간인구 유입지, 2005
(단위: 순위, %)

구 \ 유입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종로구	서대문구(6.57)	성북구(6.49)	노원구(6.02)	고양시(5.73)	은평구(5.60)
중구	고양시(5.38)	노원구(5.22)	성북구(4.57)	마포구(4.45)	성동구(4.37)
용산구	동작구(5.58)	관악구(4.84)	영등포구(4.76)	마포구(4.56)	인천시(4.35)
성동구	광진구(9.75)	노원구(5.89)	동대문구(5.83)	중랑구(5.34)	송파구(4.63)
동대문구	중랑구(11.90)	노원구(8.07)	성북구(7.87)	광진구(5.46)	도봉구(4.51)
서대문구	은평구(10.00)	고양시(9.20)	마포구(8.79)	강남구(4.40)	강서구(4.15)
마포구	고양시(8.53)	서대문구(7.35)	은평구(6.63)	강서구(5.90)	인천시(5.45)
구로구	인천시(10.60)	부천시(9.62)	광명시(7.66)	양천구(6.98)	영등포구(6.26)
영등포구	강서구(8.75)	양천구(8.38)	구로구(7.05)	인천시(6.60)	관악구(5.52)
서초구	성남시(8.15)	강남구(8.09)	관악구(7.50)	동작구(6.62)	용인시(4.72)
강남구	성남시(7.94)	송파구(7.67)	관악구(5.95)	서초구(5.31)	동작구(3.94)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먼저 서울 외곽에 건설되었던 신도시들이 서울에서 상주인구 혹은 통근·

1) 1995년과 2000년 현재 서울에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에 어디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지는 은기수(2002)에서 상세히 분석했다. 지면의 한계상 1995년과 2000년의 분석은 여기서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기수(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통학인구로 서울의 각 구에 주간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표 16>을 통해 살펴보자. 고양시는 중구에 유입되는 통근·통학인구 중 가장 많은 유입인구를 제공하고 있다. 마포구의 경우에도 새로 유입되는 인구 가운데 고양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종로구에 유입되는 인구 가운데 고양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종로구에 네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서초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중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고(8.15%), 강남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7.94%).

인천시의 경우에는 구로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10.60%). 이외에도 영등포구에 유입되는 인구 중 인천시 출신이 6.6%로 제4위를 차지하고 있고, 마포구에 유입되는 인구 가운데는 인천시가 5.45%로 제5위를 달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리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용인지역에서는 서초구에 공급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간인구를 서초구에 공급하고 있다.

서울 지역 내에서는 노원구가 서울의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에 유입인구를 많이 보내고 있다.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유입되는 인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입인구가 노원구에서 온다. 종로구에 유입되는 인구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역시 노원구에서 온다.

도봉구와 함께 주간인구지수가 낮은 곳 가운데 하나인 서울의 은평구는 서대문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서대문구에 보내고 있다. 서대문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제일 많은 인구가 은평구에서 오는 것이다. 마포구 또한 은평구에서 많은 주간인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마포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은평구에서 오고 있다. 도심부인 종로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도 은평구에서 오고 있다. 이처럼 주간인구지수가 낮은 은평구는 서울의 도심부 및 도심부에 인접한 서울의 중심 지역에 많은 주간인구를 보내고 있다.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낮은 곳이 도봉구였는데, 의외로 도봉구가 배출하는 인구가 서울에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곳으로 유입되는 비율은 적은 것 같다. 동대문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도봉구에서 올 뿐, 다른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서울 지역에 도봉구의 주간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은 아님을 <표 16>은 보여준다.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이면서 우리가 소위 “강남”이라 부르는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를 보면 서초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가 강남구에서 유입된다. 다른 한 편 강남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 또한 서초구에서 유입된다. 이처럼 강남구와 서초구는 소위 서울의 “강남”을 형성하면서 강남구에 살면서 통근·통학은 서초구로 하거나, 서초구에 살면서 통근·통학은 강남구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한 편 서울의 관악구는 서울의 신 도심부인 강남과 영등포 지역에 주간인구를 많이 보내는 배후지역활을 하고 있다. 관악구는 서초구와 강남구에 주간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는데, 강남구와 서초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중 각각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서울의 관악구에서 온다.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유입인구는 주위의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그리고 인천시에서 많이 온다. 그러나 관악구도 영등포구에 주간인구를 많이 보내는 순서로 보면 다섯 번째로 영등포구에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다.

서울의 입장에서는 서울 내에서 일일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지만,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간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 서울일 수도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경기 내에서 일일 인구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서울 주위의 도시는 소위 서울의 위성도시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상주는 서울 외곽에서 하지만, 주간에는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²⁾

<표 17>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서울 주위의 경기도 시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첫 번째 유입지는 단연 서울의 강남구라는 점이다. 용인시(32%), 성남시(30%), 군포시(20.3%), 수원시(19.6%), 안양시(17%), 과천시(16%), 하남시(15.6%), 남양주시(13.9%), 구리시(13.3%), 인천시(10.9%), 광명시(10%), 고양시(9.8%), 의정부시(8.7%), 부천시(8.7%) 등 서울의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시 지역에서 주간에 배출하는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5개 지역에 서울의 강남구가 포함되어 있다.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서초구도 서울의 소위 “강남”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의 시 지역에서 서울로 배출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서초구에 유입되는 인구도 비중이 크다. 과천에서 주간에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의 가장 많은 인구가 서초구(27%)로 유입된다. 용인시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주간인구도 20%가 역시 서초구로 유입된다. 성남시(15.6%), 안양시(15%), 군포시(14%), 수원시(13%)도 서울로 배출하는 주

2) 여기에 관한 분석도 1995년과 2000년에는 은기수(2002)에서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1995년과 2000년에 관해서는 은기수(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간인구들이 가는 곳 가운데 역시 서초구로 주간인구를 많이 보내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에는 서초구에 아주 많은 주간인구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광명시를 떠나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서초구(6.37%)로 유입되고 있다.

<표 17> 경기의 일부 시별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주간유출인구의 통근·통학지, 2005³⁾
(단위: 순위, %)

구 \ 유입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인천시	영등포구(12.62)	강남구(10.94)	구로구(10.24)	중구(7.20)	강서구(6.54)
수원시	강남구(19.62)	서초구(12.88)	중구(7.57)	영등포구(6.86)	용산구(5.32)
성남시	강남구(30.02)	서초구(15.59)	송파구(14.04)	중구(6.17)	종로구(3.78)
의정부시	노원구(15.33)	도봉구(11.38)	종로구(8.78)	강남구(8.68)	동대문구(7.81)
안양시	강남구(17.04)	서초구(15.15)	중구(8.20)	금천구(7.85)	영등포구(6.94)
부천시	영등포구(12.17)	구로구(11.80)	강서구(9.19)	강남구(8.67)	양천구(7.21)
광명시	구로구(15.50)	금천구(15.33)	영등포구(10.68)	강남구(9.99)	서초구(6.37)
고양시	중구(13.04)	종로구(10.72)	강남구(9.76)	영등포구(9.33)	서대문구(8.79)
과천시	서초구(27.05)	강남구(15.98)	중구(9.43)	관악구(7.79)	종로구(7.38) 동작구(7.38)
구리시	강남구(13.34)	광진구(10.84)	중랑구(10.08)	송파구(8.24)	성동구(7.63)
남양주시	강남구(13.90)	중랑구(9.24)	노원구(8.74)	동대문구(8.54)	중구(7.75)
군포시	강남구(20.29)	서초구(14.08)	구로구(8.59)	중구(8.41)	영등포구(6.58)
용인시	강남구(31.96)	서초구(20.05)	송파구(9.08)	중구(5.74)	종로구(4.46)
하남시	강동구(28.60)	송파구(19.14)	강남구(15.64)	광진구(4.94)	중구(4.73)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강남구와 서초구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소위 “강남”이라고 간주한다면 서울 주위의 경기 시지역에 살면서 통근·통학은 강남으로 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용인시의 경우 서울로 주간인구로 배출하는 인구 가운데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로 유입되는 인구를 합하면 용인시가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의 52%가 서울의 “강남”지역으로 일일 인구이동하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에도 배출하는 주간인구의 43%가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에는 36%, 군포시의 경우에는 34%, 수원시의 경우에는 32%, 안양시의 경우에는 32% 등 매우 높은 비율로 서울의 “강남”지역으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주위의 경기도 시지역은 서울의 “강남”지역에 주간인구를 공급하는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다.

3) 이 표에 제시된 주간인구는 인천과 경기도를 떠나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만을 다루고 있다.

서울 내에서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 중구이다. 서울 중구는 상주 인구가 13만 명이 채 안 되는, 상주인구가 매우 작은 지역이다. 그러나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에 통근·통학으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많아 주간인구지수는 매우 높다. 이처럼 높은 주간인구지수를 기록하는 데는 고양시와 중구 주위의 서울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임을 우리는 <표 16>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지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들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에 서울의 최도심부인 중구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의 “강남”지역에 유입시키는 인구의 규모에 비하면 비록 적다고 해도, 서울 중구는 경기도에서 주간에 서울로 배출하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5대 지역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고양시(13%), 과천시(9.4%), 군포시(8.4%), 안양시(8.2%), 수원시(7.6%), 인천시(7.2%), 성남시(6.2%), 용인시(5.7%), 하남시(4.7%) 등에서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가 서울지역으로 유입되는 5대 지역의 하나로 서울의 중구가 위치하고 있다.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는 서울의 전통적인 도심부이고,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서울의 부심부이자 최근에는 새로운 도심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의 다른 한 축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등포지역이다. 영등포 지역도 역시 서울 인근의 경기도 시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의 하나이다. 영등포 지역은 인천시가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다(12.6%). 인천시 외에도 부천시(12.2%), 고양시(9.3%), 수원시(6.9%), 안양시(6.9%), 군포시(6.6%)의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역시 서울의 도심부의 하나인 영등포 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서울의 인근에 있는 경기 시지역 가운데 서울의 중심부나 부도심부로 주간인구를 별로 많이 보내지 않는 곳은 의정부시이다. 의정부시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주간인구는 주로 노원구와 도봉구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경우에도 서울의 구도심부인 종로구에 8.8%의 주간인구가 들어가고 있고, 강남구에도 8.7%의 주간인구가 들어가고 있어서 꼭 서울의 중심부나 부도심부로 주간인구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상대적으로 서울의 중심부나 부도심부에 배출하는 인구의 규모가 다른 경기 시 지역에 비해 작다는 것일 뿐 역시 주간인구의 상당량이 서울로 유입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강동구에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고(28.6%), 서울의 “강남”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송파구에도 서울로 배출되는 주간인구의 19%가 유입되고 있다. 하남시는 서울 강남구에 15.6%의 주간인구를 보내면서 동시에 중구에도 4.7%의 하남시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처럼 <표 17>은 서울의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시 지역에서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 가운데 소위 서울의 새로운 도심부인 “강남”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를 공급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경기도 시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에 주간인구를 공급하는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통근·통학 소요시간

서울의 외곽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 밖에 상주하면서 통근·통학을 서울로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외곽의 경기도 지역에 살면서 서울로 오고 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다음 <표 18>을 통해 살펴보자.⁴⁾

먼저 30분 이내의 통근·통학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20%를 넘는 경우는 광명시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경우이다.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22.2%는 30분 이내에 자신의 일터에 도착한다. 이보다는 못하지만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16%는 30분 이내의 시간이 걸린다. 하남시의 경우에는 18.7%가 30분 이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인접한 강동구로 출퇴근하는 주간인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30분에서 45분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과천시(42.4%), 구리시(41.3%), 성남수정, 중원구(38.6%), 하남시(38%), 성남분당구(34.5%), 광명(34.1%), 고양덕양(32.6%)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 하는 경우 단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힘들다.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군포시(56.3%)와 의왕시(50.7%)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50% 이상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용인시(47.8%), 안양시(47.3%), 수원시(46%), 고양, 일산(45.4%), 광주(44.6%), 부천(40.4%), 안산(41%) 등은 서울로 일일 인구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40% 이상이 1시간-1시간 30분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그 외의 경기 지역에서는 동두천과 과천, 하남, 이천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30% 이상이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

때로는 1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통근·통학하기도 한다. 혹은 두 시간 이상을 걸리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기도 한다. 동두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주, 이천, 포천, 안성 등지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할 때도 2시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2시간 이상 걸리

4) 2000년의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은 은기수(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택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42%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의 시간을 들여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은 평택 이외에도 오산, 이천, 시흥, 안산, 수원, 화성 등지이다. 이에 못 미치지만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주간인구의 29%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이들의 교통수단에 따라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하면서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서울로 오고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들의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표 18>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 2005 (단위: %)

출발지	15분미만	15-29분	30-44분	45-59분	60-89분	90-119분	120분 이상
인천	0.2	1.2	11.7	4.1	42.7	28.6	11.5
수원	0.0	0.2	8.6	5.2	46.0	31.0	9.0
성남 수정, 중원	0.6	10.2	38.6	10.4	30.6	8.2	1.4
성남 분당	0.1	2.9	34.5	11.3	36.5	11.6	3.2
의정부	0.8	5.2	26.8	7.5	35.4	18.6	5.7
안양	0.5	3.9	27.4	10.2	47.3	9.7	1.1
부천	1.1	5.5	27.6	6.2	40.4	15.5	3.8
광명	4.2	18.0	34.1	6.5	30.3	6.4	0.5
평택	0.0	0.0	1.7	1.7	38.3	41.7	16.7
동두천*	0.0	0.0	0.0	6.4	27.7	23.4	42.6
안산	0.2	0.4	10.8	3.9	41.0	31.0	12.9
고양 덕양	0.1	4.5	32.6	9.2	39.0	12.9	1.7
고양 일산	0.1	1.0	19.5	9.2	45.4	20.3	4.5
과천	3.4	12.7	42.4	12.2	28.2	0.8	0.0
구리	1.7	11.5	41.3	8.5	30.1	6.5	0.5
남양주	0.1	5.1	23.3	8.0	39.4	18.4	5.7
오산*	0.0	0.0	4.7	9.3	30.2	39.5	16.3
시흥	0.0	2.3	18.8	3.6	32.6	30.6	12.1
군포	0.2	0.7	16.8	9.1	56.3	14.8	2.1
의왕	0.0	2.5	24.3	9.1	50.7	12.0	1.5
하남	2.7	16.0	38.0	3.5	25.7	6.4	2.9
용인	0.1	0.2	13.0	8.8	47.8	21.4	8.7
파주	0.0	0.0	10.1	3.2	39.3	26.7	20.7
이천*	0.0	0.0	0.0	3.6	28.6	39.3	28.6
안성*	5.0	5.0	0.0	5.0	30.0	30.0	25.0
김포	0.3	4.3	26.8	6.2	35.6	18.6	8.2
화성	0.0	1.1	7.7	4.4	37.4	34.1	15.4
광주	0.6	0.9	22.9	9.3	44.6	17.5	4.2
양주	1.0	2.0	8.3	5.4	33.3	30.9	19.1
포천*	0.0	0.0	14.3	6.1	30.6	20.4	28.6

주) * 60 사례 이하임.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제 5 장 결론

이 연구는 인구학적 연구에서는 사실상 지금껏 무시되어 온 일일 인구이동을 다루고 있다. 인구학적 연구에서 인구이동은 1년 사이의 이동을 단기이동으로 간주하고, 1년 이상의 사이에 이루어진 인구이동을 장기이동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대개 단기이동의 경우 1년 사이에 거주지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장기이동의 경우 5년 사이에 거주지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나 단기이동이든 장기이동이든 이동의 경험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얼마든지 반복이동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1년 전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 정보를 이용해서 장단기 인구이동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제약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인구학적 연구에서는 소외되어 왔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인구이동은 역시 일일 인구이동이다. 통계청의 자료 생산 측면에서 보면 통근·통학과 주간인구라고 표기되어 있는 인구이동이 바로 일일 인구이동에 해당된다. 전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서울 및 경기 지역, 즉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 매일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는데, 그중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인구이동의 방향과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농현상이 오래 전부터 일어났지만 서울로 오는 모든 이동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주위에 수많은 위성도시가 건설되어왔다. 그래서 생업은 서울에서 영위하지만 상주는 서울 주위의 수도권에서 하는 생활유형이 오래 전부터 자리게 되었다.

이 연구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근·통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별, 각 지역별 유출과 유입, 주간인구지수를 통해 살펴 본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통근·통학 인구가 각 지역별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학업을 위해 거의 대부분 통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대의 학업에 따른 통학 양상에서 20대로 건너가면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갑자기 낮아진다. 그래서 20대부터 30대 및 40대까지는 통근·통학자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그러다 50대부터는 다시 통근·통학자의 비율이 낮아진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직업에 따른 통근·통학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판매직과 서비스직이 상대적으로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직업위세가 강한 직종에서는 거의 50% 이상이 다른 시군구도 통근을 하면서 생업을 영위하는 현상이 강하다. 반면에 직업위세가 약한 직종에서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하기 보다는 같은 시군구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계열적으로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일 인구이동은 수도권에서 그 의미가 더 강하다. 이 연구는 수도권의 인구이동 현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내의 일일 인구이동에서 서울 내에서 주간 인구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하는 전체 이동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도 내에서 주간 인구이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하면서 비단 서울에서만 생업을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울 밖의 경기도 지역에서도 수도권의 인구가 생업을 영위하며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주간인구지수가 120이상인 지역을 골라 그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았다. 또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서울의 경우 서울 내에서도 중구, 종로구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부,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하는 강남 부도심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등포 부도심부가 있고, 이들 지역은 인천, 일산, 분당 등의 신도시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지만 소위 서울의 베드타운 지역과 각 도심부의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많음을 확인했다.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경우 가장 많은 경우는 강남구와 서초구로 대표되는 소위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었다. 이들 주간인구는 “강남” 지역만이 아니라 중구로 표현되는 구 도심부에도 많이 유입되고 있었다.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과천 등지에서는 비교적 통근·통학을 통해 서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의 한 시간에 가까운 통근·통학 시간을 걸러 서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때로는 두 시간에 가깝거나 두 시간 이상을 들여 서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통근·통학자도 경기 지역에는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일일 인구이동을 다루어 한국인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수도권의 일일 인구이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한국 사회의 최 중심지인 서울 및 주위의 지역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인구이동을 통해 서울 내에서도 과연 어디가 한국사회의 중심지역인지에 관해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인 의의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일일 인구이동의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매일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몰리는 지역이 어디인지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중심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동방향과 이동에 걸리는 시간, 이동에 이용하는 수단의 분석을 통해 교통행정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교통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기본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한 분석을 했고, 이러한

분석이 앞으로 수도권에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현실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면서 인구 학자들 사이에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이 분야의 연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 6 장 참고문헌

- 곽영호. 1991. “수도권에 있어서 서울 중심의 여객교통권에 관한 연구” 『동국지리』. 제12권.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 백종렬·정환영. 1999. “우리나라의 통근·통학권의 설정” 『지역개발연구논총』. 제7권 제1호.
- 서종국. 1998. “도시공간구조변화와 통행행태의 변화관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3권 제5호.
- 손승호. 2003. “수도권의 통근통학통행과 지역구조의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6권 제1호.
- 송미령. 1998. “통근자의 통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토계획』. 제33권 제4호.
- 은기수. 1997. “주야간활동인구 개념” 『비전 중구 2000-상주인구회복과 인간위주 환경조성을 위한 장기발전방안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_____. 2000. “도심부의 인구문제” 김창석 외 공저. 『도시중심부연구』. 제7장. 서울:보성각.
- _____. 2001.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층구조 비교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4권 제1호.
- _____. 2002. “제15장.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2. 통계청.
- 이상일. 2001. “인구이동 연구에 대한 공간통계학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7권 제3호.
- 전명진·정명지. 2003. “서울대도시권 통근통행 특성변화 및 통근거리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제38권 제 3호.
- 정환영·양경옥. 1998. “청주시 거주자의 통근지역과 통근자 특성” 『지역개발연구논총』 제6권 제1호.
- 통계청. 1997.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 및 통근·통학 현황” 제3회 통계의 날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통계청.
- 허우궁. 1991. “서울의 통근과 거주지 선택” 『지리학』. 제26권 제1호.

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와 생활비 충당 방법에 관한 연구 - 2000년 인구센서스자료와 2005년 인구센서스자료 비교분석을 통하여 -

박 수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1 장 연구목적과 대상

1절 연구목적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대해서 위기감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하나의 추세로 인정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학문적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기획되었다. 우리의 정책적·학문적 관심은 ‘은퇴 이후의 여유로운 노년기’에 대한 것보다는 우선 늘어만 가는 노인(단독)가구의 생계 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데 모아져 있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고령자들이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부양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가 하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고령자의 생계수단과 생활비 충당방안을 경험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예정된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계수단 및 주 부양자는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처음 조사되었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주 부양자는 빠지고 대신 세는 나이 61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고령화시대에 고령자부담이 전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 오래다. 따라서 표본조사가 아닌 센서스에서 고령자의 현재 생활비 부담에 관한 항목은 고령화시대의 고령자부양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2절 연구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0년 인구센서스와 2005년 인구센서스의 만60세 이상 고령자이며 연구주제는 고령자의 생계수단과 생활비 충당방안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2000년 고령자와 2005년 고령자의 성, 연령, 혼인지위, 학력, 경제활동상태, 직종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5년간 고령 집단의 생활상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두 시기 고령자의 가족구성, 세대구성 등 고령자의 거주상태(living arrangement)를 파악하고, 고령자가 주 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피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다음 성, 연령, 교육, 혼인상태, 경제활동 등의 특성과 가족구성 등 개인적인 차원과 가족의 차원에서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안에 관한 문항은 2000년 인구센서스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주제는 2000년과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함께 분석해서 지난 5년 사이에 고령자의 현재 생활비 충당 방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개인적인 수준의 특성상 차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고령층의 자립 혹은 부양 문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시행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

1절 고령화 추세와 고령자의 삶에 대한 선행 연구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65천명으로 총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총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29.4% 증가하여 총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고령 인구는 남성이 39.8%, 여성이 60.2%로 고령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여성의 증가율이 26.2%이었던 반면 남성의 증가율은 34.9%로 나타나 남성의 고령화 현상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표 1> 고령자(65세이상) 규모 및 추이

(단위 : 천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총인구	37,407	40,420	8.1	43,390	7.3	44,554	2.7	45,985	3.2	47,026	2.3
65세이상	1,446	1,750	21.0	2,262	29.3	2,640	16.7	3,372	27.7	4,365	29.4
남 자	539	652	20.9	811	24.3	975	20.2	1,287	32.1	1,736	34.9
여 자	907	1,097	21.0	1,452	32.3	1,666	14.7	2,084	25.2	2,629	26.2
구성비	3.9	4.3		5.2		5.9		7.3		9.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고령자의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5년 현재 고령자의 연령별 분포는 65세-69세가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세-74세 28.7%, 75세-79세 17.6% 등의 순이었으며 80세 이상으로 갈수록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80세 이상 고령자의 분포는 15.2%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고령집단내의 연령별 분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8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0년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476,965명으로 고령인구 내 비율은 14.1%였다. 그러나 2005년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665,547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고령인구 내 비율도 15.2%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고령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이 55.4%, 사별이 42.9%, 이혼과 미혼이 각각 1.1%, 0.5%로 나타났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33.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이 37.0%, 중학교 10.9%, 고등학교 11.4%등의 순이며, 대학 이상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령남성의 경우 무학의 비중이 15.5%로 크게 감소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고령여성은 무학(45.3%)과 초등학교 졸업(38.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학력수준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7).

세대구성별로는 2005년 현재 전체 고령인구 중 33.0%가 1세대 가구에 분포하고 있고, 다음으로 2세대 가구(24.9%)와 3세대 가구(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에만 해도 3세대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떠올릴 때,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1세대 가구나 1인 노인가구의 증대 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다(통계청, 2007). 이는 또한 전체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인구 집단 내에서 고령여성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시간이나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고, 노동에 배분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여성의 경우, 고령남성에 비해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경험이 적고,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인구 중 32.6%인 1,585,432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남성의 36.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령여성은 25.9%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남녀 모두 농업 및 임업(73.8%)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의 경우는 도매·소매업과 보건복지공공개인서비스업 및 기타에 해당되었다. 종사상 지위로는 고령남성의 경우 자영자가 73.8%로 가장 높았던 반면 고령여성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74.0%로 가장 많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통계청, 2007).

한편 노인들의 유급노동시간은 노인 자신의 건강상태나 연령, 직종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김진옥, 2006; 박수미, 2007).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5세-69세의 낮은 연령층이 38.4%, 70대가 27.9%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연령과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노인의 유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직종을 들 수 있다. 노인의 생활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정경희, 2001),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세 시간 이상 긴 유급노동시

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의 경우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농현상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노인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노인 시기는 신체가 약해지고 경제적 수입이 감소되는 등 단독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사노동의 양과 내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행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노인들에 대한 가사노동의 요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문숙재, 1996), 결혼 상태나 세대구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고령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세대 가구나 1인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이라 할지라도 청소 및 정리, 음식준비 등의 기본적인 가사활동은 노인 스스로가 담당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여성의 경우 젊었을 때와 다름없이 주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고령의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시간이 유지되는 가사노동과 달리 노인들의 가족보살피기 관련 시간은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연령까지는 손자녀의 출산이나 아이돌보기, 집안 보살핌 등 가정의 주변역할을 분담하거나 육아 또는 가사돌보기의 경험자로서 기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동거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가사노동의 양과 내용이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따라서 ‘재생산을 위한 활력’으로 여겨지는 일반성인의 여가와 달리 노인의 여가는 매일 매일의 생활 전체이며, 취미나 오락, 자기개발 등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다양하고 전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 고령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조경옥, 2005). 고령자의 여가유형은 성별이나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정경희 외, 2004), 노인의 사회단체 활동은 종교단체(47.9%), 사교단체(35.5%)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원봉사 활동과 평생교육참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절 노인의 생활비 충당에 관한 연구 동향

노인의 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빈곤노인가구 실태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김영숙, 2002; 최현수·류연규, 2003). 이들 연구에선 노인단독가구와 비노인가구간의 소득 격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인단독가구가 빈곤가구일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혹은 노인 가구의 소득이 건강, 만족도 등과 같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백경숙·권용신, 2007).

노인 가구의 소득원을 분석한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효미(2007)는 노동패널 자료 중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 혹은 가구주가 60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소득원천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노동패널 자료 내의 노인 가구는 688가구로 전체의 14.2%(2005년 조사기준)이다. 분석결과, 총소득에 있어서 노인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기별 변화 추이를 보면 노인가구의 실질소득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8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근로소득 39.2%, 사회보험소득 27.6%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경우 단독 혹은 1세대인 비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88.5%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평균소득액을 항목별로 볼 때, 근로소득이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였으며 연간 403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비노인가구의 연평균 총소득이 1천 937만원인 점에 비교해 보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무려 5배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반면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한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은 단독 또는 1세대 비노인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 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평균해 보면, 이전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28.4%, 사회보험소득 9.7% 순이었다.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이전소득에 의존해 가구경제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전소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면, 친척/친지보조금이 6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효미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가구의 소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근로여부이지만 가구주가 은퇴한 이후에는 여전히 자녀 혹은 친지에 의한 부양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김수완·조유미(2006)는 노인계층의 소득구성 방식, 근로소득 비중

이 높은 노인가구 유형의 특징과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구성 변화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가구별 총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소득원별 빈곤제거효과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 및 사적이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둘째, 연령에 따라 근로소득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70세 미만까지도 근로소득의 비중은 전체 소득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가 고소득, 고연령일수록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에 의해 근로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노인단독가구에 비해 성인자녀동거가구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74%로 미루어 보아 근로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상당부분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들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적연금 수급비율은 높지 않으나 일단 수급하는 경우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급가구에서는 공적연금 급여가 없는 대신 사적이전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국에서 사적이전이 거의 없고 공적연금이 근로소득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과 차별적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노인가구 집단별 빈곤율과 소득원별 빈곤제거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거나 일하지 않을 경우,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을 경우, 노인단독가구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정경희 외, 2004)에 따르면 노인의 28.3%만이 경제적인 노후생활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적인 노후생활비마련 방법으로 사회보장 등 국가가 40.9%, 스스로 마련이 40.2%, 가족 및 자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9.7%로 나타나 노인 부양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조사결과에서는 국가책임이 25.5%, 스스로 마련이 38.8%, 가족 및 자녀라고 응답한 노인은 32.5%였다. 노인의 근로 및 사업·부업소득을 갖고 있는 비율은 27.8%, 자산소득은 12.5%, 공적연금 13.9%, 사적이전소득 78.6%로 나타났다. 평균 용돈은 13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30.8%가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취업노인 중 81.7%가 농·어·축산업과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1998년 조사의 노인취업률은 29.0%로 2004년에 노인취업률이 약 1.8% 포인트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비취업노인의 17.5%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노인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마련'이라는 점을 제안해 주고 있다.

그밖에 고령층의 생활비 충당방안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illiamson과 Smeeding(2004)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받는 사회보험금과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룩셈부르크 임금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5개 OECD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20년 동안의 합성 코호트를 추적하여 사적 임금과 사회보험금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노인의 대다수가 소득 중 대다수를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보험금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런 보험금 수급 여부가 여성노인이 자신의 빈곤 정도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정년퇴직과 공적연금 이전에 관대한 나라에 사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빈곤의 수준이 낮았다. 또한 이 경우에 주택은 특히 중요한 변수로서 나타났다. 노인 주택소유자들일수록 노인 임대주택 거주자들보다 빈곤할 확률이 낮았다.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주택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부양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제 3 장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의 변화

이 장에서는 2000년 고령자와 2005년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5년간 고령집단의 생활상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두 시기 고령자의 가족구성, 세대구성 등 고령자의 거주상태(living arrangement)의 변화도 파악하고자 한다.

1절 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

2000년과 2005년 인구센서스를 통해 본 고령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변화 추세가 읍면부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동부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60.14%이었던 반면 2005년에는 동 비율이 55.28%로 감소하였다. 2000년에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고령자가 분포해 있는 지역은 서울로서 서울에 전체 고령자의 16.88%가 거주하였다. 반면 2005년 서울 거주 고령자 비율은 전체의 14.73%로 감소했으며 그 결과 2005년 고령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고령자의 14.78%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령자의 지역 분포는 이후 고령자의 직종, 산업 분포와도 일관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2>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2000년	2005년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17538(16.88)	20540(14.73)
	부산광역시	7343(7.07)	8877(6.37)
	대구광역시	4649(4.48)	5544(3.98)
	인천광역시	4229(4.07)	5214(3.74)
	광주광역시	2346(2.26)	2975(2.13)
	대전광역시	2218(2.14)	2723(1.95)
	울산광역시	1290(1.24)	1591(1.14)
	경기도	15536(14.96)	20608(14.78)
	강원도	4680(4.51)	6411(4.60)
	충청북도	4348(4.19)	6192(4.44)
	충청남도	6381(6.14)	8852(6.35)
	전라북도	6602(6.36)	9790(7.02)
	전라남도	7884(7.59)	12492(8.96)
	경상북도	9473(9.12)	13991(10.04)
	경상남도	8063(7.76)	12046(8.64)
	제주도	1303(1.25)	1567(1.12)
동읍면부	동부	62472(60.14)	77068(55.28)
	읍면부	41411(39.86)	62345(44.72)
합계		103883(100.0)	139413(100.0)

<표 3>은 고령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분포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

성보다 긴 까닭에 2000년이나 2005년 모두 여성고령자의 비율이 남성고령자의 비율보다 조금 높다. 그러나 그 차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서 고령집단내의 남성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추세는 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가구의 증가와 연관되는 현상으로서 2000년 고령자 중 가구주인 경우가 전체의 53.12%였던 데 비해 2005년 고령자 중 가구주인 경우는 전체의 57.48%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인부부가 가구주 부부를 이루는 비율은 2000년 74.25%에서 2005년 81.05%로 증가하였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3세대 가구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령화의 정도가 더욱 진척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의 9.2%였던 데 비해 2005년에는 동 비율이 10.88%로 증가했다. 고령집단 내에 초고령집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또한 고령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70% 가량 되어 고령층이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5년 고령자의 교육수준이 좀 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고령자 가운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는 전체의 6.66%인 데 비해 2005년에는 동 비율이 7.3%로 증가하였다.

고령자의 생활세계 역시 다른 생애주기집단과 마찬가지로 성별로 매우 다르다(박수미·선보영·김진욱, 2005). <표 4>는 고령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성별로 나눠본 것이다. 먼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연령계급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이지만 2000년에 비해 2005년 80세 이상에서 차지하는 여성고령자의 비중이 조금 감소하였다.

고령집단의 혼인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별한 사람들의 90% 가량이 여성고령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고령층의 여성 가운데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까닭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고령자의 여성가구주 비율 역시 34%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고령집단의 성별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고령집단 교육수준의 성별격차 역시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령집단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여성고령자의 혼인지위, 교육수준 등이 매우 열악하여 이들 집단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표 3>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포

(단위: 명, %)

		2000년	2005년
성별	남자	42491(40.90)	58059(41.65)
	여자	61392(59.10)	81354(58.35)
연령	60세이상-65세 미만	35854(34.51)	40249(28.87)
	65세이상-70세 미만	27986(26.94)	37694(27.04)
	70세이상-75세 미만	18438(17.75)	28737(20.61)
	75세이상-80세 미만	12053(11.60)	17559(12.59)
	80세이상-85세 미만	6148(5.92)	9968(7.15)
	85세이상	3404(3.28)	5206(3.73)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55179(53.12)	80131(57.48)
	가구주의 배우자	21946(21.13)	32858(23.57)
	자녀	60(0.06)	153(0.11)
	자녀의 배우자	89(0.09)	98(0.07)
	가구주의 부모	22826(21.97)	25648(24.69)
	배우자의 부모	2261(2.18)	
	조부모	561(0.54)	
	손자녀 및 그 배우자	8(0.01)	20(0.02)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12(0.01)	
	형제자매, 그 배우자	154(0.15)	258(0.19)
	기타 친인척 (형제자매의자녀및그배우자)	8(0.01)	301(0.29)
	기타 친인척 (부모의형제자매및그배우자+기타친 인척)	293(0.28)	
	기타동거인	485(0.47)	555(0.40)
	교육정도**	안 받았음	36973(35.61)
초등학교		37585(36.19)	51802(37.16)
중학교		10971(10.57)	17454(12.52)
고등학교		11390(10.97)	17998(12.91)
대학교(4년제 미만)		1622(1.56)	8957(6.42)
대학교(4년제 이상)		4523(4.36)	
대학원(석사과정)		534(0.51)	1225(0.88)
대학원(박사과정)		244(0.23)	
합계		103883(100.0)	139413(100.0)

주1) * 2000년 가구주와의 관계 결측값=1

2) ** 2000년 교육정도 결측값=41

<표 4> 고령자의 성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2000년		2005년		합계
		남	여	남	여	
5세 단위 나이	60세이상-65세 미만	16662(46.47)	19192(53.53)	18788(46.68)	21461(53.32)	40249(100.0)
	65세이상-70세 미만	12050(43.06)	15936(56.94)	16822(44.63)	20872(55.37)	37694(100.0)
	70세이상-75세 미만	6881(37.32)	11557(62.68)	11768(40.95)	16969(59.05)	28737(100.0)
	75세이상-80세 미만	4158(34.50)	7895(65.50)	6188(35.24)	11371(64.76)	17559(100.0)
	80세이상-85세 미만	1954(31.78)	4194(68.22)	3155(31.65)	6813(68.35)	9968(100.0)
	85세이상	786(23.09)	2618(76.91)	1338(25.70)	3868(74.30)	5206(100.0)
10세 단위 나이	60세 이상-70세 미만	28712(44.97)	35128(55.03)	35610(45.69)	42333(54.31)	77943(100.0)
	70세 이상-80세 미만	11039(36.20)	19452(63.80)	17956(38.79)	28340(61.21)	46296(100.0)
	80세 이상	2740(28.69)	6812(71.31)	4493(29.61)	10681(70.39)	15174(100.0)
혼인 상태	미혼	139(35.01)	258(64.99)	256(38.44)	410(61.56)	666(100.0)
	배우자 있음	37708(59.57)	25597(40.43)	50971(58.25)	36529(41.75)	87500(100.0)
	사별	4196(10.74)	34867(89.26)	5755(11.72)	43360(88.28)	49115(100.0)
	이혼	431(39.94)	648(60.06)	1077(50.52)	1055(49.48)	2132(100.0)
가구주 와 의 관계	가구주	37011(67.07)	18168(32.93)	52511(65.53)	27620(34.47)	80131(100.0)
	가구주의 배우자	388(1.77)	21558(98.23)	573(1.74)	32285(98.26)	32858(100.0)
	자녀	38(63.33)	22(36.67)	107(69.93)	46(30.07)	153(100.0)
	자녀의 배우자	7(7.87)	82(92.13)	18(18.37)	80(81.63)	98(100.0)
	가구주의 부모	4323(18.94)	18503(81.06)	4502(18.00)	20509(82.00)	25011(100.0)
	배우자의 부모	447(19.77)	1814(80.23)			
	조부모	1(12.50)	7(87.50)	0(0.0)	0(0.0)	0(0.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3(25.00)	9(75.00)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44(7.84)	517(92.16)			
	형제자매, 그 배우자	54(35.06)	100(64.94)	108(41.86)	150(58.14)	258(0.19)
	기타 친인척 (형제자매의자녀및그 배우자)	1(12.50)	7(87.50)	90(25.79)	259(74.21)	349(100.0)
	기타 친인척 (부모의형제자매및그 배우자+기타친인척)	73(24.91)	220(75.09)			
	기타동거인	101(20.82)	384(79.18)	150(27.03)	405(72.97)	555(100.0)
교육 정도	안 받았음	7264(19.65)	29709(80.35)	8014(19.09)	33963(80.91)	41977(100.0)
	초등학교	14782(39.33)	22803(60.67)	19768(38.16)	32034(61.84)	51802(100.0)
	중학교	6588(60.05)	4383(39.95)	9918(56.82)	7536(43.18)	17454(100.0)
	고등학교	7935(69.67)	3455(30.33)	12135(67.42)	5863(32.58)	17998(100.0)
	대학교(4년제 미만)	1275(78.61)	347(21.39)	7129(79.59)	1828(20.41)	8957(100.0)
	대학교(4년제 이상)	3913(86.51)	610(13.49)			
	대학원(석사과정)	488(91.39)	46(8.61)	1095(89.39)	130(10.61)	1225(100.0)
대학원(박사과정)	226(92.62)	18(7.38)				
합계		42491(40.90)	61392(59.10)	58059(41.65)	81354(58.35)	139413(100.0)

주) 각 변수마다 성별 분포를 보이기 위한 표이므로 row percentage를 제시하였음.

2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것이 <표 5>이다. 2000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의 비율이 32.48%에서 2005년에는 34.77%로 약간 증가했다. 2005년에 증가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주로 자영업자의 비중 증가와 연관된다. 또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직업 및 산업 분포를 보면 <표 2>에서 살펴본 읍면부 거주 고령층의 증가와 일맥상통하게 농림어업직종, 농림어업 산업의 비중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2005년에는 2000년에 비해서 숙박및음식점업과 운수업 등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것 역시 자영업자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반적으로 2000년에서 5년이 경과한 2005년에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근소하나마 증가했지만 증가한 분야가 주로 농림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 형태로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에는 고령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¹⁾. <표 6>을 보면 2000년 당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70,118명 중 8.52%인 5,977명이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실업자로 파악되었고 구직활동을 한 5,977명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53%에 달하는 1,227명이었다. 즉 고령층 내부의 취업요구는 실제 취업률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은 2005년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장소를 표로 제시한 것으로서 고령취업자의 63.09%가 야외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등 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물론 이것 역시 고령취업자의 대부분이 농림어업, 운수업, 자영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는 것이다.

1) 2005년 인구센서스에도 고령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설문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2005년 2% 인구센서스 자료에 이 설문항이 제공되지 않아 분석하지 못했다.

<표 5> 조사대상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

(단위: 명, %)

		2000년	2005년
경제활동상태	취업(일하였음)	33402(32.17)	48470(34.77)
	취업(일시휴직)	320(0.31)	
	미취업	70118(67.53)	90930(65.23)
종사상지위	임금 근로자	6811(20.20)	8964(18.49)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8178(53.91)	27343(56.41)
	고용원을 둔 사업주	1361(4.04)	1633(3.37)
	무급 가족 종사자	7372(21.86)	10529(21.72)
직업	의회의원	1156(3.43)	1070(2.21)
	전문가	749(2.22)	1006(2.0)
	기술공	612(1.81)	1006(1.47)
	사무직	578(1.71)	951(1.96)
	서비스직	1159(3.44)	1620(3.34)
	판매직	2433(7.22)	2757(5.69)
	농림어업	21508(63.78)	32224(66.49)
	기능원	981(2.91)	1461(3.01)
	장치, 기계조작	973(2.89)	1461(3.4)
	단순노무	3571(10.59)	4978(10.27)
	분류불능(군인포함)	-	34(0.07)
산업	농업, 임업, 어업	21852(64.80)	32637(67.35)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1880(5.57)	2277(4.70)
	건설업	961(2.85)	1092(2.25)
	도매및소매업	2789(8.27)	3458(7.14)
	숙박및음식점업	1040(3.08)	1596(3.29)
	운수업	666(1.97)	1106(2.28)
	통신업	23(0.07)	59(0.12)
	금융및보험업	245(0.73)	242(0.50)
	부동산및임대업	1305(3.87)	1841(3.80)
	사업서비스업	742(2.20)	1163(2.40)
	공공행정	329(0.98)	459(0.95)
	교육서비스업	480(1.42)	663(1.3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44(0.72)	362(0.75)
	오락문화	192(0.57)	254(0.52)
	기타공공수리	792(2.35)	1060(2.19)
	분류불가능 (가사서비스업,국제및외국기관포함)	182(0.54)	193(0.40)
합계		33722(100.0)	48462(100.0)

<표 6> 조사대상의 구직활동 분포 (2000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직여부	찾아 보지 않았음	64141	91.48
	찾아 보았음	5977	8.52
합 계		70,118	100.0
일할 수 있었는지	일할 수 있었음	1227	20.53
	가사, 학업, 질병 등 때문에 일할 수 없었음	4750	79.47
합 계		5,977	100.0

<표 7> 고령취업자의 근로장소 분포 (2005년)

(단위: 명, %)

		2005년
근로장소	사업장(건물 및 땅)	12928(26.67)
	자기 집	2526(5.21)
	남의 집	486(1.0)
	거리	1221(2.52)
	야외 작업현장	30578(63.09)
	운송수단	587(1.21)
	기타	143(0.3)
합계		48469(100.0)

이번에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실태를 성별로 살펴보겠다. <표 8>을 보면,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2000년에 42.98%, 2005년에 44.21%로 근소하나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층이고 그에 따라 취업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고령여성이 숫적으로 고령남성보다 많고 고령여성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가 경제적 필요와 연관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고령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참여율 자체는 큰 문제일 것이다. 그나마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용형태나 직종, 산업 분포를 살펴보아도 고령여성들의 열악한 생활세계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령취업자 가운데 무급가족 종사자로 일하는 집단의 95% 가량이 여성이며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령여성의 비율은 불과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인 고령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취업률도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바로 이 점에서 증가하는 고령집단의 인적자본량(human capital) 증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8> 성별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2000년		2005년		합계
		남	여	남	여	
경제 활동 상태	취업(일하였음)	19157(57.35)	14245(42.65)	27040(55.79)	21430(44.21)	48470(100.0)
	취업(일시휴직)	192(60.0)	128(40.0)			
	미취업	23122(32.98)	46996(67.02)	31015(34.11)	59915(65.89)	
총 사 상 지 위	임금 근로자	4742(69.92)	2069(30.38)	6191(69.07)	2773(30.93)	8964(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2904(70.99)	5274(29.01)	18964(69.36)	8379(30.64)	27343(100.0)
	고용원을 둔 사업주	1190(87.44)	171(12.56)	1399(85.67)	234(14.33)	1633(100.0)
	무급 가족 종사자	513(6.96)	6859(93.04)	485(4.61)	10044(95.39)	10529(100.0)
직업	의회의원	1091(94.38)	65(5.62)	989(92.43)	81(7.57)	1070(100.0)
	전문가	665(88.79)	84(11.21)	872(86.68)	134(13.32)	1006(100.0)
	기수공	539(88.07)	73(11.93)	619(86.69)	95(13.31)	714(100.0)
	사무직	477(82.53)	101(17.47)	770(80.97)	181(19.03)	951(100.0)
	서비스직	413(35.63)	746(64.37)	597(36.85)	1023(63.15)	1620(100.0)
	판매직	1290(53.02)	1143(46.98)	1428(51.80)	1329(48.20)	2757(100.0)
	농림어업	10973(51.02)	10535(48.98)	15951(49.50)	16273(50.50)	32224(100.0)
	기능원	704(71.76)	277(28.24)	1117(76.45)	344(2.55)	1461(100.0)
	장치, 기계조작	871(89.52)	102(10.48)	1498(91.01)	148(8.99)	1646(100.0)
	단순노무	2325(65.11)	1246(34.89)	3170(63.68)	1808(36.32)	4978(100.0)
	분류불능(군인포함)	-	-	23(67.65)	11(32.35)	34(100.0)

주) 각 변수마다 성별 분포를 보이기 위한 표이므로 row percentage를 제시하였음.

<표 9> 취업별 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2000년			2005년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일하였음	일시적휴직			
나 이	60세이상-65세 미만	16074(44.83)	159(0.44)	19619(54.72)	18811(46.74)	21435(53.26)
	65세이상-70세 미만	10087(36.04)	83(0.3)	17815(63.66)	15332(40.68)	22359(59.32)
	70세이상-75세 미만	4573(24.81)	49(0.27)	13812(74.93)	9172(31.92)	19563(68.08)
	75세이상-80세 미만	1991(16.52)	15(0.12)	10045(83.35)	3711(21.14)	13847(78.86)
	80세이상-85세 미만	560(9.11)	12(0.2)	5575(90.69)	1172(11.76)	8795(88.24)
	85세이상	117(3.47)	2(0.06)	3252(96.47)	272(5.23)	4931(94.77)
교 육 정 도	안 받았음	10220(27.64)	100(0.27)	26651(72.09)	12705(30.27)	29268(69.73)
	초등학교	13481(35.87)	130(0.35)	23973(63.79)	20519(39.61)	31280(60.39)
	중학교	3587(32.69)	42(0.38)	7343(66.93)	6050(34.66)	11403(65.34)
	고등학교	3663(32.16)	28(0.25)	7699(67.59)	5864(32.59)	12131(67.41)
	대학교(4년제 미만)	499(30.76)	6(0.01)	1117(68.87)	2731(30.50)	6224(69.50)
	대학교(4년제 이상)	1535(33.94)	11(0.01)	2977(65.82)		
	대학원(석사과정)	240(44.94)	2(0.37)	292(54.68)	601(49.06)	624(50.94)
대학원(박사과정)	178(72.95)	1(0.41)	65(26.64)			
합계		33402(32.17)	320(0.31)	70118(67.53)	48470(41.65)	90930(58.35)

주) 각 변수마다 취업여부별 분포를 보이기 위한 표이므로 row percentage를 제시하였음.

3절 고령자의 거주상태(living arrangement)

<표 10>은 고령자의 거주상태를 주택 점유형태, 주인가구 여부, 거처 종류 별로 살펴본 것이다. 2000년에 비해 2005년 자가 소유 비율이 2.4%가량 높아졌다. 그와 동시에 월세 비율도 0.2% 가량 높아져서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고령집단내의 이질화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했다. 거처종류는 단독주택 비율이 67% 가량 되어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근소하나마 아파트의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단독주택 거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향과 연관된다.

<표 10> 조사대상의 거주상태 분포

(단위: 명, %)

		2000년		2005년	
점유형태	자기 집	81374(78.35)		112516(80.71)	
	전세(월세 없음)	12282(11.83)		12056(8.65)	
	월세(보증금있는월세)	4977(4.79)	7378(7.1)	10560(7.57)	
	월세(보증금없는월세)	1341(1.29)			
	월세(사글세)	1060(1.02)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2821(2.72)		4281(3.07)	
주인가구	주인가구	81216(78.51)		112516(80.71)	
	주인 아닌 가구(대표가구)	12886(12.46)		26897(19.29)	
	주인 아닌 가구(기타 세 들어 사는가구)	9351(9.04)			
거처종류	단독주택	69934(67.32)		93285(66.91)	
	아파트	22464(21.62)		33324(23.90)	
	연립주택	4827(4.65)		10012(7.18)	
	다세대주택	2331(2.24)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내 주택	3897(3.75)		2184(1.57)	
	기타(오피스텔)	11(0.01)	480(0.41)	608(0.44)	
	기타(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21(0.02)			
	기타(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45(0.04)			
	기타(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 기타)	353(0.34)			
합계	103883(100.0)		139413(100.0)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에서 5년이 경과한 2005년 고령층의 가구유형과 세대구성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노인만으로 된 가구의 증가이다. 2000년 고령층의 가구유형 가운데

가족과 함께 사는 혈연가구는 전체의 85.25%에서 2005년 82.31%로 감소한 반면,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은 14.29%에서 17.26%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사는 혈연가구의 경우에도 노인부부만이 사는 가구가 2000년엔 30.1%였던 것이 2005년에는 35.78%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는 2000년에 전체의 44.85%였던 것이 2005년에는 60.5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앞서 고령층의 연령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령층 내부의 초고령집단의 증가에도 기인하며 남성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부부가구의 비중도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노인가구의 증가는 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와는 별도로 또 다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상이라고 하겠다.

<표 11> 조사대상의 가구유형과 세대구성 분포

(단위: 명, %)

		2000년	2005년
가구유형	혈연가구	88556(85.25)	114747(82.31)
	비혈연가구	484(0.46)	599(0.43)
	1인가구	14843(14.29)	24067(17.26)
세대구성*	1인가구	14843(14.29)	24067(17.34)
	부부	31270(30.1)	49664(35.78)
	부부+형제자매	26(0.03)	48(0.03)
	부부+기타 친인척	33(0.03)	194(0.14)
	가구주+형제자매	166(0.16)	40(0.03)
	가구주+기타 친인척	143(0.14)	220(0.16)
	1세대 기타	405(0.39)	558(0.40)
	부부+자녀	13814(13.3)	17186(12.38)
	부+자녀	732(0.7)	1008(0.73)
	모+자녀	4202(4.04)	5504(3.97)
	부부+양친	744(0.72)	888(0.64)
	부부+한부모	3527(3.4)	4936(3.56)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30(0.03)	21(0.02)
	조부모+손자녀	1563(1.5)	2216(1.60)
	2세대 기타	5187(4.99)	6873(4.95)
	부부+자녀+양친	5749(5.53)	4828(3.48)
	부부+자녀+한부모	12701(12.23)	11526(8.30)
	3세대 기타	7473(7.19)	8389(6.04)
	4세대 이상	786(0.76)	648(0.47)
	합계		103883(100.0)

주)* 2005년 결측값=599(비혈연가구)

4절 고령자의 건강 상태

고령자의 건강 상태는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는 집안활동과 바깥활동을 혼자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물어보았고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는 두 개의 범주로 구성된 활동제약 여부 문항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2> ~ <표 15>에 나타나 있다.

2000년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가운데 집안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61%이며 바깥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령자의 활동상태는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 고령자의 활동상태(2000년)

(단위: 명, %)

집안활동	혼자 할 수 있음	100088	96.39
	혼자 할 수 없음	3750	3.61
바깥활동	혼자 할 수 있음	98249	94.62
	혼자 할 수 없음	5589	5.38
합계		103883	100.0

2005년에는 좀 더 상세하게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감각기관, 학습능력, 육체적 활동 등에 대한 질문에서 이들 모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72.45%였고, 걷기 등 육체적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3.64%였다. 두 번째 범주의 활동제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취업 활동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9.93%이며 쇼핑 등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4.71%였다. 이때 특기할 만한 것은 취업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95.11%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05년에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34.77%에 불과했다. 결국 고령집단의 취업 요구는 매우 큰 반면 실제로 이들이 나가서 일할 만한 일자리가 태부족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활동제약 여부의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 <표 14>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고령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활동상에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고령여성의 평균연령이 고령남성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취업별로 살펴본 활동제약 여부 역시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활동상태가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3>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2005년)

(단위: 명, %)

활동제약1	시각, 청각, 언어 장애	6874(4.93)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3788(2.72)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32951(23.64)
	없음	101003(72.45)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9229(6.62)
활동제약2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6330(4.54)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20511(14.71)
	취업활동(16세 이상)	6819(4.89)
	없음	111432(79.93)

<표 14> 성별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

(단위: 명, %)

		남	여	합계
활동제약 1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시각, 청각, 언어 장애	2852(41.49)	4022(58.51)	6874(100.0)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1295(34.19)	2493(65.81)	3788(100.0)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10816(32.82)	22135(67.18)	32951(100.0)
	없음	44880(44.43)	56123(55.57)	101003(100.0)
활동제약 2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3145(34.08)	6084(65.92)	9229(100.0)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2356(37.22)	3974(62.78)	6330(100.0)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6762(32.97)	13749(67.03)	20511(100.0)
	취업활동(16세 이상)	2291(33.60)	4528(66.40)	6819(100.0)
	없음	48590(43.61)	62842(56.39)	111432(100.0)

주) 각 변수마다 성별 분포를 보이기 위한 표이므로 row percentage를 제시하였음.

<표 15> 취업별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

(단위: 명, %)

		취업	미취업	합계
활동제약 1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시각, 청각, 언어 장애	1317(19.16)	5557(80.84)	6874(100.0)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397(10.48)	3391(89.52)	3788(100.0)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7170(21.76)	25780(78.24)	32951(100.0)
	없음	40137(39.74)	60864(60.26)	101003(100.0)
활동제약 2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1691(18.32)	7538(81.68)	9229(100.0)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530(8.37)	5800(91.63)	6330(100.0)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3351(16.34)	17160(83.66)	20511(100.0)
	취업활동(16세 이상)	1059(15.53)	5760(84.47)	6819(100.0)
	없음	43194(38.76)	68235(61.24)	111432(100.0)

주) 각 변수마다 취업여부별 분포를 보이기 위한 표이므로 row percentage를 제시하였음.

제 4 장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 방안

1절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 방안 분포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안에 대한 질문은 2000년 조사와 2005년 조사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조사에서는 고령자의 생계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응답 항목으로는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②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③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고령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비해 2005년 조사에서는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이 무엇인지를 묻고 응답 항목으로 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② 예금,적금, ③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④ 개인연금(은행,보험 등) ⑤ 부동산 ⑥ 함께 사는 자녀 ⑦ 따로 사는 자녀 ⑧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 ⑨ 기타(주식, 채권, 증권 + 친인척 + 이웃, 종교, 사회단체보조 포함) 등이 응답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05년 조사에서는 생활비 원천을 두 가지까지 중복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2000년 고령자의 생계수단을 살펴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의 43.72%였고 나머지 56.28%는 자녀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정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장남, 그 외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 가족에 의존하는 비율이 91%를 넘어서 고령자들이 대부분 가족관계내의 이전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고령자의 생계수단과 부양자(2000년)

(단위: 명, %)

		빈도	비율
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45397	43.72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40681	39.18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17760	17.1
부양자종류	장남, 며느리	32490	55.59
	그 외의 아들, 며느리	13549	23.18
	딸, 사위	6317	10.81
	기타 친척	701	1.2
	정부 사회단체	4764	8.15
	기타	620	1.06
	합계	103883	100.0

2005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응답건수 177,020개의 생활비 원천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생활비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59%였다. 그밖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비 원천은 역시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서 함께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18.08%,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24.55%로서 전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42.63%나 되어 고령자 집단의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예금이나 적금, 연금,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 생활비의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눈에 띄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65%에 불과했다. 2000년도 고령층의 생계수단 응답결과나 2005년 고령층의 생활비 원천 응답결과에서 공히 발견되는 것은 고령집단의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점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거의 전적으로 가족의 이전소득과 같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표 19>는 2005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을 내용별로 크게 4가지 범주로 재분류한 것으로 4가지 범주는 ① 자신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② 자산소득, 연금, ③ 자녀로부터 지원, ④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이다.

<표 17>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2005년)

(단위: 명, %)

		2005년
고령자 생활비 원천 (중복선택 가능)	본인.배우자의 일,직업	52380(29.59)
	예금,적금	13132(7.42)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11552(6.53)
	개인연금(은행,보험 등)	2817(1.59)
	부동산	7915(4.47)
	함께 사는 자녀	32000(18.08)
	따로 사는 자녀	43461(24.55)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10004(5.65)
	기타 (주식, 채권, 증권 + 친인척 + 이웃, 종교, 사회단체보조 포함)	3759(2.12)
	합계	177020(100.0)

<표 18> 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2005년)

(단위: 명, %)

		남	여	합계
고령자 생활비 원천 (중복선택 가능) 1순위	본인.배우자의 일,직업	27733(36.71)	24647(24.29)	52380(29.59)
	예금,적금	6648(8.80)	6484(6.39)	13132(7.42)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6942(9.19)	4610(4.54)	11552(6.53)
	개인연금(은행,보험 등)	1556(2.06)	1261(1.24)	2817(1.59)
	부동산	4033(5.34)	3882(3.83)	7915(4.47)
	함께 사는 자녀	8825(11.68)	23175(22.84)	32000(18.08)
	따로 사는 자녀	15097(19.99)	28364(27.95)	43461(24.55)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3329(4.41)	6675(6.58)	10004(5.65)
	기타(주식, 채권, 증권 + 친인척 + 이웃, 종교, 사회단체보조 포함)	1377(1.82)	2382(2.35)	3759(2.12)
합계	75540(100.0)	101480(100.0)	177020(100.0)	

<표 19>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안 4범주(2005년)

(단위: 명, %)

		빈도	비율
생활비 충당방안	자신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52380	30.23
	자산소득, 연금	35416	20.44
	자녀로부터 지원	75461	43.55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	10004	5.77
합계		173261	100.00

2절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별 생활비 충당 방안

2000년 고령자의 생계수단을 개인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83.4%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수입만으로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75.34%가 자녀 등 다른 수입원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나 다른 단체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자 집단 중에서 가장 젊은 층인 60세~64세 연령계층에서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수입만으로 살고 있는 비율은 64.18%에 지나지 않았다.

혼인상태별로 생계수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는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사별한 고령자보다 이혼한 고령자의 경우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이혼자가 사별자보다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자녀 등 다른 수입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생계수단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고령남성 가운데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전체의 59.09%인 데 비해 여성은 동 비율이 33.08%에 불과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여러 지표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자본, 고연령, 낮은 취업 비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고령여성의 생계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생계수단 여부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률적으로 자신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아서 경제적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고령자의 개인특성별 생활비 원천을 살펴보면(<표 21> 참조), 취업자의 경우 전체의 67.24%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 전체의 60.02%가 자녀의 지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고령자의 취업 자체는 고령자 자신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볼 때 고령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이들의 생활비 충당방법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미취업자의 경우 저축이나 연금, 부동산 등 자산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도 24.08%로 취업자의 경우보다 높지만 미취업자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도 8.02%로 높았다.

<표 20> 개인적 특성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

(단위: 명, %)

	노인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합계
경제 활동 상태	취업(일하였음)	27855(83.4)	5039(15.09)	507(1.52)	33401(100.0)
	취업(일시휴직)	248(77.81)	64(20.0)	7(2.19)	320(100.0)
	미취업	17293(24.66)	35578(50.74)	17246(24.6)	70117(100.0)
나이	60세이상-65세 미만	23010(64.18)	9761(27.23)	3081(8.59)	35852(100.0)
	65세이상-70세 미만	13471(48.14)	10454(37.36)	4060(14.51)	27985(100.0)
	70세이상-75세 미만	5802(31.48)	8688(47.14)	3942(21.39)	18432(100.0)
	75세이상-80세 미만	2326(19.3)	6330(52.53)	3395(28.17)	12051(100.0)
	80세이상-85세 미만	634(10.31)	3472(56.48)	2041(33.2)	6147(100.0)
	85세이상	154(4.57)	1976(58.62)	1241(36.81)	3371(100.0)
나이	60세이상-70세 미만	36481(57.15)	20215(31.67)	7141(11.19)	63837(100.0)
	70세이상-80세 미만	8128(26.66)	15018(49.27)	7337(24.07)	30483(100.0)
	80세 이상	788(8.28)	5448(57.24)	3282(34.48)	9518(100.0)
혼인 상태	미혼	147(37.12)	66(16.67)	183(46.21)	396(100.0)
	배우자 있음	37834(59.77)	19126(30.22)	6338(10.01)	63298(100.0)
	사별	7012(17.95)	21120(54.07)	10930(27.98)	39062(100.0)
	이혼	403(37.35)	369(34.2)	307(28.45)	1079(100.0)
성별	남자	25095(59.09)	12757(30.04)	4617(10.87)	42469(100.0)
	여자	20302(33.08)	27924(45.5)	13143(21.42)	61369(100.0)
교육 정도	안 받았음	10695(28.93)	17317(46.84)	8959(24.23)	36971(100.0)
	초등학교	17423(46.36)	14566(38.76)	5595(14.89)	37584(100.0)
	중학교	5741(52.33)	3821(34.83)	1409(12.84)	10971(100.0)
	고등학교	6664(58.52)	3485(30.6)	1239(10.88)	11388(100.0)
	대학교(4년제 미만)	1057(65.17)	416(25.65)	149(9.19)	1622(100.0)
	대학교(4년제 이상)	3164(69.95)	991(21.91)	368(8.14)	4523(100.0)
	대학원(석사과정)	436(81.65)	68(12.73)	30(5.62)	534(100.0)
	대학원(박사과정)	217(88.93)	17(6.97)	10(4.1)	244(100.0)

연령별로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의외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산소득이나 연금소득 의존도도 높아서 고령집단내의 초고령집단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세인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60대 초반집단의 높은 자산소득 비율은 고령사회가 우리의 예정된 미래인 만큼 서서히 노후를 준비해 온 이들 집단의 생애전략이 어느 정도 드

러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혼인상태별로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2000년 고령자 생계 수단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유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 의존비율이 높은 반면 이혼자, 사별자의 순으로 근로소득 의존비율이 낮아지고 대신 자녀 의존 비율이 높아진다. 성별로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근로소득 비율이 남성보다 낮지만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이와 같은 성별 격차는 현격히 감소하였다.

<표 21> 개인적 특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

(단위: 명, %)

	생활비 충당방법	근로소득	자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 지원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	합계
경제 활동 상태	취업(일하였음 + 일시휴직)	43869(67.24)	9404(14.41)	10627(16.29)	1341(2.06)	65241(100.0)
	미취업	8511(7.88)	26010(24.08)	64828(60.02)	8662(8.02)	108011(100.0)
나이	60세이상-65세 미만	21458(42.87)	12928(25.83)	14338(28.65)	1324(2.65)	50048(100.0)
	65세이상-70세 미만	16619(34.73)	11060(23.12)	18005(37.63)	2162(4.52)	47846(100.0)
	70세이상-75세 미만	9330(25.74)	6872(18.96)	17535(48.37)	2512(6.93)	36249(100.0)
	75세이상-80세 미만	3634(16.82)	3050(14.12)	12713(58.84)	2210(10.23)	21607(100.0)
	80세이상-85세 미만	1101(9.42)	1107(9.47)	7043(60.23)	1223(10.46)	11694(100.0)
	85세이상	238(4.09)	399(6.86)	4607(79.20)	573(9.85)	5817(100.0)
나이	60세이상-70세 미만	38077(38.9)	23988(24.5)	32343(33.04)	3486(3.56)	97894(100.0)
	70세이상-80세 미만	12964(22.41)	9922(17.15)	30248(52.28)	4722(8.16)	57856(100.0)
	80세 이상	1339(7.65)	1506(8.6)	12870(73.5)	1796(10.26)	17511(100.0)
혼인 상태	미혼	149(28.01)	105(19.74)	10(1.88)	268(50.38)	532(100.0)
	배우자 있음	42608(37.99)	28135(25.09)	24473(21.82)	3981(3.55)	112157(100.0)
	사별	9027(15.48)	6773(11.62)	37251(63.88)	5260(9.02)	58311(100.0)
	이혼	596(26.36)	403(17.82)	767(33.92)	495(21.89)	2261(100.0)
성별	남자	27733(37.39)	19179(25.86)	23922(32.26)	3329(4.49)	74163(100.0)
	여자	24647(24.87)	16237(16.38)	51620(52.09)	6675(6.74)	99098(100.0)

3절 고령자의 가구특성별 생활비 충당 방안

고령자의 가구특성별 생활비 충당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2000년 고령자의 가구유형별 생계수단을 살펴보면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45.45%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반면, 노인단독가구는 33.6%만이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만을 놓고 볼 때,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고령층일수록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고령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속하여 유배우 상태에 있는 집단들, 즉 고령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경제적 자립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05년 가구특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2000년 조사결과와 같은 패턴이 그대로 발견된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단독가구의 24.09%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한 데 비해 혈연가구의 동 비율은 31.45%이다. 자녀에 대한 의존비율 역시 노인단독가구가 혈연가구보다 높고 노인단독가구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비율도 높다. 즉 이를 통해서 노인단독가구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어서 여성가구가 많을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집단임을 알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 유배우 상태의 고령자 집단 즉 부부가 함께 사는 집단에서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고 자녀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2> 가구유형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

(단위: 명, %)

	노인 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합계
가구 유형	혈연가구	40244(45.45)	34500(38.97)	13796(15.58)	88540(100.0)
	비혈연가구	158(42.13)	93(24.8)	124(33.07)	375(100.0)
	1인가구	4978(33.6)	6079(41.03)	3758(25.37)	14815(100.0)
	비혈연6인이상가구	17(15.74)	9(8.33)	82(75.93)	108(100.0)
세대 구성	1인 가구	5153(33.68)	6181(40.4)	3964(25.91)	15298(100.0)
	부부	20580(65.82)	7849(25.1)	2838(9.08)	31267(100.0)
	부부+미혼형제자매	10(38.46)	12(46.15)	4(15.38)	26(100.0)
	가구주+미혼형제자매	21(63.64)	4(27.71)	8(24.24)	33(100.0)
	부부+기타친인척	95(57.23)	46(27.71)	25(15.06)	166(100.0)
	가구주+친인척	42(29.37)	58(40.56)	43(30.07)	143(100.0)
	1세대 기타	209(52.51)	114(28.64)	75(18.84)	398(100.0)
	부부+미혼자녀	9081(65.74)	3699(26.78)	1034(7.49)	13814(100.0)
	편부+미혼자녀	340(46.45)	297(40.57)	95(12.98)	732(100.0)
	편모+미혼자녀	1069(25.45)	2275(54.15)	857(20.4)	4201(100.0)
	부부+양친	225(30.24)	390(52.42)	129(17.34)	744(100.0)
	부부+편부모	1160(32.89)	1547(43.86)	820(23.25)	3527(100.0)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12(40.0)	14(46.67)	4(13.33)	30(100.0)
	부부+미혼손자녀	831(53.17)	536(34.29)	196(12.54)	1563(100.0)
	2세대 기타	1490(28.74)	2444(47.14)	1251(24.13)	5185(100.0)
	부부+미혼자녀+양친	1659(28.86)	3088(53.71)	1002(17.43)	5749(100.0)
	부부+미혼자녀+편부모	1238(9.75)	7754(61.05)	379(29.2)	12701(100.0)
	3세대 기타	1994(26.69)	3965(53.08)	1511(20.23)	7470(100.0)
	가구주를 포함한 혈연인	186(23.66)	405(51.53)	195(24.81)	786(100.0)
	기타	2(40.0)	3(60.0)	0(0.0)	5(100.0)
합계	45397(43.72)	40681(39.18)	17760(17.10)	103838(100.0)	

<표 23> 가구유형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

(단위: 명, %)

	생활비 충당방법	근로소득	자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 지원	정부, 사회단체로 부터 지원	합계
가구 유형	세대유형가구	45228(31.45)	30845(21.45)	62001(43.12)	5716(3.98)	143790(100.0)
	비혈연가구	196(33.11)	99(16.72)	167(28.21)	130(21.96)	592(100.0)
	1인가구	6956(24.09)	4472(15.49)	13293(46.03)	4158(14.4)	28879(100.0)
세대 구성	1인가구	6956(24.09)	4472(15.49)	13293(46.03)	4158(14.4)	28879(100.0)
	부부	25987(40.39)	16737(26.02)	18856(29.31)	2753(4.28)	64333(100.0)
	부부+형제자매	15(30.0)	19(38.0)	10(20.0)	6(12.0)	50(100.0)
	부부+기타 친인척	73(31.74)	72(31.3)	71(30.87)	14(6.09)	230(100.0)
	가家主+형제자매	9(25.0)	8(22.22)	8(22.22)	11(30.56)	36(100.0)
	가家主+기타 친인척	40(18.1)	55(24.89)	71(32.13)	55(24.89)	221(100.0)
	1세대 기타	214(36.33)	145(24.62)	154(26.15)	76(12.9)	589(100.0)
	부부+자녀	8268(37.90)	5930(27.18)	7208(33.04)	408(1.87)	21814(100.0)
	부+자녀	337(27.65)	276(22.64)	535(43.89)	71(5.82)	1219(100.0)
	모+자녀	1186(17.68)	876(13.06)	4229(63.03)	419(6.24)	6710(100.0)
	부부+양친	294(26.06)	162(14.36)	650(57.62)	22(1.95)	1128(100.0)
	부부+한부모	1420(24.32)	788(13.49)	3500(59.93)	132(2.26)	5840(100.0)
	부부+자녀+부부형 제자매	6(42.86)	5(35.71)	2(14.29)	1(7.14)	14(100.0)
	조부모+손자녀	959(33.85)	626(22.1)	1008(35.58)	240(8.47)	2833(100.0)
	2세대 기타	1633(20.21)	1233(15.26)	4457(55.17)	756(9.36)	8079(100.0)
	부부+자녀+양친	1451(23.44)	1046(16.9)	3597(58.11)	96(1.55)	6190(100.0)
	부부+자녀+한부모	1145(8.43)	1276(9.4)	10943(80.61)	211(1.55)	13575(100.0)
3세대 기타	2031(19.98)	1501(14.76)	6210(61.08)	425(4.18)	10167(100.0)	
4세대 이상	160(21.0)	90(11.81)	492(64.57)	20(2.62)	762(100.0)	
합계		52184(30.22)	35317(20.45)	75294(43.61)	9874(5.72)	172669(100.0)

4절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별 생활비 충당 방안

이번에는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비 충당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2000년의 경우 <표 24>를 보면, 집안활동과 바깥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각각 13.68%, 13.87%만이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자녀나 다른 단체에 의존하여 살아간다고 응답하였다.

2005년의 경우 감각기관, 학습능력, 육체적 활동 등에 대한 질문에서 이들 모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33.43%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했다(<표 25> 참조).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나 정부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두 번째 범주의 활동 제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취업 활동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33.03%가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근로소득 의존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특히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 의존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활동제약을 갖고 있는 고령층의 생활비 충당 방법은 거의 전적으로 자녀와 정부에 의존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24> 활동상태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

(단위: 명, %)

	노인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합계
집안 활동	혼자 할 수 있음	44884(44.84)	38668(38.63)	16536(16.52)	100088(100.0)
	혼자 할 수 없음	513(13.68)	2013(53.68)	1224(32.64)	3750(100.0)
바깥 활동	혼자 할 수 있음	44622(45.42)	37793(38.47)	15834(16.12)	98249(100.0)
	혼자 할 수 없음	775(13.87)	2888(51.67)	1926(34.36)	5589(100.0)

<표 25> 활동제약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

(단위: 명, %)

	생활비 충당방법	근로소득	자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 지원	정부, 사회단체 로부터 지원	합계
활동 제약 1	시각, 청각, 언어 장애	1521 (17.8)	1123 (13.15)	4574 (53.54)	1158 (13.55)	8543 (100.0)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566 (12.35)	564 (12.31)	2704 (59.01)	641 (13.99)	4582 (100.0)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8333 (20.29)	6036 (14.69)	21262 (51.76)	4758 (11.58)	41078 (100.0)
	없음	42720 (33.43)	28402 (22.23)	50792 (39.75)	4461 (3.49)	127772 (100.0)
활동 제약 2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1971 (17.27)	1468 (12.86)	6329 (55.44)	1431 (12.54)	11416 (100.0)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931 (12.13)	1058 (13.78)	4490 (58.49)	1043 (13.59)	7677 (100.0)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4321 (17.04)	3546 (13.98)	13812 (54.46)	3237 (12.76)	25360 (100.0)
	취업활동(16세 이상)	1370 (16.27)	1159 (13.76)	4553 (54.07)	1190 (14.13)	8421 (100.0)
	없음	45980 (33.03)	30486 (21.9)	57054 (40.99)	5679 (4.08)	139199 (100.0)

제 5 장 맺음말

지금까지 2000년 고령자와 2005년 고령자의 성, 연령, 혼인지위, 학력, 경제활동상태, 직종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5년간 고령집단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고령자의 생활비 부담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은 성, 연령, 교육, 혼인상태, 경제활동 등의 특성과 가족구성 등 개인적인 차원과 가족의 차원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우리 사회 고령자의 생활상에서 두드러진 변화상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등 노인만으로 된 가구의 증가이다. 노인 단독가구이든 노인부부가구이든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는 2000년에 전체의 44.85%였던 것이 2005년에는 60.5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고령층 내부의 초고령집단의 증가에도 기인하며 남성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부부가구의 비중도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노인가구의 증가는 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와는 별도로 또 다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상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노인단독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소득원 제공 등과 별도로 노인들만의 생활세계를 고려한 여가문화의 보급 및 고안과 기본적인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2000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의 비율이 32.48%에서 2005년에는 34.77%로 근소하나마 증가했으나 이 증가의 대부분은 고령층의 자영업자 비중 증가와 연관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직업 및 산업 분포가 주로 농림어업직종, 농림어업 산업의 비중 증가와 연관되며 2005년에 읍면부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증가한 것과는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증가 현상을 고령층의 활력 있는 노동시장 참여로 해석하기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2000년 고령자의 생계수단을 살펴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의 43.72%였고 나머지 56.28%는 자녀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정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장남, 그 외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 가족에 의존하는 비율이 91%를 넘어서 고령자들이 대부분 가족관계내의 이전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건수 177,020

개의 생활비 원천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생활비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59%였다. 그밖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비 원천은 역시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서 함께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18.08%,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24.55%로서 전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42.63%나 되어 고령자 집단의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예금이나 적금, 연금,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 생활비의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눈에 띄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다 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65%에 불과했다. 2000년도 고령층의 생계수단 응답결과나 2005년 고령층의 생활비 원천 응답결과에서 공히 발견되는 것은 고령집단의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점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거의 전적으로 가족의 이전소득과 같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 고령층의 생활세계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으며 경제적 자립도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몇 가지 변화의 조짐들은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온 흔적을 엿보게도 한다. 2000년 인구센서스조사와 2005년 인구센서스조사의 고령층 생활비 충당방안을 비교분석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인 고령집단의 삶의 질이 고양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의 경우 고령층의 소득원이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간에 대체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사회에선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에 대체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활비 충당 방식은 사적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 만큼 가족구조의 변화, 고령층의 거주형태의 변화에 따라 고령층의 생계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현상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고령층 생계의 상당 부분을 가족지원과 같은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염려스런 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고령층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공적연금 설계와 집행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2008년에 시행될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의 포괄 범위와 지원금 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층 소득원의 또 다른 축인 근로소득의 질적, 양적 수준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 고령층의 경제활

동참여율은 외국의 경우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고령취업자의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 등을 통해서 살펴본 고령자의 일자리 특성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층 대상 일자리 창출 정책 못지않게 고령층에 대한 직업훈련, 사회교육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정책도 병행함으로써, 점점 더 길어지는 노년기에 고령층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 결과 고령층 내부의 다양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고령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층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그 안에는 성별·주거형태별·교육수준별로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초고령 기간이 길고 단독가구 비율이 높은 여성고령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활기찬 노년전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정책도 요구된다.

제 6 장 참고 문헌

- 김수완·조유미. 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 『사회복지연구』 29:5-37.
- 김영숙. 2002. “도시 빈곤노인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일반가계, 일반노인 가계 및 빈곤노인 가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13(3): 95-119.
- 김진옥. 2006.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 -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권 제8호.
- 문숙재. 1996. 『생활시간연구』. 신정
- 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수미. 2007.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통권 제72권 1호: 5-30.
- 백경숙·권용신. 2007.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87-106.
- 정경희. 2001.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1호.
- 정경희 외.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경옥. 2005. “여성 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7권 봄호.
- 최현수·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최효미. 2007. 『노인가구의 소득 원천』. 노동리뷰.
- 통계청. 2004.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통계청.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2006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 Williamson, James M, and Timothy M. Smeeding. 2004. “Sliding into Poverty? Cross-National Patterns of Income Source Change and Income Decay in old Age.” *CRR working paper* 2004-25.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및 근로장소에 대한 연구

이 성 용(강남대)

제 1 장 연구목적과 대상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산업, 직업 그리고 종사상 지위의 구조에 분명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은기수(2002)는 1995년과 2000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95년과 2000년 산업구조와 직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구조는 1995년에 비해 2000년 제조업분야의 비율은 감소하고 서비스분야의 분야는 증가하고 있다. 직업구조도 고위직, 전문직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군 및 판매 서비스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기능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그리고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경기가 약간 회복된 2000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2005년 센서스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해방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다. 급격한 사회변동은 세대마다 각 성원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하기 쉽다. 특히 1950년대 초등학교 의무교육,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 1970년대 고등학교 연합시험제도, 그리고 1980년대 대학의 졸업정원제 제도 등은 개인이 종사할 산업과 직업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령별로 종사하는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그리고 교육수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센서스에 처음으로 근로장소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전에는 직업, 산업, 종사상의 지위, 경제활동상태, 취업여부, 취업형태, 취업시간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고, 조사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조사된 적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부문에서 탈락한 경제활동인구들이 자영업 중심의 비공식부문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고정된 근로장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페들러라고 표현되는 길거리 혹은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무급종사자들 가운데는 가족노동을 배경으로 한 자영

업이 많고, 이들 또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하는지 충분한 정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2005 인구센서스에 포함된 근로장소에 관한 항목을 중심으로 직업별,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및 성, 연령, 교육 등은 인구학 변수까지 함께 고려하여 근로장소가 얼마나 다양한지 분석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1995년, 2000년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산업, 직업, 그리고 종사상지위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2005년 센서스 자료에 근거하여 연령별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 구조를 분석한다. 셋째,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소 유형을 직업별,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및 성,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관계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국한하였다. 그 결과, 이를테면 2005년도 2% 표본자료의 총 응답자 수 892,000명 중 취업자 379,733명만이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었다.

제2장. 직업, 산업 및 종사상 지위의 구조 변화: 1995-2005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급격히 변화하였다. 1995년 1차 산업 11.8%, 2차 산업 23.6%, 3차 산업 55.1%에서 2000년 1차 산업 10.6%, 2차 산업 20.3%, 3차 산업이 61.6%를, 그리고 2005년에는 1차 산업이 7.9%, 2차 산업 18.5%, 3차 산업 73.5%로 변화하였다(노동연구원, 2006). 이는 외환위기 직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에도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감소하는 반면 3차 산업은 증가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제조업위주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업위주의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정이환, 2004).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동은 당연히 직업구조의 변동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으로 해고당한 많은 노동자들이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최문경·이명진, 2005), 종사상지위 구조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1절 직업별 변화

<표 1>를 통해 직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비율은 2000년 약간 증가하였다가 2005년 대폭 감소하였다.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1995년 이래 계속 상승하는 반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감소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전문직’과 ‘기술공, 준전문가’를 동일하게 전문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정이환, 2004),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인다.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종사할 것으로 추측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비율을 1995년 이래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판매종사자의 비율은 1995년과 2000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5년 갑자기 떨어졌다.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1995년 이래 계속 상승하고 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율은 2000년 상당한 폭으로 하강했다가 2005년 상당한 폭으로 상승했다.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급상승한 뒤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 직업구조의 변화, 1995-2005

직업분류	(단위: %)		
	1995	2000	2005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3	4.6	3.4
전문가	5.7	8.9	9.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1	7.4	8.4
사무 종사자	11.5	14.3	15.3
서비스 종사자	8.6	9.7	9.3
판매종사자	12.6	12.7	10.5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6.0	13.6	1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7	10.6	9.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8	10.6	10.6
단순 노무 종사자	5.5	7.6	7.3
분류불능			0.7
합계	100.0	100.0	100.0

<표 2>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성별에 따른 직업구성비의 변화를,

그리고 <표 3>은 직업부문별 성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업부문에 남성의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다. 이 부문의 성비는 <표 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 직업 부문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음을 말한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그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증가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고, 그 결과 성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 종사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급격히 하락했지만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약간 급반등했다. 하지만 성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의 하락에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술공 및 준전문가들(이를테면 제조업분야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해고가, 그리고 2000년 이후의 반등에는 서비스 부문 기술공 및 준전문가들(이를테면, 교육서비스업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진입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부문은 1995년 남자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사무종사자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율보다 더 하강하였다. 여성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강한 반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비율은 2000년 하강하였다가 2005년 약간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문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성비의 추세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2005년 급상승한 반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무 종사자 집단과 판매종사자 집단도 남성과 여성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 및 판매종사자 집단과는 반대로, 사무종사자 집단의 성비는 1995년에 비해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 이후 전문직 집단과 판매종사자 집단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수로 새로이 진입하는 반면, 사무 종사직은 여전히 새로이 진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여전히 많음을 암시한다.

서비스 종사직은 1995년 이래 여성이 압도적인 직업 부문이다. 남녀 모두 구성비는 2000년 약간 상승했다가 2005년 다시 하강하였다. 그러나 성비가 계속 하강하는 추세는 여전히 새로이 이 부문에 진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더 많음을 암시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율도 2000년 약간 상승했다가 2005년 다시 하강하였다. 그러나 성비는 2005년 와서 약간 하강했다.

요컨대, 제2차 산업관련 직업 종사자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3차 산업관련 종사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3차 산업 관련 직업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진입이 외환위기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직업구조의 성별 변화, 1995-2005

직업분류	남자			여자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6.3	6.9	5.0	0.6	0.9	0.9
전문가	5.8	8.3	7.8	5.8	9.8	11.5
기술공 및 준전문가	12.4	8.4	9.4	8.7	5.9	6.8
사무 종사자	9.7	13.1	14.3	14.8	16.3	16.7
서비스 종사자	5.2	5.8	5.6	14.8	16.1	15.0
판매종사자	10.7	10.4	8.8	16.2	16.6	13.1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2.7	11.3	13.3	21.7	17.2	19.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0	13.6	13.0	7.8	5.6	4.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2	14.3	14.0	4.7	4.5	5.4
단순 노무 종사자	5.8	7.9	7.9	4.9	7.1	6.5
분류불능			1.0			0.2
전체취업자	100.0		100.0		100.0	

<표 3> 직업별 성비 변화, 1995-2005

직업분류	(단위: 여자 100당 남자 수)		
	1995	2000	2005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904.4	1,283.8	828.9
전문가	176.9	139.4	104.7
기술공 및 준전문가	259.3	231.7	213.5
사무 종사자	120.5	131.3	131.8
서비스 종사자	64.6	59.1	57.7
판매종사자	120.9	102.6	103.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08.7	108.1	10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99.5	397.0	488.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44.4	530.1	402.6
단순 노무 종사자	215.7	183.7	187.9
분류불능			735.4
전체 취업자 성비	183.7	165.1	154.5

2절 산업별 변화

<표 4>는 1995년에서 2005년까지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 부문, 건설업, 그리고 도매업 및 소매업 등 네 부문의 취업자 비율은 1995년 65.5%, 2000년 58.0%, 2005년 56.2%로 감소하였지만, 1995이래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취업자들이 특정 산업 부문들에 집중되어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의 종사자 비율은 직업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 하락했지만 2005년 상승했다.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을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계속 하강하고 있다. 건설업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통신업종사자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행정,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문들의 증가는 서비스업 관련 직업 종사자들, 이를테면 사무 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율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 비율의 감소는 직업부문에서 판매종사자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비율은 1995년과 2000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005년 하강하였다. 직업구조와 마찬가지로 성별 구성비와 성비의 변화를 살펴보자.

<표 4> 산업구조의 변화, 1995-2005

산업분류	(단위: %)		
	1995	2000	2005
농업 임업, 어업	16.4	13.8	16.2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24.1	21.3	18.6
건설업	8.6	7.2	7.1
도매 및 소매업	16.9	15.7	14.3
숙박 및 음식점업	6.4	7.5	7.5
운수업	4.6	4.8	4.3
통신업	0.8	1.2	1.1
금융 및 보험업	3.6	3.7	3.1
부동산 및 임대업	1.5	1.7	2.3
사업서비스업	2.9	4.3	5.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8	3.9	3.8
교육서비스업	5.3	6.0	6.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	2.3	3.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	1.8	1.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8	4.3	4.2
분류불능(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0.4	0.5	0.5
전체 취업자	100.0	100.0	100.0

<표 5>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성별에 따른 산업구성비의 변화를, 그리고 <표 6>은 산업부문별 성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5>는 남성과 여성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산업부문이 다름을 보여준다. 남성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건설업,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집중적인 네 개의 산업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다. 남자는 1995년 68.8%, 2000년 60.6%, 2005년 59.8%로 감소하였고, 여자는 1995년 70.5%, 2000년 64.9%, 2005년 61.5%로 감소하였다. 남자보다 여자가 특정 산업부문

에 약간 더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5년과 2000년 사이 남녀 각각 집중적인 네 개의 산업부분 종사자 비율의 급격한 하락률은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력을 말해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었는데(정이환 2004), 네 개의 산업분문은 탈산업사회에서 중시되는 산업분야라기보다 산업사회에서 중시되는 산업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종사자 비율은 남녀 모두 2000년 감소했다가 2005년 다시 상승하였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비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뒤에 보여주겠지만, 이 부문 종사자의 높은 연령대를 비추어 볼 때, 성비의 감소는 여성보다 낮은 남성의 기대수명을 상당히 반영할 것이다. 즉 남성의 낮은 평균수명으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그리고 빨리 이 부문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표 5> 성별 취업인구의 산업별 분포, 1995-2005

산업분류	(단위: %)					
	남자			여자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농업 임업, 어업	13.5	11.5	13.5	22.2	17.7	20.2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26.8	24.1	22.0	19.2	16.6	13.4
건설업	12.1	10.5	10.8	2.2	1.6	1.5
도매 및 소매업	16.4	14.5	13.5	17.8	17.8	15.6
숙박 및 음식점업	3.7	4.3	4.4	11.3	12.8	12.3
운수업	6.5	7.0	6.3	1.0	1.1	1.2
통신업	0.9	1.4	1.4	0.5	0.9	0.7
금융 및 보험업	2.8	2.9	2.6	5.1	5.0	3.8
부동산 및 임대업	1.8	2.2	2.7	0.9	1.0	1.5
사업서비스업	3.3	5.0	6.2	2.2	3.1	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9	5.0	4.7	1.9	2.0	2.3
교육서비스업	3.8	4.0	4.0	7.8	9.4	10.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	1.3	1.6	2.9	4.0	6.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	1.9	2.0	1.2	1.6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3	4.3	4.2	2.8	4.3	4.2
분류불능(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3	1.0	1.1	0.9
전체 취업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취업자의 이동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남성보다 여성의 더 많은 이동을 반영한다. <표 6>의 성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건설업은 운수업과 더불어 남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는 부문이다. 1995년과 2005년 성비 추세를 보면, 건설업의 성비는 증가한 반면 운수업의 성비는 감소하였다. 이는 건설업에 비해 운수업에 진입하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도매 및 소매업 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남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여자는 2005년에 갑자기 하락하였다. 성비는 2000년 상당히 하락하여 2005년 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숙박과 음식점 부문은 남녀 모두 외환위기 이후 그 비율이 증가했다. 이 부문의 성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말한다.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부문은 자영업자가 50%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는 비교적 높은 비율(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종사하는 부문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이 부문의 많은 남성 종사자들이 다른 산업 부문 혹은 실직상태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통신업은 남성의 구성비 비율이 외환위기 증가한 이후 그 수준으로 남아 있는 반면, 여성의 구성비 비율은 2000년 증가하였다가 2005년 약간 감소하였다. 성비는 비교적 높으며, 2000년 감소하였다가 2005년 증가하였다.

금융 및 보험업은 남성이 여성이 거의 같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문의 남성과 여성의 종사자 비율은 2005년 감소하였다.

부동산과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문은 남성과 여성 모두 그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성비는 2005년 상당히 감소하였다. 부동산과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그리고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

비스업은 남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구성비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문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고 성비는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직업구조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2차산업 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3차산업 부문 종사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 3차 산업 부문에 남성 노동자들보다 여성 노동자들의 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6> 산업별 취업자의 성비변화, 1995-2005

산업분류	1995	2000	2005
농업 임업, 어업	113.4	107.8	103.0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	256.4	239.8	253.0
건설업	1,040.4	1098.5	1104.0
도매 및 소매업	169.0	134.8	133.1
숙박및 음식점업	60.3	55.1	55.0
운수업	1,175.7	1,032.4	821.5
통신업	345.7	258.8	286.9
금융 및 보험업	98.6	94.2	106.2
부동산 및 임대업	349.6	353.3	273.7
사업서비스업	274.9	265.9	23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66.4	403.9	316.2
교육서비스업	89.7	71.0	6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3.1	52.0	39.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95.1	197.4	168.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85.2	163.2	154.2
분류불능(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49.8
전체 취업자 성비	183.7	165.1	154.5

3절. 종사상지위 변화

<표 7>은 1995-2005년 사이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다. 임금 봉급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2000년에 그 비율이 약간 증가했지만 2005년 다시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계속해 하강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가족 종사자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7>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변화, 1995-2005

종사상 지위	(단위: %)		
	1995	2000	2005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7.2	6.7	6.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2.0	22.3	23.7
무급가족 종사자	10.7	9.2	9.3
임금·봉급근로자	60.1	61.8	60.7
전체 취업자	100.0	100.0	100.0

<표 8>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의 구성비의 변화를 나타낸다. <표 8>은 성비에 따라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은 임금 봉급근로자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 순인 반면, 여성은 봉급근로자 다음으로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순이다. 이러한 순서는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추세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여주는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추세를 보여준다. 남성은 그 구성비가 1995년과 2000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 급감한 반면, 여성은 2000년 급등했다가 2005년 미미한 감소를 하였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구성비는 남자는 계속 감소한 반면, 여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여성의 경우 2000년 급락하였고, 2005년에도 약간 감소하였지만, 남자는 2000년 약간 떨어진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남성은 외환위기 이후 임금 봉급 근로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한 반면,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상당수가 임금 봉급 근로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표 9>은 종사상 지위의 범주별 성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남자 4-5명당 여자 1명이라는 높은 성비를 보여주는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는 그 반대로 여자 7-10명당 남자 1명이라는 낮은 성비를 나타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금 봉급 근로자도 높은 성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 성비는 감소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많은 여성들이 임금 봉급 근로자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8>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변화, 1995-2005

종사상 지위	(단위: %)					
	남자			여자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9.4	8.9	8.4	3.2	3.1	3.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	25.3	26.0	28.1	15.9	16.2	16.8
무급가족 종사자	1.9	1.6	1.6	26.8	21.6	21.2
임금·봉급근로자	63.3	63.4	61.8	54.1	59.1	58.9
전체 취업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 종사상 지위의 성비 변화, 1995-2005

종사상 지위	1995	2000	2005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548.7	478.1	416.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	293.1	264.9	258.6
무급가족 종사자	13.0	12.3	11.8
임금·봉급근로자	214.9	177.4	162.1
전체 평균 성비	183.7	165.1	154.5

제 3장. 연령별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의 구성 분포: 2005년 센서스

1절. 연령별 직업구조 분포

<표 10>은 2005년 센서스에서 계산한 연령별 직업 분포를 나타낸다. 연령에 따라 높은 비율로 근무하는 직업의 유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30대 미만의 경우, 사무직(26.8%)과 전문가(16.1%), 기술공

(12.7%), 판매직(10.5%), 장치, 기계조작(10.2%), 서비스직(9.2%), 기능원(7.2%) 등에서 약 93%가 종사하고 있다. 30-39세의 취업자는 동일한 직업군—하지만 많이 근무하는 순서는 다르다. 사무직(21.5%), 전문가(12.7%), 기술공(11.9%), 판매직(11.2%), 장치 기계조작(11.2%), 기능원(11.0%), 서비스직(9.0%)—에서 약 88%가 근무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1956-1965년 출생자)인 만40-49세는 위의 직종에서 약 77.5%가 근무하고 있다. 베이비붐 바로 이전 세대인 만50-59세 취업자는 위의 직종에서 약 60%가 종사하고 있다. 40세 미만의 취업자와 만40-59세의 취업자들을 비교할 때, 만40-59세의 취업자는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집단인 의회 의원 직종에는 40세 미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종사하지만 또한 직업위세가 낮은 집단인 단순 노무직에도 더 높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베이비붐 직전세대는 베이비붐세대보다 높은 비율로 농업과 어업 분야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특히 70세 이상의 취업자 경우는 무려 약 85%가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 중 약 77%가 만50세 이상이며, 그 중 69.6%가 만 60세 이상이고, 26.2%는 만 70세 이상이다.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고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보다 젊은 세대일수록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반면 나이가 먹은 세대일수록 단순노무직과 농업 어업 분야에서 종사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1차 산업이나 2차산업보다 3차산업 관련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베이비붐세대와 베이비붐 직전 세대가 다른 세대들에 비해 가장 높은 직업위세의 직업군인 의회의원과 낮은 직업군인 단순노무직에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다가올 고령화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입할 연령대에서 가장 심한 양극화된 사회불평등 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표 10> 연령별 직업 분포

(단위: %)

	의회의원	전문가	기술공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 어업
전체	3.4	9.3	8.4	15.3	9.3	10.5	15.8
30세 미만	0.4	16.1	12.7	26.8	9.2	10.5	1.6
30-39세	2.4	12.7	11.9	21.5	9.0	11.2	3.3
40-49세	5.3	7.8	7.6	13.3	11.8	12.0	8.9
50-59세	5.5	5.2	5.1	7.7	10.4	10.5	22.5
60-69세	2.7	2.4	1.8	2.4	4.1	6.5	58.9
70세 이상	1.0	1.2	0.7	0.9	1.4	3.8	84.6

<표 10> 연령별 직업 분포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단순 노무	분류불능(군인포함)	합계
전체	9.5	10.6	7.3	0.7	100.0
30세 미만	7.2	10.2	3.9	1.4	100.0
30-39세	11.0	11.2	5.0	0.8	100.0
40-49세	12.0	13.1	7.7	0.6	100.0
50-59세	9.9	11.6	11.4	0.4	100.0
60-69세	3.9	4.5	12.6	0.1	100.0
70세 이상	1.0	0.7	4.6	0.0	100.0

2절. 연령별 산업구조 분포

30세 미만의 취업자는 약 66%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22.6%), 도매 및 소매업(16.9%), 사업서비스업(8.9%), 교육서비스업(9.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0%)에 근무하고 있다. 만 30-39세의 취업자는 약 58%가, 만40-49세 취업자는 49%, 만50-59세 37.5%, 만60-69세 19.7%, 70세 이상은 불과 8.4%만이 위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세대별로 종사하는 그리고 종사해왔던 산업부문이 연령별로 극명히 차이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베이비붐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취업자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에 가장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농업 임업 어업에 가장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다. 이는 직업구조의 분포분석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붐세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세대는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부문이 달라지는 사실을 의미한다. 직업 구조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의 종사자의 연령 분포는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나타낸다. 이 분야 전체 종사자 중 50-59세 23.4%, 60-69세 33.4%, 70세 이상 20.0%로, 76.7%가 만50세 이상이다.

<표 11>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단위: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열, 수도업	건설업	도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체	16.2	18.6	7.1	14.3	7.5	4.3	1.1	3.1	
30세 미만	1.7	22.6	4.6	16.9	6.6	2.6	1.6	4.2	
30-39세	3.5	22.3	8.2	16.3	6.4	4.0	1.6	4.6	
40-49세	9.1	21.5	9.3	15.1	10.1	5.2	1.1	3.1	
50-59세	22.9	14.7	8.0	12.8	8.9	6.5	0.7	1.7	
60-69세	59.7	5.9	3.0	8.1	4.1	3.0	0.2	0.6	
70세 이상	85.5	1.9	0.5	4.9	1.3	0.5	0.0	0.1	

<표 11>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단위: %)

	부동산 및 임대업	서비스업	행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기타 공공수리	분류불능	전체
전체	2.3	5.4	3.8	6.4	3.3	1.9	4.2	0.5	100.0
30세 미만	1.0	8.9	3.3	9.9	8.0	3.3	4.1	0.5	100.0
30-39세	1.7	7.2	4.9	8.1	3.9	2.3	4.6	0.4	100.0
40-49세	2.2	4.0	4.1	6.1	2.3	1.6	4.6	0.6	100.0
50-59세	3.3	3.7	3.9	4.6	1.7	1.3	4.5	0.8	100.0
60-69세	4.7	3.0	1.1	1.8	0.9	0.7	2.7	0.5	100.0
70세 이상	1.5	0.9	0.6	0.3	0.4	0.2	1.0	0.2	100.0

분류불능에는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 기관포함.

3절. 연령별 종사상 지위 분포

<표 12>는 연령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나타낸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과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40-49세를 정점으로 상승하였다가 하락한다.

연령별 직업 구성, 산업 구성 그리고 종사상 지위 구성의 분포가 보여 주듯이, 연령별로 각 분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연령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다.

<표 12> 연령별 종사상지위

	(단위: %)				
	임금노동자	고용원이 는 자영업자	없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돈 무급가족종사 자	합계
전체	60.7	23.7	6.4	9.3	100.0
30세 미만	91.7	4.1	1.2	3.0	100.0
30-39세	75.6	13.6	5.8	5.1	100.0
40-49세	57.4	23.7	9.9	8.9	100.0
50-59세	44.8	33.5	8.5	13.2	100.0
60-69세	23.3	50.8	4.0	21.8	100.0
70세이상	6.9	69.9	1.8	21.4	100.0

4절. 연령별 교육수준 분포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은 1954년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시작되었다. 1959년 초등학교 취학률이 96.4%에 도달했다. 그 후 1969년 7월 15일 교육혁명이라고 불리는 중학교 무시험제가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된 후 1970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6대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 무시험제도는 1956년생 이후의 출생자에게 그 이전의 출생자보다 높은 중학교 진학률을 제공했다. 그 후 4년 뒤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는 고등학교를 본고사 대신 연합고사를 통하여 진학하게 하였다. 국가연합고사제도는 1975년 대구, 광주, 인천에서, 1979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에서, 1980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 2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베이비붐세대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표 13>는 연령별 교육수준을 나타낸다. 1945년 이전 출생자들인 60세 이상의 노인들에서는 확실히 초등학교 수준이하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물론 70세 이상이 더 낮은 교육수준을 보여주지만, 만60-69세 취업자의 경우도 무려 약 62%가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개혁은 만50-59세(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출생자)의 교육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취업자의 비율이 약27.2%로 이전 연령대보다 무려 35%가 감소하였다.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취업자 비율은 만40-49세 취업자에서는 다시 7.3%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만

40세 이하의 취업자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준이하가 1%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취업자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70세 이상의 취업자는 불과 3.8%만이 대졸이상이었지만, 만60-69세 8.2%, 만50-59세 18.6%, 만40-49세 33.6%, 만30-39세 52.9%, 만30세 미만 65.6%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교육수준의 향상은 연령별 취업자 산업구조, 직업구조, 그리고 종사상 지위 구조의 차이를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표 13 > 취업자의 연령별 교육수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합계
전체	4.0	11.6	10.2	36.3	33.7	4.3	100.0
30세 미만	0.1	0.2	1.2	32.9	62.8	2.8	100.0
30-39세	0.1	0.7	2.9	43.5	46.6	6.3	100.0
40-49세	0.5	6.8	14.2	44.2	28.6	5.0	100.0
50-59세	2.7	24.5	21.9	32.3	15.0	3.6	100.0
60-69세	18.2	44.0	15.1	14.5	6.7	1.5	100.0
70세 이상	45.2	38.4	6.3	6.3	3.2	0.6	100.0

5절. 취업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 분포

앞의 연령별 직업구조와 산업구조 분석에서 만50세 이상의 취업자에서 농업, 어업, 임업의 종사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성별에 따른 연령별 거주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14>은 취업자의 연령별 거주지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취업자의 거주지 비율은 농촌보다 도시가 거의 3배에 달한다. 남성 취업자 230,52명 중 도시거주자는 171,555(74.4%), 농촌거주자는 58,968명(25.6%)이며, 여성취업자 149,210명 중 도시거주자는 102,660명(68.8%), 농촌거주자는 46,500명(31.2%)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감소되며, 오히려 만60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는 오히려 도시보다 농촌 거주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남성과 여성을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도 만60세를 기점으로 하여 도시보다 농촌거주자의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60세 이상에서 도시와 농촌 거주지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여성의 경우 농촌 노인 여성이 도시의 노인 여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표 14> 취업자의 연령별 거주지

(단위: %)

	전체		남자(60.7%)		여자(39.3%)		합계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전체	72.2	27.8	74.4	25.6	68.8	31.2	100.0
30세 미만	84.9	15.1	82.1	17.9	87.4	12.6	100.0
30-39세	82.2	17.8	82.0	18.0	82.6	17.4	100.0
40-49세	77.9	22.1	79.7	20.3	74.8	25.2	100.0
50-59세	66.4	33.6	72.1	27.9	56.1	43.2	100.0
60-69세	36.4	63.6	45.3	54.7	24.7	75.2	100.0
70세 이상	15.8	84.2	18.4	81.6	12.8	87.2	100.0

제 4장.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및 거주지별 근로장소 유형

1절 성별 연령별 근로장소 분포

<표 15>는 성별로 본 근로장소의 분포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업장, 자기 집, 남의 집 그리고 야외작업현장에서 약간 더 높은 비율로 근무하는 반면, 거리와 운송수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다. 야외작업현장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남성보다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좀더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표15> 성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 송 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남성	70.0	2.6	1.3	4.0	18.4	3.7	100.0
여성	70.7	4.8	2.9	2.6	18.8	0.2	100.0

<표 16> 연령별로 분석한 취업자의 근로장소 분포를 나타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낮아지며,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한다. 자기집과 거리에서 근무할 확률은 50대까지 계속 높아진 후 감소한다. 남의 집에서 일할 가능성은 자신의 집에서 일할 가능성보다는 작은 변동을 보이지만, 40대까지 높아지다가 낮아진다. 운송수단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40대까지 증가하다가 낮아진다.

<표 16> 연령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 외 작업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30세 미만	90.5	1.1	1.7	2.2	3.7	0.9	100.0
30-39세	82.5	2.5	1.9	3.6	7.4	2.2	100.0
40-49세	73.7	3.8	2.3	4.0	13.3	3.0	100.0
50-59세	59.0	5.7	2.1	4.3	25.4	3.5	100.0
60-69세	32.1	5.4	1.2	2.8	56.8	1.6	100.0
70세 이상	14.0	4.7	0.6	1.8	78.7	0.2	100.0

2절. 교육수준별 거주지 별 근로장소 분포

<표 17>은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자의 근로장소를 나타낸다.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자기 집과 남의 집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중학교 수준까지 높아지다가 고등학교 이후 수준에서는 낮아진다. 거리에서 일할 가능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정점으로 낮아진다.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은 교육수준이 높아갈수록 낮아진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업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지는 우리나라 교육수준 실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18>은 거주지별 취업자의 근로장소를 나타낸다. 농촌의 취업자에 비해 도시의 취업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마 이러한 차이는 농촌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높은 비율을 반영할 것이다. 도시의 취업자에 비해 농촌취업자는 자기집에서 일할 가능성은 높지만 남의 집, 거

리 그리고 운송수단에서 일할 가능성은 낮다.

<표 17> 교육수준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무학	14.4	3.9	1.0	2.5	78.0	0.2	100.0
초등학교	30.2	5.0	1.7	3.0	58.7	1.4	100.0
중학교	53.0	6.3	2.6	4.8	29.5	3.9	100.0
고등학교	74.0	3.6	2.1	4.8	11.8	3.8	100.0
대학교	88.8	2.2	1.8	2.2	4.0	1.0	100.0
대학원	95.4	2.0	0.9	0.5	1.1	0.2	100.0

<표 18> 거주지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도시	82.0	2.8	2.2	4.0	6.4	2.6	100.0
농촌	39.9	5.3	1.0	2.0	50.2	1.6	100.0

3절. 직업별 근로장소 분포

<표 19>은 직업별 취업자의 근로장소를 나타낸다. 의회의원, 전문가, 사무직 등의 직업을 가진 취업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90%이상으로 매우 높다. 그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일할 가능성은 기술공,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단순노무직, 그리고 농업어업 순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불과 10.5%에 불과하다. 자기 집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서비스직과 판매직이며, 남의 집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기술공과 기능원이다. 거리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판매직과 장치 기계조작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높다. 야외작업 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과 기능원이 높다. 운송수단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장치 기계 조작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비교적 높을 뿐, 다른 직업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매우 낮은 편이다.

<표 19 > 직업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송수 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의회의원	90.7	2.9	0.7	0.4	5.0	0.3	100.0
전문가	95.7	2.6	0.5	0.2	1.1	0.0	100.0
기술공	87.1	2.8	4.5	2.1	3.0	0.5	100.0
사무직	95.9	1.5	0.5	0.9	1.0	0.2	100.0
서비스직	84.3	9.6	2.8	2.1	0.8	0.3	100.0
판매직	77.3	7.2	2.1	11.4	1.2	0.8	100.0
농업어업	10.5	1.9	0.2	0.1	87.3	0.1	100.0
기능원	74.3	3.9	4.1	1.2	16.2	0.2	100.0
장치 기계조작	66.4	1.5	0.5	8.5	5.7	17.5	100.0
단순노무	55.6	2.8	5.8	9.5	23.7	2.7	100.0
분류불능	94.3	2.0	0.5	0.8	1.4	0.9	100.0

4절. 산업별 근로장소 분포

<표 20>은 산업별 취업자의 근로장소를 나타낸다.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산업,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하는 취업자들은 약 90%이상이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기타 공공수리 등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이 80%대의 높은 확률을 보인다. 통신업 종사자는 약 74%, 건설업 종사자는 약 51.6%,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는 단지 11%만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기 집에서 근무할 확률은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확률(11.3%)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공공수리, 도매 및 소매업 등이 5%이상의 수준을 보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집단은 5%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을 보인다. 남의 집에서 근무하는 확률이 5%이상인 산업부문의 종사자는 단지 교육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뿐이며 나머지 산업부문의 종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서비스 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남의 집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이거나 과외선생이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근무할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 거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 종사자들은 운수업, 통신업이며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들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들 산업 종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종사자들은 5%미만이 거리에서 근무한다.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들이 압도적으로 높고, 건설업 종사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 종사자가 5%를 넘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 종사자들이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5%가 안 된다. 운송수단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운수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통신업 종사자들이 약 6.7%로 5%를 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 종사자들은 거의 1% 이하이다.

<표 20 > 산업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합계
	사업장(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 작업현장	운송수단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농업, 임업, 어업	11.0	1.9	0.2	0.1	86.6	0.2	100.0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93.4	2.2	0.7	1.1	1.8	0.8	100.0
건설업	51.6	1.0	3.8	1.5	41.0	1.1	100.0
도매 및 소매업	80.1	6.1	1.8	9.1	1.5	1.5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82.9	11.3	2.7	2.6	0.3	0.2	100.0
운수업	40.4	0.8	0.9	17.4	4.5	35.9	100.0
통신업	74.0	0.7	1.3	13.9	3.5	6.7	100.0
금융 및 보험업	88.4	0.4	1.8	8.6	0.6	0.2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92.2	3.1	1.4	1.0	1.9	0.4	100.0
사업 서비스업	87.2	2.0	2.0	1.4	7.1	0.3	100.0
공공행정	89.4	0.2	0.6	4.5	4.7	0.6	100.0
교육서비스업	89.6	2.6	5.6	1.1	0.3	0.9	10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6.4	1.6	0.8	0.4	0.2	0.6	100.0
오락문화	89.8	4.0	0.8	1.0	4.0	0.5	100.0
기타 공공수리	81.1	9.7	2.9	2.5	2.7	1.2	100.0
분류불능	47.8	7.8	41.7	1.1	1.3	0.3	100.0

5절 종사자 지위별 근로장소 분포

<표 21>은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의 근로장소를 나타낸다. 임금 노동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들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다음으로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다음이 거리, 운송수단, 남의 집 그리고 자기 집 순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다음으로 자기 집, 야외작업현장, 남의 집, 거리, 운송수단의 순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장과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비슷한 정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거리, 운송수단, 남의 집 순이다. 하지만 무급가족 종사자는 야외작업현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업장, 자기집, 거리, 남의 집, 그리고 운송수단 순이다.

<표 2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임금노동자	86.1	0.5	1.9	3.0	6.3	2.2	100.0
고용원이 없는 자 영업자	38.9	9.0	2.5	6.2	39.6	3.8	100.0
고용원을 둔 자영 업자	88.2	4.9	1.3	0.9	4.1	0.5	100.0
무급가족 종사자	34.6	8.3	0.7	1.4	54.9	0.2	100.0

제 5장 결론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부문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부문은 증가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이래 가장 높지만 계속 감소하여 왔다. 이 부문에 관련되는 직업부문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율도 계속 감소했지만, 이상하게도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보장 행정,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문들의 증가는 서비스업 관련 직업 종사자들, 이를테면 사무

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율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 비율의 감소는 직업부문에서 판매종사자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1차 산업인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산업 및 직업 종사자의 비율은 2000년에 감소하였다가 2005년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사자 지위는 성별을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성별에 따라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순위가 달라진다. 남녀 모두 임금봉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 다음의 순위에서 남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가, 여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한다. 이는 여성의 무급 가족종사자의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최근에 올수록 남자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도 2005년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연령별 분석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연령에 따라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의 구조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와 같은 전문가 직업군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무직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농업, 어업 그리고 단순 노무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산업부문에서도 농업, 임업 어업 부문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서비스산업 관련 부문인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부문 등은 연령이 낮은 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 부문은 베이비붐세대까지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베이비붐이전세대에서는 갑자기 낮은 비율을 보인다. 종사상 지위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낮아진다.

이러한 상이한 연령별 직업, 산업 그리고 종사상 지위의 분포는 연령별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령별 교육수준 차이는 매우 현격하다. 만60세 이전 세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62%이고 대학이상 교육수준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약 3.8%에 불과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인 2005년 만40-49세 사람들의 교육수준은 불과 7.3%만이 초등학교 수준 이하였고, 약 33.6%가 대학 이상의 수준을 받았다. 그리고 30-39세는 약 52.9%, 30세 미만은 약 65.6%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초등학교 수준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불과 1%가 안 되었다.

취업자의 거주지 분포에서도 도시가 농촌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러한 차이는 감소되며, 60세 이상의 취업자에서는 오히려 농촌의 비율이 도시의 비율보다 더 높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는 농촌의 여성노인이 도시의 여성노인보다 훨씬 높은 취업률을 보인다.

근로 장소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직업별,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로 차이를 보인다. 남녀 취업자 모두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가장 높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거리와 운송수단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기 집과 남의 집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았으며,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낮았다. 이는 농업임업어업등의 종사자들 대부분이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하고, 그들의 연령이 대체로 높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수준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장에서 그리고 낮을수록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도 교육수준과 연령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

직업별 근로 장소의 분석결과는 농업어업, 판매직, 장치 기계 조작, 기능원 그리고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 직업부문의 종사자는 80% 이상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어업, 단순노무직, 기능원 등은 근로 장소가 야외작업현장에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려 87.3%가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를 한다. 장

치 기계조작 직업군은 운송수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산업별 근로 장소 분석에 따르면, 직업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농업, 어업, 임업 산업 분야 종사자가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다음으로 건설업 종사자들이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 운수업과 통신업은 특성상 거리와 운송수단이 근무 장소가 될 확률이 높다. 이 네 개의 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80%가 넘는다.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별 근로 장소 분석에서는 임금노동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사업장보다 오히려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 이것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근무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환, 2001. “금융인력 실업 및 재취업 대책,” 한국금융연구원편, 주간 금융동향 (2001.8).
- 유홍준·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학 40집 6호: 153-186.
- 은기수 2002 “경제활동: 직업과 산업” 한국의 인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315-348.
- 이종선 2002,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사회학 36집 3호: 25-45.
- 정이환, 2004, “서비스산업화와 노동의 변화” 한국사회학 38집 4호: 159-186.
- 정이환, 2002,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요인” 한국사회학 36집 1호: 83-112.
- 조혜선, 2002.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집 1호: 145-169.

채구목, 2002,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학 36집 5호: 143-169.

최문경, 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39집 1호: 21-51.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시장현황과 고용정책의 과제 .

한국인의 활동장애: 고령자를 중심으로

조영태 (서울대)

제 1 장 연구목적과 대상

1절 연구목적

최근 오래 사는 것과 동시에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과 활동장애 없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강수명이 동시에 증가되어 오긴 하였지만, 건강수명의 증가 속도가 평균수명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여 오히려 인생에서 활동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윤병준·김정근 1996; 권영훈 등 2002)가 보고되면서 더욱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활동제약의 원인은 다양하다. 교통사고, 상해사고, 낙상 등 사고로 인한 활동장애가 있을 수 있고, 급성질환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의 수행이 제한될 수 있고, 또 고령으로 인한 노쇠와 함께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함께 수반되어 장기적으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모두 활동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활동제약은 주로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지만 젊은 인구에게 활동제약은 노인 인구에게보다 더욱 심각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활동제약은 많은 나라들이 그 사회의 보건지표를 산출하는데 반드시 포함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보건지표인 활동제약 혹은 활동장애에 대하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활동제약 수준을 살펴보고, 인구 집단에 이 활동제약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활동제약의 종류는 어떠한 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적 수준에서 활동제약과 관련된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매 4년마다 조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해 생성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5년 조사에서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600개의 조사구로부터 13,345가구가 포함되었고,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 활동제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비록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우리나라보건 지표의 대표적인 통계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사구를 선정하는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그동안 변화된 지역 인구의 수와 구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활동제약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가운데 2% 샘플 자료가 이용되고, 여기에는 약 892,000명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조사대상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는 그 어떤 자료를 이용한 활동장애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가장 대표적인 모집단 추정치를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절 연구대상

활동제약에 관한 질문은 샘플조사에 포함되는 다른 질문 문항들과 달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처음 수록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보건 지표 생산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활동제약과 관련한 질문이 수십여 가지 포함되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활동제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활동제약에 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다. 하지만 응답자에게 질문된 문항들은 모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역시 포함된 것들이고, 단지 신체적인 제약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제약도 포함하고 있어 비록 간단하지만 많은 정보를 응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미국 인구센서스의 샘플 조사도 활동제약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2005년에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샘플 조사에 포함된 문항과 매우 유사하며 서로 비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동제약에 대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의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즉 일상생활능력에서의 장애를 파악하는 것이다.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에 대한 질문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있습니까?”이고, 응답자는 “시각·청각·언어장애”, “치매”, “중풍”,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육체적 제약”, “학습의 어려움,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그리고 “없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되었다. 일상생활능력에서의 장애를 파악하는 질문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까?”이며, 응답자들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혹은 “없음” 가운데에서 해당되는 곳에 모두 답하게 되어있다. 이 가운데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에 관한 응답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일상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응답은 각각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과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을 측정하는 도

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샘플 서베이에는 활동제약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장애가 서로에게 완전 독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며 둘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만의 장애보다 더욱 활동의 제약이 크게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래의 분석도 각 장애에 대하여 독립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의 경우는 ADL이 IADL에 비해 다소 중증의 활동장애 수준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ADL이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들에서의 제약을 의미하는 반면 IADL은 그보다는 다소 일상적인 활동들에서의 제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DL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IADL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활동제약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질적으로 인구주택센서스의 조사표에도 응답자가 해당되는 모든 문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장 기존 연구 검토

인간이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나의 의지 혹은 신체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와 정신적인 기능의 쇠약으로 인해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전자는 법적인 구속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후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년기에 겪게 되는 공통적인 경험이다. 예전 사망의 주요 원인이 전염병이나 급성질환이며 사망률이 매우 높아 평균수명이 낮았던 시기에는 신체와 정신적인 기능의 쇠약으로 인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인구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평균수명은 증가하였지만 인생의 많은 기간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활동에 제약을 받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고나 만성질환 등과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오는 경우를 활동장애라고 부르며, 한 사회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들 가운데 하나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의 사회지표를 조사할 때 주관적인 건강인식과 함께 활동장애는 거의 누락되지 않는 보건분야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조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조사”, 유럽의 “EuroQol”, 미국의 “Social Indicators Survey”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국내의 활동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의 연구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심층 분석 가운데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와 2005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고령자패널조사”의 원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활동장애와 관련된 부분을 심층 분석한 장숙량(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 건강 및 보건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활동장애에 대한 매우 자세한 정보들을 응답자에게 요구하였고, 19세 이상 성인 모두를 응답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한국고령자패널은 4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비록 고령자들의 삶에 활동장애가 차지하는 매우 크지만 이 조사는 이외에 경제활동, 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활동장애에 대한 질문은 다소 제한적이다. 하지만 통시적으로 조사되는 패널설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 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활동장애에 관한 매우 심도 깊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심층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6.5%가 활동장애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서 활동장애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에게 있어 관절염, 당뇨, 고혈압, 뇌혈관 질환, 치매 등 만성질환과 함께, 비록 실질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하나가 되어버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활동장애가 더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더 긴 것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활동장애를 지니고 살게 되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김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ADL과 IADL의 경우는 우리나라 노인의 17.8%와 46.0%가 각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서 그 발생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고령자패널 자료의 분석을 실시한 장숙량(2006)의 연구에서도 위와 비슷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는데, 먼저 연령별로 볼 때 65세 미만의 성인 집단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ADL은 약3%대, IADL은 약 7%대 미만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 연령대들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65-74세의 노인에게서는 두 가지 일상활동장애 모두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장애율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 연령대 즈음하여 남성들의 사망률이 여성들에 비해 높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소득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ADL과 IADL이 모두 더 많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두 연구는 활동장애와 관련한 최근의 경향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먼저 응답자의 선정 과정인데, 두 조사 모두 응답자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만, 16개 시도차원의 대표성을 전혀 띠고 있지 못해, 활동장애의 지역 간 분포 현황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소지역 추정법을 이용하여 16개 시도의 현황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말 그대로 추정치일 뿐이고 그 추정의 결과도 연령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샘플자료는 위 두 자료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있는데, 전 인구의 약 2%에 달하는 약 90만 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활동장애가 주로 나타나는 65세 이상 인구도 이들 가운데 10%인 약 9만 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5년 당시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일치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방대한 샘플의 크기는 비록 본 조사가 활동장애 혹은 건강이나 보전에 대해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모수의 추정치를 산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시도 간 활동장애율의 차이를 밝혀내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원이 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제 3 장 한국인의 활동장애 실태

이 장에서는 다양한 원인과 형태의 활동장애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된 바대로 활동장애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게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대상 연령집단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활동장애 6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장애 유형은 “신체장애(중풍 포함)”이었는데, 전체 설문 참가자 약 90만 명 가운데 4.8%인 42,635 명이 신체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답하였고, 이들 중 65.8%가 65세 이상의 응답자였다. 물론 나머지 34.2%가 작은 수는 아니지만, 주로 60세 이후의 응답자들이 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역시 65세 즈음하여 활동장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활동장애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활동제약의 육체적·정신적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활동제약의 유형이다. 즉 전자는 원인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구분이 충분히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자와 후자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며 실제 설문에서도 해당되는 모든 장애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서로 큰 연관성이 있는 장애를 동일한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원 설문에서 활동제약의 원인 가운데 “학습의 어려움,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과 “치매”를 하나의 “학습장애” 유형으로,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육체적 제약”과 “중풍”을 “신체장애”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나머지 활동장애의 유형은 설문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활동장애가 노인인구들에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노인인구의 인구/사회적인 특징들을 고려하였다.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 등이 그것이다. 활동장애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그 발생 및 유병빈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석에서 필요한 경우 연령 표준화를 실시하였고, 남성과 여성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1절 6가지 활동장애 유형별 유병율

다음 <표 1>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6가지 활동장애 유병율을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1> 65세 이상 인구의 성별, 연령별 활동장애 유병율

(단위: %)

장애 종류 연령	시각 청각 언어장애		학습장애 (치매 포함)		신체장애 (중풍 포함)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옷 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 안 보행		쇼핑 병원가기 집 밖 보행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5-69세	3.3	2.9	1.5	1.8	15.3	22.4	3.8	4.8	3.1	3.0	8.8	12.1
70-74세	5.5	4.5	2.6	2.5	22.7	31.0	6.4	7.4	4.6	4.9	13.7	18.1
75-79세	8.6	6.8	3.5	4.4	32.1	38.4	9.3	10.8	7.0	7.1	20.7	24.8
80-84세	12.9	11.7	5.7	7.0	37.2	43.4	14.6	16.1	9.6	10.2	27.1	31.9
85세 이상	18.9	18.4	9.1	13.3	43.5	47.5	21.2	25.0	14.4	17.5	33.9	41.4
전체*	6.1	6.1	2.7	3.8	22.8	31.9	6.9	9.2	5.1	6.1	14.5	20.4

주) *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각 장애 변수별 응답율(%)

먼저 전체 유병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신체장애(중풍포함)로 인한 활동제한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남자 22.8%, 여자 31.9%), IADL인 쇼핑, 병원가기, 및 집 밖 보행이 그 뒤를 이었다 (남자 14.5%, 여자 20.4%). 다른 장애 유형들은 남녀 모두 10%를 넘지 않았다. 대부분의 활동장애 유형들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유병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신체장애와 IADL에서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장애 유형에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활동장애 비율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앞서 가장 높은 유병율을 기록했던 신체장애와 IADL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장애 유형들은 가장 낮은 연령대(65-69세)와 가장 높은 연령대(85세 이상)의 유병 비율차이가 거의 두 배 혹은 그 이상 나타났는데, 위 두 유형에서는 그 차이가 약 1.5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신체장애와 IADL은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 발병 시기가 매우 빠른 연령층임을 시사하는 것이고, 다른 활동장애들은 비록 발병의 시기는 빠르지 않지만 고령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절 시각, 청각, 언어장애

다음 <표 2>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시각, 청각, 언어장애가 어떠한 양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장애 유병 비율을 각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분석에 연령표준화를 실시하였고 남녀를 나누어 분석하였으므로 각 특성들

의 구분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표 2>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시각, 청각, 언어장애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14.57
		배우자 있음	6.07
		사별	6.49
	여자	이혼	5.85
		미혼	8.49
		배우자 있음	4.90
		사별	6.59
종교	남자	이혼	7.44
		무교	6.32
		불교	5.75
		기독교	5.89
	여자	천주교	5.69
		기타	6.84
		무교	6.68
		불교	5.66
교육 수준	남자	기독교	5.87
		천주교	5.85
		기타	5.65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7.01
	여자	중학교 졸업	5.69
		고등학교 졸업	5.32
		대학(교)졸 혹은 이상	3.47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6.32
직업	남자	중학교 졸업	3.76
		고등학교 졸업	3.79
		대학(교)졸 혹은 이상	5.10
		의원/전문가/준전문가	1.34
		사무직	2.86
		서비스/판매직	5.51
		농림어업	4.92
	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1.04
		단순노무	2.45
		직업 없음	7.04
		의원/전문가/준전문가	0.95
		사무직	2.27
		서비스/판매직	3.57
		농림어업	5.36
남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4.87	
	단순노무	8.49	
	직업 없음	6.36	

먼저 결혼 상태별 시각, 청각, 언어 장애 노인의 비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 미혼이 다른 결혼 상태에 비해 훨씬 높은 장애율을 나타냈다. 즉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에 비해 미혼 노인은 두 배 이상 높은 시청각 및 언어 장애율을 보였다. 여성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였지만 남자만큼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종단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혼인이 먼저인지 활동장애가 먼저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미혼이라는 혼인 상태가 활동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고, 반대로 장애로 인해 혼인을 못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이혼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본 유형으로 인한 활동장애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종교인데,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와 활동장애와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종교는 신앙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 이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활동장애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가 다른 삶의 특성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연구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떠한 종교를 지니고 있는지 만이 아니라 그 종교가 삶에 얼마나 용해되어 있는지 혹은 종교성(religiosity)이 얼마나 높은지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의 유무 여부와 종류만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을 표준화한 후, 남녀 모두 종교의 유무 혹은 종교가 있는 경우 어떠한 종교를 지니고 있는지와 시청각, 언어장애와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남녀 모두에 있어서 무교일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본 장애율이 다소 높는데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교육수준은 노인인구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건강 연구에서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소득, 직업, 그리고 교육수준에 의해 파악되는데, 노인은 대부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은퇴로 인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가장 적합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표가 된다. 교육은 대부분 30세 이전에 모두 마쳐지기 때문인데, 교육과 함께 최근 노인 관련 연구에서는 자산(wealth)을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자산 정보가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수준만이 분석에 고려되었다. 연령을 표준화한 후 교육은 남자에게 있어 시청각 및 언어장애와 매우 뚜렷한 역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학교 졸업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에 비해 초등학교만을 졸업하거나 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노인들이 두 배 이상 이 장애를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다소 다른데, 중고졸자에 비해 대학교 졸 혹은 이상교육을 받은 고등교육

노인이 이 장애에 대한 유병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은 노인인구에게 사회경제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의 직업과 본 장애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는데, 점점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에서도 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커져가고 있고 실제로 사회에서도 이들의 노동참여 혹은 유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직업과 장애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전문직 혹은 사무직에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이 장애를 겪고 있는 비율이 크게 낮게 나타났다. 예외적인 것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의 소위 블루칼라 집단인데, 이는 시청각 장애가 있을 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매우 큰 제약이 따르므로 역의 인과관계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표 3>은 노인인구의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장애가 연령을 표준화 하였을 때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대표성 있는 활동장애율을 산출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만이 지니고 있는 장점이다. 남자의 경우 서울시가 가장 낮은 장애율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을 나타내는 시지역이 도지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함께 비교적 시청각 및 언어장애의 비율이 높았다.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에 살고 있는 남성 노인인구의 본 장애비율이 매우 높는데, 가장 낮은 수준인 서울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에게도 거의 유사한 패턴의 활동장애가 발견되는데, 서울시가 가장 낮고, 제주와 강원도 지역에 시청각 언어장애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젊은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울산광역시의 노인인구 시청각 및 언어장애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 지역이 공단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에서의 작업환경이 은퇴 후 노인들에게 이러한 장애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단지역의 환경이 간접적으로 노인들에게 시청각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시각, 청각, 혹은 언어 장애는 남자 노인들에게는 미혼의 혼인상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농림어업 혹은 무직의 직업 상태와 다소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장애율을 보였다. 여자 노인들의 경우 미혼, 낮은 교육수준, 단순노무 혹은 무직일 경우 이 장애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울산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

<표 3>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시각, 청각, 언어장애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4.63
	부산광역시	4.77
	대구광역시	5.34
	인천광역시	6.64
	광주광역시	7.19
	대전광역시	5.71
	울산광역시	7.02
	경기도	5.55
	강원도	8.43
	충청북도	6.35
	충청남도	4.75
	전라북도	6.14
	전라남도	7.60
	경상북도	6.83
	경상남도	6.27
	제주도	8.38
	여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5.25
대구광역시		5.68
인천광역시		5.44
광주광역시		7.16
대전광역시		3.78
울산광역시		8.55
경기도		5.52
강원도		7.44
충청북도		5.43
충청남도		4.69
전라북도		6.18
전라남도		7.56
경상북도		7.56
경상남도		6.38
제주도		7.76

3절 학습장애 (치매포함)

<표 4>는 치매를 포함한 노인인구의 학습장애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모든 통계는 연령이 보정되었다. 먼저 결혼 상태별 학습장애를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미혼 노인인구에서 학습장애나 치매의 유병율이 다른 혼인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물론 정신적인 지체가 이들로 하여금 혼인의 기회를 낮추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미혼으로 살아오게 된 다른 이유들이 정신적인 측면의 장애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

남녀 공히 종교의 유무는 물론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신지체와 그리 큰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성경이나 불경 등을 읽고, 교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혹은 종교를 통한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이 정신적인 노화를 예방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종교성이 고려된다면 종교와 정신적인 노화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수준을 보면 연령표준화 학습장애율이 남녀 모두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주목할 만큼 낮은 장애율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높은 교육수준과 가장 낮은 교육수준 간의 장애율 차이가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서 더욱 컸다. 특히 대졸 혹은 그 이상자 여성 노인의 학습장애율이 1.83인데 같은 교육수준의 남성 노인의 학습장애율은 1.91로 나타났는데, 비록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이 결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집단에서 여성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는 것은 매우 선택적인 인구집단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별 학습장애율은 남녀 모두 직업이 없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로 인한 직업선택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학습장애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13.49
		배우자 있음	2.65
		사별	3.17
		이혼	3.39
	여자	미혼	8.47
		배우자 있음	3.13
		사별	3.96
종교	남자	무교	2.71
		불교	2.62
		기독교	2.81
		천주교	3.06
		기타	2.93
	여자	무교	4.14
		불교	3.34
		기독교	4.04
		천주교	3.24
		기타	4.64
교육 수준	남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3.09
		중학교 졸업	2.27
		고등학교 졸업	2.58
		대학(교)졸 혹은 이상	1.91
	여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3.94
		중학교 졸업	2.50
		고등학교 졸업	2.72
		대학(교)졸 혹은 이상	1.83
직업	남자	의원/전문가/준전문가	0.00
		사무직	0.00
		서비스/판매직	0.96
		농림어업	1.21
		기능원/장치/기계조작	0.15
		단순노무	1.74
		직업 없음	3.67
	여자	의원/전문가/준전문가	1.84
		사무직	0.00
		서비스/판매직	0.74
		농림어업	1.53
		기능원/장치/기계조작	0.27
		단순노무	1.01
		직업 없음	4.17

<표 5>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학습장애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2.69
	부산광역시	1.88
	대구광역시	3.23
	인천광역시	2.23
	광주광역시	2.72
	대전광역시	2.92
	울산광역시	1.16
	경기도	2.46
	강원도	3.16
	충청북도	3.58
	충청남도	1.73
	전라북도	3.53
	전라남도	3.31
	경상북도	2.88
	경상남도	2.65
	제주도	2.53
	여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3.36
대구광역시		3.54
인천광역시		2.99
광주광역시		4.29
대전광역시		3.51
울산광역시		4.18
경기도		3.32
강원도		3.85
충청북도		3.59
충청남도		3.32
전라북도		5.04
전라남도		4.49
경상북도		3.78
경상남도	3.88	
제주도	4.27	

<표 5>는 지역별 연령표준화 학습장애 유병율을 나타낸다. 앞선 시청각 및 언어장애 보다 지역간 유병율의 차이가 그리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발견되는데, 남자는 울산광역시가 1.16으로 가장 낮았고 충청북도가 3.58로 가장 높았다. 여자는 인천광역시가 2.99로 가장 낮았고 전라북도가 5.04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치매를 포함한 학습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발견은 바로 울산광역시이다. 이 지역의 남성 노인의 학습장애율은 매우 낮은 편인데, 여성 노인의 그것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병을 위

한 경제적/심리적인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치매를 비롯한 학습장애는 미혼이고,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현재 없는 노인 인구집단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지역에 따른 주목할 만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절 신체적 장애 (중풍 포함)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장애의 분포를 살펴보자. 이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지니고 있는 활동 장애 가운데 가장 많은 유병율을 보이는 것이 중풍을 포함한 신체적 장애이다. 신체적 장애는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육체적 제약을 의미하는데, 골다공증이나 관절염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오기도 하지만 고령으로 인한 노쇠현상으로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 유형별 신체적 장애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낮은 수준의 장애 유병율을 보였고, 사별, 이혼, 그리고 미혼 순으로 유병율이 상승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유병율이 가장 낮았지만 남성과 달리 미혼, 사별 그리고 이혼의 순서로 장애 유병율이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의 연령에도 미혼인 경우 신체적인 장애는 혼인을 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 미혼 노인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신체적 장애율은 장애가 이들의 혼인에 장애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신체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이혼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이혼 이후에 한국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육체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논리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이혼을 경험하여 홀로 살아가는 여성노인들은 높은 신체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앞선 장애 유형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유무와 종류는 남녀 모두에게 주목할 만한 신체적인 장애분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남녀 모두 신체적 장애와 역의 관계를 보였다. 그런데 비록 여성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신체적 장애의 유병율이 더 높았지만, 가장 높은 교육수준과 가장 낮은 교육수준과의 신체적 장애율을 비교해 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 차이를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신체적 활동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신체적 장

애가 노인으로 하여금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역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표 6>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신체적 장애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30.21
		배우자 있음	22.73
		사별	24.25
	여자	이혼	26.37
		미혼	32.38
		배우자 있음	30.08
		사별	33.26
종교	남자	이혼	39.59
		무교	23.07
		불교	23.55
		기독교	22.20
		천주교	20.43
	여자	기타	21.94
		무교	31.70
		불교	32.50
		기독교	31.96
교육 수준	남자	천주교	30.04
		기타	31.68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26.46
		중학교 졸업	21.92
	여자	고등학교 졸업	18.62
		대학(교)졸 혹은 이상	13.45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33.13
직업	남자	중학교 졸업	25.30
		고등학교 졸업	22.09
		대학(교)졸 혹은 이상	21.35
		의원/전문가/준전문가	5.78
		사무직	11.18
		서비스/판매직	9.86
		농림어업	19.06
	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9.59
		단순노무	12.29
		직업 없음	26.61
		의원/전문가/준전문가	18.06
		사무직	16.88
		서비스/판매직	20.58
		농림어업	27.00
남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15.28	
	단순노무	24.08	
	직업 없음	33.44	

교육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별 신체 장애율의 격차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연령대의 여성들의 경제적인 삶은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효과가 남편의 그것에 의해 상쇄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신체적 장애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16.62
	부산광역시	22.14
	대구광역시	24.52
	인천광역시	22.17
	광주광역시	24.26
	대전광역시	20.13
	울산광역시	23.52
	경기도	19.25
	강원도	27.65
	충청북도	24.91
	충청남도	20.84
	전라북도	24.64
	전라남도	26.55
	경상북도	26.11
	경상남도	26.26
	제주도	28.31
	여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30.40
대구광역시		33.74
인천광역시		31.09
광주광역시		35.05
대전광역시		27.62
울산광역시		32.27
경기도		27.25
강원도		35.15
충청북도		32.61
충청남도		27.25
전라북도		36.21
전라남도		36.81
경상북도		35.60
경상남도		34.56
제주도		39.36

신체적 장애 유병율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연령표준화 장애율이 시지역에 비해 도지역이 다소 높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남녀 공히 서울지역의 노인들이 신체적 장애로부터 가장 자유로웠고, 제주도의 노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절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장애

지금까지 활동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의 유형별로 그 분포를 알아봤다. 이제는 원인보다는 활동장애 자체가 어떠한 유형을 지니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 활동장애의 유형은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의 장애이다. 이 장애는 신체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이거나 감성적인 측면에서 활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앞서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들 가운데 치매를 포함하는 학습장애로부터 발생된 장애와 관련이 깊다.

다음 <표 8>은 이러한 유형의 장애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먼저 결혼 상태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미혼인 경우에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한편 남자에게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노인인구가 이러한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가장 낮은 반면 여자는 이혼한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치매를 포함한 학습장애에서와 동일한 발견이다.

종교가 없는 노인들이 종교가 있는 노인들에 비해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등학교졸업 혹은 그 이하로 매우 낮은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에 장애를 겪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데, 남자는 8.23%가 여자는 9.75%가 그러하였다.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들과 이들의 본 장애유형에 있어서의 차이는 남자는 두 배 이상, 여자도 거의 두 배에 가깝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대학교 졸업 이상자들의 이 장애 유병율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약 2% 포인트) 여자들의 경우 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최소한 65세 이상 연령대에겐 학력이 남자들에게 사회적 삶의 매우 중요한 특성인 반면 여성에게는 학력이 매우 낮지 않는 한 그렇지 않은 한국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직업적 구분으로 본 사회경제적 수준과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의 제약은 뚜렷한 관계가 드러나는데, 전문직 혹은 사무직에 있는 노인들이 농림어업이나, 기능원/장치/기계조작 혹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들에 비해 이러한 종류의 활동제한을 훨씬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활동장애의 선택성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경우 매우 높은 장애율을 나타내었다.

<표 8>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장애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19.00
		배우자 있음	6.76
		사별	7.87
		이혼	8.70
	여자	미혼	12.88
		배우자 있음	8.19
		사별	9.69
종교	남자	무교	7.06
		불교	6.67
		기독교	6.63
		천주교	6.75
		기타	8.08
	여자	무교	10.03
		불교	8.88
		기독교	9.14
		천주교	7.80
		기타	9.53
교육 수준	남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8.23
		중학교 졸업	6.00
		고등학교 졸업	5.57
		대학(교)졸 혹은 이상	3.79
	여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9.75
		중학교 졸업	4.59
		고등학교 졸업	5.29
직업	남자	의원/전문가/준전문가	0.72
		사무직	1.33
		서비스/판매직	1.87
		농림어업	5.46
		기능원/장치/기계조작	2.06
		단순노무	4.03
		직업 없음	8.16
	여자	의원/전문가/준전문가	2.32
		사무직	3.02
		서비스/판매직	5.11
		농림어업	7.36
		기능원/장치/기계조작	6.45
		단순노무	6.33
		직업 없음	9.63

<표 9>는 이 장애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시지역에 비해 도지역이 노인들의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제약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발견은 울산광역시인데, 남자의 이 장애 유병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5.66%), 여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10.98%). 역시 유사한 결과가 앞선 학습장애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 여성노인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비록 연령이 보정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광주광역시, 제주도, 강원도, 혹은 전라도와 같이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곳에서 정신적인 활동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9>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장애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5.54
	부산광역시	4.67
	대구광역시	7.14
	인천광역시	5.41
	광주광역시	7.49
	대전광역시	5.54
	울산광역시	5.66
	경기도	6.00
	강원도	8.40
	충청북도	7.89
	충청남도	4.87
	전라북도	8.26
	전라남도	9.12
	경상북도	7.63
	경상남도	8.45
	제주도	7.92
여자	서울특별시	7.37
	부산광역시	6.79
	대구광역시	8.54
	인천광역시	7.86
	광주광역시	12.38
	대전광역시	7.75
	울산광역시	10.98
	경기도	7.46
	강원도	9.87
	충청북도	8.66
	충청남도	7.28
	전라북도	11.60
	전라남도	11.80
	경상북도	10.95
	경상남도	10.40
	제주도	11.62

6절 ADL 활동장애 유병율

한 사회 혹은 개인의 활동장애를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ADL과 IADL이다. 이 두 지표는 그 사회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 데에도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혹은 미국의 Social Indicator's Survey, 유럽의 EuroQol에도 다수의 삶의 질 질문과 함께 ADL과 IADL이 함께 질문되어진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ADL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집안 내에서 돌아다니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기초적인 일상을 하는데 있어서 혼자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서 다소 심각한 수준의 활동장애를 의미한다. <표 10>은 ADL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들의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모든 유병율 계산에 연령이 보정되었다.

먼저 혼인상태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미혼인 경우가 높은 연령표준화 ADL장애율을 보였는데,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약 5%인 반면 미혼은 9%에 달했다. 여자는 그보다는 다소 차이가 작은 편이지만 여전히 미혼 여성노인에게서 ADL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 모두 이혼을 경험한 경우 ADL 장애율이 다소 높았는데, 장애로 인해 이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혼이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편이 더욱 적절하다. 종교의 유무는 남자에서는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은 종교가 없을 때 ADL 유병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교의 종류별로 보면 세 가지 대표적인 종교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여자의 기타 종교는 ADL과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장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교육수준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ADL 장애 유병율도 높이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남자의 경우 대졸 혹은 이상의 노인은 3.28%,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의 노인은 5.55%가 ADL을 겪고 있었고, 여성은 각각 4.89%와 6.22%이었다. 직업별 유병율을 보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남녀 각각 7.24%와 6.91%로 다른 직업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증의 활동장애로 볼 수 있는 ADL이 있을 경우 어떠한 유형이라도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업 유형과 상관없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ADL 유병율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표 10>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ADL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8.79
		배우자 있음	5.11
		사별	5.05
	여자	이혼	6.27
		미혼	8.15
		배우자 있음	5.73
		사별	6.15
종교	남자	이혼	7.12
		무교	4.94
		불교	4.98
		기독교	5.40
		천주교	5.37
	여자	기타	4.67
		무교	6.73
		불교	5.40
		기독교	5.78
		천주교	5.93
교육 수준	남자	기타	7.21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5.55
		중학교 졸업	4.88
		고등학교 졸업	4.59
	여자	대학(교)졸 혹은 이상	3.28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6.22
		중학교 졸업	4.48
		고등학교 졸업	5.57
직업	남자	대학(교)졸 혹은 이상	4.89
		의원/전문가/준전문가	0.84
		사무직	2.68
		서비스/판매직	1.41
		농림어업	1.63
		기능원/장치/기계조작	0.37
		단순노무	0.89
	여자	직업 없음	7.24
		의원/전문가/준전문가	0.48
		사무직	0.74
		서비스/판매직	1.79
		농림어업	2.26
		기능원/장치/기계조작	0.54
		단순노무	0.68
직업 없음	6.91		

<표 11>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ADL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3.99
	부산광역시	4.52
	대구광역시	4.95
	인천광역시	5.93
	광주광역시	3.85
	대전광역시	5.75
	울산광역시	4.61
	경기도	4.32
	강원도	5.77
	충청북도	5.31
	충청남도	4.20
	전라북도	5.90
	전라남도	6.15
	경상북도	5.02
	경상남도	6.17
	제주도	6.92
여자	서울특별시	5.42
	부산광역시	6.07
	대구광역시	5.48
	인천광역시	6.77
	광주광역시	5.84
	대전광역시	6.47
	울산광역시	5.38
	경기도	5.27
	강원도	6.28
	충청북도	5.39
	충청남도	4.73
	전라북도	7.65
	전라남도	7.00
	경상북도	6.27
	경상남도	6.60
	제주도	6.46

<표 11>은 옷 입고, 목욕하고, 밥 먹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활동이 제한된 노인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앞서 다른 장애들에서 시지역에 비해 도지역의 장애 유병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 모두 ADL의 지역 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가지 활동장애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이 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집안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ADL은 지역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도 남자는 서울의 ADL 유

병율이 가장 낮고, 제주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다소 높은 유병율을 보였고, 여자는 충청남도가 4.73%로 가장 낮고, 전라남도가 7.00%로 다소 높아, 지역 간 차이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7절 IADL 활동장애 유병율

앞서 분석한 ADL과 함께 일반적으로 활동장애의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 가운데 하나인 IADL을 살펴보자. IADL은 ADL보다는 다소 경미한 활동장애로 여겨지는데, 집 안에서는 그다지 상관이 없지만 밖에 나가서 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고, 혹은 다른 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활동이 편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 <표 12>에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이 IADL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혼인 상태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미혼으로 남아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도구적 활동장애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의 IADL 유병율이 남녀 각각 14.37%와 19.15%인 반면 미혼 노인들은 22.94%와 22.82%로 높게 나타났는데, 여자들에게서 보다 남자 노인들의 미혼과 이 활동장애 유병율이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남자는 아니었지만, 여자의 경우 이혼과 IADL이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AD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활동장애가 이혼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마도 이혼을 경험한 여성이 스스로 생계를 이끌어 나가면서 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그것에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그들에게 IADL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종교의 유무와 종류는 남녀 모두 연령이 표준화 되었을 경우 유병율에 그다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 IADL 장애 유병율을 보면,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과 이 활동장애가 매우 큰 연관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남자들에게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장애율이 두드러지게 낮아지고 있는데, 여자들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를 제외하면 활동장애 유병율이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결과인데, 한국 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른 의미를 지니는지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남자들에게 있어 교육은 사회적 삶의 차별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반면 여자들에게는 매우 낮은 수준의 교육인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 수준은 삶의 궤적을 그리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직업이

없는 경우가 IADL의 유병율이 가장 높았는데, 역시 장애로 인한 무직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 가운데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IADL 유병율이 남녀 공히 매우 높았는데, 밖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표 12>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IADL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22.94
		배우자 있음	14.37
		사별	15.54
	여자	미혼	14.14
		배우자 있음	22.82
		사별	19.15
종교	남자	이혼	21.15
		무교	23.35
		불교	14.77
		기독교	14.16
	여자	천주교	14.72
		기타	13.23
		무교	14.38
		불교	21.09
교육 수준	남자	기독교	19.79
		천주교	20.66
		기타	18.85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21.67
	여자	중학교 졸업	16.76
		고등학교 졸업	13.39
		대학(교)졸 혹은 이상	11.99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7.93
직업	남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21.20
		중학교 졸업	15.07
		고등학교 졸업	13.32
		대학(교)졸 혹은 이상	14.40
		의원/전문가/준전문가	2.55
		사무직	6.43
		서비스/판매직	5.67
	여자	농림어업	9.60
		기능원/장치/기계조작	3.39
		단순노무	4.27
		직업 없음	18.19
		의원/전문가/준전문가	5.77
		사무직	6.96
		서비스/판매직	8.56
농림어업	농림어업	13.53	
	기능원/장치/기계조작	10.21	
	단순노무	12.62	
	직업 없음	22.09	

<표 13>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IADL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9.86
	부산광역시	13.25
	대구광역시	15.61
	인천광역시	14.72
	광주광역시	16.06
	대전광역시	11.43
	울산광역시	13.33
	경기도	11.60
	강원도	15.96
	충청북도	16.14
	충청남도	13.56
	전라북도	17.04
	전라남도	18.51
	경상북도	15.75
	경상남도	17.03
	제주도	19.05
	여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19.51
대구광역시		20.98
인천광역시		21.12
광주광역시		23.24
대전광역시		17.44
울산광역시		20.10
경기도		16.57
강원도		20.73
충청북도		21.54
충청남도		17.61
전라북도		25.03
전라남도		25.05
경상북도		21.79
경상남도		22.87
제주도		24.14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생계를 위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위 <표 13>은 IADL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남자

들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들 가운데 IADL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았는데, 유병율이 9.86%로 나타났다. 이는 유병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도의 19.05%의 절반 수준이다. 유병율이 높은 다른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 이었다. 여자의 경우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IADL 유병율이 15.21%로 가장 낮았는데,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인 지역인 전라남도의 25.05%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남자들과 유사하게 제주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의 여성 노인들이 수단적 활동장애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교하여 가장 낮은 IADL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노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실제로 건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지역의 제반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가 어렵지 않게 바깥 생활을 하는데 유리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도 상대적으로 낮은 IADL 유병율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활동장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 4 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한국인의 활동장애율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특히 노인 인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ADL과 IADL을 동시에 고려할 때 19세 이상 전체 성인 가운데 한국인은 8.3%가 미국인은 4.3%가 각각 2005년과 2003년에 활동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의 노인들만으로 고려의 대상을 한정하면 65-74세까지 한국은 29.8%, 미국은 9.9%가, 75세 이상은 한국 54.0% 미국 29.2%로 그 격차가 훨씬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두 나라가 건강이나 활동제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미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활동장애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게 분명히 중요한 보건문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하나는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인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의 보건학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보건 정책에 대한 것이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의 보건학적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자. 본 연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장애가 원인과 유형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고찰을 시도하였다. 물론 노인인구의 활동장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인구를 커버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장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발견과 결과는 다른 연구들이 수행하지 못한 제한점을 잘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산출용 자료인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샘플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전국적인 통계를 산출하기는 하였지만 활동제한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추정치로 밖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활동제한의 원인과 유형도 인구주택총조사가 오히려 더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그리고 지역 수준의 활동장애 유병율을 산출하는데 있어 더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방대한 샘플의 크기와 활동장애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는 비록 그 목적이 특별히 보건과 활동장애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활동장애율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함께 인구주택총조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65-74세 노인들의 ADL과 IADL 유병율이 본 연구에서는 남녀를 나누지 않더라도 약 10%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활동장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기 시작한 것이 2005년이 처음이므로 발견된 유병율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조사가 더욱 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활동제한에 관한 결과와의 큰 차이는 보건학계와 관련 부처에서 진지하게 검증해 봐야할 사안이라 사료된다.

비록 유병율 자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 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활동제한의 분포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결과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거의 대부분의 활동제한의 원인과 유형에서 더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활동장애 유병율이 낮으며, 특히 미혼인 경우 모든 활동제한 유형과 원인에서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들의 활동장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남자들은 교육수준과 활동장애율이 대부분 역의 관계를 보였지만, 여자들은 가장 낮은 교육수준을 제외하면 다른 교육수준 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비록 selection효과가 매우 크겠지만, 직업적 위세도 거의 모든 활동장애 유형과 원인에서 유병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 노인인구가 활동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비록 본 연구가 횡단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추론할 때 연구에서 고려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장애의 발생과 유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현재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 인구집단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하여야 함도 제시하는 결과이다.

지역으로 보았을 때 비록 본 연구가 연령을 모두 보정한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대부분의 활동장애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큰 시도의 장애 유병율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 유병율을 보였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이들 지역에 활동장애를 가진 노인이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의 경제발전과 복지제도 및 시설개선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주된 수혜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다른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활동장애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이 지역 내 인구/사회적 특성이 노인들의 활동장애를 어떻게 분포시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록 수가 많지 않더라도 조금 더 많은 건강 혹은 보건관련 질문들이 인구주택총조사 설

문에 포함된다면 앞으로 더욱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 5 장 결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국가와 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을 사회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부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령 인구의 부양 때문이다. 만일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없다면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용인의 수준이 더욱 높았을 것이다. 계속 증가하게 될 평균수명과 이 증가속도에 못 미치는 건강기대수명은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의 활동을 제약하여 노인을 독립적이고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활동제약의 유형과 원인에 대하여 사회적 분포를 확인하고 고찰하였다. 전체 국민의 2%에 달하는 큰 샘플을 확보한 인구주택총조사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장애와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가 실시되었고 국내의 다른 어떠한 조사도 시도별 대표성 있는 유병율 차이를 발표해오지 못해온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의 보건 당국은 물론 특히 지방정부의 노인 복지와 보건정책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젊은 연령대의 인구보다는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노인인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노동참여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의 취로사업과 같은 노동의 강도와 질이 매우 낮은 노동참여가 아니라 그들이 40-50대를 지나면서 축적해 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노동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의 최우선 결정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노인 인구의 건강이고 활동제약의 가능성을 줄여가는 일이다. 이는 노인인구의 노동참여는 물론 활동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의료/복지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져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남자 23% 여자 32%가 다양한 유형의 신체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활동에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남자 15% 여자 2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장애 발병 시기를 늦추고 유병율을 낮추는 일에 더욱 많은 사회적 관심과 자원의 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2% 샘플자료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제 6 장 참고문헌

- 윤병준, 김정근. 1996. “장애제거 기대여명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19권 123-137.
- 권영훈, 이종규, 도영경, 윤석준, 김창엽, 김용익, 신영수. 2002. “국민건강면접조사를 이용한 한국인의 장애보정기대여명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제35권 331-339.
- 장숙량. 2006. “Findings from Pilot data on Health.” Unpublished Report,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The second Advisory Panel Meeting. October 12-13, 2006. Sonoma. California.

가구 구성 및 주거 실태를 통해 본 주택 공급의 재편 방안

장세훈 (동아대)

I. 문제제기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던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직면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농으로 대변되는 대규모의 인구이동에서 빚어진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주거 불안 문제는 도시문제의 관건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해 왔다. 특히 주거 위기가 극심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을 필두로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함으로써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5.9%에 달하는 등,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아파트로 상징되는 근대적 주거공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주거 규모 및 시설 또한 크게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주거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 양상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또 주택 재고 물량의 부족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크게 완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House)이라는 양적인 차원, 물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Housing)라는 질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Turner, 1976; 1979),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총량적인 주택 수요(House Demands)는 일정 정도 충족시켜 주었지만, 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요구, 즉 주거 소요(Housing Needs)에 제대로 부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던 그간의 노력들을 되돌아보면, 이 같은 논의가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님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주어진 기한 내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이를 위해 민간 건설업체의 적극

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인가, 주택 건설을 통해 안정된 적정 수익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주체인 정부와 기업의 관점에서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해 왔다. 그 반면에 주택 수요의 주체인 집 없는 서민의 입장은 제대로 대변되지도 못했고, 또 거의 고려되지도 않았다(손경환, 2005). 극심한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주택은 짓기도 전에 팔려 나가는 ‘선분양(先分讓)’의 대상이어서,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총량적 수준에서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수요를 무시한 무분별한 주택 공급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촉발해서 주택 자원의 ‘사회적 낭비’, 이른바 ‘가치잠식(Devaluation)’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는 주택 공급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보다 효과적인 주택 분배 방식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수요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구 구성이 크게 바뀌어 과거와 같은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주택의 대량 공급, 대량 소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한 부모 가정과 1인 단독 가구, 노인 가구 등과 같이 과거에는 예외적인 가구 형태로 여겨지던 가구들이 크게 늘어나 ‘부모+자녀’로 구성된 ‘표준 가구’를 더 이상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최근 확산되는 가구 유형들이 불안정하고 취약한 형태의 가구들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서도 주거복지를 고려하는 등 좀 더 많은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고려해서 주택 수요 계층이 누구인가를 판별해 내는 한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주택 분배 방식은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가구 구성 및 주거 실태의 변화 추이와 주택 공급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주택의 수요와 공급 간의 조응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가구 형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2장), 이에 따른 가구별 주거 및 주택소유 실태를 점검한다(3장). 다음으로 4장에서는 주택 재고 현황이 어떠한지, 신규 주택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5장에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구 구성의 변화와 주택 공급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가구-주택의 부조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상의 연구를 위해 이 글에서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

사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고, 기타 주택과 관련한 총량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 시기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25년간으로 한정한다. 이는 그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가구 구성이 1980년대 이후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고,¹⁾ 정부가 주택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같은 급격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구와 주택 간의 부조응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단순한 주택 재고 물량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주택 문제를 낳기 때문에, 분석 시기를 이 시기로 국한시켜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 가구의 변화 추이

가구는 흔히 “취사와 기타 기본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단위”를 가리킨다(UN, 1998). 이에 근거해서 통계청(2006)에서는 가구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가구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모든 형태의 집단생활이 포함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이와 구분해서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가구주 및 가족, 친척 등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를 ‘보통가구’로 정의했고, 대다수 연구가 보통가구 개념을 중심으로 가구 구성을 살펴왔다.

그러나 보통가구 개념은 지나치게 혈연을 강조한 나머지 그 구성이 다양해지고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현실의 실제 가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1980년부터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5명 이하의 사람들이 집단시설 이외의 거처에서 가구주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모여 취침, 취사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일반가구’로 규정하고,²⁾ 이에 근거해서 가구의 구

1) 이는 가구의 구분 기준이 1980년을 기점으로 변경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 혈연관계를 중시한 ‘보통가구’ 개념에 기초했다면, 1980년 이후에는 비혈연관계의 구성원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일반가구’ 개념이 사용되었다(정의철, 2002: 29). 이는 가구 구성의 변화를 개념적으로 수용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으로 일반가구에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가 포함된다(통계청, 2006).

성 및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통계청, 2006).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도 일반가구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가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인구 및 가구 변동 추이: 1980-2005년

(단위: 천명, 천가구, 명,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총인구 (증가율)	37,436 (1.53)	40,448 (1.56)	43,411 (1.42)	44,609 (0.55)	46,136 (0.68)	47,279 (0.49)
일반가구 (증가율)	7,969 (3.69)	9,571 (3.73)	11,355 (3.48)	12,958 (2.68)	14,312 (2.01)	15,887 (2.11)
평균가구원	4.54	4.09	3.71	3.34	3.12	2.88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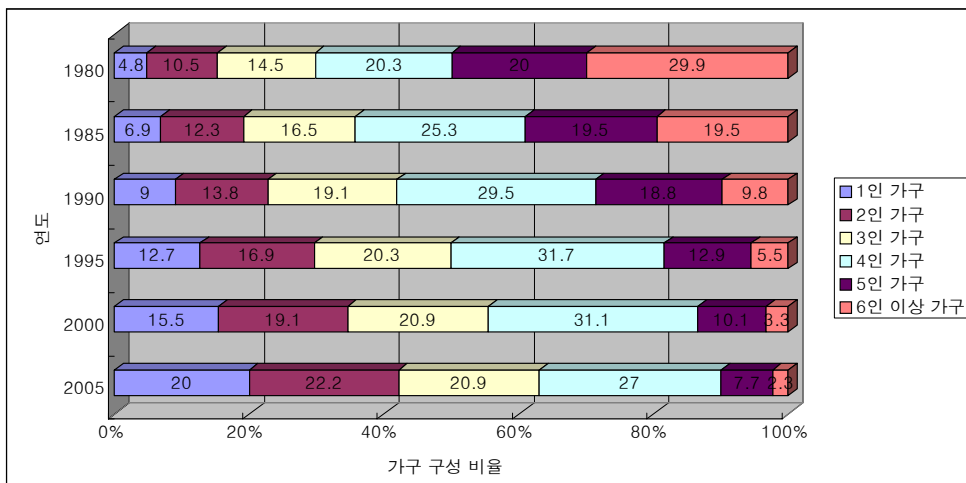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전쟁, 해외 이주 등의 일시적인 사회적 격변을 제외하고는 20세기 내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표 1>에서 보듯이, 1980년 이후에도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980년대 전반기 1.5%에서 2000년 전반기 0.5%로 격감하는 등, 인구 증가 추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일반가구도 꾸준히 증가해서, 1980년 797만여 가구였던 것이 2005년 1,589만여 가구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은 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에, 일반가구의 그것은 그보다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해서 2000년대 전반기에도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구 규모의 축소가 인구 증가 추세의 둔화를 일정 정도 상쇄하는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4.54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4명 이하로 감소했고, 2005년에는 3명 이하로까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인구 증가 추세가 빠르게 둔화되더라도 가구의 증가 추세는 그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가구원 수별로 일반가구를 구분해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림 1>을 보면, 1인 가구는 1980년 4.8%에서 2005년 20.0%로 크게 늘어난 반면에, 6인 이상 가구는 29.9%에서 3.3%로 격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올수록

그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2000-2005년 사이에 1인 가구는 42.5%나 증가한 데 반해, 5인 이상 가구는 17.7%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1-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구는 꾸준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5인 이상 가구는 격감하는 반면에, 3-4인 가구는 점증해 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리적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가구 규모가 단축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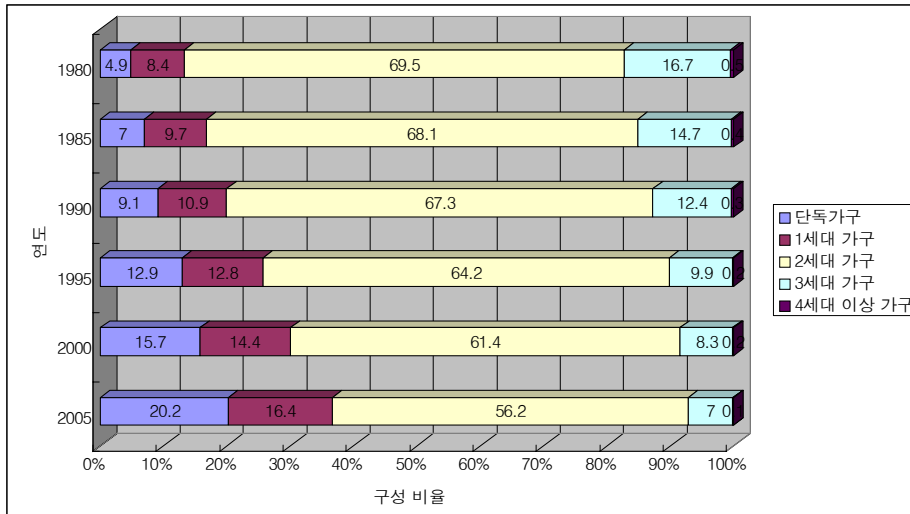
<그림 1>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 1980-2005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가구 규모가 이처럼 축소되면서, 가구의 세대 구성도 과거에 비해 단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1세대 가구가 앞서 살펴본 1인 가구에 못지 않게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1980년 8.4%였던 것이 2005년 16.4%로 늘어났다. 그 반면에 4세대 이상 가구는 0.5% 수준이던 것이 0.1% 수준으로 줄어 거의 흔적을 찾아 보기도 어렵고, 3세대 가구도 16.7%에서 7.0%로 격감했다. 근대적 가족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던 2세대 가구도 점차 감소해서 1980년 69.5%에서 2005년 56.2%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그림 2> 참조). 이 같은 소가족화 경향은 출산율의 감소, 핵가족화 추세,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이다(권태환·박영진, 1995; 김정석, 2002: 252).

<그림 2> 세대별 가구 구성: 1980-2005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이처럼 세대 구성이 단순해지지만, 각 세대별 내부구성은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세대 구성이 안정적인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표 2> 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2000-2005년

(단위: 천가구, %)

가구 구분	2000년		2005년	
	천가구	(%)	천가구	(%)
1인 가구	2,224	15.7	3,171	20.3
1세대 가구	2,034	14.4	2,575	16.4
2세대 가구	8,696	61.4	8,807	56.2
부부+자녀	(6,892)	(48.7)	(6,702)	(42.8)
한부모 가구	(1,124)	(7.9)	(1,370)	(8.7)
조손가구	(45)	(0.3)	(58)	(0.4)
3세대 가구	1,176	8.3	1,093	7.0
4세대 가구	22	0.2	16	0.1
합계(혈연가구)	14,152	100.0	15,662	100.0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예컨대 2세대 가구 중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가 ‘부부+자녀’ 가구인데, 이처럼 안정적인 가족 형태는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표 2>를 보면, 2세대 가구 중에서 ‘부부+자녀’ 가구는 2000년 48.7%였던 것이 2005년에는 42.8%로 감소하고, 편부, 편모로 이루어진 한 부모 가구가 7.9%에서 8.7%로, 또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 가구가 0.3%에서 0.4%로 늘어났다. 이는 최근에 올수록 이혼, 사별 등이 늘어나 가족 해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불안정한 가구 형태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안정한 가구 형태, 이른바 ‘취약가구’들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이 같은 취약가구로는 흔히 1인 가구, 노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을 손꼽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 3> 1인 가구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단위: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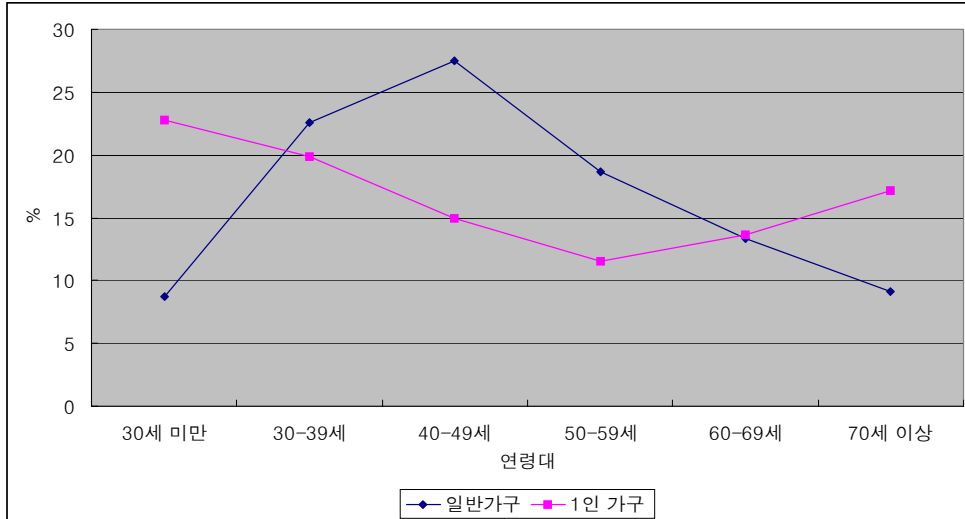
연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일반가구(A)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동 지역(B)	4,670	6,331	8,463	10,032	11,230	12,745
읍·면 지역(C)	3,299	3,240	2,892	2,926	3,082	3,142
1인 가구(D)	383	661	1,021	1,642	2,224	3,171
D/A(%)	(4.8)	(6.9)	(9.0)	(12.7)	(15.5)	(20.0)
동 지역(E)	220	428	723	1,185	1,642	2,440
E/D(%)	(57.5)	(64.7)	(70.8)	(72.2)	(73.8)	(76.9)
읍·면 지역(F)	163	233	298	457	582	731
E/B(%)	(4.7)	(6.8)	(8.5)	(11.8)	(14.6)	(19.1)
F/C(%)	(4.9)	(7.2)	(10.3)	(15.6)	(18.9)	(23.3)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먼저 1인 가구를 살펴보면, 1980년 38만여 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005년에는 약 317만 가구로 4반세기만에 8배 이상 증가했고,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에서 20.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표 3> 참조). 이는 1인 가구가 더 이상 예외적인 가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았음을 의

미한다.

<그림 3> 전국의 일반가구 및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2005년



자료: 통계청,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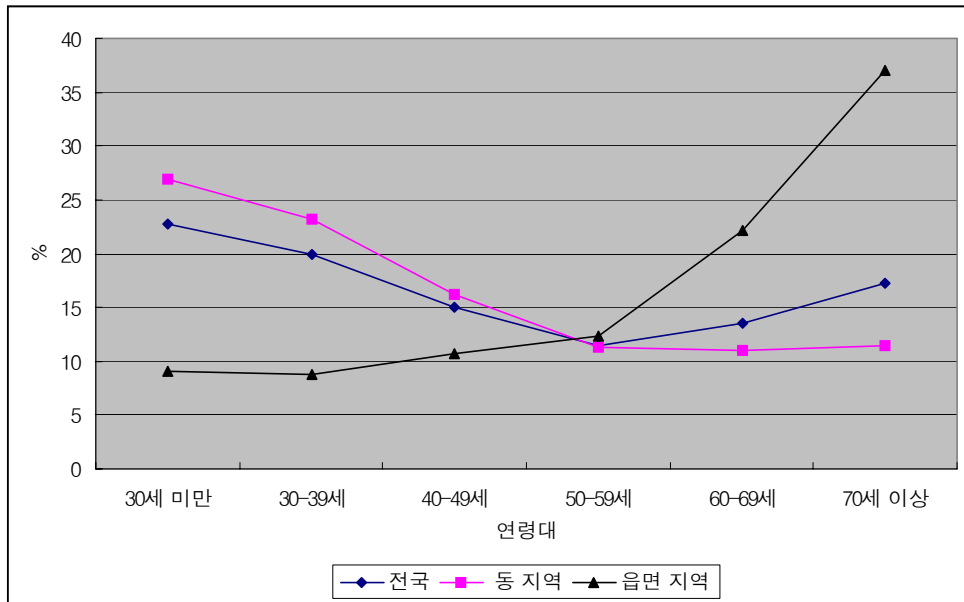
다음으로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세 미만의 청년층에 많이 몰려 있고, 중·장년층에서 서서히 감소하다가 70세 이상 고령층에 다시 몰리는 U자형 분포도를 그리고 있다. 이는 30-50대의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고 30대 미만의 청년층과 60대 이상의 노령층 비중이 낮아 역U자형 분포를 그리는 일반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그림 3> 참조).

그런데 1인 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촌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에서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동 지역의 1인 가구는 1980년 22만여명에서 2005년 244만여명으로 늘어났는데, 읍·면 지역에서는 16만여명에서 73만여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도시 지역에 1인 가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도·농 지역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가구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농촌 지역보다 높지만 일반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2005년간

4.7%에서 19.1%로 늘어난 데 반해, 농촌 지역에서는 가구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1인 가구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비중이 4.9%에서 23.3%로 늘어났다(<표 3> 참조).

<그림 4> 1인 가구의 도·농별 인구 분포: 2005년



자료: 통계청,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그렇다면 도시와 농촌의 1인 가구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는 2005년 현재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에 대한 도·농간 비교에서 잘 드러난다. 동 지역의 경우에는 30세 미만의 청년층에 전체의 1/4 이상이 몰려있는 반면에, 읍·면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달리 70세 이상 고령인구층의 비중을 보면, 동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11.4%에 불과한데, 읍·면 지역에서는 이들의 비중이 37.1%에 달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이를 통해 우리는 1인 가구의 전국적 연령별 분포가 보여주는 U자형이 결과적으로는 청년층 1인 가구는 도시 지역에, 고령층 1인 가구는 농촌 지역에 몰려 있음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 노인 가구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단위: %)

가구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노인 가구 비중	5.9	5.8	8.5	9.7	12.2	17.9
도시 노인 가구 비중	3.8	4.0	5.6	6.4	8.4	11.7
농촌 노인 가구 비중	8.9	9.3	17.1	20.6	25.2	36.1

주: 노인 가구 = 노인 단독가구 + 노인 부부 가구.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다음으로 노인 가구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 가구의 비중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표 4>에 따르면, 1980년에 5.9%에 지나지 않았던 노인 가구가 2005년에는 17.9%로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청·장년층이 도시로 떠나고 노인 인구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꾸러진 농촌 지역에서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동부 지역의 노인 가구는 1980-2005년간 3.8%에서 11.7%로 증가한 데 반해, 읍·면부 지역 노인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8.9%에서 36.1%로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표 4> 참조).

<표 5> 한 부모 가구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단위: 천가구, %)

가구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일반 가구(A)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한부모 가구(B)	744	848	889	960	1,124	1,370
B/A(%)	9.33	8.86	7.83	7.41	7.85	8.62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마지막으로 한 부모 가구를 살펴보자. 한 부모 가구는 다른 취약 가구들에 비교할 때,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80년 한 부모 가구의 비중이 9.3%로 가장 높았는데, 점차 줄어들어 1995년 7.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져 가족 해체 현상이 늘어나면서, 한 부모 가구의 비중도 커지기 시작해서 2000년에는 7.9%, 2005년에는 8.6%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Ⅲ. 가구별 주거 및 주택 점유 실태

1. 가구별 주거 실태

지난 25년간 가구 규모 및 구성과 관련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들 가구의 주거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먼저 <표 6>에서 거처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거 유형이 크게 변모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표 6> 전국의 가구별 주거 유형: 1980-2005년

(단위: 천호, %)

주거 유형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단독주택	7,107 (89.7)	7,838 (82.2)	8,506 (75.3)	7,716 (59.8)	7,103 (49.9)	7,064 (45.1)
아파트	391 (4.9)	863 (9.0)	1,678 (14.9)	3,478 (26.9)	5,238 (36.8)	6,629 (42.3)
연립/다세대 주택	205 (2.6)	442 (4.6)	729 (6.4)	1,139 (8.8)	1,294 (9.1)	1,695 (10.8)
영업용건물 내 주택	224 (2.8)	393 (4.1)	388 (3.4)	576 (4.5)	593 (4.2)	282 (1.8)
주택 합계	7,926 (100.0)	9,536 (100.0)	11,301 (100.0)	12,909 (100.0)	14,227 (100.0)	15,670 (100.0)
주택 이외의 거처	43	35,820	54	49	84	217
거처 총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1980년에는 5%도 안되는 가구만이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1985년에는 그 비율이 10%에 육박했고, 1995년에는 전체 가구의 1/4 이상이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전체 가구의 2/5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에 반해 1980년 전체 가구의 대다수가 단독주택에서 생활했는데, 1990년에는 그 비중이 3/4으로 줄었고, 2000년에 이미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2005년에는 다시 45%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그 외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2005년에도 10% 수준에 머물러 지배적인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지는 못한 실정이다.

<표 7> 가구 형태별 주거 유형: 1980년, 2005년 비교

(단위: %)

1980년	일반가구	1인 가구	노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단독주택	89.7	86.2	90.8	91.1
아파트	4.9	4.4	2.9	2.8
연립/다세대 주택	2.6	1.8	2.4	2.4
영업용건물 내 주택	2.8	7.6	3.9	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2005년	일반가구	1인 가구	노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단독주택	45.1	67.6	73.6	64.8
아파트	42.3	20.1	18.9	24.1
연립/다세대 주택	10.8	6.6	5.8	8.7
영업용건물 내 주택	1.8	5.7	1.7	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198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빈곤층이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중하층용 주택으로 낙인찍힌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근대적 생활양식의 상징이자 안락하고 쾌적한 중산층용 주거공간으로 받아들여져 주거 선호 1순위로 자리잡으면서, 크게 확산될 수 있었다(박철수, 2006; 천현숙, 2002). 또한 만성적인 주택 과부족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대량의 주택 공급이 필요했던 정부로서도 대규모 단지 형태로 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의 주거생활 확산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단지형 아파트가 공급된 지 40여년만에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아파트 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줄레조, 2007).

아파트가 극소수 중상층의 주거 공간이었던 1980년대에는 가구 형태에 따른

주거 유형의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즉 1980년에는 1인 가구, 노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과 같은 취약 가구나 일반 가구 모두 90% 가까이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중산층의 보편적 주거로 자리잡은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반 가구에서는 단독주택 거주 가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에, 취약가구에서는 적게는 해당 가구의 2/3, 많게는 3/4이 여전히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아파트 거주 가구가 20% 수준을 맴돌고 있다(<표 7> 참조). 이는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의 상당 수가 노령층이어서 전통적인 단독주택 거주를 선호하고, 농촌에 거주해서 아파트를 접한 기회가 부족한데다가,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여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었지만, 그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미미해서 취약 가구 가운데 그 수혜 대상이 적은 탓도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취약 가구는 이로부터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8> 주거공간의 규모 변화: 1980-2005년

(단위: 개, 명)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가구 당 평균 사용 방 수(개)	2.2	2.2	2.5	3.1	3.4	3.6
방 당 평균 가구원 수(명)	2.10	1.87	1.48	1.08	0.92	0.81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그렇다면 주거공간의 규모는 얼마나 달라졌을까?3) 먼저 가구 당 평균 사용 방수를 보면, 1980년 한 가구가 평균 2.2개의 방을 사용했는데, 2005년에는 3.6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일반 국민의 소비 수준이 향상되어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축 주택의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단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3) 통계청 조사에서는 거실도 방 한 칸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통계청 수치를 활용할 경우 방수가 실제보다 과다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공간의 변화 추이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해석 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 당 평균 가구원 수에서도 1980년 2.1명에서 2005년 0.8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표 8> 참조). 신축 주택의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및 가구 분할의 진전으로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가구 당 평균 사용 방 수의 증가 속도보다 방 당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르게 전개된 결과이다.

<표 9> 주거빈곤 가구의 추이: 1980-2005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일반가구(A)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방수 기준 주거빈곤 가구(B)	4,686	4,917	2,770	1,335	372	170
(B/A)	(58.8)	(51.4)	(24.4)	(10.3)	(2.6)	(1.1)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C)	1,785	1,952	1,408	388	100	56
(C/A)	(22.4)	(20.4)	(12.4)	(3.0)	(0.7)	(0.4)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이 같은 주거공간의 확장은 중산층 이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주거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주거빈곤 가구들도 협소한 주거공간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에서 서서히 벗어나, 주거빈곤 가구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9>에서 방수를 기준으로 주거빈곤 정도를 측정하는 건설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 근거해서 주거빈곤 가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⁴⁾ 1985년까지도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거면적과 관련해서 주거빈곤 가구 범주에 속했는데, 그 비중은 1990년 1/4 이하로 떨어졌고, 1995년에는 1/10 수준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총 가구의 1.1%인 17만 가구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 가구원이 3명 이상인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는 비중을 살펴보다도, 1980년에는 전체 가구의 22.4%인 179만여 가구가 이처럼 곤궁한 처지에 놓였는데, 2005년에는 총 가구의 0.5%도 되지 않는 6만여 가구만이 이 범주에 속한 것으로

4) 최저주거기준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2005) 참조.

조사되고 있다.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5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의 대량 공급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 근대적 주거양식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주거면적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주거빈곤 가구의 비중도 격감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주거문제가 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가구별 주택 점유 실태

주택의 자가점유율, 즉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1990년의 49.9%를 정점으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1990년 이전에는 광범위한 도시화 과정에서 이농민들이 도시로 대거 이입했지만, 이들은 도시 지역의 높은 땅값이 반영된 주택 가격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도시 지역은 이미 그 이전부터 주택 과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새로운 이농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의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도시화가 급진전되던 1980년대까지는 자가점유율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내 집 마련에 실패한 대다수 이농민들은 셋집을 전전하며,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을 계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가계가 보다 윤택해지면서, 이들은 본격적으로 내집 마련에 나설 경제적 여력을 갖출 수 있었다. 또한 호황 국면에서 풀린 대규모 유희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주택가격 폭등이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자, 이들의 내 집 마련 욕구는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집값 상승으로 시 외곽 변두리로 내몰린 무주택 서민 가운데 수십명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채 잇따라 자살하는

5) 그러나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가 21,561세대에 달하고, 도시 지역에만 15,31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통계청, 2007), 집이 없어 떠도는 노숙자(홈리스)도 대도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시설이나 구조·성능,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서 주거빈곤층을 판별한다면 주거빈곤층의 절대수는 더욱 불어난다(윤주현, 2002 참조). 이에 더해 그간의 가구원수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로 인해 방수를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 측정치의 위상이 크게 바뀐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절대 수는 크게 줄었지만 주거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에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단편적인 수치 변화에 기대어 선불리 주거빈곤의 해소를 운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태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 대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에 앞장서게 되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0; 한상진·한상연, 1990). 이처럼 주택 신규 공급 증대, 무주택 서민의 경제력 증진,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요인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자가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반등시킬 수 있었다.⁶⁾

<표 10> 일반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단위: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자가	4,672 (58.6)	5,127 (53.6)	5,667 (49.9)	6,910 (53.3)	7,753 (54.2)	8,828 (55.6)
전세	1,904 (23.9)	2,202 (23.0)	3,157 (27.8)	3,845 (29.7)	4,040 (28.2)	3,557 (22.4)
월세	1,231 (15.5)	1,892 (19.8)	2,173 (19.1)	1,876 (14.5)	2,113 (14.8)	3,012 (19.0)
무상 및 기타	162 (2.0)	350 (3.7)	358 (3.2)	328 (2.5)	406 (2.8)	490 (3.1)
합계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9 (100.0)	14,312 (100.0)	15,88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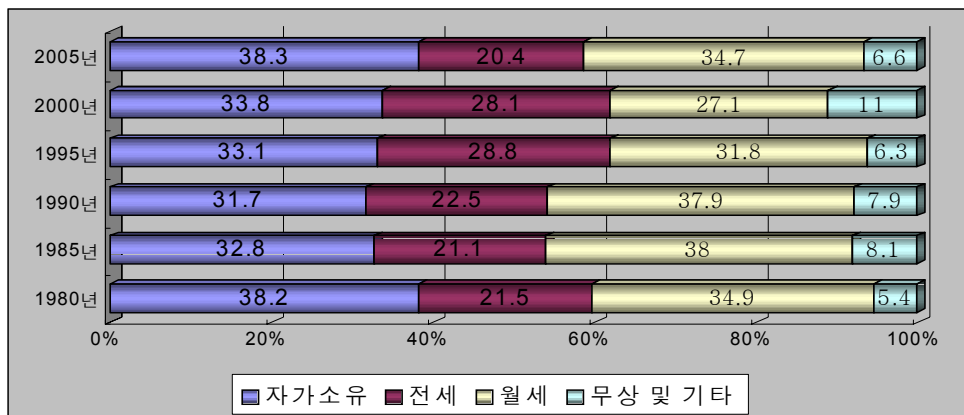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그렇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안정을 대표하던 중산층의 몰락 현상이 나타나고(신광영, 2003), 무주택 서민의 경우에는 고용 불안으로 주택금융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면서, 자가점유율의 상승 속도는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전반기 5년 동안 49.9%에서 53.3%로 3.4% 증가했던 자가점유율은 1995-2005년의 10년간 2.3% 증가하는 데 그쳐, 2005년의 자가점유율은 아직도 1980년의 그것에도 못 미치는 55.6%에 머물고 있다.

6) 그러나 당시의 자가점유율 증가는 도시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자가점유율이 감소하고 임차가구가 늘어났다 이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이 주로 도시에 집중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김재익, 2002: 88)

주택 점유 실태의 변화 추이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은 임차가구의 전세-월세 비율이다. 전세 가구가 1985년 23%에서 1995년 29.7%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1990년대 후반 일시 정체 상태를 겪다가 2005년 22.4%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월세 가구는 1980년 15.5%에서 출발해서 1985, 1990년 20% 수준으로 올랐다가 1995, 2000년에 다시 15% 이하로 떨어지고 2005년 또 다시 19%로 증가하는 등 롤러코스트와 같이 등락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최근의 전세 가구 감소, 월세 가구 증가 현상은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가옥주가 월세 입주 가구를 선호하는 데다가, 임차가구 내에서도 늘어난 1인 가구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등, 가옥주와 세입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저리의 이자율과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리 사회의 독특한 임대차 관계로 자리잡았던 전세 제도는 갈수록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그렇다면 취약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점유 형태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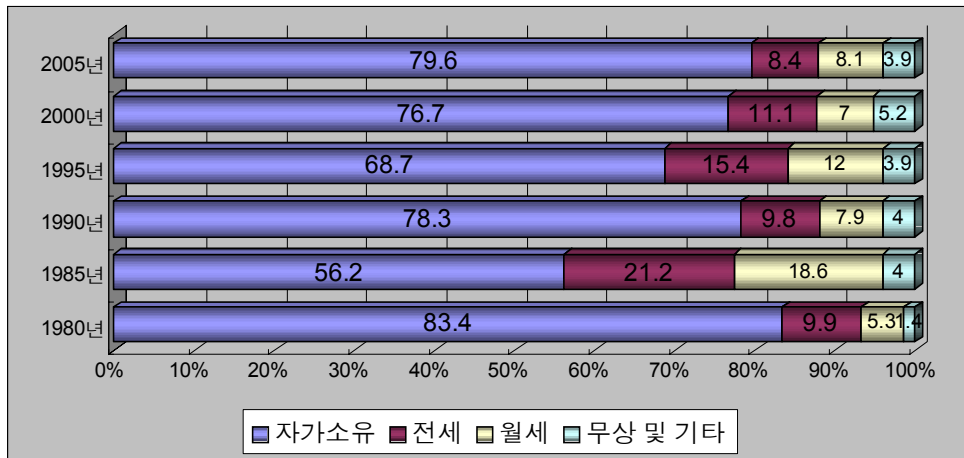
먼저 1인 가구를 살펴보자(<그림 5> 참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자가점유 비율이 30%대에 머물러 50%대를 맴도는 일반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 자산의 규모가 크고, 이러한 자산을 대부분 내 집 마련에 쏟아붓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과 자가점유율은 서로 일정한 조응

관계에 있다(구본영, 1989; 김태일, 2000). 도시에서는 1인 가구의 상당 수가 20-30대의 청·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촌에서는 1인 가구가 노인 단독 가구인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그림 3>, <그림 4> 참조), 1인 가구의 자가 점유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1인 가구의 임차 가구 중에서 전세 가구의 비중은 일반 가구와 비슷한 수준인데, 월세 가구의 비중은 3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어, 월세 가구가 10%대에 머무는 일반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 1인 가구들이 목돈을 필요로 하는 전세 형태보다 소액을 분할해서 지불하는 월세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1인 가구의 가구 규모가 단출하고 이주가 빈번하기 때문에, 정주를 필요로 하는 자가점유 방식을 덜 선호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올수록 1인 가구의 자가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일반 가구의 주택 점유 추이와 유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내 노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농촌에 정주하며 낡은 집을 소유한 이들 가구가 자가점유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림 6> 노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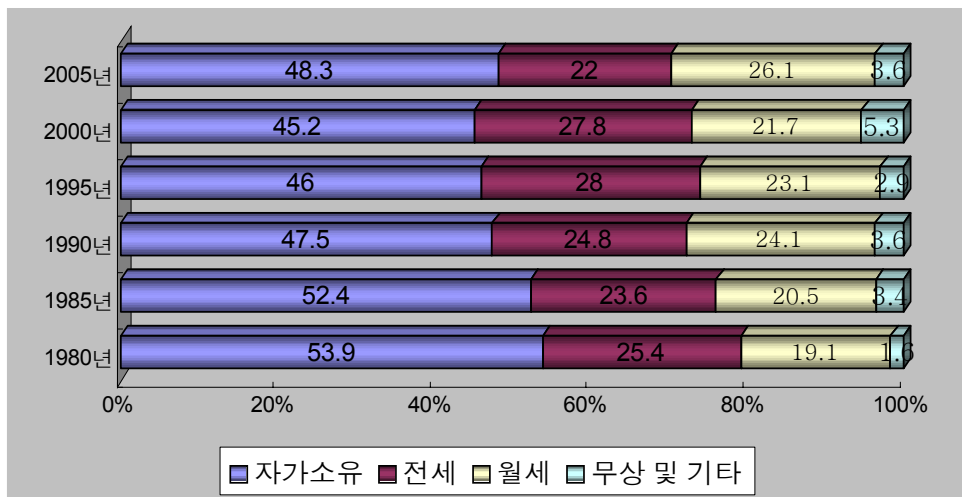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이러한 사실은 또 다른 취약 가구인 65세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에는 노인 가구의 자가점유율이 83%에 달했고, 그 뒤로도 1985년을 제외하고는 70%대를 유지하는 등, 자가점유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이들은 정주형 생활을 하고 매월 임대료를 부담 할만한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월세 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6> 참조). 이는 노인 가구가 주택 보유를 통해 자산 증식을 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적어도 그 절반 가까이가 주택소유를 통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된 주거 문제는 주택 소유 문제보다는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낡고 허름한 건물과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는 주거시설 문제에 있다(윤주현 외, 2004).

<그림 7> 한 부모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1인 가구보다 주거 사정이 다소 낮지만, 일반 가구보다 자가점유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1980년대까지는 일반 가구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다가, 1990년대부터 주거 사정이 악화되어 자가점유율에서의 차이가 벌어진 채 좁혀지지 않고, 월세 가구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이는 한 부모 가구라는 취약한 가구 구성이 주택 보유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어느 정도일까? 유일하게 2005년 센서스에서 ‘타지 주택 소유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가구의 11.3%가 현재의 거주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때 자가 점유 가구보다 전세 가구나 무상 및 기타 보유 가구에서 타지 주택 소유의 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이 흥미롭다(<표 11> 참조). 자가점유 중 타지 주택 소유 가구는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자산가, 또는 투기적 주택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타지 주택을 소유한 전세 가구는 취업, 교육 등의 이유로 내 집을 임대하고 현 거주지에 임차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주택 보유 형태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이다.

<표 11> 타지 주택 소유 가구의 구성: 2005년

(단위: 천가구, %)

가구 유형	자가	전세	월세	무상 및 기타	계
일반가구 중 타 주택 소유 (비율) [점유유형 내 비중]	1,047 (58.4) [11.9]	505 (28.2) [14.2]	163 (9.1) [5.4]	79 (4.4) [16.1]	1,794 (100.0) [11.3]
1인 가구 중 타 주택 소유	(42.4) [7.3]	(20.4) [6.6]	(23.0) [4.4]	(14.2) [14.3]	(100.0) [6.6]
노인 가구 중 타 주택 소유	(82.1) [7.3]	(9.9) [8.3]	(4.0) [3.5]	(4.0) [7.2]	(100.0) [7.1]
한 부모 가구 중 타 주택 소유	(63.2) [6.2]	(20.7) [7.4]	(11.6) [2.8]	(4.5) [5.2]	(100.0) [5.5]

자료: 통계청,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그런데 취약 가구들의 타지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표 11>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노인 가구의 경우에도 일반 가구의 2/3 수준이고, 1인 가구나 한 부모 가구는 그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 형태가 불안정한 취약 가구의 일부가 간신히 내 집을 장만할 수는 있지만, 일반 가구처럼 주택 소유를 통한 자산 증식이나 ‘소유 주택의 임대 후 임차’에 나서기는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IV. 주택 재고 및 공급 추이

이상에서 주택 수요의 주체가 되는 가구의 변화 추이와 이들의 주거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주택 공급은 그 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주택 공급 추이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이 지속되던 ‘개발연대’에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이농민의 대대적인 유입으로 주택의 과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꼭대기에서부터 하천변까지 빈 터만 있으면 우후죽순 격으로 지어져 대도시 전역을 뒤덮은 무허가판자집이 바로 그 증거였다. 정부 주도의 판자집 철거 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었지만, 주택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 ‘철거-재축’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었다(김형국·하성규, 1998). 따라서 주거빈곤의 문제는 해소되기는 커녕 판자집 철거로 인한 주거 불안만 키워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양상마저 보였다.

<표 12> 연평균 주택 공급 추이: 1971-2005년

(단위: 천호)

연도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연평균 신축 주택	144.2	227.4	203.2	412.2	625.2	466.6	541.8

자료: 건설교통부, 각년도 『건설교통통계연보』.

특히 1980년대까지도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주택 공급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주택 신축이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를 따라잡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 실제로 GDP 대비 주택투자 규모는 1980년대 중반까지 4-5% 수준을 넘나들었는데, 국민경제 규모가 빈약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 건설 분야에는 최소한의 투자만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970년대 전반기에 연평균 약 14만호, 1970년대 후반기부터 약 20만호씩의 주택이 신축되었지만, 이는 도시의 폭발적인 가구 증가 추세에 비하면 ‘코끼리에 비스킷’, 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따라서 1970년 78.2%였던 주택보급률은 1980년 71.2%, 1985년 69.8%까지 떨어졌다(<표 12>와 <표 13> 참조).

주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무관심은 오래 가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에 따른 경기 과열과 유흥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투기 열풍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어, 주거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크게 고조되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불안과 빈곤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한편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택 투자를 잠재우고, 다른 한편으로 영세민 대상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빈곤 문제에 대처하고자 했다(한상진·한상연, 1990).

<표 13> 주택 관련 주요 지표 추이: 1970-2005년

(단위: 천호, %)

연도	재고주택 (천호)	신축주택 (천호)	주택보급률 (%)	주택투자/GDP (%)	인구 천명 당 주택건설 호수
1970	4,360	115	78.2	4.2	3.6
1975	4,734	180	74.4	5.2	5.1
1980	5,319	212	71.2	5.5	5.6
1985	6,104	227	69.8	4.6	5.6
1990	7,357	750	72.4	8.8	17.5
1995	9,570	619	86.0	7.4	13.8
2000	11,472	433	96.2	4.3	9.2
2005	13,223	464	105.9	5.2	9.8

자료: 건설교통부, 각년도, 『건설교통통계연보』.

그 결과 1990년 GDP 대비 주택 투자율이 1985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뛴 8.8%까지 상승했고,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이전까지 주택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추세가 이어졌다. 그 결과 1992년 58만여 호를 건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60

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었다.)⁷⁾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도 1990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1995년 86%, 2000년 96.2%에 이르렀다(<표 12>와 <표 13> 참조). 이에 힘입어 주택 매매가격도 1990년 가격을 100으로 상정할 때, 1991년 99.5, 1993년 94.5, 1995년 91.5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주택 대량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투기 붐을 잠재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통계청, 각년도).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경기 침체, 신용 경색, 주택 수요 격감 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주택 관련 투자 및 건설 활동마저 크게 위축된 것은 아니었다. 외환위기 직후 2-3년을 제외하고는 GDP 대비 주택 투자 비중이 5% 수준을 유지했고, 신축 주택도 평균 50만호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국민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주택 투자 비중이 낮아져도 투자의 절대액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5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05.9%까지 올라섰다. 이는 총량적으로 주택이 가구 수보다 많아져 남아도는 상황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의 심각한 주거위기 상황을 계기로 주택 공급의 물줄기가 크게 바뀌면서, 만성적인 주택 과부족 상황을 벗어나는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재고 실태는 어떻게 변모해왔을까?

2. 주택 재고 실태

빈집을 포함한 주택 총수는 1980년 약 543만 호에서 2005년 1,322만여 호로 779만여 호가 늘어나, 4반세기 동안 2.4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인구가 1.26배 증가하고, 주택 수요의 기초 단위인 가구가 1.99배 증가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이 같은 증가 속도는 엄청난 물량의 주택이 단기간 내에 공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기반해서 1985년 7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주택 보급률이

7) <표 13>에서 1980년대 후반의 주택 신축이 연평균 41만여 호로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1990년 75만여호가 건설된 효과이다. 1990년을 제외한 1986-89년간 평균 주택 건설 호수는 33만여 호에 그친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과 중산층의 비약적 성장에 힘입어 공공부문의 전면적 개입 없이도 주택 공급이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2005년에는 105.9%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 물량이 단순히 증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의 형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표 14>를 보면, 단독주택은 1980년 전체의 87.5%를 차지하며 보편적인 주택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 같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 재고에 변화를 몰고 온 것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대대적인 건설이었다. 공동주택 공급의 급물살에 휩쓸려 단독주택은 이미 1990년대 전반기에 전체 주택 재고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2005년에는 총 주택의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표 14> 전국의 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1980-2005년

(단위: 천호, %)

주택 유형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단독주택	4,652 (87.5)	4,719 (77.3)	4,727 (66.0)	4,337 (47.1)	4,069 (37.1)	3,985 (31.9)
아파트	374 (7.0)	822 (13.5)	1,628 (22.7)	3,455 (37.5)	5,231 (47.7)	6,627 (53.0)
연립/다세대주택	162 (3.0)	350 (5.7)	603 (8.4)	1,071 (11.6)	1,266 (11.6)	1,684 (13.5)
비거주용건물	131 (2.5)	213 (3.5)	202 (2.8)	343 (3.7)	393 (3.6)	199 (1.6)
사용주택 합계	5,319 (100.0)	6,104 (100.0)	7,160 (2.7)	9,205 (100.0)	10,959 (100.0)	12,495 (100.0)
빈집 (총주택 대비 %)	115 (2.1)	167 (2.7)	197 (2.7)	365 (3.8)	513 (4.5)	728 (5.5)
주택 총수	5,434	6,271	7,357	9,570	11,472	13,223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공동주택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 절약형’ 주택 유형이었기 때문에, 좁은 국토에, 특히 지가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에 적합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과 토지를 효율

적으로 활용해서 대규모 주택 물량을 공급하려 했던 정부와 주택건설업체 모두가 공동주택 공급에 앞장섰던 것이다. 여기에 수요 측면에서는 근대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중산층 가구의 열망까지 더해지면서, 이들 삼자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공동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주거를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의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에 주력했다.⁸⁾ 그 결과 1990년대 전반기 이들 주택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자투리 택지 공간이 점차 고갈되는 데다가, 이들 주택이 단독주택 지역에 무분별하게 지어져 과밀화,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낳는 데다가 아파트와 달리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이왕기, 2005; 홍성기, 2001),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건립 열풍은 잦아들었다. 이와 달리 아파트 건축은 꾸준히 이어져온 까닭에, 2005년 드디어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아파트가 차지하며, 지배적인 주택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표 15> 주택 규모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단위: %)

주택 규모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9평 미만	10.8	6.3	3.5	2.8	2.3	2.0
9-19평	51.0	47.1	42.5	39.2	40.2	37.8
19-29평	25.4	29.2	31.5	36.2	36.2	38.2
29-39평	6.9	9.1	10.8	10.1	10.2	10.9
39-49평	3.1	4.1	5.2	5.2	5.0	5.1
49-69평	1.9	3.0	4.2	4.2	3.7	3.6
69평 이상	0.9	1.2	2.3	2.3	2.4	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건설교통부, 각년도, 『건설교통통계연보』.

8) 대다수의 아파트는 주민의 자족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도심 주변의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처럼 아파트가 신규 주택 공급의 주종을 이루고는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주상복합건물들이 점차 들어서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오피스텔(원룸) 공급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주택의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 유형의 변화와 함께 주택의 규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왔다. <표 15>를 보면, 9평 미만의 소형 주택이 1980년 10.8%이었는데, 2005년에는 2%로 혼적만 남아있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9-19평 미만 주택도 같은 기간 동안 51%에서 37.8%로 상당히 감소했다. 그 반면에 19평 이상의 중형 이상 주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39평 이상의 대형 주택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수요자 층의 더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열망과 높아진 경제 수준이 주택의 규모에 그대로 반영되어 주택 평형이 갈수록 늘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가구-주택의 부조응과 그 대응방안의 모색

1. 주택 수급의 불균형: 가구 유형의 변화에 대응한 주택 공급의 부족

주택 재고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주택 총량의 증대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게 되면, 단순한 총량 확보가 더 이상 관심사일 수 없다. 이제는 무분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보다는 주택 수요를 감안한 적정 수준의 공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이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윤주현, 2002 참조), 이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택 수요의 주체가 되는 가구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 수급의 불일치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등 주택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좌우하던 과거와 달리, 1990년대부터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주택의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이 다양화된 것은 사실이다. 성냥갑 같이 획일화된 아파트 외관이 화려하고 다채롭게 바뀌고,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과 같은 새로운 주거공간이 등장하는 등,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가구 변화 추이와 주택 공급 추이를 견주어 보면, 주택 공급이 가구 구성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 자원의 사회·경제적 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이 주택 규모의 문제이다. 앞서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가구 당 가구원수는 최근에 올수록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에, 2세대 이상 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가구 규모의 축소 및 가구 구성의 단순화는 가구 당 주거 소요 면적의 감축을 의미한다.⁹⁾

그런데 신축 주택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는 소형 주택의 감소와 중·대형 주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축 주택의 주종을 이루는 아파트의 경우, 1998년 이후 국민주택기금 적용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까지로 확장되어¹⁰⁾ 중형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주택 규모 확장 추세는 더욱 가속되었다. 이에 더해 대형 주택일수록 단위 면적 당 건축비가 낮아져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체들이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 더욱 매진하게 되어, 신축 주택의 규모 키우기 경쟁은 더욱 가파르게 전개되었다.¹¹⁾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본래 4.5인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 이른바 ‘표준 가구’를 대상으로 설계된 주택 형태이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중·대형 주택은 2세대 가구라도 한 자녀 가구가 대다수인 최근의 가구 구성에 비한다면, ‘주거 공간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더해 사생활을 강조하는 아파트 주거가 확산되면서, 과거 단독주택에서와 같은 ‘1주택 다가구 거주’ 유형이 감소해서 주택 당 평균 가구원 수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따른 ‘주택 과소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가구 규모와 주거 공간의 부조용으로 말미암아 신축 주택의 미

9) 물론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사생활(privacy) 공간으로서 주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1인 당 소요 면적이 늘어나고, 이는 가구별 주거공간의 확장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평균 가구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가구 당 주거 소요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1998년 이전에는 전용면적 18평(60m²) 이하의 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어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이 비교적 활기를 띠었는데,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자 중소형 주택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했다.

11) 물론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이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공급의 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물량이 적어 신축 아파트의 규모 확대 추세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김호철, 2002: 60).

분양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주택 미분양 사태는 주택 수급 요인, 경기변동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한 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가구의 주거 공간 소요를 넘는 중·대형 주택 공급도 그 한 축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표 16>에서 보듯이, 2005년 현재 空家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주택의 22.2%가 미분양 및 미입주로 인해 빈 집이 되었고, 특히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그 비율이 38%와 23.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비교 자료가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도래와 함께 특히 공동주택의 미분양 사태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성적, 고질적 현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표 16> 주택 유형별 공가 발생의 원인: 2005년

(단위: %)

주택 유형	매매·임대, 이사	미분양, 미입주	현재 수리 중	일시적 이용	기타	합계
단독주택	42.0	3.5	2.8	42.5	9.2	100.0
아파트	35.1	38.0	1.5	12.4	13.0	100.0
연립주택	47.3	19.1	2.3	17.8	13.5	100.0
다세대주택	52.8	23.9	1.4	12.9	9.0	100.0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38.2	11.4	3.4	33.6	13.4	100.0
주택 총계	40.0	22.2	2.1	24.5	11.2	100.0

자료: 통계청,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주택 자원의 사회적 낭비 또는 주거공간의 과소비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볼 문제로 주택 수요의 다양성에 대한 공급 주체 측의 무관심 또는 무대응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청년층을 중심으로 혼인 연령이 지연되어 장기간 미혼 상태로 생활하거나 또는 독신 생활을 고집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들이 경제적 역량을 갖춰 주택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룸, 소형 아파트 등과 같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서종균, 2002: 131). 그러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선호하는 주택건설업체와 시대에 뒤쳐진 ‘표

준 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공공부문은 이러한 신규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농촌 지역에서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1인 가구나 부부가구가 크게 늘고, 생애 동안의 자산 축적을 통해, 또 값싼 농촌 주택 구입의 용이성과 높은 자가점유 성향 탓에 이들의 자가점유 비중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다(<표 4> 및 <그림 6> 참조). 또한 전체 가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에서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거의 없다. 따라서 도시의 청년층 1인 가구와 달리 신규 주택 공급이 절실하지 않다. 그보다는 주거설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주현, 2002: 24). 따라서 농촌의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들의 경제력 수준에 걸맞으면서 주거시설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현존 주택의 개·보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배순석, 2001). 그러나 주택 신축에만 주력하는 주택건설업체나 농촌 노인층을 정책의 사각시대에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들의 주거 수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2. 주택 소유의 불평등: 취약 가구의 주거 불안

1990년대 이후 주택의 대량 공급에 힘입어 50% 미만까지 떨어졌던 자가점유 가구의 비중이 최근 55.6%까지 올라섰지만(<표 10> 참조), 지난 25년간 자가점유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2.58%)은 일반가구(2.8%)나 주택 재고(3.62%)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대대적인 주택 신축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상당히 크게 기여했지만, 기왕의 주택 소유 가구들이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자가 이외의 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의 소유 집중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곳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6.6%에 달하고 있다(<표 11> 참조).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 같은 주택의 소유 집중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은 여전히 주택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가구 구성이 불안정한 취약 가구들의 경우에는 빈약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부족, 가족 재생산 비용의 편중 부담 등으로 인해 주택소유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른 이주 압박, 철거 위협, 적정 주거 찾기의 어려

움 등에 노출되어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¹²⁾

특히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의 취약 가구가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이행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과성 가구 유형이거나 개인의 생애사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한시적 가구 유형이 아니라 하나의 정형화된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아 간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이들의 주거 안정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구 유형별 주택 소유의 불평등으로 인해 취약 가구들이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대책이 반드시 무주택 가구의 주택 소유 진작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변창흠, 2007a; 진보정치연구소, 2007). 왜냐하면 이들 취약 가구의 상당 수가 고가의 도시 주택을 구입할 만한 경제적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소유의 불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으로 무주택 가구의 임차 조건이 악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통해 이들의 주거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취약 가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주거 안정 방안을 채택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가운데 주거빈곤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또 주거빈곤 가구와 자가점유 가구 사이에 끼여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구에게는 최근의 이른바 ‘반값 아파트’, 즉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 등을 체계적으로 공급해서 염가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가구주택의 매입 후 임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변창흠, 2007b; 천현숙, 2005). 특히 이러한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정 방안을 민간의 주택시장 논리에 내맡길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주택 수급의 주체들과 협의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택 거버넌스 체제(Housing Governance System)’를 구축해서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주거복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12) 취약 가구 가운데 농촌의 노인 가구 범주가 유일하게 자가점유 비중이 높아 주택의 소유 집중으로 인한 주거 불안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들은 주택의 노후화, 빈약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구 구성과 주택 공급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양자의 조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간의 가구 구성을 보면, 인구 증가에 따라 꾸준히 늘어난 가구 수는 가구 규모의 축소 및 세대 구성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1인 가구, 노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의 ‘취약 가구’가 늘어나면서, 과거와 달리 ‘부부+자녀’의 표준 가구가 더 이상 보편적인 가구 형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가구별 주거 실태를 보면, 우선 주거 유형이 단독주택에서 근대적 주거양식으로 새롭게 자리잡은 아파트로 그 무게중심을 옮겼다. 또한 주거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서, 협소한 주거 공간 문제를 크게 완화시켰다. 그 결과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주거빈곤 가구의 비중도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 주택 점유 형태에서는 1990년대부터 신규 주택 공급에 힘입어 자가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에 비해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산증식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의 소유 집중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 가구 가운데 노인 가구를 제외한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의 상당 수는 임차 가구로 머물며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더해 주택 공급 및 재고 실태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 ‘주거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주택 관련 투자 및 건설이 활발하게 일어나,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5.9%에 이르렀다. 또 그 과정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주상복합건물, 원룸 등 새로운 주택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며 주택의 형태를 다채롭게 했고, 주택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구 구성의 변화와 주택 공급이 조금씩 서로 어긋나면서, 가구-주택 간 관계의 부조응 문제가 새로운 주택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먼저 가구 규모가 줄고 세대 구성이 단출해지는데 반해, 주택 규모는 증가 일로에 있어, 주택 과소비 문제와 주택 미분양 사태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가구 구성이 다양해지는 데 반해 신축 주택은 ‘표준 가구’를 모델로 삼는 등, 주택 수요의 다양성이 주택 공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주택

소유의 불평등이 점차 완화되고는 있지만, 취약 가구의 주거 불안 문제는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구-주택 간 부조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택 공급 위주의 기존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택 수요의 주체가 되는 가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집중할 것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기초해서 향후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주택 공급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처할 정책적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2005. 『2005년도 주택업무편람』.
- 건설교통부. 각년도. 『건설교통통계연보』.
- 구본영. 1989. “위성도시 주거지역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안양 및 부천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태환·박영진. 1995. “가구 구조와 가족 형태”, 권태환·김태현·최진호(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 김정석. 2002. “가족과 가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1)』, 통계청.
- 김재익. 2002. “한국인의 주거환경 수준”, 윤주현(편), 『한국의 주택』, 통계청.
- 김태일. 2000.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고령자 주택 형태의 변화와 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3호. pp.37-50.
- 김형국·하성규(편). 1998. 『불량주택 재개발론』, 나남출판사.
- 김호철. 2002. “주택 재고 및 공가 분석”, 윤주현(편), 앞의 책.
- 민족민주운동연구소(편). 1990. 『주택문제의 인식과 대안』, 논장.
- 박철수. 2006. 『아파트의 문화사』, 살림.
- 배순석. 2001.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 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 변창흠. 2007a.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이념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현안진단 제72호), 코리아연구원(KNSI).

- 변창흠. 2007b.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1가
구1주택 국민운동(편), 『긴급토론회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
낼 건가?’ 자료집』.
- 서종균. 2002. “가구 특성별 주거 수준”, 윤주현(편), 앞의 책.
- 손경환. 2005.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
구축 연구』, 국토연구원.
- 신광영. 2003. “중산층의 위기, 표준과 상승의 몰락”, 『당대비평』 제24호.
- 양세화. 1996. “주택유형과 주택소유 형태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편), 『자연과학 연구 논문집』 제5집 2호. pp.49-58.
- 윤주현. 2002. “주택보급률의 변화”, 윤주현(편), 앞의 책.
- 윤주현·강미나·송하승. 2004. 『인구 고령화와 노인 주거: 고령화 사회 노인 주거
의 현황과 정책 과제』, 국토연구원.
- 이왕기. 2005. 『저층·고밀 노후 주거지역 정비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정의철. 2002. “주택 소요 단위로서 가구 수 및 가구 구조의 변화”, 윤주현(편),
앞의 책.
- 줄레조, 발레리(Gelézeau, Valérie) (길혜연 옮김). 2007. 『아파트 공화국』, 후마
니타스.
- 진보정치연구소(편). 2007.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사회공공
주택의 확보와 다주택 소유자의 ‘비거주 주택’ 처분 방안』.
- 천현숙. 2002.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아파트 주거의
확산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 천현숙. 2005.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정책의 개선 방향』(국토정책 Brief 제84
호), 국토연구원.
- 통계청. 각년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보고서』.
- 통계청. 2006. 『2005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주택 부문)』.
- 한상진·한상연. 1990. 『알기쉬운 집의 경제학: 주택문제의 실상과 허상』, 실천문
학사.
- 홍성기. 2001. “저층 고밀도 주택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안양과학대학 논

문집』 제24집. pp.277-297.

Turner, John. 1976. *Housing By People: Towards Autonomy in Building Environments*.
London: Marion Boyars.

Turner, John. 1979. “Housing in Three Dimensions: Terms of Reference for the
Housing Question Redefined”, Bromley, Ray (ed.), *The Urban Informal
Sector*. Oxford: Pergamon Press.

UN. 1998. *United Nations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New York.

주거생활의 변화: 주택유형과 자가소유를 중심으로

윤 일 성 (부산대 사회학과)

제 1 장 연구목적과 대상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의 주거생활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이 글은 주택유형과 자가 소유를 중심으로 주거생활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과 계급 혹은 계층간의 관계는 서구 사회에서 한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주제이다(Hamnett, 1989; Forrest, Murie and Williams, 1990; Saunders, 1990). 이 논쟁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한 가구의 계급적 지위가 그 가구의 주거수준을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한 가구의 주거수준은 그 가구의 계급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하는가? 중간계급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노동계급은 세를 들어 사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는가? 햄넷(Hamnett)의 표현대로 사회계층별 주택점유형태의 양극화(socio-tenurial polarization)가 진행되고 있는가?”(윤일성, 2002: 191).

주택과 계급 혹은 계층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을 소비하는 것은 가구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구의 계급 혹은 계층적 지위가 고찰되어야 한다(홍두승, 1991). 센서스 2% 표본자료를 가지고 가구의 계급 혹은 계층적 지위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본자료에는 한 가구의 가구원들의 직업이 다 나와 있지 않다. 또한 2005년도 2% 표본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류로 직업분류가 되어 있어서 계급분류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중요한 한계가 있겠지만, 가구주의 직업을 가지고 가구의 계급 혹은 계층적 지위를 대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택소비의 다양한 측면을 계급, 계층과 관련시켜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다룬다. 네 가지 유형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주택)이 도시와 농촌에 어떻게 분포되어있는가 그리고 주택유형별로 주

택점유형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검토한다. 둘째,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고찰한다. 전체 가구와 도시 가구를 비교하면서, 가구를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6개의 카테고리(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농림, 어업)로 분류한 다음, 직업군별 자가소유율 변화의 다양성을 분석한다. 셋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계층적 특성을 가구주의 직업이라는 변수를 매개로 하여 고찰한다. 현재 한국 사회 (혹은 서울 지역, 6대광역시 지역)의 아파트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배분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제 2 장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1절 주택현황과 주택유형

<표 1>은 2005년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현황을 보여준다. 먼저 2005년 현재 한국사회의 주택 총 재고량은 13,222,641호이다. 총재고량의 75.6%에 해당하는 약 1천만호의 주택이 도시지역에 있다. 1천3백만여 호의 전체 주택 중 52.7%에 해당하는 약 7백만 호가 아파트이다.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4,263,541호(32.2%),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1,787,221호(13.5%), 비주거용(상가 등) 주택이 208,690호(1.6%) 있다.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도시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도시와 농촌에 거의 절반씩 위치한다.

<표 1>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현황, 2005

(단위: 호,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합계
도시	2,124,135 (49.8)	6,122,716 (87.9)	1,599,811 (89.5)	150,870 (72.3)	9,997,532 (75.6)
농촌	2,139,406 (50.2)	839,973 (12.1)	187,910 (10.5)	57,820 (27.7)	3,225,109 (24.4)
전국	4,263,541 (100) (32.2)	6,962,689 (100) (52.7)	1,787,221 (100) (13.5)	208,690 (100) (1.6)	13,222,641 (100) (100)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2절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표 2>는 전체 가구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유형과 주택점유 형태를 교차시켜 놓은 표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2005년 현재 전국에 13,222,641호의 주택이 있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수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670,271 가구이다. 1천5백6십여만 가구 가운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6.1%에 해당하는 약 8백8십만 호이다. 전체 가구(일반가구)의 22.3%는 전세로, 18.5%는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포함)로 거주한다.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같이 고려해서 보면,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는 자기집에서가 아니라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자가 46.5%, 차가(전세+월세) 50.2%). 반면에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가구는 약 65% 정도가 자기집에 거주한다. 상가 등 비주거용 주택에서 사는 가구는 세 들어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표 2>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전국 가구, 2005

(단위: 호,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합계
자가	3,283,782 (46.5)	4,298,428 (64.8)	1,100,526 (64.9)	109,375 (38.8)	8,792,111 (56.1)
전세	1,659,086 (23.5)	1,372,486 (20.7)	412,784 (24.3)	54,683 (19.4)	3,499,039 (22.3)
월세	1,886,988 (26.7)	790,624 (11.9)	140,285 (8.3)	88,063 (31.3)	2,905,960 (18.5)
기타	234,272 (3.3)	167,455 (2.5)	41,834 (2.5)	29,600 (10.5)	473,161 (3.0)
합계	7,064,128 (100)	6,628,993 (100)	1,695,429 (100)	281,721 (100)	15,670,271 (100)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표 3>은 도시에 사는 가구만을 따로 떼어서,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교차시킨 표이다. <표 2>와 <표 3>을 비교해 보면, 도시 가구의 주거상황은 전국의 주거상황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도시 가구의 경우, 자기집에 사는 가구의 백분율이 52.2%로 전체 가구에 비해서 3.9% 낮게 나타난다. 이는 농촌 가구의 경우 자기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를 다 합쳐서 자가소유율을 계산하면(2005년의 경우 56.1%),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을 상회하는 결과를 낳는다.

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시 가구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자기집에 사는 경우가 더 많고,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주택에 사는 가구는 세를 들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특히 흥미롭다. 전국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46.5%가 자기집에 사는 반면에, 도시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31.7%만이 자기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은 셋집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도시 가구, 2005

(단위: 호,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합계
자가	1,561,046 (31.7)	3,910,896 (66.6)	995,177 (65.1)	80,321 (36.6)	6,547,440 (52.2)
전세	1,553,535 (31.5)	1,203,926 (20.5)	374,916 (24.5)	47,409 (21.6)	3,179,786 (25.3)
월세	1,681,536 (34.1)	640,621 (10.9)	126,777 (8.3)	72,698 (33.1)	2,521,632 (20.1)
기타	133,075 (2.7)	116,245 (2.0)	32,119 (2.1)	18,980 (8.7)	300,419 (2.4)
합계	4,929,192 (100)	5,871,688 (100)	1,528,989 (100)	219,408 (100)	12,549,277 (100)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제 3 장 자가소유의 변화: 가구주의 직업과 자가 소유의 제 측면들

1절 가구주 직업분포(직종별)의 변화

1. 전체 가구

<표 4>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가구주 직업분포의 변화를 보여 준다. 2005년 현재 가구주 직업은 전문직, 관리직 22.0%, 사무직 13.8%, 판매직 및 서비스직 16.8%, 생산직 24.2%, 단순노무직 8.1%, 농림, 어업 15.1%으로 분포되어 있다. (200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직업분포는 전문직, 관리직 21.1%, 사무직 15.3%, 판매직, 서비스직 19.8%, 생산직 20.1%, 단순노무직 7.3%, 농림, 어업 15.8%이다). 가구주의 직업분포와 전체인구의 직업분포를 비교해 보면, 가구주의 경우 전체인구에 비해서, 생산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직 및 서비스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가구주 직업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몇 가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중이 많이 줄었다. 둘째, 전문직, 관리직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셋째, 판매직 및 서비스직과 생산직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

<표 4> 가구주의 직업분포(직종별): 전국 가구주, 1985 - 2005

(단위: %)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9.2	23.9	22.0
사무직	11.9	9.2	13.8
판매직, 서비스직	21.9	17.5	16.8
생산직	30.3	28.2	24.2
단순노무직	-	6.9	8.1
농림, 어업	26.7	14.2	15.1
합계	100%	100%	100%
N	197,632	212,938	227,255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 도시 가구

<표 5>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가구주 직업분포의 변화를 담고 있다. 2005년 현재 도시 가구주 직업은 전문직, 관리직 26.4%, 사무직 16.6%, 판매직, 서비스직 19.3%, 생산직 26.9%, 단순노무직 8.8%, 농림, 어업 2.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도시 가구주 직업분포는 전국 가구주 직업분포와 조금 다르다. 먼저,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도시 가구주는 2.1%에 불과하다 (전국 가구주의 15.1%가 농림, 어업에 종사한다). 농림, 어업을 제외한 다른 직업군에 종사하는 도시 가구주의 비중은, 전국 가구주의 직업분포와 비교해 볼 때, 조금씩 높게 나타난다. 전국과 비교해 볼 때, 도시 가구주가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2.5% 정도,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4.4%가 높게 나타난다.

<표 5> 가구주의 직업분포(직종별): 도시 가구주, 1985 - 2005

(단위: %)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12.2	28.1	26.4
사무직	15.9	10.7	16.6
판매직, 서비스직	28.6	19.8	19.3
생산직	39.2	31.4	26.9
단순노무직	-	7.6	8.8
농림, 어업	4.2	2.5	2.1
합계	100%	100%	100%
N	125,345	163,534	167,966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절 자가 소유율의 변화

1. 전체 가구

<표 6>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 자가소유율은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자료(1985년, 1995년, 2005년)를 분석하여 계산한 것이다. 첫째,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을 보면,

1985년 53.0%, 1995년 52.9%, 2005년 59.2%이다. 200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10가구 가운데 6가구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았듯이,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전국의 자가소유율은 56.1%이다. 여기에 비해서 2% 표본자료를 통해서 나온 2005년 자가소유율은 59.2%로 3.1%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자가소유율의 추이를 보면,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53% 정도로 자가소유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동안 자가소유율이 6.3% 증가했다. 과연 지난 10년간 자가소유율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가소유율 증가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차후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 표는 가구주의 직업별로 자가소유율의 현황을 보여준다. 2005년 현재 전체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의 현황을 보면, 전문직, 관리직 56.7%, 사무직 53.0%, 판매직, 서비스직 48.8%, 생산직 54.2%, 단순노무직 49.5%, 농림, 어업 93.3%로 나타난다.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들의 자가소유율이 가장 높다. 100가구 중 93가구 정도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 어업을 제외하면,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자가소유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생산직, 사무직, 단순노무직, 판매직 및 서비스직 순으로 자가소유율이 높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자가소유율이 높다는 것과 판매직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가소유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셋째, 이 표는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다른 직업군을 잘 살펴보면,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의 자가소유율만 4.3% 상승했고, 나머지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서 2005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 이전의 10년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즉, 모든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이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직업군은 생산직이다. 44.6%에서 54.2%로 무려 9.6%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자가소유율도 8.3% 증가했고, 사무직 가족주의 자가소유율도 6.3% 증가했다. 지난 20년 동안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정리하면,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와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계속 증가한 반면,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감소했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증가했다.

<표 6> 자가소유율의 변화(직종별): 전국 가구주, 1985 - 2005

(단위: %)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49.6	53.9	56.7
사무직	48.2	46.7	53.0
판매직, 서비스직	49.6	44.7	48.8
생산직	49.7	44.6	54.2
단순노무직	-	45.9	49.5
농림,어업	62.8	85.0	93.3
전체가구	100%	100%	100%
N	197,632	212,938	227,255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도시 가구

<표 7>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1985년 47.7%, 1995년 45.5%, 2005년 52.7%이다. <표 6>에 나와 있는 전국 가구의 자가소유율과 비교하면,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6-7% 낮음을 알 수 있다. 가령, 2005년의 경우, 전국 가구의 자가소유율이 59.2%인데 반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2.7%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 추이는 전국 자가소유율의 추이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은 감소했고 (전국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은 증가했다. 후반 10년 동안 도시의 자가소유율은 7.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 현황을 전국 가구주와 비교해 볼 때,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거의 대부분 낮게 나오지만 (단 하나의 예외는 2005년 전문직, 관리직 자가소유율임), 직업별 자가소유율의 상대적 크기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전국 가구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도시 가구의 경우, 농림, 어업을 제외한다면, 전문직, 관리직, 생산직, 사무직의 순서로 자가소유율이 높다.

<표 7> 자가소유율의 변화(직종별): 도시 가구주, 1985 - 2005

(단위: %)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47.3	52.7	57.0
사무직	46.0	44.7	52.5
판매직, 서비스직	46.9	41.7	46.6
생산직	47.6	41.3	53.3
단순노무직	-	41.1	46.0
농림, 어업	60.7	61.8	77.9
전체가구	100%	100%	100%
N	125,345	163,534	167,966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셋째, 지난 20년 동안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의 추이를 가구주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1985년에서 1995년까지의 경우, 도시내 다른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은 감소한 반면, 농림, 어업과 전문직, 관리직은 각각 1.1%와 5.4% 증가했다. 1995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에는 모든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이 증가했다. 지난 20년 동안 도시 가구의 직업별 자가소유율 변화 추이는 전국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전문직, 관리직과 농림, 어업의 경우 자가소유율이 계속 상승했지만,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은 자가소유율의 부침을 겪었다. 첫 10년 동안 자가소유율이 하락했다가 다음 10년 동안 하락폭을 능가할 정도로 자가소유율이 증가했다. 특히 가장 부침이 심한 자가소유율을 보인 직업군은 생산직이다. 첫 10년 동안 자가소유율이 6.3% 하락했다가 다음 10년 동안 무려 12%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과 도시에 서 경험한 자가소유율의 부침은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절 직업별 주택소유와 주택유형

<표 8>은 가옥주의 직업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이 다양함을 보여 준다.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와 사무직 가구주가 다른 가구주에 비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직업군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30% 이하이지만, 전문직, 관리직의 42.2% 그리고 사무직의 38.8%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표 8> 직업별 주택소유와 주택유형: 전국 가구주, 2005

(단위: %)

직업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주거 (상가)주택	자가 소유율
전문직, 관리직	8.4	42.2	4.9	0.9	56.7
사무직	7.4	38.8	5.8	0.8	53.0
판매직, 서비스직	14.2	26.0	6.7	1.7	48.8
생산직	14.3	29.7	9.7	0.5	54.2
단순노무직	21.9	17.6	9.5	0.4	49.5
농림, 어업	90.0	2.0	0.7	0.3	93.3
전체 가구 = 227,255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사무직 가구주와 생산직 가구주를 비교해 보면, 자가소유율의 경우 생산직이 사무직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무직이 생산직 보다 약 10%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순노무직 가구주의 경우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경우 90%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단지 2%만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직, 서비스직 가구주는 다른 직업군보다 비주거(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절 누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가?

1.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전국, 서울, 6대광역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국의 아파트 수는 2005년 현재 6,962,689호이다. 서울의 아파트 수는 1,258,658호이며, 6대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수는 2,006,241호이다. 경기도의 아파트 수는 1,707,868호이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수는 3,363,006호이며, 이는 전국 아파트의 48.3%를 차지한다(통계청, 2005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제3권 주택편, 2006).

대한주택공사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아파트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6백만 호를 넘는 민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파트를 소유하는가? 한국의 아파트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분배되었는가? 여기서는 비록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표 9>는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에 관한 표이다. 2005년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 중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의 직업별 분포이다. 먼저 전국 아파트의 소유 분포를 보면, 33.2%를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25.7%를 생산직 가구주가, 19.2%를 사무직 가구주가, 그리고 15.7%를 판매직, 서비스직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다. 6대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현황은 전국 아파트의 소유현황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전국 아파트의 소유현황과 서울 아파트의 소유현황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첫째, 서울의 아파트는 전문직, 관리직에게 더 많이 배분되어 있다. 전국 아파트의 33.2%를 전문직, 관리직이 소유하는 반면에, 서울의 전문직, 관리직은 서울 아파트의 41.7%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서울의 아파트는 생산직 종사자에게 더 적게 배분되어 있다. 전국 아파트의 25.7%를 생산직 종사자가 소유하는 것에 반해, 서울 아파트의 14.8%만 생산직 종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표 9>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가구주, 2005

(단위: %)

직업	전국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
전문직, 관리직	33.2	41.7	32.5
사무직	19.2	22.2	17.0
판매직, 서비스직	15.7	17.5	15.6
생산직	25.7	14.8	28.9
단순노무직	5.1	3.7	5.4
농림,어업	1.0	0.2	0.6
전체가구	100%	100%	100%
N	63,428	11,275	20,085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 규모별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아파트를 소유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아파트의 규모별로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아파트가 규모별로 볼 때 어느 사람들에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 규모별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전국 가구주, 2005

(단위: %)

직업	10평미만	10-19	20-29	30-39	40-49	50평이상
전문직, 관리직	21.7	22.3	33.0	49.9	62.1	74.0
사무직	28.3	18.5	20.8	18.2	15.3	9.6
판매직, 서비스직	19.6	15.5	16.0	16.7	14.3	10.5
생산직	26.1	35.2	24.5	12.1	6.9	4.8
단순노무직	4.3	7.4	4.6	2.3	0.8	0.5
농림,어업	0.0	1.1	1.1	0.8	0.6	0.6
전체가구	100%	100%	100%	100%	100%	100%
N	46	22,482	29,822	6,385	3,708	985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0>은 전국의 아파트를 10평 단위로 분류하여, 작은 아파트에서부터 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규모별로 아파트가 어떤 사람들에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20평 이상의 아파트는 전문직, 관리직에게 가장 많이 배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평형대를 넘어가면 전문직, 관리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30대평형의 50%, 40대평형의 62%, 그리고 50대 이상 평형의 74%를 전문직, 관리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미만의 평형의 경우 사무직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점과 20대평형의 경우 생산직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점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제 4 장 결론

이 연구는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의 모습을 검토하고 난 다음, 지난 20년 동안 자가소유율의 추이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가구주의 직업을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주택소비 특히 자가소유의 몇 가지 모습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같이 고려해서 보면,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는 자기집이 아니라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더 많고,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가구는 자기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다.

둘째, 지난 20년간 자가소유율의 추이를 보면,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자가소유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 동안 자가소유율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자가소유율이 증가한 이유를 밝혀내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구주의 직업과 가구의 자가소유 여부를 관련시켜서 보면, 농림, 어업을 제외하고,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자가소유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생산직, 사무직, 단순노무직, 판매직 및 서비스직 순으로 자가소유율이 높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자가소유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넷째, 지난 20년 동안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와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다른 추이를 보인다. 이들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감소했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증가했다. 특히 생산직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가소유율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부침이 심했다. 가구주의 직업별로 가구의 자가소유율의 추이가 상이한 것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다섯째, 아파트의 소유 분포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를 100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문직, 관리직 가구이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가구의 순으로 아파트가 배분되어 있다. 6대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분포는 전국 아파트의 분포와 유사하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다르다. 서울의 아파트는 전문직, 관리직 가구에게 더 많이 배분되어 있고, 생산직 가구에게 더 적게 배분되어 있다.

도시연구에서 주택과 계급 혹은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논쟁을 거듭하면서 심화되어 왔다. 주택소비의 다양한 모습을 계급 혹은 계층론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연구는 계급 혹은 계층론적 관점으로 주택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5 장 참고문헌

- 권태환·윤일성·장세훈. 2006.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다해출판사.
- 윤일성. 2002.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한울출판사.
- 홍두승. 1991. “계층의 공간적 분화 1975-1985: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 홍두승·이동원. 1993. 『집합주거와 사회환경』. 서울대학교 출판부.
- Forrest, R., Murie, A., and Williams, P., 1990. *Home Ownership: Differentiation and Fragmentation*, London: Unwin & Hyman.
- Hamnett, C., 1989. "Consumption and class in contemporary Britain." in Hamnett et al.(eds), *Restructuring Britain: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London: Sage.
- Saunders, P., 1990. *A Nation of Home Owners*. London: Unwin & Hyman.

한국의 종교인구

조순기 · 박영실 · 최은영 (통계청)

제 1 장 머리말

종교가 하나만 있거나 또는 여러 종교들이 있는 가운데 한 종교가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현재의 우리사회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시대라고 불린다(김종서, 2000). 선행 연구(정창수 · 김신열, 1993; 은기수, 2002; 윤이흠, 2007)에 의하면 현대 한국사회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적 종교 현상의 특성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 대해 그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부족한데, 김종서(1998: 50)는 해방 후 50년간 종교사회학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서, 기존 연구들이 사회학적 이론들에 집중한 나머지 종교들의 실제 양상에 관한 정보들을 간과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부족은 이에 대한 자료의 빈곤과도 관련이 있는데, 1980년대 이전에는, 각 종단의 보고에 기초한 문화부의 종교단체현황이 통계자료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에 근거한 신도수는 해마다 인구증가율을 압도하여 총인구보다 많이 보고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84년 이후 부정기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종교조사는 이 분야의 발달에 공헌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198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는 종교에 관한 최초의 전수조사로, 종교인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김종서, 1998). 이후 1995년과 2005년의 총조사에서 종교항목이 각각 조사되어 현재 10년 주기로 20년간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자료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 첫째는 일정한 시계열이 유지된다는 점, 둘째는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전국 대상의 시도 및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 등의 다양한 공간단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85~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와 2005년 표본자료를

1) 한국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사회 속에서만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조차 때때로 다양한 종교적 성향이 상호 '겹쳐(overlapped)' 나오고 또 깊이 '연관되어(interpenetrated)' 있다. 더구나 그것에 대해 모순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면서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고 또 종종 절에도 가고, 유교식 조상제사를 지내면서도 때로는 성당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다(김종서, 2000: 44).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다종교 상황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GIS에 기반한 분석, 코호트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불교인구 몇 %, 개신교인구 몇 % 등과 같은 단일 숫자를 성·연령·직업·교육정도·지역 등의 변수를 통해 분해해 봄으로써 한국의 종교 현상에 대한 실제적 진실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한국 종교 구조의 변화를 종교인구의 구성 및 성·연령별 특성과 가구 내 종교 구성을 통해 살펴보았다.²⁾ 둘째, 종교별로 교육수준과 직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시도 및 시군구별 종교인구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교인구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 본 연구에서 ‘종교인구’는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인’과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제 2 장 한국 종교 구조의 변화

1절 종교인구의 구성 및 성·연령별 특성의 변화

1. 종교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1985~2005년까지 20년 동안 종교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종교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표 1> 참조). 종교인 비율은 2005년 53.5%로, 1985년의 42.6%에 비해 약 10%p 증가하였으며, 무종교인 비율은 1985년 57.4%에서 2005년 46.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무종교인 비율의 감소가 1985~1995년에 8.1%p였던데 비해 1995~2005년에는 2.8%p에 그치고 있어, 종교인의 증가와 무종교인의 감소 경향이 최근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의 무종교인 비율이 15.0%(국민일보, 2006. 8. 13)인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의 무종교인 비율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종교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불교와 개신교인구 비율은 1985~1995년 사이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개신교인구는 1995년 876만 명에서 2005년 862만 명으로 약 14만 명의 절대적인 신도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천주교인구 비율은 1985년 4.6%에서 2005년 10.9%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천주교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교인구 비율과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독교인구 비율과 불교인구 비율이 1985년에는 각각 20.7%, 19.9%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2005년에는 그 비율이 29.2%와 22.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불교인구 비율은 1995~2005년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교인구 비율은 1985년 1.2%, 2000년 0.5%, 2005년 0.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기타 종교 인구수는 1985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국민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종교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1985~2005년)

(단위 : 천 명, %)

구 분	1985년		1995년		2005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총인구	40,420	100.0	44,554	100.0	47,041	100.0	
종교인	계	17,203	42.6	22,598	50.7	25,176	53.5
	불교	8,060	19.9	10,321	23.2	10,726	22.8
	개신교	6,489	16.1	8,760	19.7	8,616	18.3
	천주교	1,865	4.6	2,951	6.6	5,146	10.9
	원불교	92	0.2	87	0.2	130	0.3
	유교	483	1.2	211	0.5	105	0.2
	기타 종교	213	0.5	271	0.6	453	1.0
무종교인	23,216	57.4	21,953	49.3	21,865	46.5	

주) 기타 종교에는 종교 미상 포함, 총인구는 내국인수임.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2. 성별 종교인구의 변화

성별 종교 구성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여자 종교인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매년 6.5~6.9%p 높게 나타난다. 종교인 비율이 남자는 2005년에 과반(50.2%)에 도달한 반면, 여자는 1995년에 이미 과반(54.2%)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56.9%로 증가하였다. 이를 종교별로 살펴보면, 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여자 종교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05년의 종교별 남자신도 대 여자신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불교가 46.7: 53.3, 개신교가 46.5: 53.5, 천주교가 46.1: 53.9로 나타나고 있다. 세 종교 모두 유사한 성별 구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천주교가 여자신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교는 여자에 비해서 남자 비율이 높는데, 2005년의 성 구성비는 남자 55.1%, 여자 44.9%이다.

<표 2> 성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단위 : %)

구 분	1985년				1995년				2005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총인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교인	계	39.3	(46.2)	45.8	(53.8)	47.3	(46.8)	54.2	(53.2)	50.2	(46.7)	56.9	(53.3)
	불교	18.5	(46.4)	21.4	(53.6)	21.8	(47.2)	24.6	(52.8)	21.5	(47.1)	24.1	(52.9)
	개신교	14.7	(45.8)	17.4	(54.2)	18.3	(46.7)	21.1	(53.3)	17.1	(46.5)	19.6	(53.5)
	천주교	4.2	(45.3)	5.1	(54.7)	6.0	(45.4)	7.3	(54.6)	10.1	(46.1)	11.8	(53.9)
	원불교	0.2	(45.4)	0.2	(54.6)	0.2	(45.6)	0.2	(54.4)	0.3	(47.2)	0.3	(52.8)
	유교	1.3	(54.0)	1.1	(46.0)	0.5	(54.0)	0.4	(46.0)	0.2	(55.1)	0.2	(44.9)
	기타 종교	0.5	(46.0)	0.6	(54.0)	0.6	(45.8)	0.7	(54.2)	0.9	(48.5)	1.0	(51.5)
무종교인	60.7	(52.9)	54.2	(47.1)	52.7	(53.7)	45.8	(46.3)	49.8	(53.5)	43.1	(46.5)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성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3. 연령별 종교인구의 변화

연령별로 종교인구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표 3> 참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록 1> 참조),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교를 믿는 비율이 높아지고 무종교인 비율이 낮아지는데, 이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10세 미만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무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 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985년과 1995년에는 40~60대, 2005년에는 50대 이상이다(그림 1) 참조). 1985~2005년 사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종교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30~40대의 종교인 비율은 1985~1995년에는 증가하였으나 1995~2005년에는 감소하였다. 특히 30대 인구의 종교인 비율은 1995년 52.8%에서 2005년에는 48.5%로 4.3%p나 감소해 전반적인 종교인 비율 증가와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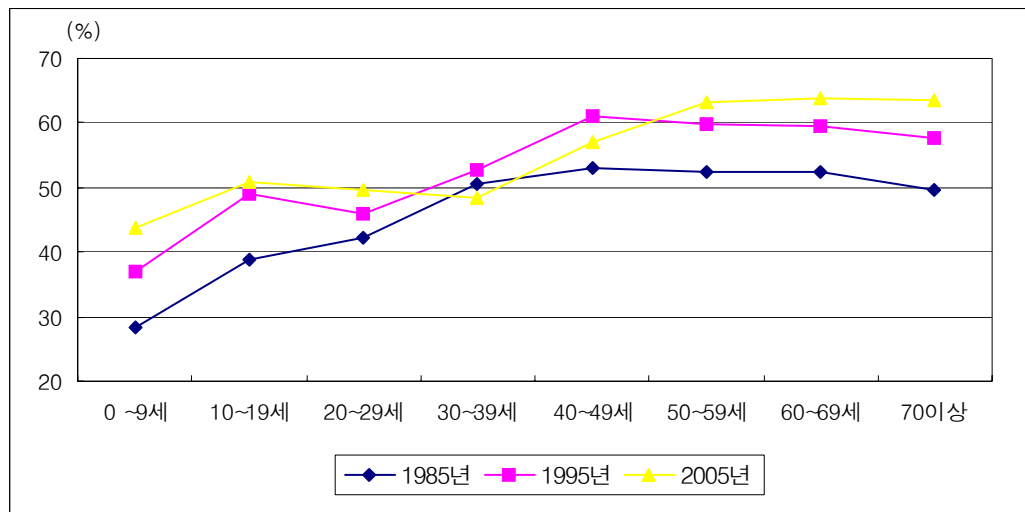
<표 3> 연령대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단위 : %)

구 분	1985년		1995년		2005년	
	종교인	무종교인	종교인	무종교인	종교인	무종교인
전연령	42.6	57.4	50.7	49.3	53.5	46.5
0 ~ 9세	28.2	71.8	36.9	63.1	43.9	56.1
10~19세	38.9	61.1	49.0	51.0	51.0	49.0
20~29세	42.3	57.7	45.9	54.1	49.6	50.4
30~39세	50.6	49.4	52.8	47.2	48.5	51.5
40~49세	53.0	47.0	60.9	39.1	57.0	43.0
50~59세	52.5	47.5	59.9	40.1	63.1	36.9
60~69세	52.4	47.6	59.5	40.5	63.7	36.3
70세이상	49.5	50.5	57.7	42.3	63.4	36.6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그림 1) 연령대별 종교인 비율의 변화(1985~2005년)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중에서 3대 종교를 믿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통해 종교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불교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는 비교적 전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개신교는 1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타 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교인구의 비율보다는 낮아지고 천주교인구의 비율과는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를 보인다. 불교인구 비율은 개신교와 천주교인구를 합한 기독교인구 비율에 비해 1985년에는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1995년에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2005년에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아진다.

현재의 연령계층과 10년 전 연령계층을 비교하는 코호트 분석에 의하면, 동일 인구 집단(예를 들어 1985년의 10대 인구는 1995년의 20대 인구, 2005년의 30대 인구와 동일 인구 집단이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종교성향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3대 종교에 대한 코호트 분석에 의하면, 개신교는 불교·천주교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동일 코호트에 속한 인구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불교와 천주교인구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개신교인구 비율은 1995~2005년 사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의 코호트 분석이 가능한 1995년의 0~69세 연령대 중에서, 개신교의 경우 1995년 당시 10대미만과 60대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05년에는 구성 비율이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을 1985년 10~19세였던 인구집단을 사례로 살펴보면, 1985년, 1995년, 2005년 각각 이 집단의 불교인구 비율은 15.0%, 19.4%, 19.6%, 천주교인구 비율은 4.4%, 4.8%, 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개신교인구 비율은 18.1%, 19.7%, 17.7%로 변화하였다. 1985년 20~29세였던 인구집단의 개신교인구 비율 역시 동일

<표 4> 연령별 총인구 중 3대 종교인구 구성비 변화(1985~2005년)

(단위 : %)

구 분	1985년			1995년			2005년		
	불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전연령	19.9	16.1	4.6	23.2	19.7	6.6	22.8	18.3	10.9
0 ~ 9세	9.5	14.1	3.8	11.3	19.3	5.6	13.2	19.9	9.7
10~19세	15.0	18.1	4.4	18.3	22.5	7.2	17.7	20.4	11.7
20~29세	18.6	17.3	4.9	19.4	19.7	5.8	19.3	17.9	11.2
30~39세	25.2	17.9	5.7	24.7	20.0	7.0	19.6	17.7	9.8
40~49세	30.3	14.9	4.9	31.5	20.0	8.0	26.6	17.7	11.3
50~59세	31.5	12.8	4.3	34.7	16.7	6.3	31.7	17.8	12.0
60~69세	30.4	13.0	4.5	34.5	16.0	6.2	34.1	16.6	10.8
70세이상	28.0	12.4	4.4	30.5	17.5	6.8	31.1	18.2	11.5

주) 음영은 동일 코호트의 사례를 나타냄.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985년, 1995년, 2005년 각각 17.3%, 20.0%, 17.7%로 변

화하였다.

1985~1995년 자료를 분석한 은기수(2002)에 의하면 개신교는 가장 젊은 인구구조를 보였지만, 2005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신교가 유소년층과 함께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인구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인구는 0~19세 인구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4. 성·연령별 종교인구

성·연령별로 종교인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남녀간 종교인 비율의 차는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에서는 크지 않지만 30대 이상에서는 10%p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 종교인 비율의 차가 가장 큰 연령대는 1985년에는 60대(13.7%p)였으며, 1995년과 2005년에는 70대 이상의 연령대이다.

종교별로 성·연령별 종교인구 비율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부록 2 ~ <부록 4> 참조). 불교는 연령에 따른 성별 구성의 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1985년, 1995년, 2005년 세 시점 모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남자 불교인구 비율이 여자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20대를 지나면서 여자가 남자를 추월,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이가 더 커진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천주교의 경우, 남자나 여자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불교나 유교인구의 경우 해당 연령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서 비교에 무리가 있으나, 가장 뚜렷한 특징은 50대 이상에서 유교를 믿는 인구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는 점이다.

<표 5>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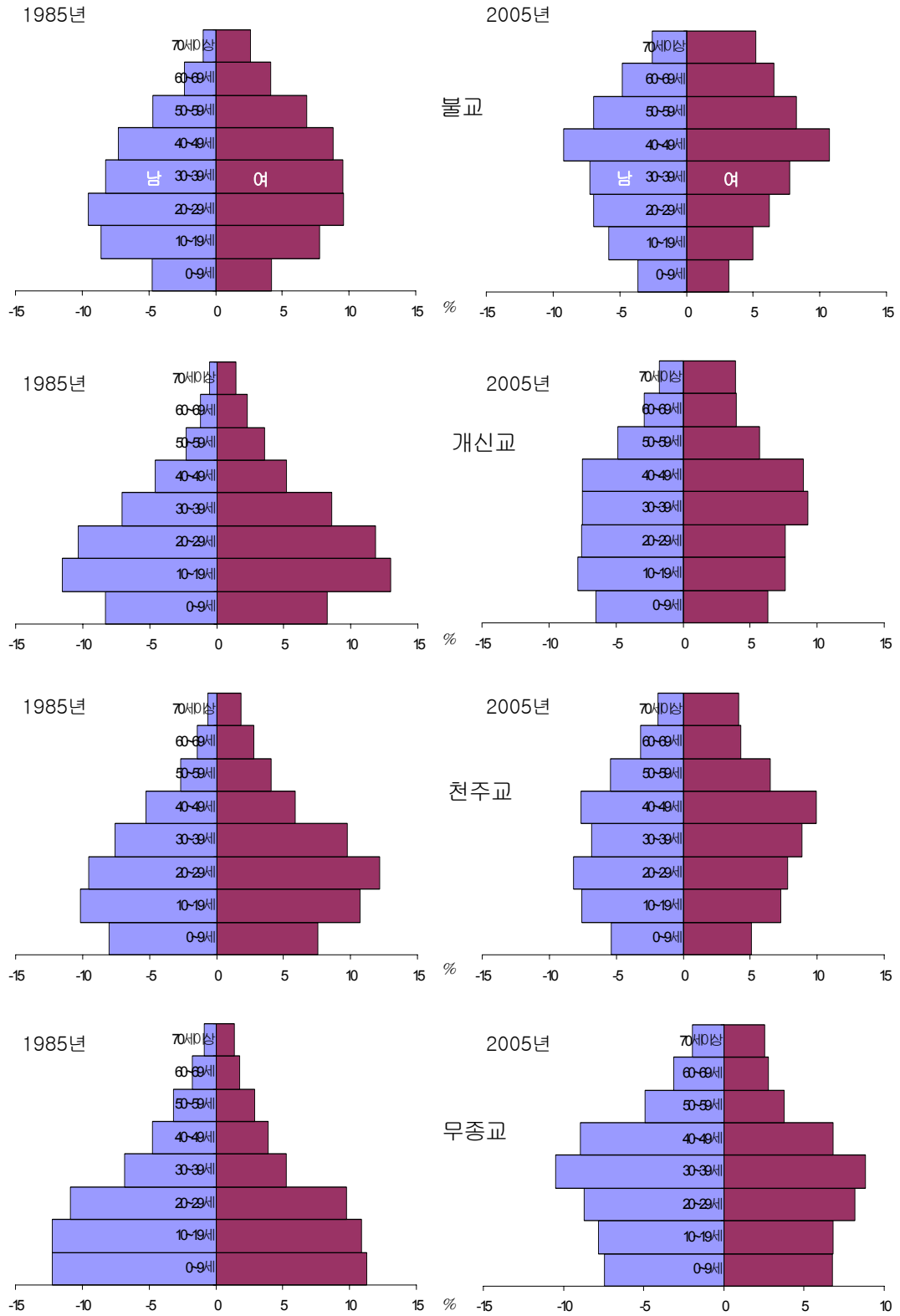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1985년			1995년			2005년		
	남자	여자	차이	남자	여자	차이	남자	여자	차이
전연령	39.3	45.8	6.5	47.3	54.2	6.9	50.2	56.9	6.7
0 ~ 9세	27.9	28.5	0.6	36.5	37.3	0.8	43.6	44.3	0.7
10~19세	37.3	40.6	3.3	48.2	49.9	1.7	50.3	51.7	1.4
20~29세	40.0	44.7	4.7	45.1	46.8	1.7	49.4	49.8	0.4
30~39세	45.3	56.2	10.9	46.7	59.1	12.4	44.3	52.6	8.3
40~49세	48.7	57.5	8.8	56.0	66.1	10.1	51.5	62.6	11.1
50~59세	46.4	57.8	11.4	54.8	64.7	9.9	58.1	68.1	10
60~69세	44.6	58.3	13.7	52.3	64.9	12.6	58.4	68.3	9.9
70세이상	41.6	53.5	11.9	49.0	62.3	13.3	56.2	67.6	11.4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종교별로 성·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85년과 2005년 각 종교의 전체 신도수 대비 성·연령별 인구를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1985~2005년 사이 성·연령별 구조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한국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종교의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았던 불교는 물론 개신교와 천주교의 경우도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둘째,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0~49세에서 역삼각형 모양의 인구구조를 보이는데 비해 개신교는 이와는 다른 종형의 인구구조를 보인다. 이는 앞의 3대 종교의 연령대별 종교인 비율의 변화를 코호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림 2) 종교별 인구 피라미드 유형의 변화(1985·2005년)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2절 가구 내 종교 구성의 변화

1. 부부간 종교 일치도

부부간의 종교 일치도를 살펴보면, 약 90%에 이르는 가구에서 부부간에 종교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1985년, 1995년, 2005년 각각 88.0%, 88.6%, 88.8%로 나타나 약간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³⁾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부 모두 무종교로 일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났다. 무종교로 일치하는 경우는 1985년 44.6%에서 2005년 38.1%로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불교와 개신교의 경우에는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일치도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2005년으로 오면서 두 종교로의 일치율은 약간씩 감소하였다. 반면에, 천주교로의 일치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 4.0%에서 2005년 9.5%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간에 종교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보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무종교인이지만 다른 한사람은 불교·개신교·천주교인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우에 종교가 달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기성종교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간에 기성종교가 혼재해 있는 경우는 1%대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6> 부부간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1985~2005년)

(단위 : %)

구 분	종교 구성	1985년	1995년	2005년
일치	계	88.0	88.6	88.8
	무종교	44.6	38.9	38.1
	불교	23.6	26.0	24.6
	개신교	13.5	16.7	14.9
	천주교	4.0	5.7	9.5
	기타 일치	2.3	1.3	1.7
불일치	계	12.0	11.4	11.2
	무종교+불교	4.6	3.9	3.8
	무종교+개신교	4.2	4.3	3.4
	무종교+천주교	1.5	2.1	2.8
	기타 불일치	1.7	1.1	1.2

주) 1985년과 1995년의 비율은 은기수(2002: 574)의 수치임.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3)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방법 특성상 주로 가구원 중 한 명이 가구원 전체에 대해 응답하는 대 리응답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별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와 종교에 대한 응답결과가 일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부간 일치도 또는 가구 내의 종교일치도는 실제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가 조사표를 기입하게 되는 0~19세 인구의 무종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료의 신뢰수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부부간 종교 일치 여부를 시도별로 살펴보면(<표 7> 참조), 일치율이 90%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는 지역은 불교인구가 많거나, 지리적으로 동쪽에 위치하는 시도로 나타났다. 즉 대구 90.2%, 울산 91.9%, 강원 90.8%, 경북 91.4%, 경남 91.3%, 제주 90.6% 등 6개 시도가 타 지역에 비해 일치율이 높게 나타난다.

무종교로 일치하는 부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그 비율은 45.2%이었으며, 다음으로 강원(45.0%), 충남(43.5%), 광주(41.7%) 등의 순이었다. 불교인 부부의 일치 비율은 경남지역에서 45.0%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과 부산이 각각 43.0%와 42.0%로 높았다. 이들 지역은 개신교인 부부의 비율이 낮은 곳과 일치된다(경남: 6.5%, 울산: 8.2%, 부산: 8.3%). 부부가 모두 개신교인 비율은 전북(19.7%)이 가장 높고, 수도권(서울: 19.2%, 인천: 18.9%, 경기: 18.2%) 역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에도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부부가 모두 천주교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서울: 12.8%, 인천: 12.7%, 경기: 11.4%).

한편, 부부간 종교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무종교인과 불교인으로 구성된 부부 비율은 부산이 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과 제주가 각각 5.5%와 4.9%로 나타났다. 부부사이의 종교가 무종교와 개신교인 경우는 전북 5.5%, 광주 4.9%, 인천 4.4%이다.

<표 7> 시도별 부부간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2005년)

(단위 :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치	계	86.9	89.6	90.2	88.3	85.5	88.0	91.9	88.5	90.8	89.7	89.2	86.8	88.3	91.4	91.3	90.6
	무종교	35.9	30.3	35.2	41.3	41.7	37.8	33.9	39.4	45.0	41.7	43.5	39.9	45.2	37.8	33.4	37.9
	불교	17.2	42.0	37.1	13.6	15.7	22.1	43.0	17.8	23.4	27.1	20.8	15.3	18.1	36.6	45.0	34.8
	개신교	19.2	8.3	8.3	18.9	15.8	17.3	8.2	18.2	13.1	11.9	15.7	19.7	15.7	9.8	6.5	5.8
	천주교	12.8	7.2	8.6	12.7	10.9	9.8	5.5	11.4	8.1	8.1	7.7	8.7	6.3	5.7	4.6	10.1
	기타 일치	1.9	1.8	1.0	1.8	1.4	1.0	1.3	1.8	1.2	0.9	1.5	3.1	2.9	1.4	1.8	1.9
불일치	계	13.1	10.4	9.8	11.7	14.5	12.0	8.1	11.5	9.2	10.3	10.8	13.2	11.7	8.6	8.7	9.4
	무종교+불교	3.5	5.8	4.4	2.6	3.1	3.4	4.3	2.9	3.5	3.7	3.4	3.7	3.9	4.5	5.5	4.9
	무종교+개신교	4.2	1.9	1.8	4.4	4.9	4.1	1.7	4.0	2.7	3.3	4.2	5.5	4.3	1.9	1.4	1.5
	무종교+천주교	3.9	1.7	2.6	3.6	5.1	3.4	1.3	3.4	2.2	2.4	2.3	2.7	2.3	1.4	0.9	2.5
	불교+개신교	0.5	0.3	0.4	0.4	0.3	0.3	0.3	0.4	0.2	0.3	0.3	0.3	0.3	0.3	0.3	0.0
	불교+천주교	0.3	0.4	0.3	0.2	0.4	0.4	0.3	0.3	0.1	0.2	0.2	0.1	0.2	0.2	0.2	0.3
	개신교+천주교	0.3	0.0	0.1	0.2	0.4	0.2	0.0	0.2	0.2	0.1	0.2	0.2	0.1	0.1	0.0	0.0
	기타 불일치	0.4	0.3	0.3	0.2	0.3	0.2	0.2	0.3	0.2	0.3	0.4	0.8	0.7	0.4	0.4	0.1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2. 가구 내 종교 일치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 종교 일치 및 불일치 여부를 살펴보면(<표 8> 참조), 가구원간의 종교 일치도는 1985년 67.7%에서 1995년 73.2%, 2005년 78.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구원간의 종교 일치도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가구원간의 종교적 동질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⁴⁾

가구 내의 종교 일치 여부를 종교별로 보면, 가구원 모두가 무종교인인 경우가 1985년에는 40.8%를, 1995년과 2005년에는 36.2%와 36.7%로 가장 많다. 불교로 일치하는 비율은 1985년에는 12.2%이던 것이 1995년에는 16.6%, 2005년에는 18.5%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개신교로의 일치비율은 1985년과 1995년 사이에는 10.5%에서 14.7%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13.8%를 나타내었다. 가구원 모두가 천주교를 믿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198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1%가 천주교로 일치하였으나, 1995년에는 4.8%, 2005년에는 8.4%로 급증하였다.

반면 가구원들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종교가 있는 경우(무종교 포함)는 1985년에는 32.3%, 1995년에는 26.8%, 2005년에는 21.1%로 나타났다. 이 가구들 중에서 무종교와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각각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전체 불일치 가구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1995년 27.0%, 1995년 23.7%, 2005년 18.6%), 서로 다른 종교들로 결합된 가구는 1985년 5.3%에서 1995년 3.1%, 2005년 2.5%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시도별로 가구내 종교 일치도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표 9> 참조), 가구 내 가구원의 종교 일치도는 부부간의 일치도가 높은 지역과는 달리 인천(81.3%), 경기(80.0%), 강원(82.4%), 충북(80.8%), 충남(80.3%), 경북(80.7%) 등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종교유형별로 보면 그 분포는 부부간 일치도가 높은 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종교로 일치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43.5%), 전남(43.0%), 충남(41.8%) 순이며, 불교로 일치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남(33.5%), 울산(32.0%), 부산(30.4%), 경북(28.7%), 대구(27.0%) 순이다. 개신교로 일치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북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7.9%, 인천 17.8%, 경기 16.8%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뒤에서 살펴보게 될 지역별 종교 구성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가구 내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불교의 비율이 높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무종교와 불교가 혼합되어 있는 가구의 비율이 16.7%로 높게 나타났다. 불

4) 가구 내 종교일치도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기될 수 있으나, 가구원 모두 동일한 종교를 믿는 경우를 일치로 본 계산방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평균가구원수가 감소(4.16명(1985년) → 3.34명(1995년) → 2.88명(2005년))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치 형태가 무종교와 개신교인 경우는 전북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7.3%), 광주(7.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내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의 기성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서울(3.1%), 광주(3.1%), 전북(3.0%)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8> 가구 내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1985~2005년)

(단위 : %)

구 분	종교 구성	1985년	1995년	2005년
일치	계	67.7	73.2	78.9
	무종교	40.8	36.2	36.7
	불교	12.2	16.6	18.5
	개신교	10.5	14.7	13.8
	천주교	3.1	4.8	8.4
	기타 일치	1.1	0.9	1.5
불일치	계	32.3	26.8	21.1
	무종교+불교	15.4	13.0	9.4
	무종교+개신교	9.1	7.7	5.3
	무종교+천주교	2.5	3.0	3.9
	불교+개신교	0.7	0.7	0.5
	불교+천주교	0.1	0.2	0.3
	개신교+천주교	0.3	0.2	0.3
	기타 불일치	4.2	2.0	1.4

주) 1985년과 1995년의 비율은 은기수(2002: 576)의 수치임.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표 9> 시도별 가구내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2005년)

(단위 :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치	계	78.0	75.5	77.8	81.3	76.3	78.2	78.8	80.0	82.4	80.8	80.3	78.0	78.7	80.7	77.7	79.9
	무종교	34.2	29.5	34.5	39.6	40.4	36.6	33.2	37.9	43.5	40.7	41.8	37.4	43.0	36.8	32.6	37.4
	불교	12.9	30.4	27.0	10.7	10.8	16.1	32.0	13.6	18.6	21.1	16.5	11.9	13.4	28.7	33.5	26.9
	개신교	17.9	7.6	7.8	17.8	14.6	15.9	7.7	16.8	11.9	11.0	14.0	18.2	14.4	9.0	5.8	5.1
	천주교	11.3	6.2	7.6	11.5	9.6	8.5	4.9	10.1	7.3	7.0	6.7	7.9	5.4	5.1	4.2	8.9
	기타 일치	1.7	1.7	0.9	1.7	1.0	0.9	0.9	1.6	1.1	0.9	1.3	2.7	2.4	1.1	1.5	1.6
불일치	계	22.0	24.5	22.2	18.7	23.7	21.8	21.2	20.0	17.6	19.2	19.7	22.0	21.3	19.3	22.3	20.1
	무종교+불교	7.3	16.7	13.5	5.4	7.4	8.8	15.1	6.9	8.1	9.1	7.8	6.9	7.9	12.0	16.7	12.5
	무종교+개신교	6.4	2.9	2.9	6.4	7.2	6.3	2.3	5.9	4.6	4.6	6.4	8.3	7.3	3.0	2.2	2.3
	무종교+천주교	5.1	2.6	3.5	4.8	6.0	4.2	1.8	4.7	3.1	3.5	3.3	3.7	3.3	2.1	1.4	3.4
	불교+개신교	0.6	0.5	0.5	0.4	0.5	0.6	0.6	0.5	0.5	0.5	0.5	0.6	0.6	0.5	0.5	0.2
	불교+천주교	0.4	0.4	0.4	0.2	0.3	0.4	0.4	0.4	0.2	0.2	0.2	0.1	0.2	0.2	0.3	0.6
	개신교+천주교	0.4	0.1	0.1	0.3	0.5	0.3	0.1	0.4	0.2	0.2	0.3	0.3	0.2	0.1	0.1	0.2
	기타 불일치	1.7	1.3	1.2	1.2	1.8	1.2	1.1	1.3	0.9	1.1	1.3	2.0	1.8	1.3	1.2	0.8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제 3 장 종교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1절 종교인구와 교육수준

종교 인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종교별로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 인구 비율은 불교 26.1%, 개신교 16.6%, 천주교 13.9%이며,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이상의 고학력 인구 비율은 불교 21.7%, 개신교 34.1%, 천주교 38.0%로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천주교의 교육수준은 여타 종교들에 비해서 높다. 불교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유교는 비교된 종교인구 중 교육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불교와 유교인구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고령 인구가 많은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종교별 교육수준의 차이는 대체로 이전 조사의 결과와 유사한데, 다만 전체 인구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종교인구의 학력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⁵⁾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별 평균 교육년수⁶⁾를 계산해 보면(<표 11> 참조), 천주교가 12.5년으로 가장 길고, 개신교 12.1년, 원불교 11.1년, 불교 10.5년, 유교 8.0년 순으로

<표 10> 종교별 인구의 교육수준별 구성비(2005년)

(단위 : %)

학력	종교인							무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7.5	9.5	6.2	4.7	10.2	17.1	6.0	7.6
초등	13.3	16.6	10.4	9.2	15.6	35.2	12.0	12.0
중학	11.8	14.1	9.8	9.2	10.8	14.6	11.6	10.9
고등	38.6	38.1	39.5	38.8	32.3	21.9	42.1	42.6
대학(전문대)	26.0	20.2	30.2	33.7	27.6	10.5	26.2	25.1
대학원이상	2.8	1.5	3.9	4.3	3.5	0.7	2.2	1.7

주)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5)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는 1995년 9.7년에서 2005년 11.0년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6) 평균 교육년수는 18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을 수치화하기 위하여 학력별 교육년수를 환산한 수치이다(무학은 0년, 초등졸업은 6년, 중졸은 9년, 고졸은 12년, 대졸은 16년, 대학원졸은 19년, 그리고 중퇴, 재학 등은 중간값을 취하여 계산함).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시도간 교육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천주교는 낮게 나타났다.

<표 11> 시도·종교별 평균 교육년수(2005년)

(단위 : 년)

시도	종교인	종교별						무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전국	11.4	10.5	12.1	12.5	11.1	8.0	11.6	11.4
서울	12.8	12.1	13.1	13.5	13.3	11.4	12.5	12.7
부산	11.7	11.3	12.4	12.5	12.7	10.8	11.2	12.1
대구	11.7	11.2	12.5	12.6	11.9	9.9	11.1	12.2
인천	11.7	11.3	11.8	12.1	11.4	8.6	12.1	11.7
광주	12.3	11.5	12.7	12.8	12.7	10.9	12.4	12.3
대전	12.4	11.5	12.9	13.2	13.8	12.3	12.0	12.5
울산	11.5	11.2	12.1	12.6	13.0	12.0	11.3	12.2
경기	12.3	11.4	12.7	12.9	13.3	9.9	12.1	12.2
강원	10.3	9.6	11.0	11.1	12.3	7.8	10.1	9.9
충북	10.0	9.1	11.0	11.1	11.5	8.2	10.6	10.0
충남	9.6	8.9	10.2	10.5	9.0	7.6	10.5	9.5
전북	9.7	8.1	10.2	11.1	10.3	6.1	9.8	9.5
전남	8.8	8.0	9.3	10.3	6.7	6.4	9.0	8.2
경북	9.4	8.9	10.5	11.1	10.0	6.5	10.3	9.5
경남	9.9	9.4	11.6	11.8	10.7	7.3	9.9	10.7
제주	11.0	10.5	11.7	12.5	13.1	7.4	9.6	11.4

주)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앞에서 살펴본 종교별 교육수준의 차가 종교별 연령 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은기수, 2002), 연령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30~49세 인구만을 대상으로 종교별 교육수준의 차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 참조). 30~49세 종교인의 평균 교육년수는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기타종교, 불교, 유교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 18세 이상 전체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와 대체로 유사하다. 하지만 30~49세 인구의 경우 종교별 평균 교육년수의 차가 18세 이상 인구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 연령대 인구의 경우 종교별 교육수준의 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2> 30~49세 인구의 종교별 평균 교육년수(2005년)

(단위 : 년)

구분	종교인	종교별						무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18세이상	11.4	10.5	12.1	12.5	11.1	8.0	11.6	11.4
30~49세	13.3	12.7	13.7	14.0	13.6	11.5	13.1	12.9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2절 종교인구와 직업

종교별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면(<표 13> 참조), 종교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 종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천주교는 직업 대분류 중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의 직업군에서 다른 종교인보다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는 종교별로 차이가 적으며, 판매종사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종교 등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는 유교에서 67.7%, 원불교 27.4%, 불교 21.3%로 다른 종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표 13> 15세이상 인구의 종교별 직업현황(2005년)

(단위 : %)

직업구분	종교인							무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9	3.6	3.9	4.7	3.9	1.3	3.4	2.8
전문가	10.4	6.2	14.2	15.2	12.8	2.3	9.9	8.1
기술공 및 준전문가	8.6	6.8	10.4	11.0	7.2	2.5	9.0	8.1
사무 종사자	14.8	12.7	16.2	18.2	12.0	4.8	16.1	15.8
서비스 종사자	9.6	10.5	8.6	8.9	8.8	4.2	11.0	9.0
판매 종사자	11.0	10.4	11.5	11.7	8.0	4.5	11.5	9.9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15.7	21.3	10.6	7.6	27.4	67.7	7.4	16.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5	9.0	8.4	7.6	6.9	3.9	10.6	10.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7	11.0	8.6	8.2	7.5	4.9	11.5	11.7
단순노무 종사자	7.1	7.8	6.7	6.1	5.0	3.7	8.8	7.5
기타	0.8	0.6	0.9	1.0	0.7	0.1	0.9	0.6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다음에서는 종교별 평균 교육년수와 마찬가지로 연령구성의 차이를 통제한 후 종교별 직업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30~49세 인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14> 참조).

30~49세 인구의 종교별 직업 구성을 15세이상 인구 전체의 종교별 직업현황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종교간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물론 15세이상 종교인구의 직업현황에서의 특징과 유사하지만, 유교인구 중 농림어업 종사자가 67.7%에서 30.9%로 줄어드는 등 동일 연령대에서는 각 종교간의 차이가 작아진다. 아울러 종교별로 지역분포의 차이까지 제거하여 특정 시도를 비교한다면 종교별 직업분포의 차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14> 30~49세 인구의 종교별 직업현황(2005년)

(단위 : %)

직업구분	종교인	종교						무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3	4.3	4.2	4.7	4.7	2.7	4.1	3.5
전문가	11.6	7.1	15.2	16.0	16.8	4.2	10.1	8.7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2	8.4	11.6	12.0	10.8	5.8	10.1	9.2
사무 종사자	17.1	15.5	17.7	19.9	15.1	13.0	17.1	17.3
서비스 종사자	10.8	12.5	9.2	9.3	11.0	10.9	11.6	10.0
판매 종사자	12.2	12.0	12.4	12.6	7.6	8.8	12.0	10.9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5.7	7.9	4.2	3.0	8.8	30.9	2.4	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2	11.5	9.7	8.3	9.4	8.2	12.0	12.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1	13.2	9.5	8.5	9.2	11.8	12.7	13.3
단순노무 종사자	5.9	6.8	5.4	4.7	5.9	3.6	7.0	6.9
기타	0.8	0.7	0.9	1.0	0.8	0.0	0.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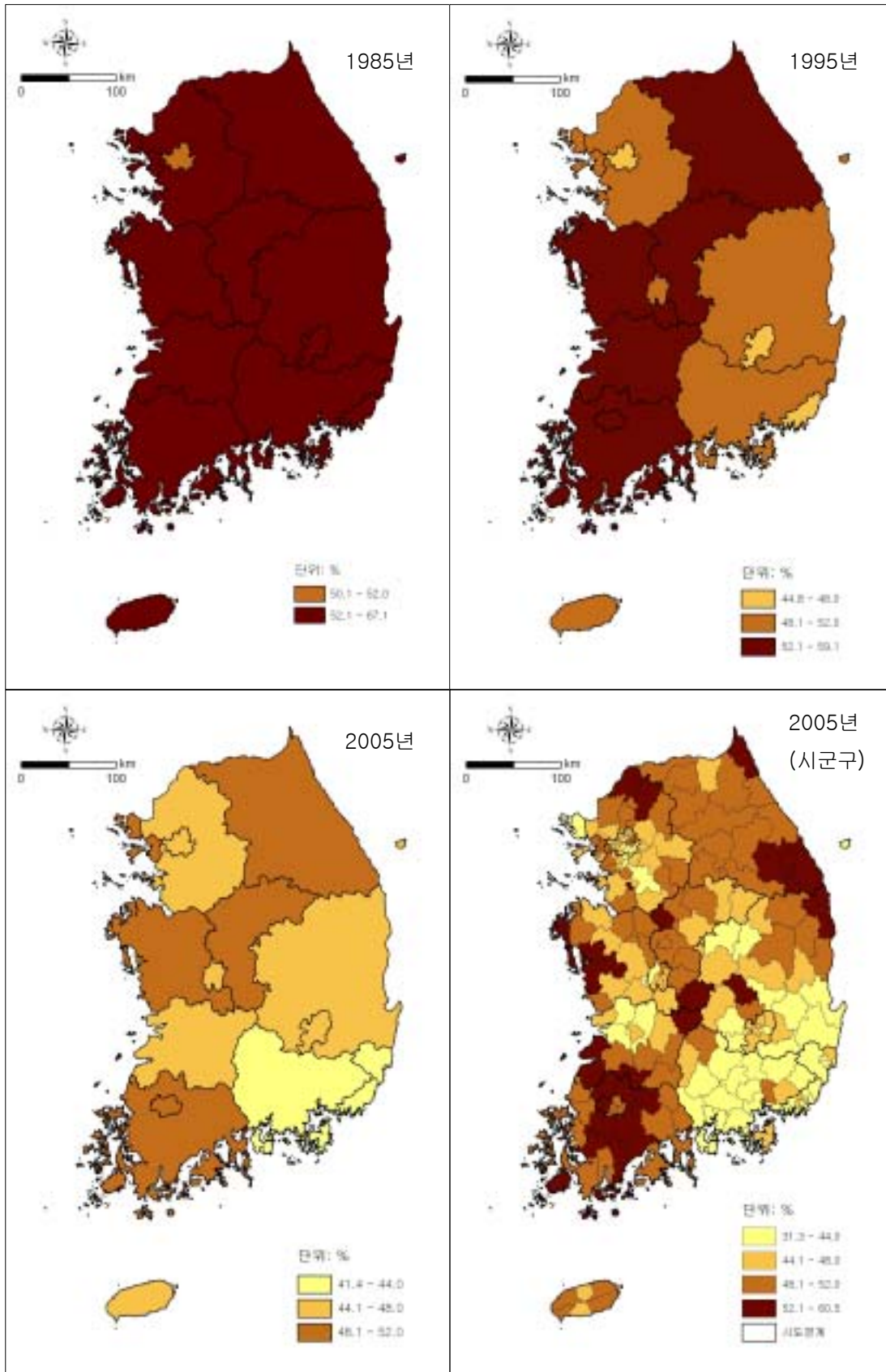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제 4 장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 간 차이

Newman and Halvorson(1984)에 의하면 거주 지역은 개인의 종교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의 원인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구이동, 사회문화적인 특성 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alfant and Heller, 1991; Clarke, 1985 등). 반면에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며, 다만 정창수·김신열(1993)에 의해 외래종교인 기독교와 전통종교를 대표하는 불교인구 비율의 지역 간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서 기독교의 수용이 이루어진 정도가 유교적 전통의 강도와 종교전파의 전달경로가 되는 사회적인 연결망, 지역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차에 대한 원인 분석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요 종교인구 분포의 시도별 분석은 물론 시군구별 분석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지도화를 통한 시계열 분석이 주로 수행되었는데, 시계열 자료의 비교를 위해 지도의 계급 급간은 가능한 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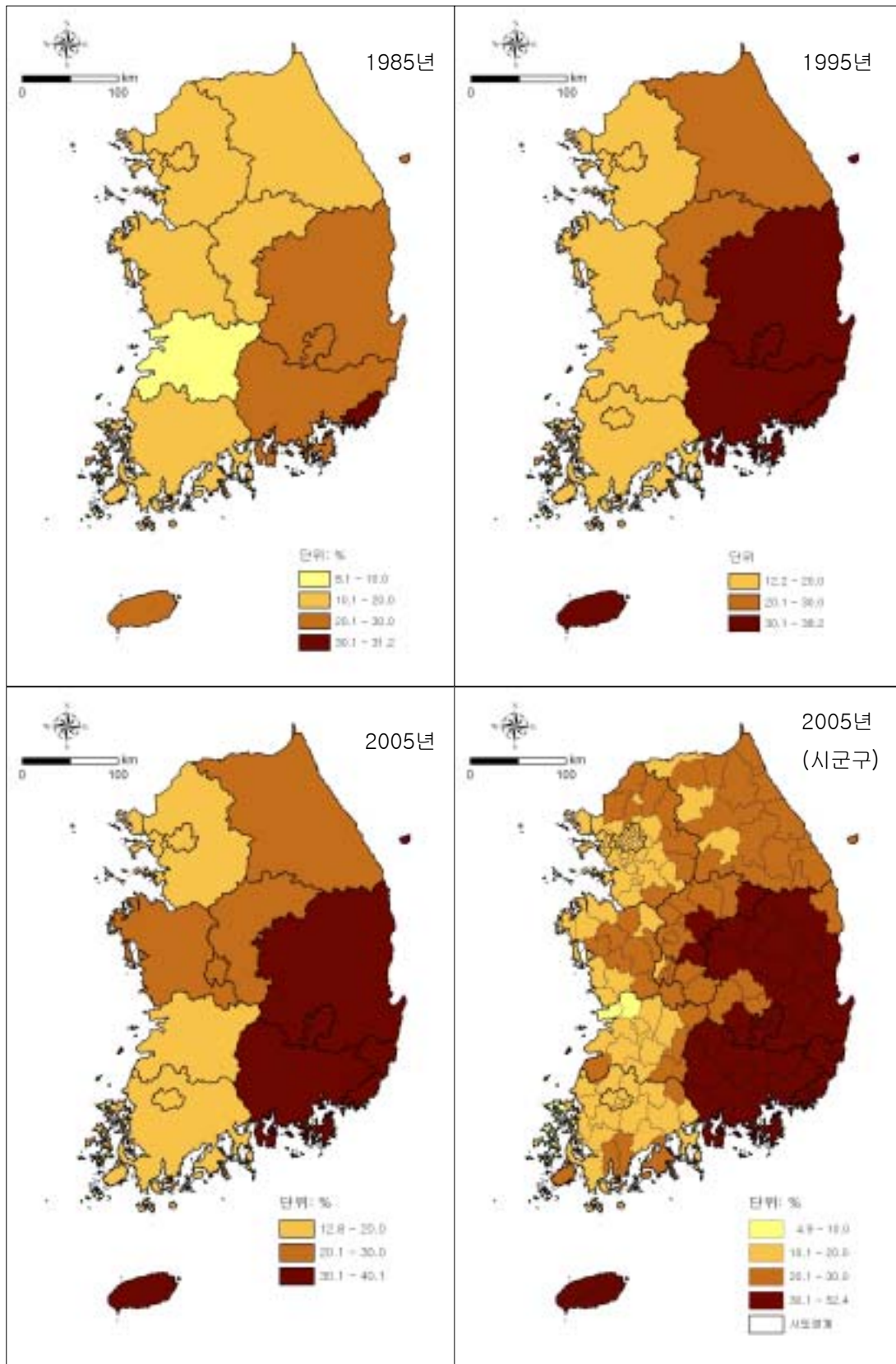
앞에서 보았듯이 무종교인 비율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 감소추세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1985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무종교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서울과 대구, 부산, 대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무종교인 비율이 45.8%, 44.8%, 47.4%, 48.2%로 낮아졌다. 2005년에는 경남의 무종교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산과 함께 무종교인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의 계룡시(31.3%)이나, 대체로 경상권의 군지역(경북 울릉군(33.0%), 경북 청도군(33.3%), 경남 산청군(34.7%))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 및 <부록 5> 참조).

(그림 3) 시도 및 시군구별 무종교인 비율(1985~2005년)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그림 4) 시도 및 시군구별 불교인구 비율(198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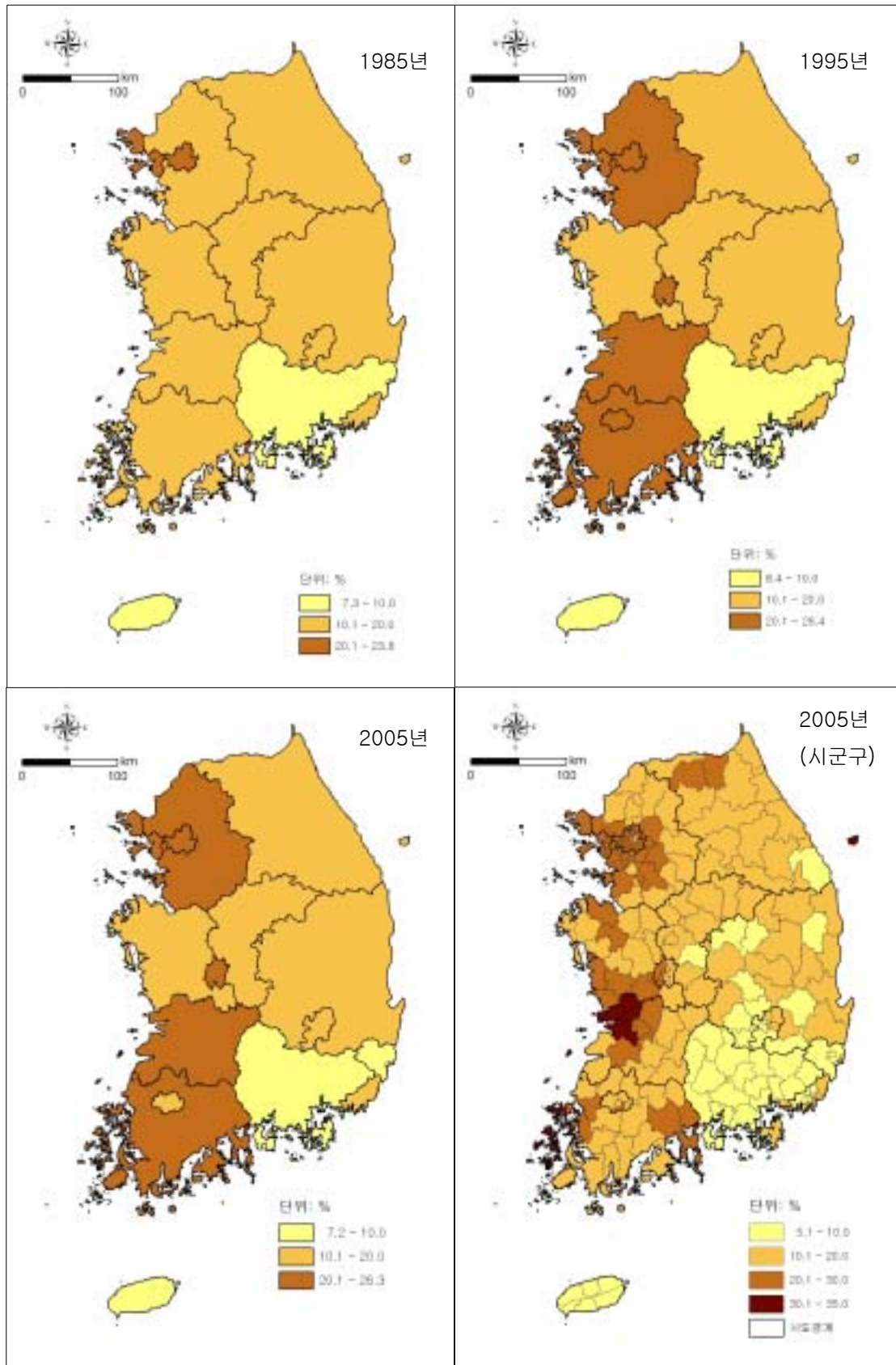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불교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경상권과 제주이다. 1985년의 경우 부산 인구의 31.2%가 불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남(29.0%) 및 제주(28.7%), 대구(27.5%), 경북(26.1%) 순이었다. 1995년과 2005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으며, 특히 1985년과 1995년 사이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1995년 부산과 경남의 불교인구 비율은 각각 38.2%와 36.3%로 1985년에 비해 7%p 가량 증가하였다. 대구와 경북, 그리고 제주의 경우에도 5%p 가량 증가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불교인구 비율은 30% 이상이 되었다. 불교인구 비율은 1995~2005년에 전국적으로는 다소 감소(23.2%→22.8%)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및 경상권에 서는 소폭 증가하면서 울산을 포함한 경남의 경우 이 지역 인구의 40% 정도가 불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청도군(52.4%), 경남 산청군(52.4%)과 창녕군(51.1%)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불교인구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의 무종교인 비율이 각각 33.3%, 34.7%, 37.9% 인 것을 감안한다면 개신교 및 천주교 등 외래종교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시군구별 분석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시도 경계에 위치한 지역의 종교인구 분포이다. 경북 문경시와 인접해 있는 충북 보은군(32.3%)과 괴산군(30.2%), 증평군(30.2%)은 충북 전체(23.8%)에 비해서 불교인구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반면에 개신교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과 접해있는 경북의 일부 시지역(김천시(28.5%), 구미시(28.2%))은 경북 전체(33.9%)에 비해 불교인구 비율이 낮았다. 한편, 경남과 인접해 있는 전북시군지역 중 일부(전북 무주군(22.9%), 장수군(24.2%), 남원시(20.2%), 구례군(27.5%))에서는 전북 전체의 불교인구 비율인 12.8%보다 2배가량 많은 인구가 불교를 믿고 있다((그림 4) 참조).

개신교인구 비율은 수도권과 전라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1985년에 서울의 개신교인구 비율은 23.8%, 인천은 21.8%, 경기도는 19.1%였으며, 1995년에는 이보다 증가하여 서울 26.2%, 인천 25.8%, 경기 23.7%를 기록하였다. 1985 ~ 1995년에 개신교인구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지역은 전라권으로, 전북은 7%p 가량 증가한 26.4%를, 전남은 6%p 가량 증가한 20.4%이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이 지역 모두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전남만이 약간 증가(20.4% → 21.8%)하는데 그쳤다. 2005년에 개신교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의 신안군(35.0%)과 전북의 익산시(31.4%), 군산시(31.1%)이다. 반면, 개신교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불교인구가 많은 경남과 제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의 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합천군(5.1%), 의령군(5.4%), 함안군(5.7%), 창녕군(5.7%)). 한편 불교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과 울산의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 개신교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그림 5) 시도 및 시군구별 개신교인구 비율(198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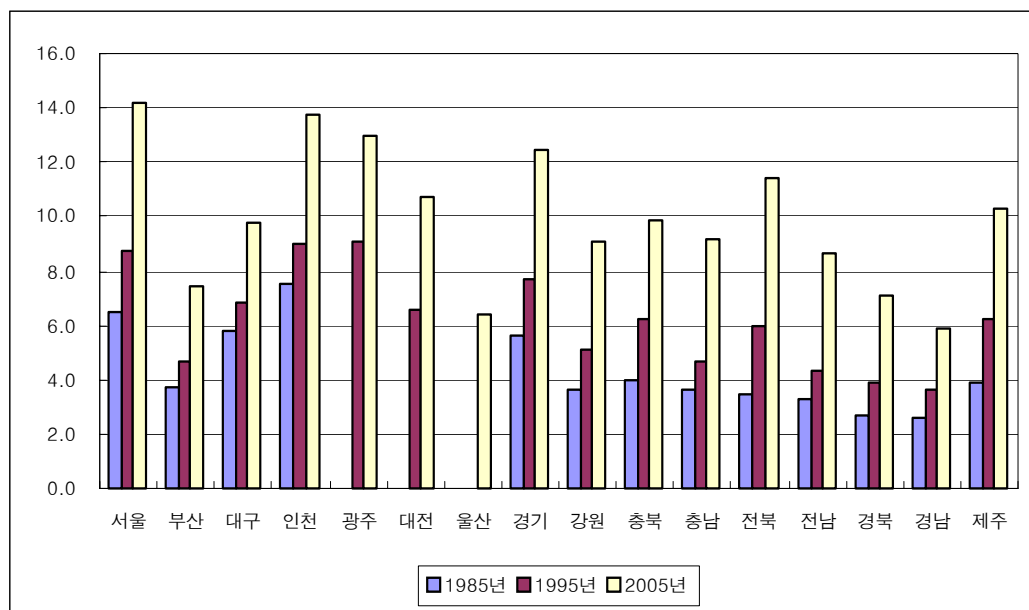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천주교인구 분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불교, 개신교와 다르게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에서 이 종교를 믿는 인구 비율이 일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5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 많으며((그림 6) 참조), 시도별 구성분포를 보면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그림 7) 참조). 1985년에 서울 6.5%, 인천 7.5%, 경기 5.6%이었던 천주교인구 비율은 2005년에는 14.2%, 13.7%, 12.4%로 증가하였다. 전북의 천주교인구 비율은 1985년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11.4%를 차지하여 천주교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광주(13.0%), 대전(10.7%)과 제주(10.3%)에서도 천주교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제주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불교와 개신교인구의 비중이 1, 2순위를 달리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불교 다음으로 천주교인구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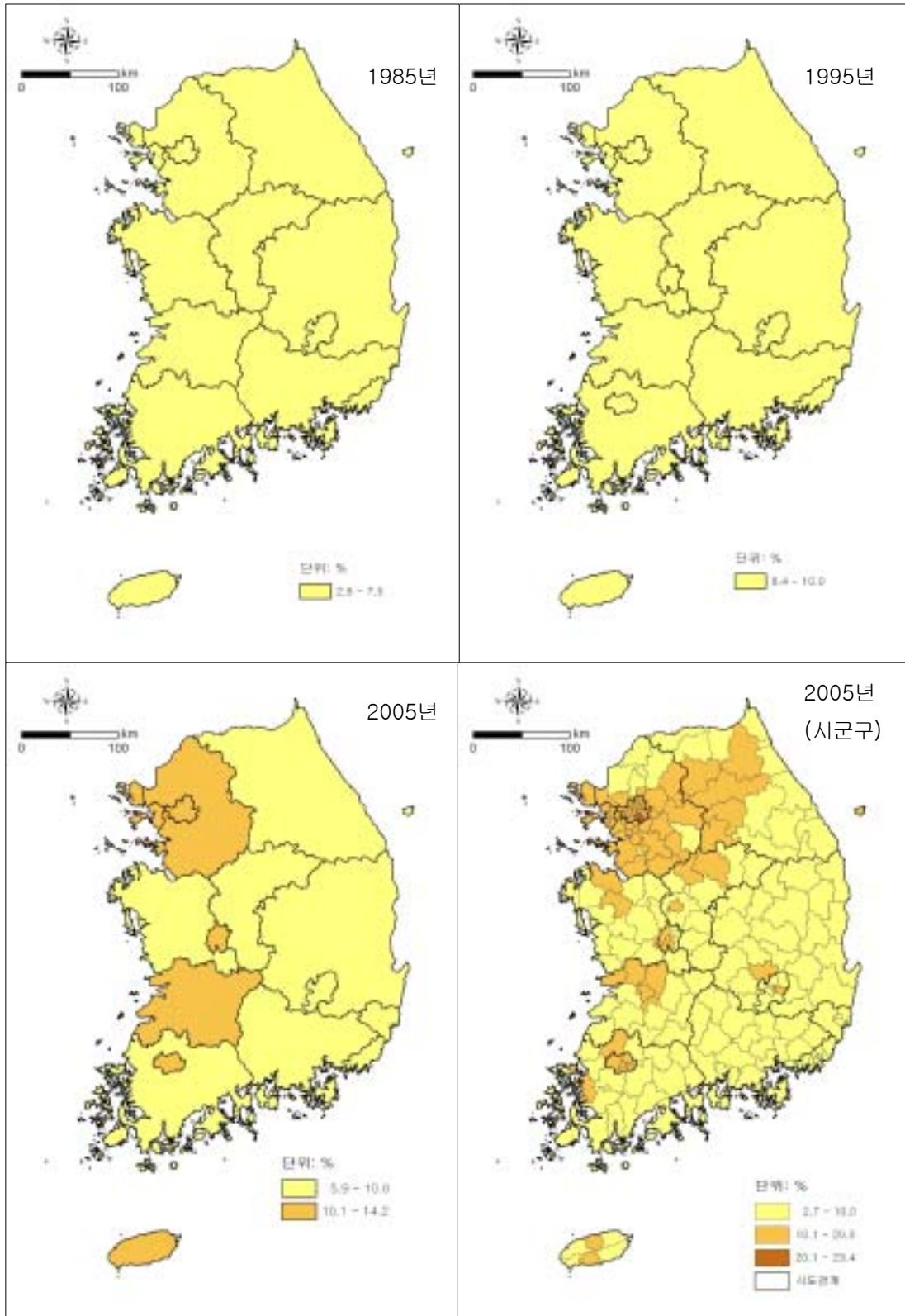
시군구별로는 서울의 강남권과 인천의 일부 도시에서 그 비율이 20%를 상회하였다. 인천 옹진군이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 서초구(21.1%)와 강남구(20.7%), 인천 동구(20.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와 인접해 있는 강원, 충북, 충남의 일부 시군지역에서 천주교인구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주시(15.0%)를 중심으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에서 천주교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전주의 경우에는 전라도에 맨 처음 천주교가 전파된 곳이며, 완주군은 전라도 최초의 천주교회 본당이 세워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주명준, 1998).

(그림 6) 시도별 천주교인구 비율 추세(1985~2005년)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그림 7) 시도 및 시군구별 천주교인구 비율(1985~2005년)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제 5 장 결론

선행연구(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이희길, 1995; 은기수, 200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종교인구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기독교인구는 불교인구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연령층이 많다. 반대로 불교 신자들은 연령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다. 불교는 여성 신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종교 집단에 비해 높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일반화된 사실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또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종교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5~2005년까지 20년 동안 종교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종교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인의 증가와 무종교인의 감소 경향은 최근 완화되고 있다. 특히 30~40대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무종교인 비율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관찰되었다. 둘째, 불교와 개신교인구 비율은 1995~2005년 사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천주교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교인구 비율과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셋째, 연령대별 종교인구의 코호트 분석에 의하면 개신교는 불교·천주교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동일 코호트에 속한 인구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불교와 천주교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개신교인구 비율은 1995~2005년 사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넷째, 성별 종교 구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여자 종교인의 비율이 남자 종교인에 비해 높는데, 3대 종교 중에서 천주교의 여자신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각 종교의 전체 신도수 대비 성·연령별 인구를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통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았던 불교는 물론 개신교와 천주교의 경우도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한국의 부부 및 가구 내 구성원들 간에는 강한 종교적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다. 가구구성원들은 무종교로 종교적 성향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수준과 직업을 통해 종교별로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종교별로 교육수준과 직업구성이 달라 종교인들 간에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으

며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별 교육수준과 직업구성의 차는 종교별 연령 구성의 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30~40대 동일 연령대 인구의 경우 종교별로 교육수준과 직업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뿐 아니라 지역까지 통제하는 경우 그 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종교인구 분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부산·대구·울산을 포함한 경상권은 불교인구가, 수도권 및 전라권은 개신교인구가 우세하였으며 불교인구가 많은 지역은 개신교인구 비율이 낮고, 개신교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불교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교와 개신교의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시계열적으로 볼 때 그 차이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995~2005년 사이 전국적으로는 불교인구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인구 비율이 높은 경상권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경상권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종교인 아니면 불교인구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불교인구 비율이 높다. 셋째, 시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시군구 지역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강한 공간 군집을 형성하면서 양 시도의 중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접이지대에서 불교는 주로 군지역에서, 개신교는 시지역에서 해당 종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연령·교육수준·직업 등의 변수에 비해 지역 간 종교현상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한국사회의 종교 현상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제 6 장 참고문헌

- 김종서. 1998. “해방후 50년의 한국 종교사회학 연구사.” 『종교연구』 15: 33-72.
- _____. 2000. “현대 종교다원주의와 그 한국적 독특성 연구.” 『종교학연구』 19: 33-48
- 윤이흠. 2007. “21세기의 세계종교상황과 원불교사상.” 『원불교 교전』 (중문판) 출판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13-33.
- 은기수. 2002. “종교.” 『한국의 인구』 . 557-586.
- 이희길. 1995. “한국종교에 있어서 체제저항적 정치운동과 그에 참여한 종교지도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창수·김신열. 1993. “한국에 있어서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한국사회학』 27: 117-151.
- 주명준. 1998.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라도 선교 비교.” 『전주사학』 6: 43-77.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
- 한내창. 2005. “가정의 종교 환경과 자녀의 종교성.” 『종교연구』 40: 219-244.
- Chalfant, H. P., and P. L. Heller. 1991. "Rural/Urban versus Regional Differences in Religiosit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3(1): 76-86.
- Clarke, C. J. 1985. "Religion and Regional Culture: The Changing Pattern of Religious Affiliation in the Cajun Region of Southwest Louisiana."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384-395.
- Newman, W. M. and P. L. Halvorson. 1984. "Religion and Regional Culture: Patterns of Concentration and Change among American Religious Denominations, 1952-1980."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3: 304-315.

[통계관련자료]

- 통계청. 2007.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_____. 2006.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결과』, 인구조사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1985. 1995.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및 2% 표본자료. 통계청.

[부록]

<부록 1> 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단위 : %)

구 분	종교인	종교인						무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1985년	42.6	19.9	16.1	4.6	0.2	1.2	0.5	57.4
0~9세	28.2	9.5	14.1	3.8	0.1	0.3	0.3	71.8
10~19세	38.9	15.0	18.1	4.4	0.2	0.7	0.5	61.1
20~29세	42.3	18.6	17.3	4.9	0.2	0.9	0.5	57.7
30~39세	50.6	25.2	17.9	5.7	0.2	1.1	0.6	49.4
40~49세	53.0	30.3	14.9	4.9	0.3	2.0	0.7	47.0
50~59세	52.5	31.5	12.8	4.3	0.4	2.8	0.8	47.5
60~69세	52.4	30.4	13.0	4.5	0.4	3.2	0.9	47.6
70세이상	49.5	28.0	12.4	4.4	0.4	3.4	0.8	50.5
1995년	50.7	23.2	19.7	6.6	0.2	0.5	0.6	49.3
0~9세	36.9	11.3	19.3	5.6	0.1	0.1	0.4	63.1
10~19세	49.0	18.3	22.5	7.2	0.2	0.2	0.5	51.0
20~29세	45.9	19.4	19.7	5.8	0.2	0.3	0.6	54.1
30~39세	52.8	24.7	20.0	7.0	0.2	0.3	0.6	47.2
40~49세	60.9	31.5	20.0	8.0	0.2	0.5	0.7	39.1
50~59세	59.9	34.7	16.7	6.3	0.3	1.1	0.7	40.1
60~69세	59.5	34.5	16.0	6.2	0.3	1.6	0.8	40.5
70세이상	57.7	30.5	17.5	6.8	0.4	1.7	0.9	42.3
2005년	53.5	22.8	18.3	10.9	0.3	0.2	1.0	46.5
0~9세	43.9	13.2	19.9	9.7	0.2	0.0	0.8	56.1
10~19세	51.0	17.7	20.4	11.7	0.2	0.1	0.8	49.0
20~29세	49.6	19.3	17.9	11.2	0.2	0.1	0.9	50.4
30~39세	48.5	19.6	17.7	9.8	0.2	0.1	1.0	51.5
40~49세	57.0	26.6	17.7	11.3	0.3	0.2	1.0	43.0
50~59세	63.1	31.7	17.8	12.0	0.3	0.3	1.0	36.9
60~69세	63.7	34.1	16.6	10.8	0.4	0.8	1.1	36.3
70세이상	63.4	31.1	18.2	11.5	0.5	1.0	1.1	36.6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부록 2>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1985년)

(단위 : %)

구 분	종교인	종교인						무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남자	39.3	18.5	14.7	4.2	0.2	1.3	0.5	60.7
0 ~ 9세	27.9	9.7	13.6	3.8	0.1	0.4	0.3	72.1
10~19세	37.3	15.2	16.5	4.2	0.2	0.8	0.5	62.7
20~29세	40.0	18.3	15.9	4.2	0.2	1.0	0.5	60.0
30~39세	45.3	22.8	15.8	4.8	0.2	1.1	0.5	54.7
40~49세	48.7	27.4	13.8	4.6	0.3	2.1	0.6	51.3
50~59세	46.4	27.8	10.7	3.7	0.3	3.3	0.6	53.6
60~69세	44.6	25.4	10.3	3.6	0.3	4.2	0.8	55.4
70세이상	41.6	22.0	10.1	3.4	0.3	5.0	0.8	58.4
여자	45.8	21.4	17.4	5.1	0.2	1.1	0.6	54.2
0 ~ 9세	28.5	9.2	14.6	3.9	0.1	0.3	0.3	71.5
10~19세	40.6	14.7	19.8	4.7	0.2	0.7	0.5	59.4
20~29세	44.7	18.9	18.8	5.5	0.2	0.8	0.5	55.3
30~39세	56.2	27.7	20.0	6.5	0.3	1.1	0.6	43.8
40~49세	57.5	33.3	16.0	5.2	0.3	1.9	0.7	42.5
50~59세	57.8	34.7	14.6	4.8	0.4	2.4	0.9	42.2
60~69세	58.3	34.1	15.1	5.2	0.5	2.4	1.0	41.7
70세이상	53.5	31.1	13.6	5.0	0.4	2.6	0.8	46.5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부록 3>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1995년)

(단위 : %)

구 분	종교인	종교인						무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남자	47.3	21.8	18.3	6.0	0.2	0.5	0.6	52.7
0~ 9세	36.5	11.7	18.6	5.5	0.1	0.1	0.4	63.5
10~19세	48.2	18.8	21.5	6.9	0.2	0.2	0.5	51.8
20~29세	45.1	19.7	18.9	5.4	0.2	0.3	0.6	54.9
30~39세	46.7	22.7	17.4	5.6	0.2	0.3	0.6	53.3
40~49세	56.0	29.0	18.5	7.2	0.2	0.5	0.6	44.0
50~59세	54.8	31.5	15.4	5.9	0.2	1.2	0.6	45.2
60~69세	52.3	30.9	13.2	5.1	0.3	2.1	0.6	47.7
70세이상	49.0	25.6	14.4	5.4	0.3	2.5	0.8	51.0
여자	54.2	24.6	21.1	7.3	0.2	0.4	0.7	45.8
0~ 9세	37.3	10.9	20.1	5.8	0.1	0.1	0.4	62.7
10~19세	49.9	17.8	23.7	7.5	0.2	0.2	0.6	50.1
20~29세	46.8	19.1	20.6	6.2	0.2	0.2	0.6	53.2
30~39세	59.1	26.8	22.7	8.4	0.2	0.3	0.7	40.9
40~49세	66.1	34.1	21.5	8.9	0.3	0.5	0.8	33.9
50~59세	64.7	37.9	17.9	6.8	0.3	1.0	0.8	35.3
60~69세	64.9	37.2	18.2	7.0	0.4	1.3	1.0	35.1
70세이상	62.3	33.1	19.2	7.5	0.4	1.2	0.9	37.7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부록 4>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2005년)

(단위 : %)

구 분	종교인	종교인						무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남자	50.2	21.5	17.1	10.1	0.3	0.2	0.9	49.8
0~ 9세	43.6	13.6	19.4	9.5	0.2	0.0	0.8	56.4
10~19세	50.3	18.2	19.7	11.3	0.2	0.1	0.8	49.7
20~29세	49.4	19.8	17.3	11.2	0.2	0.1	0.9	50.6
30~39세	44.3	18.8	15.7	8.5	0.2	0.1	1.0	55.7
40~49세	51.5	24.4	16.0	9.7	0.3	0.2	1.0	48.5
50~59세	58.1	29.1	16.4	10.9	0.3	0.3	1.0	41.9
60~69세	58.4	31.1	15.0	10.0	0.4	0.9	1.0	41.6
70세이상	56.2	27.9	15.4	9.9	0.5	1.5	1.0	43.8
여자	56.9	24.1	19.6	11.8	0.3	0.2	1.0	43.1
0~ 9세	44.3	12.9	20.5	9.9	0.2	0.0	0.8	55.7
10~19세	51.7	17.2	21.3	12.1	0.2	0.1	0.8	48.3
20~29세	49.8	18.8	18.5	11.2	0.2	0.1	1.0	50.2
30~39세	52.6	20.4	19.7	11.2	0.2	0.1	1.0	47.4
40~49세	62.6	28.9	19.5	12.8	0.3	0.1	1.0	37.4
50~59세	68.1	34.2	19.1	13.0	0.3	0.3	1.1	31.9
60~69세	68.3	36.6	17.9	11.6	0.4	0.7	1.1	31.7
70세이상	67.6	32.9	19.8	12.5	0.5	0.7	1.2	32.4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부록 5> 시도별 종교인구 구성비의 변화(1985~2005년)

(단위: %)

시도	연도	종교인	종교인구 구성비						무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서울	1985	49.9	18.4	23.8	6.5	0.2	0.4	0.5	50.1
	1995	54.2	18.4	26.2	8.7	0.1	0.2	0.6	45.8
	2005	55.2	16.8	22.8	14.2	0.2	0.1	1.1	44.8
부산	1985	46.1	31.2	10.1	3.7	0.2	0.4	0.6	53.9
	1995	55.2	38.2	11.1	4.7	0.1	0.2	0.8	44.8
	2005	58.6	39.2	10.4	7.4	0.2	0.1	1.3	41.4
대구	1985	45.8	27.5	11.2	5.8	0.1	0.3	0.8	54.2
	1995	52.6	33.2	11.6	6.8	0.1	0.2	0.8	47.4
	2005	54.6	33.4	10.4	9.8	0.1	0.1	0.9	45.4
인천	1985	43.9	13.4	21.8	7.5	0.1	0.6	0.5	56.1
	1995	50.4	14.6	25.8	9.0	0.1	0.3	0.6	49.6
	2005	51.3	13.8	22.4	13.7	0.1	0.2	1.1	48.7
광주	1995	47.5	15.3	21.7	9.1	0.5	0.3	0.6	52.5
	2005	48.3	14.4	19.7	13.0	0.4	0.2	0.6	51.7
대전	1995	51.8	23.2	21.1	6.6	0.2	0.1	0.6	48.2
	2005	54.2	21.8	20.5	10.7	0.2	0.1	0.8	45.8
울산	2005	56.9	39.8	9.5	6.4	0.1	0.1	1.0	43.1
경기	1985	44.8	17.3	19.1	5.6	0.1	2.1	0.6	55.2
	1995	51.1	18.5	23.7	7.7	0.1	0.4	0.6	48.9
	2005	52.5	16.8	21.9	12.4	0.2	0.2	1.1	47.5
강원	1985	36.6	19.0	12.2	3.6	0.1	1.2	0.5	63.4
	1995	45.8	23.2	16.2	5.1	0.1	0.6	0.5	54.2
	2005	48.8	23.0	15.6	9.1	0.1	0.3	0.7	51.2
충북	1985	33.5	17.6	10.8	4.0	0.1	0.7	0.3	66.5
	1995	45.9	23.5	15.2	6.2	0.1	0.3	0.5	54.1
	2005	49.6	23.8	15.1	9.9	0.1	0.1	0.6	50.4
충남	1985	39.0	17.7	15.4	3.6	0.2	1.6	0.5	61.0
	1995	45.5	19.9	19.1	4.7	0.1	0.9	0.6	54.5
	2005	50.4	20.5	19.6	9.1	0.2	0.4	0.6	49.6
전북	1985	33.3	8.1	19.3	3.5	1.3	0.7	0.4	66.7
	1995	47.5	12.2	26.4	6.0	1.5	0.8	0.6	52.5
	2005	53.7	12.8	26.3	11.4	2.3	0.3	0.6	46.3
전남	1985	32.9	10.6	14.6	3.3	0.3	3.7	0.4	67.1
	1995	40.9	13.6	20.4	4.3	0.4	1.8	0.4	59.1
	2005	49.0	16.1	21.8	8.7	0.6	1.2	0.6	51.0
경북	1985	41.3	26.1	10.2	2.7	0.1	1.6	0.5	58.7
	1995	48.8	31.0	12.3	3.9	0.1	0.9	0.5	51.2
	2005	53.8	33.9	11.5	7.1	0.1	0.4	0.8	46.2
경남	1985	40.5	29.0	7.3	2.6	0.2	0.8	0.6	59.5
	1995	50.4	36.3	9.1	3.6	0.2	0.5	0.7	49.6
	2005	56.0	40.1	8.5	5.9	0.3	0.3	0.9	44.0
제주	1985	41.6	28.7	7.4	3.9	0.2	0.8	0.6	58.4
	1995	49.4	33.6	8.4	6.2	0.1	0.4	0.7	50.6
	2005	52.1	32.7	7.2	10.3	0.2	0.3	1.3	47.9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